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1536-01

정책보고서 2015-29

영유아 적정 가정양육비용 산출을 위한 통계자료 분석



고제이·신윤정·강신욱·오미애·안형석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책임연구자】

고제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요저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조세수입 전망과 사회복지 지출부담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공저)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공저)

【공동연구진】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오미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안형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제출문 <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부와 용역계약(2015. 05. 28.)한 「영유아 적정 가정양육비용 산출을 위한 통계자료 분석」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년 10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상 호

목 차

요약	1
제1장 서 론	7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 방법	11
제2장 자녀 양육·보육지원 정책 현황	31
제1절 재정지원의 목적과 유형	51
제2절 보육재정 규모와 지출 현황	62
제3절 보육지원 형태와 정책효율성에 관한 이론적 검토	73
제3장 가정양육수당 해외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74
제1절 주요국의 가정양육수당 제도 도입 배경	94
제2절 가정양육수당 정책 현황	65
제3절 가정양육수당의 효과성	16
제4장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한 가정양육수당 만족도 분석	17
제1절 자료 분석 목적	37
제2절 자료 분석 방법	67
제3절 가정양육수당 정책인식 동향 분석	18
제4절 채널별 가정양육수당 만족도 분석	68
제5절 가정양육수당 불만족 이유 및 가정양육수당 사용처 분석	49
제5장 적정 가정양육비용 추정을 위한 설문조사	101
제1절 조사 목적 및 개요	0
제2절 부모의 경제활동과 자녀 양육 실태	501

제3절 보육지원 정책 반응도 분석	91
제6장 적정 가정양육수당 지원 수준 추정	961
제1절 물량방식 접근에 따른 양육수당 결정방식의 한계	171
제2절 영유아 양육비지출과 정부지원 수준	471
제3절 정책기능별 적정 가정양육수당 지원 수준	581
제4절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정책시뮬레이션	391
제5절 요약 및 정책제언	1
참고문헌	217
부록	223

표 목차

<표 2-1> 핀란드의 아동수당금액 체계(2015년)	8	1
<표 2-2> 스웨덴 아동수당금액 체계(2015년)	8	1
<표 2-3> 기타 유럽국가의 아동수당제도 현황	9	1
<표 2-4> 2014·2015년도 영유아 양육·보육 재정사업 소관별 세부내역(예산+기금)	2	2
<표 2-5>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특수시책현황	9	2
<표 2-6> 연도별 유치원 및 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	1	3
<표 2-7> 영유아 연령별 및 기관유형별 부모보육료 지원단가(2015)	4	3
<표 2-8> 기본보육료 지원 단가(1인당)	5	3
<표 2-9> 연도별 가정양육수당	5	3
<표 2-10> 유형별 가정양육수당	6	3
<표 2-11> 푸드스탬프 밀매율(1996~1998)	0	4
<표 2-12> 지역별 소득수준에 따른 밀거래 실태 (1998)	0	4
<표 3-1> 핀란드 가정양육수당: 기본수당	2	5
<표 3-2> 핀란드 가정양육수당: 보조수당	2	5
<표 3-3>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의 가정양육수당(2015)	3	5
<표 3-4> 북구 유럽 국가의 육아휴직·보육 서비스 정책 현황(2009년)	4	5
<표 3-5> 북구 유럽 국가의 가정양육수당 급여 기준 (2009년)	7	5
<표 4-1> 가정양육수당 관련 사건	4	7
<표 4-2> 불만족 이유 분석 결과	5	9
<표 4-3> 가정양육수당 사용처	6	9
<표 4-4> 사용처 분석 결과 비교	7	9
<표 4-5> 적금 및 저축 사용처	7	9
<표 5-1> 표본 배분 현황	40	1
<표 5-2> 조사 내용	41	1
<표 5-3> 설문조사 대상가구 특성	60	1
<표 5-4> 자녀 양육 형태별 가구 소득활동 유형 결합확률분포	70	1
<표 5-5> 미취업 사유	80	1
<표 5-6> 가정양육수당 수급 이유	90	1
<표 5-7> 어린이집 이용 이유	21	1
<표 5-8> 월평균 아동 양육비 지출(최연소 수급아동 기준,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구)	31	1

<표 5-9> 월평균 아동 양육비 지출(최연소 수급아동 기준, 어린이집 이용 가구)	5	1	1
<표 5-10> 자녀 양육 형태·가구소득 유형·모의 취업상태별 가구소득 및 양육비지출	8	4	1
<표 5-11> 가정양육수당 금액 만족 여부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구)	0	2	1
<표 5-12> 불만 사유(가정양육수당 수급 가구)	1	2	1
<표 5-13> 가정양육수당 금액 만족도 비교(2015년 조사 vs. 2014년 조사)	2	2	1
<표 5-14> 가정양육수당 사용 실태(가정양육수당 수급 가구)	4	2	1
<표 5-15> 향후 양육수당 수급 중단과 어린이집 이용 계획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구)	7	2	1
<표 5-16> ①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정양육 유지비율(=유지응답자수/전체응답자수)	8	2	1
<표 5-17>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정양육 유지비율(계속)	9	2	1
<표 5-18> 향후 어린이집 이용 중단과 양육수당 선택 계획(어린이집 이용 가구)	1	3	1
<표 5-19> ② 어린이집 이용 가구의 가정양육 전환비율(=전환응답자수/전체응답자수)	2	3	1
<표 5-20> ②-1 어린이집 이용 가구의 가정양육 전환비율(=전환응답자수/전체응답자수, 보육반 연령 기준)			1
<표 5-21> 어린이집 이용 가구의 가정양육 전환비율(계속)	4	3	1
<표 5-22> 가정양육 유지·전환비율(전체가구)	5	3	1
<표 5-23> 어머니 취업상태·형태별 전환비율(전체가구)	6	3	1
<표 5-24> 가정양육 유지·전환 비율 (2014 vs. 2015)	8	3	1
<표 5-25> 가정양육수당 인상금액 구간별 소득 및 구직활동 중단 여부(가정양육수당 수급 가구)	4		1
<표 5-26> 가정양육수당 인상금액 구간별 소득 및 구직활동 중단 의사(어린이집 이용 가구)	3	4	1
<표 5-27> 자녀 양육 형태별 부모 경제활동 특성	4	4	1
<표 5-28> 가정양육수당 인상금액 구간별 소득 및 구직활동 중단 의사(미취업모 포함, 전체가구)	4		1
<표 5-29>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구 특성별 추가 자녀 출산계획	7	4	1
<표 5-30> 어린이집 이용 가구 특성별 추가 자녀 출산계획	9	4	1
<표 5-31>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구의 자녀 출산 계획에 긍정적 영향을 준 보육지원정책	1	5	1
<표 5-32> 어린이집 이용 가구의 자녀 출산 계획에 긍정적 영향을 준 보육지원정책	4	5	1
<표 5-33>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구 아동 연령별·가구소득수준별 가정양육수당 금액인상에 따른 추가 자녀 출산 의사			5
<표 5-34> 어린이집 이용 가구 아동 연령별·가구소득수준별 가정양육수당 금액인상에 따른 추가 자녀 출산 의사			5
<표 5-35> 가정양육수당 금액인상 구간별 추가 자녀 출산 의사(현재 출산계획이 있는 가구 제외, 전체가구)			1
<표 5-36> 아동 연령·가구특성별 적정 가정양육수당 수준(가정양육수당 수급 가구)	2	6	1
<표 5-37> 아동 연령·가구특성별 적정 가정양육수당 수준(어린이집 이용 가구)	4	6	1

<표 5-38> 아동 연령·가구특성별 적정 가정양육수당 수준 (전체가구)	6·6·1
<표 6-1> 소득계층별(상중하) 영유아 가구 소비지출 및 소득현황(육아정책연구소 2014 KICCE조사결과) ...	1
<표 6-2> 최연소 아동 연령별 영유아수 분포	6·7·1
<표 6-3> 가계동향조사 경상소비 항목 분류	9·7·1
<표 6-4> 아동1인당 월평균 양육관련 소비지출	9·7·1
<표 6-5> 월평균 종이기저귀 이용비용 추정결과	0·8·1
<표 6-6> 최연소 아동 연령별 영유아수 분포	1·8·1
<표 6-7> 아동 연령별 1인당 사보육비 지출(제17차 노동패널조사)	4·8·1
<표 6-8> 아동 연령별 1인당 양육비용	4·8·1
<표 6-9> 아동 연령별 1인당 양육비지출 및 보조율(2015 전화설문조사 기준)	5·8·1
<표 6-10> 가정양육 전환에 필요한 연령별 평균유보가격	7·8·1
<표 6-11> 2014년 아동 연령별 가정양육수당 요구액 (육아정책연구소 전화조사)	7·8·1
<표 6-12> 영유아 보육료지원(통칭 부모보육료) 연령별·유형별 지원 단가	7·8·1
<표 6-13> 2014년 고용형태별-성별 월평균 급여	9·8·1
<표 6-14> 소득활동이나 구직활동을 중단하기 위해 요구되는 아동 연령별 평균유보가격	0·9·1
<표 6-15> 추가 자녀 출산 의사를 유인하는 아동 연령별 평균유보가격	1·9·1
<표 6-16> 부모가 생각하는 적정 가정양육수당 금액	3·9·1
<표 6-17> 아동 연령별 가정양육수당 인상 시나리오	4·9·1
<표 6-18> 소득재분배 효과 시산결과	6·9·1
<표 6-19> 시나리오별 단기 소득재분배 효과 비교	7·9·1
<표 6-20> 생산활동과 상품 계정의 분할	9·9·1
<표 6-21> 가계소비지출 항목 분류	0·0·2
<표 6-22> 2014년도 가정양육수당 소득분위별 지급액 추정치	3·0·2
<표 6-23> 정책시나리오별 가정양육수당 수급액 분포	3·0·2
<표 6-24> 가정양육수당 소득유발 효과 모의실험 결과	4·0·2
<표 6-25> 경제순환에 따른 10분위 가계소득분포 변화	7·0·2
<표 6-26> 정책개편 시나리오 성장-분배 효율성 비교	8·0·2
<표 6-27> 보육체계 개편안 모의실험 시나리오	9·0·2
<표 6-28> 소득유발 효과 및 소득재분배 효과 모의실험결과	9·0·2
<표 6-29> 보육체계 개편안 소득재분배 효율성 비교	1·1·2

그림 목차

[그림 2-1] 핀란드의 주요 자녀 양육·보육지원 체계의 구성(2015)	6	1
[그림 2-2] 연도별 시·도 및 시·군·구 특수보육사업 예산	9	2
[그림 2-3]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수(1993~2014)	2	3
[그림 2-4] OECD 국가의 0~2세 보육시설 이용률 추이(2006,2013)	3	3
[그림 2-5] 연령별 어린이집 이용률 추이(2008~2014)	4	3
[그림 2-6] 0~2세 가정양육수당 vs. 보육료 지원 단가	6	3
[그림 2-7] 현물급여의 효과	8	3
[그림 2-8] 가정양육수당 vs. 바우처(보육시설서비스 포함)	9	3
[그림 2-9] 자녀양육 유형별 정부 지원단가 인식률	5	4
[그림 4-1] 연관 키워드	67	
[그림 4-2] IR 아키텍처	77	
[그림 4-3] 자료 분석 과정	0	8
[그림 4-4] 가정양육수당 키워드가 포함된 전체 노출 빈도수	1	8
[그림 4-5] 뉴스 기사 빈도수	3	8
[그림 4-6] 블로그 빈도수	4	8
[그림 4-7] 카페 빈도수	4	8
[그림 4-8] 트위터 빈도수	5	8
[그림 4-9] 가정양육수당 전체 만족도 결과	7	8
[그림 4-10] 가정양육수당 전체 만족도 추이	9	8
[그림 4-11] 채널별 가정양육수당 만족도 결과	0	9
[그림 4-12] 블로그에서 가정양육수당 만족도 결과	1	9
[그림 4-13] 카페에서 가정양육수당 만족도 결과	2	9
[그림 4-14] 트위터에서의 가정양육수당 만족도 결과	3	9
[그림 5-1] 자녀양육 유형별 조사대상 가구소득분포	7	1
[그림 5-2] 가정양육수당 금액 만족 여부와 불만족 이유	9	1
[그림 5-3] 가정양육수당 사용 실태	3	21
[그림 5-4] 향후 어린이집 이용 계획과 가정양육수당 금액 인상에 따른 가정양육 선택 비율	6	2
[그림 5-5] 향후 가정양육 계획과 가정양육수당 금액 인상에 따른 가정양육 선택 비율	0	3
[그림 5-6] 가정양육수당 인상금액 구간별 소득 및 구직활동 중단 의사(가정양육수당 수급 가구)	3	1
[그림 5-7] 가정양육수당 인상금액 구간별 소득 및 구직활동 중단 의사(어린이집 이용 가구)	2	4

[그림 5-8]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구의 추가 자녀 계획과 이유	6·4·1
[그림 5-9] 어린이집 이용 가구의 추가 자녀 계획과 이유	8·4·1
[그림 5-10]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구의 자녀 출산 계획에 대한 정부 보육지원정책의 영향	0·5·1
[그림 5-11] 어린이집 이용 가구의 자녀 출산 계획에 대한 정부 보육지원정책의 영향	3·5·1
[그림 5-12]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구의 가정양육수당 금액인상 구간별 추가 자녀 출산 의사 ...	5·5·1
[그림 5-13] 어린이집 이용 가구의 가정양육수당 금액인상 구간별 추가 자녀 출산 의사	7·5·1
[그림 5-14]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구가 기대하는 적정 가정양육수당 수준	2·6·1
[그림 5-15] 어린이집 이용 가구가 기대하는 적정 가정양육수당 수준	4·6·1
[그림 6-1] 만 0~5세 아동 양육가구와 비양육가구의 소득분포	7·7·1
[그림 6-2] 만 0세 아동 양육가구와 만 4세 이상 아동 양육가구의 소득분포	7·7·1
[그림 6-3] 가구 경상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중(%)	8·7·1
[그림 6-4] 만 0~5세 아동 양육가구와 비양육가구의 소득분포	2·8·1
[그림 6-5] 만 0세 아동 양육가구와 만 4세 이상 아동 양육가구의 소득분포	2·8·1
[그림 6-6]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구 vs. 보육시설 이용 가구 소득분포	3·8·1
[그림 6-7] 개방경제의 소득순환	89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3년 미취학아동에 대한 정부 보육지원이 전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전면 확대 시행되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현재 근로세대의 출산과 자녀양육 부담 완화를 통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미래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로서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는 증가일로에 있으나,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례와 같은 보육의 질 저하, 미취업모 보육시설 이용 증가에 따른 맞벌이 가구의 서비스 접근 제약 등의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보육료 지원과 가정양육수당 간의 형평성을 강화하고, 적절한 재정적인 지원을 통하여 바람직한 수준으로 가정 내 양육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부모의 취업 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의 적정 가정양육수당 산출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보육재정 현황을 살펴보고, 서비스 중심 지원체계의 한계를 진단하기 위하여 급여형태와 재정효율성에 대한 이론을 검토한다. 이어서 주요국의 가정양육수당제도 실태와 정책효과성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하여 가정양육수당 관련 동향 파악, 만족도 분석, 가정양육수당의 불만족 이유와 사용처 분석을 하였다. 적정 가정양육비용 추정을 위해 만 0~5세 가구를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부모의 경제활동과 자녀 양육 실태를 파악하고, 보육지원 정책 반응도를 분석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와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영유아의 양육비지출 수준을 추정하고, 정책기능별 가정양육수당 인상 시나리오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시산을 통해 적정 가정양육수당 지원 수준을 파악하였다.

2. 주요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2004년 1조 5,182억 원에 불과하던 영유아 보육(국고+지방비)과 유아교육(지방재정교부금)예산은 2014년 현재 약 12조 4,647억 원으로 급증하였다. 직장어린이집지원이나 육아휴직 급여와 같은 고용보험기금이나 여성발전기금 사업까지 고려할 경우 전체 보육관련 재정규모는 2014년 현재 13조 680억 원에 이른다. 영유아 보육료지원(5조 701억 원)과 가정양육수당지원(1조 8,916억 원)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소관 보육관련 예산은 지방비 합산 총 8조 5,671억 원으로 전체 영유아 보육 및 교육재정의 약 66%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보육관련 재정규모를 기준으로 급여형태를 구분해보면, 가정양육수당을 포함한 현금지원은 2조 3,960억 원, 보육료지원과 같은 현물 및 바우처 형태의 사업비 총액은 10조 6,721억 원으로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보육지원은 현물급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이론에서는 현행과 같은 민간공급업자에 의존한 현물급여 지원방식에 따른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우선 가계가 바우처로 구매하지 못하는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보다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덜 선호할 경우 정책만족도는 현금에 비해 열등하고, 불법적 현금화에 따른 거래비용 발생으로 재정누수가 발생하며 이로써 재정비효율이 초래될 수 있다. 또한 가수요 유인방식으로 수입을 극대화 하는 공급자 행태가 존재하고, 서비스 단가 통제 시 특별활동비와 같은 부모부담을 요구하는 각종 비급여서비스의 양이 증대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 경우 정책 만족도는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크게 저하될 수 있다. 더불어 보육서비스 이용자의 부담가격이 낮아짐으로 인하여 보육서비스 수요량이 필요 이상으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재정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우려는 현재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현장에서 사실로 확인되고 있으며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는 현안이다.

합리적 보육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우선 과제로서 시설보육에 비해 과소하게 지원되고 있는 가정양육수당 지원 단가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복지국가의 경험을 살펴보면 1985년 북구 유럽 국가에서 가정양육수당을 가장 처음 도입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08년 이래로 북구 유럽 국가에서 보편화되어 현재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아이슬란드 등 대부분의 국가가 제공하고 있다. 제도의 도입취지는 표면적으로는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부모에게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자녀 양육방식

에 있어서의 선택권을 강화하였지만, 핀란드와 같이 시설 보육 서비스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실체적 목적도 강하게 작용하였다.

정책효과와 관련된 연구들의 결과를 보면 여성고용이나 이민자 아동과 같은 취약계층 아동의 발달에 가정양육수당이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지원이라는 경로를 통해서 가정 내 양육을 도모하고 결과적으로 인적자본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더불어 현재 가정양육수당이 실질적 양육비용이나 보육료지원 단가보다 낮게 적용됨에 따라 불필요한 보육서비스 이용이 이루어지는 등의 재정비효율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가정양육수당 단가 현실화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2013년 무상보육 확대 실시 이후 가정양육수당 지원 제도와 관련한 국민들의 정책 인식과 감성을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통해 관련 정책 사안별로 살펴본 결과, 가정양육수당 정책은 초기에 사람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충분히 이끌어 냈지만, 이후 가정양육수당 관련 정책 및 사건들은 초기 도입 시점만큼 긍정적 파급 효과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채널별로 신청시스템의 불편이나 바우처 방식으로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에 대한 정책적 논의, 예산부족에 대한 우려, 보육료에 비해 적은 수당금액 등 기존의 일반적인 설문조사에서 파악하지 못했던 다양한 불만족 이유들이 파악되었고, 실질적인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정책인식에 크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지급받은 가정양육수당의 사용처를 확인해 본 결과에 따르면 기저귀(48.7%), 분유(26.1%) 구입과 적금(13.6%) 순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적금이나 저축을 하는 이유 대부분이 아이의 미래소비를 위한 것으로서 사용방식이 다를 뿐 결국 자녀를 위한 양육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전화조사처럼 특정 질문에 대한 응답 형태가 아니라 제약 없이 사용처를 밝힌 내용에 대한 분석이라는 점에서 관측치의 규모와 상관없이 신뢰할 수 있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한편,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구와 어린이집 이용 가구의 정책반응을 살펴보기 위하여 연령별 1차 층화, 지역 및 성별 내재적 층화 변수로 활용 표본추출을 통해 모집단 대표 1,000명(각 500)에 대한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확인된 자녀 양육형태별 가구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자녀 양육형태와 상관없이 맞벌이가구 집단의 평균 소득과 아동 1인당 양육비 지출수준이 가장 높았다.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구에서는 어머니만 일하는 외벌이, 아버지만 일하는 외벌이, 부부 모두 일하지 않는 가구 순으로

평균가구소득과 양육비지출 수준이 높게 나타나지만, 어린이집 이용 가구의 경우 아버지만 일하는 외벌이 집단이 어머니만 일하는 외벌이 집단에 비해 소득과 양육비 지출 수준이 높았다. 가정양육수당 수급 또는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경우 어머니가 상용근로자인 집단의 평균소득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자영업자, 임시근로자, 미취업모, 일용근로자 순으로 확인되었다. 아동 1인당 양육비 지출은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구에서 어린이집 이용 가구에 비해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특히 자영업자 집단의 평균 양육비 지출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동 1인당 양육비 지출수준은 대체로 소득수준에 비례하는 것으로 확인되나, 어린이집 이용 가구에서 특히 어머니만 일하는 외벌이의 경우 맞벌이에 비해 평균 양육비 지출수준이 높았다.

가정양육수당 지급금액에 대한 만족도 설문결과 응답자의 28.8%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2014년 육아정책연구소 양육수당 금액 만족도 설문조사(이정원·이혜민, 2014) 결과인 23.4%와 단순 비교했을 때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장 큰 불만 사유로는 실제 양육비용에 비해 부족하다는 응답이 57.6%로 압도적이었고 보육료 지원금액과 비교해 낮기 때문이란 응답은 기존 결과('14년 30.6%)보다 높은 39.9%로 나타났다.

양육수당 금액 인상에 따른 정책반응을 살펴보기 위하여 가정 내 양육전환, 노동공급 중단, 추가 자녀출산 의사를 확인해 보았다. 양육수당 금액인상 수준에 따른 가정양육으로의 전환의사를 보면 '영향 없음'과 '20만원 이상 증액'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15만원 증액'보다 '10만원 증액' 시 전환의사가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이를 통해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금전적 인센티브에 반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금액 인상수준 별 구직활동이나 소득활동 중단 여부는 인상금액과 상관없이 계속 경제활동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고 30만원 이상의 큰 폭 인상이 있을 경우 일정 정도 노동공급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현재 출산계획이 없다고 답한 가구를 대상으로 수당금액 인상 시 추가 자녀출산 의향을 확인해본 결과 과반 이상인 56.7%가 가정양육수당 인상수준이 본인들의 자녀출산 계획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30만원 이상 인상 할 경우 36.8%가 추가 자녀출산을 고려해 보겠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적정 가정양육수당 인상금액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20만원 이상 증액'이 가장 높고, '현재보다 10만원 증액'이 다음으로 높았다. 특히 '현재보다 15만원

증액'의 응답률보다 '현재보다 10만원 증액' 응답률이 높은 것이 특징인데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인센티브에도 반응하는 계층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적정 가정양육수당 추정을 위하여 통계청의 2014년도 가계동향조사와 제17차 한국노동패널조사(2014년)에 기초하여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현재 소비를 위한 필수경비를 추정해본 결과 사보육비 포함 시 평균적으로 만 0세는 382,459원, 만 1세는 442,906원, 만 2세는 435,382원, 만 3세 464,703원, 만 4세 이상 아동의 경우 803,43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보육비를 제외할 경우에도 287,051원, 287,759원, 213,685원과 213,236원으로 나타나 현재 지급되고 있는 가정양육수당으로 현재 필요 소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전화설문 조사를 통해 확인된 인상금액 구간별 반응에 기초하여 정책기능별 적정 가정양육비용 인상수준을 산출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보육시설 가수요를 제거하고 가정 내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아동 발달을 지원한다는 정책목적 달성을 통한 재정의 효율적 배분을 고려했을 때 만 0세아, 만 1세아, 만 2세아, 만 3세아, 만 4세아 이상에 대하여 각각 현재 보다 233,000원, 212,000원, 214,000원, 218,000원, 203,000원의 지원금액 인상이 필요하다. 한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약하지 않는 수준의 최대 인상금액은 아동 연령집단 별 각각 265,000원, 252,000원, 257,000원, 252,000원과 261,000원인데 반해 추가자녀 출산 도모를 위해서는 이보다 평균 15,000원 정도 더 많은 금액이 추가로 지원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노동시장 참여제고와 저출산 대응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 간에 상충관계가 존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필요로 하는 인상수준에 대한 응답에 기초하여 정책만족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인상금액 수준을 파악해본 결과에 따르면 연령집단별로 각각 161,000원, 155,000원, 162,000원, 142,000원과 159,000원으로 확인되었다.

정책조정의 효과를 가늠해보기 위하여 상기의 산출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단기 소득재분배 효과와 일반균형 정태분석에 의한 성장-분배효과에 대한 정책모의실험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만 0~2세 아동에 한정하여 현재보다 20만원 정도 수당금액을 인상할 경우 단기와 중장기적 재분배효율성은 물론 성장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수당금액 인상에 따른 추가 재원조달 부담을 고려하여 동 집단에 대한 인상수준을 10만원으로 설정한 경우 성장기여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장기적 재분배효율성에 있어서는 전자에 비해 다소 우

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보육료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했을 때, 만 0~2세에 대한 지원단가 10만원 인상 시 성장과 분배 양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정책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필요한 보육시설 이용을 줄이고 기대하는 보육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만 0~2세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액을 현재보다 최소 10만원 정도 인상해야 한다. 그리고 이의 정책적 실행에 있어서는 자녀 양육행태에 ‘되먹임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적 부담을 고려한 점진적 단가인상은 지양해야 한다. 둘째, 정책적으로 저출산 대응성 강화를 목적으로 할 경우, 현행의 아동 연령별 차등 지급되는 수당체계와 구분되는 다자녀 가구 지원이나 출산연령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인센티브 체계를 고안할 필요가 있다.

*주요용어: 가정양육수당, 영유아 양육비, 보육재정, 아동수당, 텍스트마이닝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방법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정부의 복지정책은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사회경제적 활동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이들이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여러 가지 위험요인들을 사전적·사후적으로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사회통합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사회경제의 지속적인 균형발전을 추구한다. 개인과 가구를 정책의 수혜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책기능의 수행은 필연적으로 대규모 재정지출을 수반하는데, 투자비용 대비 효과성 측면에서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가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생애초기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개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바, 이러한 측면에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인 저출산·고령화 현상 극복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영유아에 대한 보육지원이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00년대 중반 이후 미취학 아동에 대한 투자를 큰 폭으로 확대하였는데, 2013년부터는 전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미취학 아동에 대한 이른바 ‘무상보육’이 시행되고 있다. 그 이면에는 근로세대의 출산과 보육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인하고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경제 전체의 생산성 제고를 궁극적 목적으로 하는 정책적 의지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 하에 지난 2006년부터 보육시설 확대와 영아보육에 대한 기본보조금 지원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어린이집 보육료지원 확대(0~2세 전액지원), 2009년 차상위 이하 만 0~1세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지원 제도 시행, 2012년 3월 만 5세 누리과정 도입에 이어 이듬해에 3~4세까지 누리과정 확대와 함께 전 소득계층에 대한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자녀 양육과 관련한 정부 지원 정책이 조응하면서 영유아 보육료지원과 가정양육수당 지원 제도를 중심으로 단기간에 관련 재정규모가 급증하였다. 2004년 1조 5,182억 원에 불과하던 영유아 보육(국고+지방비)과 유아교육(지방재정교부금)예산은 2014년 현재 약 12조 4,647억 원에 이른다. 직장어

린이집지원이나 육아휴직 급여와 같은 고용보험기금이나 여성발전기금 사업까지 고려할 경우 전체 보육관련 재정규모는 13조 680억 원에 달한다. 이중 영유아 보육료 지원(5조 701억 원)과 가정양육수당 지원(1조 8,916억 원)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소관 보육관련 예산은 지방비 합산 총 8조 5,671억 원으로 전체 영유아 보육 및 교육재정의 약 66%를 차지한다(<표 2-4>참조). 이와 같은 보육재정의 급증은 주로 어린이집 지원을 중심으로 한 보육시설 이용 아동에 대한 지출 확대에 크게 기인하고 있다. 그러나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이나 공공보육인프라 구축 이전에 민간자원에 의존한 외연적 성장을 거듭하면서 비용 대비 효과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노정하며 최근 복지논쟁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영아의 가정 내 양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잘 키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부모들도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지원액 간의 격차로 인하여 가정양육보다는 시설양육을 선호하고 있는데, 실제 정부의 보육료 월 지원 액수는 2015년 현재 만 0세 77만 8천원, 만 1세 53만 7천원, 만 2세 41만 3천원인데 반하여 가정양육수당은 만 0세 20만원, 만 1세 15만원, 만 2세 10만원으로 현저히 낮은 양상이다.

만 0~2세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200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05년 20.0%에서 2009년 41%, 2011년 54%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만 0~2세 영아에 대하여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기 시작한 2012년에는 63%로 급증하여 2014년 현재에는 65%에 이른다(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각 년도).¹⁾ 여성고용률이 높고 공보육제도가 성숙한 스웨덴의 경우에도 2013년 현재 영아 보육시설 이용률이 47.3%²⁾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비추어보면, 우리나라의 영아 시설이용은 이례적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에 반하여 시설보육의 질은 최근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한 영역임은 분명하다. 더불어 미취업모의 보육시설 이용이 증가³⁾하면서 실제로 이에 대한 수요가 가장 큰 맞벌이 부모의 서비스 접근이 제약받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설보육과 관련한 문

1) 2012년부터 가구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0~2세와 만 5세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이 시행되었고, 2013년 만 3~4세로 확대되어 현재에 이른다.

2) OECD Family Database(www.oecd.org/social/family/database.htm 접속일 2015.10.13.)

3) 이영옥(2015)은 2009년과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데이터를 통해 2012년 영아 무상보육 실시로 취업모와 미취업모 모두 보육시설 이용이 증가하였는데, 미취업모의 경우 시설보육이 자녀 직접양육시간을 대체하였음을 밝혔다.

제는 가정 내 보육과 시설보육 지원 간의 격차로 인한 시설보육 중심의 현 보육지원체계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근간에는 보육지원을 통해 기대하는 사회경제적 성과와 필요재원에 대한 충분한 검토에 기초하여 명료하게 설정된 정책방향과 목적성의 결여가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복지정책의 큰 틀 속에서 정부 보육지원의 한 축을 담당하는 가정양육수당의 개념과 정책목적의 재조명하고, 보육재정의 효율적·합리적 집행을 통해 저출산·고령화문제에 직면하여 건전한 미래 세대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가정양육수당 제도의 발전방향과 구체적 실행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에 본 연구는 보육료 지원과 가정양육수당 간의 형평성을 강화하고, 적절한 재정적인 지원을 통하여 바람직한 수준으로 가정 내 양육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부모의 취업 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의 적정 가정양육수당 산출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연구 방법

상기의 연구목적을 위하여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보육재정 규모와 지급구조를 살펴보고, 지급방식의 효과성 관련 이론분석을 통해 서비스 중심 지원체계의 한계를 진단해 본다. 선진국의 가정양육수당 제도 실태와 정책효과성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제3장에서는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의 가정양육수당 제도 도입배경과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된 쟁점을 분석한다. 특히 정책효과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통해서 국내 가정양육수당 지원 제도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발전방향의 큰 틀을 도출해 보았다. 제4장은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하여 가정양육수당 관련 동향 파악, 만족도 분석, 가정양육수당의 불만족 이유와 사용처를 분석 하였다. 제5장은 적정 가정양육비용 추정을 위해 만 0~5세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설문조사에 대한 심층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제6장에서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와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영유아의 양육비지출 수준을 추정하고, 정책기별별 가정양육수당 인상 시나리오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모의실험을 통해 적정 가정양육수당지원 수준을 파악하였다.

제 2 장

자녀 양육·보육지원 정책 현황

제1절 재정지원의 목적과 유형

제2절 보육재정 규모와 지출 현황

제3절 보육지원 형태와 정책효율성에 관한 이론적 검토

2

자녀 양육·보육지원 정책 현황 <



제1절 재정지원의 목적과 유형

정부의 자녀 양육·보육지원은 가족정책의 한 축을 구성하는 제도로서 현대 복지국가의 대표적 정책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대규모 재정지출을 수반하고 있다. 정부의 가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기본적으로 자녀가 있는 가정과 자녀가 없는 가정과의 생활상태 또는 구매력 격차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여 아동발달을 위한 부모의 물질적·정신적 투자를 보조하는 것이다. 이때 정부의 재정지원 형태는 현금, 현물 및 시간지원으로 구분된다. 현금지원의 전형적인 유형으로는 가족수당(Family benefit)이나 아동수당(Child benefit or allowance), 가정양육수당(Child home care allowance), 주택수당(Housing allowance) 등을 들 수 있으며, 현물급여로는 보육서비스(Child care service)나 주거지원과 같은 바우처 형태가 있다. 한편, 시간지원은 주로 고용보험의 형태로서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모성휴가, 부성휴가, 육아휴직 등이 대표적이며, 이 같은 시간지원은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일종의 현금 급여로도 분류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이들 세 가지 유형의 급여들을 사회경제적 여건과 정책적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혼합하여 활용하고 있다. 국가별로 급여의 대상과 범위 또는 요건에 있어서는 편차가 존재하지만 선진 복지국가들의 보육지원체계는 [그림 2-1]의 핀란드 보육지원체계의 구성과 유사하다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림 2-1] 핀란드의 주요 자녀 양육·보육지원 체계의 구성(2015)



자료: www.kela.fi/kotihoiton-tuki_maara(최종접속 2015.9.13.)에 기초하여 작성

구체적으로 핀란드의 주요 자녀 양육 관련 정책 지원 제도를 보면, 우선 자녀 출산 시 모성급여(Maternity benefit)로 €140의 일시금 또는 그에 상당하는 현물을 지원한다. 다자녀 출산의 경우 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하는데, 예컨대 쌍생아 출산 시 부모는 3종류의 물품패키지를 받거나 첫째 자녀와 둘째에게 각각 €140씩 추가로 지급되는 일시금을 포함하여 총 €420의 현금급여를 선택할 수 있다.⁴⁾

이와 별개로 어머니는 출산 전 30~50일, 출산 후 55~75일 사이 주말을 제외한 105일 동안 유급의 모성(출산)휴가(Maternity Leave)를 사용하게 된다. 자녀 출산 후 약 9주간 아이 아버지는 부성휴가(Paternity Leave)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기간 중 약 3주(18일) 간은 부모가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으나 나머지 36일은 어머니가 휴가를 받지 않는 기간이어야 한다. 모성(출산)휴가를 마치고 생후 3~9개월인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부 또는 모는 부모휴가(Parental Leave)를 신청할 수 있는데 휴가기간은 아동당 158근로일이 주어지며, 다자녀 가구의 경우 추가 자녀에 대하여 한해 60일을 연장하여 휴가를 쓸 수 있다.⁵⁾

부모휴가가 끝나면 자녀가 취학하기 전까지 1) 무급육아휴직을 받아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가정양육수당을 받거나 2) 사설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거나, 3)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길 수 있다.

4) 쌍생아 출산의 경우 자녀 출산에 대한 기본적인 물품패키지 또는 출산일시금 €140를 지급하고, 아동 1인당 물품패키지 또는 €140을 지원하게되는 구조임.

5) 예, 1자녀 158일, 2자녀(쌍생아) 158+60일, 3자녀(세쌍둥이) 158+60+60일 등

아이가 만 3살이 될 때까지 어머니나 아버지 한 사람은 무급육아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아이를 공공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돌보는 만 3세 미만의 가정에 대해 시당국이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을 받아 자녀를 돌볼 수 있다. 이때 가정양육수당은 부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이 끝나는 시점부터 지급된다. 한편, 사설 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낼 때는 사설아동보육수당(Private child-care allowance)이 지급된다. 또한 만 3세 미만의 자녀를 키우면서 주당 30시간 이하로 일을 하는 부모는 부분양육수당(Flexible care allowance)을 신청할 수 있는데, 2015년 현재 지급기준에 따르면 주당 22.5시간 이하 또는 기준근로시간의 최대 60% 미만 근로 시 €224.18를, 주당 22.5시간 또는 기준 근로시간의 60% 이상~80% 미만 근로 시 €162.78가 지원된다.

그밖에 장애아, 취약계층 아동, 입양아, 한부모가구,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개별적인 프로그램들이 시행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은 아동수당(Child benefits)이 있다. 종종 자녀 양육가구에 대해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급여로서 아동수당과 가정양육수당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전혀 별개의 개념으로서 여기서는 각 국가의 사례에 따라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우선 아동수당(Child benefits)은 보편적으로 모든 아동에게 성인이 되기 전까지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정의된다. 자국 내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는 면에서 보편성이 있으며, 동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의 제도 설계에 따라 아동 연령, 출생 순위, 가구 소득수준별로 지원 액수에 차액을 둔다는 면에서 선별적인 특성이 있다 할 것이다. 대부분의 서구 유럽 국가에서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수차례의 논의가 있어 왔으나 재정적 부담으로 인하여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아동복지국가인 핀란드의 경우 1920년대 자녀를 양육하는 주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하였고, 1948년 다른 노르딕 국가들과 함께 모든 아동을 정책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급여로 법제화되었다. 그 지급 구조를 보면, 생후~만 17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자녀수가 많을수록 수당금액이 커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표 2-1> 핀란드의 아동수당금액 체계(2015년)

자녀수	수당(유로/월)
첫째	95.75
둘째	105.80
셋째	135.01
넷째	154.64
다섯째 이상	174.27

자료: www.kela.fi/kotihoidon-tuki-maara, (최종접속 2015.9.13.)

가족지원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스웨덴의 경우 역시 핀란드와 마찬가지로 출산·육아 관련 유급휴가제도와 함께 자녀 양육가구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보조로서 아동수당과 가정양육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먼저 스웨덴의 아동수당제도는 제1차 세계대전 후 인구감소의 문제에 직면하여 출산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가족수당(family allowance)에서 출발하였다가 1948년 만 16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나 양육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제도가 확대되었다. 현재 아동 당 기본적으로 SEK 1,050이 지급되지만 핀란드와 같이 자녀수가 많을수록 총수급액이 증가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표 2-2> 스웨덴 아동수당금액 체계(2015년)

자녀수	아동수당 (SEK/월)	가구보조수당 (SEK/월)	계 (SEK/월)	유로/월
1	1050	—	1050	112.06
2	2100	150	2250	240.13
3	3150	604	3754	400.65
4	4200	1614	5814	620.51
5	5250	2864	8114	865.98

주: 2015.10.19. 고시환율

자료: [http://www.forsakringskassan.se/sprak/eng/for_families_with_children_\(barnfamiljer\)](http://www.forsakringskassan.se/sprak/eng/for_families_with_children_(barnfamiljer)) (최종접속 2015.10.19.)

그밖에도 노르웨이나 독일, 영국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에서 자국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에 대하여 출생 이후부터 보통은 취업연령 전까지 보편적 소득지원 정책으로 개별적인 아동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표 2-3> 참조).

<표 2-3> 기타 유럽국가의 아동수당제도 현황

국가	수당 금액 적용 연도	자격 연령	지급주기	수당체계
노르웨이	2015	만 18세 미만	월	아동 당 970Kr (약 €105.48)
네덜란드	2015	만 18세 미만	분기	0~5세: €191.65 (월 €63.88) 6~11세: €232.71(월 €77.57) 12~17세: €273.78(월 €91.26) *2014년 1월 이후 현재까지 금액 변동 없음
영국	2015	만 16세 미만	주	첫째아- 주당 20.7파운드(월 약 €112.68) 둘째아 이상-주당 13.7파운드 (월 약 €74.58)
스페인	2015	만 18세 미만	월	소득 및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지급 일반아동 -월 €24.25 장애아동(소득수준 상관없음) 18세 미만 장애율 33% 이상- 연간 €1,000 18세 이상 장애율 65% 이상- 연간 €4,402.80 18세 이상 장애율 75% 이상- 연간 €6,604.80
아일랜드	2015	만 16세 미만 (학생, 직업훈련 또는 장애가 있을 경우 만 18세 미만)	월	아동 당 €135 쌍생아- 아동 당 수당금액의 150% 지급(€135×1.5) 세쌍둥이 이상- 아동 당 수당금액의 200% 지급
덴마크	2013	18세미만 아동, 연령별 차등 지급	분기 & 월	0~2세: 분기 당 DKK 4,299 (€542) 3~6세: 분기 당 DKK 3,402 (€429) 7~14세: 분기 당 DKK 2,679 (€338) 1~17세: 매 월 DKK 893 (€113)
독일	2014	만 18세 미만	월	-기본수당 자녀수 1명: €184 2명: €368 3명: €558 3명 이상 추가자녀 당: €215 (첫째아 둘째아 각 184, 셋째아 190, 넷째 이상부터 각 215) -보조수당 부모소득수준에 따라 아동 당 최대 €140

주: 노르웨이, 네덜란드, 영국, 스페인의 경우 2015.10.19. 고시환율 기준 유로화 환산금액임
자료:

1) 노르웨이

<https://www.nav.no/no/NAV+og+samfunn/Kontakt+NAV/Utbetalinger/Snarveier/Satser.380089.cms?kap=380093>(최종접속 2015. 10.19)

2) 네덜란드

https://www.svb.nl/int/en/kinderbijslag/betaling/hoeveel_kinderbijslag_krijgt_u/index.jsp(최종접속 2015.10.19)

3) 영국 정부 <http://www.gov.uk/child-benefit-rates>(최종접속 2015.10.19)

4) 스페인

http://www.seg-social.es/Internet_6/Trabajadores/PrestacionesPension10935/Prestacionesfamilia10967/Prestacioneconomica27924/Cuantias/index.htm(최종접속 2015.10.19.)

5) 아일랜드 <http://www.welfare.ie/en/Pages/Child-related-payments.aspx>(최종접속 2015.10.19)

6) 덴마크 EC(2013) Your Social Security rights in Denmark, Employment, Social Affairs & Inclusion. (p. 24)

7) 독일 Alexander von Humboldt(2015) Child benefit according to German law or substitutional payment by the Alexander von Humboldt Foundation respectively

한편, 가정양육수당(Child care allowance)은 모든 아동이 국가가 제공하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는 근거 하에,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자녀를 돌보는 가족에 대한 보상 또는 자녀양육 행태별 지원 간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도입된 수당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이 바로 이 유형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7월부터 동 제도가 시행되었는데, 당시 도입 취지는 보육 시설 낙후 지역에 거주하여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최근 전 계층에 대한 무상보육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불필요하게 시설을 이용하는 부모의 가정 내 양육을 유도하는 정책적 수단으로서의 가능성에 대해 주목을 받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스웨덴이나 독일 등에서는 자녀가정양육수당(Child raising allowance)이라 불리기도 하는데, 이는 취업부모가 자녀를 위해 일을 중단하고 자녀를 양육할 때 지원하는 현금급여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가정양육수당과 다소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핀란드나 독일 등의 국가에서는 모성 휴가가 끝나고 나서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를 자녀가정양육수당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후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스웨덴의 경우 부모의 자녀 돌봄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에 따라 육아휴직이 끝나고 나서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 휴직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동 기간 동안 자녀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반면에 프랑스에서는 취업여성이 휴직하고 직접 자녀를 돌볼 때 지급하는 보조금(Complément de libre choix d'activité: Clca, 우리나라의 육아휴직급여에 해당함)과 휴직하지 않고 계속 직장을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아이돌보미를 고용할 때 지급하는 보조금(Complément de libre choix de mode de garde: Cmg, 우리나라의 아이돌보미 제도와 유사)도 모두 가정양육수당으로 보고 있다.

제2절 보육재정 규모와 지출 현황

2004년 1조 5,182억 원에 불과하던 영유아 보육(국고+지방비)과 유아교육(지방재정교부금)예산은 2015년 현재 약 12조 1,095억 원으로 급증하였다.⁶⁾ <표 2-4> 영유아 양육·보육관련 재정사업 세부현황에서 볼 수 있듯이 직장어린이집지원이나 육아휴

직 급여 등 고용보험기금, 여성발전기금 사업을 비롯하여 복지부 이외 타 부처 관련 예산사업까지 고려할 경우 전체 재정규모는 2015년 현재 13조 2,5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 중 영유아 보육료지원(4조 5,545억 원)과 가정양육수당지원(1조 6,783억 원)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소관 보육 관련 예산이 지방비 합산 총 7조 8,248 억 원으로 전체 영유아 보육 및 교육재정의 약 59%를 차지하고 있다.

급여 형태별로 보면, 현금지원이 2조 5,775억 원에 불과한 반면, 총 보육재정의 80.5%(10조 6,725억 원)가 현물서비스 형태로 지출되고 있다. 이를 재원별로 보면, 가입자기여금에 기반 한 사업비가 8,956억 원이고 세입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사업 지출이 12조 3,544억 원으로(93.2%) 사실상 대부분의 영유아 보육·교육지원 사업이 조세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중앙정부 소관부처별 시행하고 있는 관련 사업들을 살펴보면, 먼저 고용노동부의 경우 자녀 출산·양육에 따른 근로자의 소득보장(육아휴직 등) 관련 지원과 함께 예산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을 보조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역시 고용노동부와 마찬가지로 일-가정 양립 지원을 주요 정책목표로 하는 사업들을 시행중에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경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내용을 보면 보육서비스 확충 및 보육의 질 개선·관리를 중심으로 하면서 보완적 차원에서 가정양육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급여를 지원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자녀양육에 대한 선택권 강화와 보육의 질 제고, 양육부담 완화를 통한 일-가정 양립지원과 아동발달지원 등 영유아 보육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목표를 포괄적으로 동시에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Box 1참조).

6) 현재 파악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보육 관련 사업비가 제외된 규모로 <표 2-4>의 보건복지부 소관 일반회계 사업과 지방교육청 유아교육 예산의 합계이다.

<표 2-4> 2014·2015년도 영유아 양육·보육 재정사업 소관별 세부내역(예산+기금)

(단위: 억원)

소관부처	회계	프로그램	세부사업/내역	2014 예산		2015 예산	
				국가	지방	국가	지방
국세청	일반	국세행정지원	직장어린이집운영	12.2	-	17.1	-
			직장어린이집지원	789.8	-	909.1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기금	고용평등실현	-공공보육시설운영지원	90.7	-	89.8	-
			-직장어린이집설치지원	236.8	-	287.1	-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지원	447.3	-	515.7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15.1	-	16.5	-
			모성보호육아지원	6,982.1	-	8,046.7	-
			-출산전후휴가급여	2,595.6	-	2,595.6	-
			-유산사산휴가급여	7.2	-	4.1	-
			-육아휴직급여	4,345.7	-	5,381.2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33.7	-	65.8	-
교육부 (지방 교육청)	시도교육 비특별 회계 ^{1) 2)}	교수학습활동 지원	유아교육진흥	-	3,590.9	-	3,365.7
			-유아교육지원	-	245.8	-	229.5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	815.7	-	765.3
			-사립유치원지원	-	2,412.3	-	2,290.7
			-유치원교육여건개선	-	117.2	-	80.0
		교육복지지원	누리과정지원	-	32,658.0	-	39,481.7
농림축산 식품부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농촌복지증진	농촌보육여건개선	294.0	na	291.0	na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지원	14.8	-	-	-
			-농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지원사업	279.1	-	-	-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보육지원강화	보육돌봄서비스	4,671.1	6,051.5	4,969.5	5,383.6
			-국공립법인어린이집	3,047.7	-	3,274.2	3,547.0
			-영아전담어린이집	606.3	-	593.3	642.8
			-장애아전문어린이집	352.4	-	385.4	417.5
			-방과후교사	9.6	-	8.1	8.7
			-시간연장형교사	507.7	-	538.6	583.5
			-장애아통합교사	107.6	-	126.9	137.5

			-대체교사인건비	39.8	-	43.1	46.6
			영유아보육료지원	33,292.3	17,408.8	30,473.7	15,071.3
			-0~2세보육료	29,430.0	-	29,694.0	-
			-3세보육료	2,948.0	-	-	-
			-장애아보육료	461.0	-	399.0	-
			-시간연장형보육료	452.0	-	380.0	-
			-맞춤형보육지원개편시범사업	0.0	-	20.0	-
			시간차등정보육	38.0	30.2	74.4	74.4
			-경상보조	38.0	30.2	71.4	71.4
			-자본보조	-	-	3.0	3.0
			어린이집기능보강	71.4	71.4	67.9	67.9
			어린이집확충	352.9	352.9	334.5	334.5
			보육사업관리	16.5	-	14.1	-
			육아종합지원센터지원	45.8	47.6	37.1	39.0
			-경상보조	25.8	27.6	27.1	29.0
			-자본보조	20.0	20.0	10.0	10.0
			어린이집교원양성지원	11.2	11.5	11.3	11.6
			보육프로그램개발및연구	2.1	-	-	-
			보육전자바우처운영	69.1	-	61.9	-
			부모모니터링단운영지원	12.9	12.9	13.2	13.2
			공익제보자신고포상금	5.0	-	4.0	-
			어린이집평가인증운영	86.0	-	84.5	-
			어린이집지원	1,505.3	1,897.3	1,776.4	1,748.8
			-교재교구비	88.9	112.5	88.9	88.9
			-차량운영비	49.4	54.7	49.4	49.4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356.4	1,719.4	1,522.3	1,498.0
			-교사겸직원장지원비	-	-	105.1	101.8
			-농어촌법인이 어린이집지원	10.7	10.7	10.7	10.7
			공공형어린이집	375.3	315.7	430.7	368.0
			-운영비지원	375.3	315.7	430.7	368.0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	12,153.2	6,762.9	11,017.7	5,765.0
여성	일반회계	가족기능강화	아동양육지원(2015년 아이돌봄지원으로 단위사업명 변경)	756.7	426.6	787.2	407.7

24 영유아 적정 가정양육비용 산출을 위한 통계자료 분석

가족부 ³⁾			-아이돌봄지원	749.7	422.6	787.2	404.0
			·영아종일제돌봄	114.0	-	134.0	-
			·시간제돌봄	525.5	-	460.0	-
			·아이돌보미양성및관리	34.0	-	93.7	-
			·서비스기관운영	69.7	-	69.7	-
			·중앙사업관리	6.6	-	-	-
			-공동육아나눔터지원 (2015년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세부) 중 내역사업화)	7.0	4.00	6.5	3.7
			·공동육아나눔터운영	6.5	-	-	-
			·공동육아나눔터사업관리	0.5	-	-	-
	여성발전 기금	가족기능강화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등지원	475.2	172.5	680.8	247.2
			-아동양육비	467.2	169.52	670.0	243.2
			-추가아동양육비	8.1	3.0	10.8	4.0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	11.6	5.1	12.1	5.3
			-아동양육비	11.6	5.1	12.1	5.3

주: 1)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상 인적지원운용 항목에 포함되는 유치원교사, 기간제 시간제교사 등의 인건비 및 교원 역량강화 지원비용은 별도 예산규모 산출이 어려워 제외하였음.

2) 2014년도 예산은 17개 시도교육청 2015년도 본 예산상 확인되는 2014년도 확정 예산규모를 합산한 값임. 2015년도 예산규모는 경기(3차 추경), 강원(2차 추경) 및 나머지 15개 시도 제1차 추경예산의 합산으로 저자 직접 계산.

3) 여성가족부 소관 사업 지방비는 2013년도 안전행정부 국고보조사업 전수조사 상 확인된 사업비 분담률을 적용하여 저자 직접 계산.

자료:

1) 교육부: 각 시도 교육청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 세출예산서 각 연도(추경예산서 포함, 자료다운로드 2015.9.1.)

2) 보건복지부소관 국비 및 지방비 규모: 복지부 내부자료, 2015년 국고보조사업 예산현황(2014.12.30.)

3) 농림부, 고용부, 여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사업 규모: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14년도 국회 확정예산, 대한민국정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각 권; 각 소관부처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BOX 1. 소관 부처별 시행 사업 목적]

[고용노동부]

□ 직장어린이집지원

<공공보육시설운영지원>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해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 여성근로자의 육아부담 해소 및 고용안정에 기여
- 직장어린이집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에 대한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및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직장어린이집의 설치확대 유도 및 운영의 내실화 도모
-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보육수요조사·시설규모 결정·설치공사 자문·인력채용 지원·지원신청 안내 및 특수보육프로그램 개발·지원, 보육교사 교육 지원 등

<직장어린이집설치지원>

- 직장어린이집의 시설전환비 및 교재교구비 지원을 통하여 직장어린이집 확충을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지원>

- 여성의 고용기회 확대와 취업여건 개선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게 보육교사 등의 임금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와 어린이집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게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어린이집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 모성보호육아지원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통한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도모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급여를 지원하여 출산양육부담이 가중되는 취업여성의 경력단절현상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보육여건개선>

-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 지역에 공동아이돌봄센터 시설 및 운영비 지원과 농촌의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에게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농촌의 보육여건을 개선

[보건복지부]

□ 영유아보육료지원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 가정양육수당지원

- 가정 양육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부모의 선택권 강화

□ 보육돌봄서비스

<국공립·법인, 영아전담·장애아전문 어린이집>

- 저소득주민 밀집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에 주로 위치하는 국공립 등 어린이집과 취약보육(영아·장애아) 담당 어린이집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대체교사인건비>

- 보육교사가 연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결원 시 대체교사를 지원하여 보육서비스의 공백 해소

□ 어린이집지원 & 공공형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 법인,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교재교구비 지원 및 농어촌지역, 장애아전담 어린이집에 대한 차량운영비 지원을 통해 어린이집 입소아동에 대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및 시설운영 개선 도모

<교사근무환경개선비>

- 보육교사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

- 보육수요가 낮아 운영이 어려운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에 운영비 지원

□ 기타

- 시간차등형보육, 어린이집기능보강, 어린이집확충, 보육사업관리, 육아종합지원서비스제공, 어린이집교원양성지원,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15 순감), 보육전자바우처운영, 부모모니터링단운영, 공익제보자신고포상금, 어린이집평가인증운영

[여성가족부]

□ 아이돌봄지원('14년도사업명 아동양육지원)

-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취업부모 등의 자녀 양육부담 경감 및 일-가정양립 지원; 지역사회 중장년 여성에게 양육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 제공

□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등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최저생계비 130%이하, 기초수급자 제외)에게 아동양육비 및 아동교육비(학용품비 등) 지원으로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
 - 아동양육비-만 12세 미만 아동 월 7만원 지급
 - 추가아동양육비-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5만원 지급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아동양육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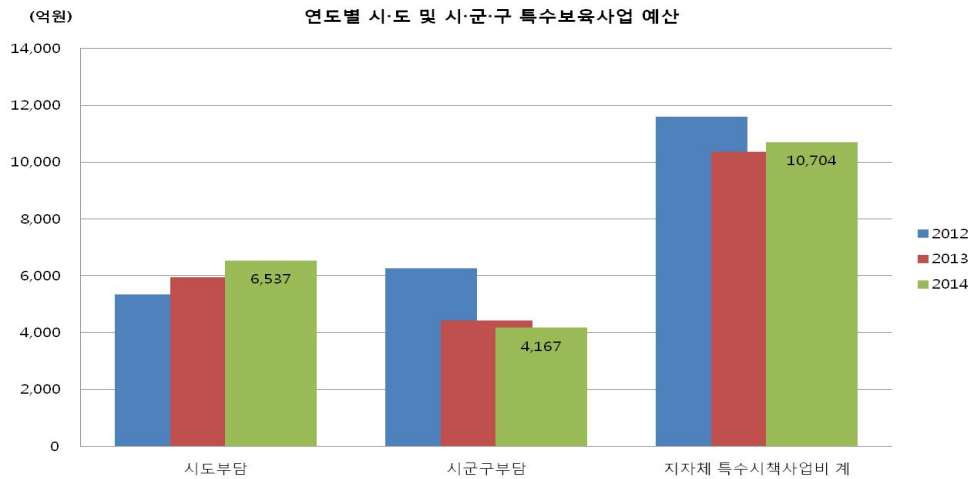
- 입양 대신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청소년한부모 가구주의 역량강화 및 자립여건 개선과 함께 이들의 자녀양육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
 - 0~5세 대상 예산구분이 어려워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지원사업 제외

자료: 2014년도 소관 부처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한편, 상기에 제시된 보육재정 규모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유아 특수 자체사업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보육정책의 확대와 그에 수반되어 보육재정이 급증하면서 최근 누리예산 갈등과 같이 중앙과 지방간 비용분담을 둘러싼 대립이 고조되고 있으나, 지자체 자체 특수사업비 지출은 연간 1조 원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표 2-5>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자체 특수사업이라 할지

라도 대부분이 현재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에 있는 사업들과 크게 차별되지 않는 유사한 성격의 사업들로서 보육서비스 지원 위주로 추진되고 있다.

[그림 2-2] 연도별 시·도 및 시·군·구 특수보육사업 예산



자료: 보건복지부(2014). 2014 보육예산(내부자료),
이정원·이혜민(2014). 2014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p.73 표 재인용

<표 2-5>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특수시책현황

구분	특수보육시책
서울	천 가지귀 지원, 보육인의 날 행사지원,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지원, 보육시설 배상보험 지원, 서울형 어린이집 환경개선, 서울상상나라 건립운영, 보육시설 기능보강, 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안심보육모니터링단 운영, 우수보육시설인센티브 지원, 서울형 어린이집 재평가, 보육포털시스템 전면 개편 추진, 영유아 생태체험 프로그램,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장난감 대여소 운영, 장난감 나눔 및 시간제 돌봄센터 운영
부산	어린이집 현장학습 및 문화행사비 지원, 정부지원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정부지원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복지수당 지원, 평가 재인증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공수당, 장애전담어린이집 보육교사 특수수당, 영아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민간어린이집 공보육운영 지원, 초등학교내 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 야간어린이집 폴리스쿨 운영, 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 보육유관기관 단체지원, 시간제 대체교사 운영, 보육지원센터 운영, 보육교직원승급교육, 자원봉사대학생 지원, 어린이집 CCTV설치 지원, 시청어린이집 위탁운영, 직장어린이집 기능보강,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 운영, 보육교직원 맞춤형 교육 및 평가인증, 맞춤형 보육장학제 운영
대구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활성화, 장애아 보육교직원 특별수당, 보육시설 종사자 연찬회, 시청 어린이집 운영지원, 보육교사 근로환경 개선 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수 등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지원사업,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인천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보육정보사업, 보육시설지원 사업, 컨설팅사업, 육아지원사업, 교재교구 대여, 보육정보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만 5세아 공통과정 직무교육
광주	보육시설평가인증조력지원, 보육인 역량증진, 보육시설 아동 현장학습, 보육시설안전공제, 보육도우미과건, 보육교사 명절수당

대전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어린이집 교원 교육, 영유아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보육교직원 특별수당, 저소득보육아동 간식비, 시 영유아지원센터 운영, 저소득층아동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보육정보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보육교재교구개발평가 및 전시회, 보육도우미 인력은행지원, 보육시설 평가인증 조력지원, 보육아동 작품전시회 및 장기경연대회, 보육시설 도서구입비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보육교사시간외 근무수당, 평가인증어린이집 프로그램 개발비운영비, 영유아보육수범 도시육성 홍보물 제작, 보육사업지침 및 교재인쇄, 보육정책위원회의참석 수당, 보육사업추진 여비, 어린이집연합회(사회단체보조금)
울산	-
세종	보육의 날 행사, 영유아 급·간식비 지원,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인건비지원시설 교재교구비, 법정저소득층 차액보육료, 평가인증 보육시설 보조교사 지원, 보육기자재 구입,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 새싹한마음가족축제, 어린이집 교사 교육 지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장기근속수당, 도시지역근무수당, 어린이집 원장 연찬회
경기	보육정책위원회, 경기 보육인대회, 보육교직원 연찬회, 보육교재교구 경진대회, 보육교사교육원 실기연구 발표회 및 세미나, 도 보육정보센터 지원(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 도 보육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영유아인성예절교육원 설치 운영, 아이사랑 육아사랑방 설치운영
강원	-미취합-
충북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 유아기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뮤지컬 순회공연, 보육인의 날 행사지원, 평가인증 조력 사업지원, 보육시설 다문화 영유아를 위한 교육지원, 보육시설 도서관난감 구입,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 평가인증시설 참여 수수료 지원, 평가인증시설 환경개선비 지원, 장애아전담시설 운전원인건비 지원, 보육사업 안내 책자 유인,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공제료 지원,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지원
충남	-
전북	보육인 한마음대회, 보육교사 양육기술향상교육, 보육시설 기능보강, 학부모를 위한 보육사업 설명회
전남	어린이집 평가인증 조력사업비 지원, 보육교직원 한마음 대축제, 어린이집원장연찬회, 다문화가정 영유아 어린이집 종사자 교육
경북	어린이집 연합회 운영, 어린이집 분과 위원회 워크숍, 우수 교재교구 경진대회지원, 장애 비장애 통합 프로그램, 어린이집 활성화 프로그램, 보육정책 홍보, 평가인증 조력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집 부모 교육, 보육정보센터 프로그램 운영, 장애아 보육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집 교직원 순회 교육, 다문화 보육 프로그램운영
경남	평가인증 조력비 지원, 보육시설 단체 운영 및 행사 지원
제주	유아축구 대회 지원, 제주 삼다 공동 육아 운동 프로그램 운영, 장애아 통합 보육지원센터 지원, 보육인 한마음 대회, 영유아 세시풍속 전통 문화체험사업, 예비 부모 아카데미 운영, 원장 교사 역량 강화사업구분 특수보육시책

자료: 보건복지부(2014).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특수시책현황(내부자료),
이정원·이혜민(2014). 2014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p.76 표 재인용

이상의 보육재정 규모 및 구조 그리고 사업구성을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자녀양육 지원 정책은 특히 민간전달체계에 의존하는 시설보육서비스 중심 지원체제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표 2-6>의 연도별 유치원 및 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과 [그림 2-2] 이용 영유아 수 추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93년 이후 유치원과 어린이집 설치 개소 수 추이에 따르면, 유치원의 경우 지난 20년간 부침을 겪으면서 매우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어린이집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현재 43,742개에 이른

다. 특히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민간보육시설 수 확대에 병행하여 입소 영유아 수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수가 가장 급격히 증가하여 2014년 현재 1,495,710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1993년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153,270명의 약 10배에 이르는 규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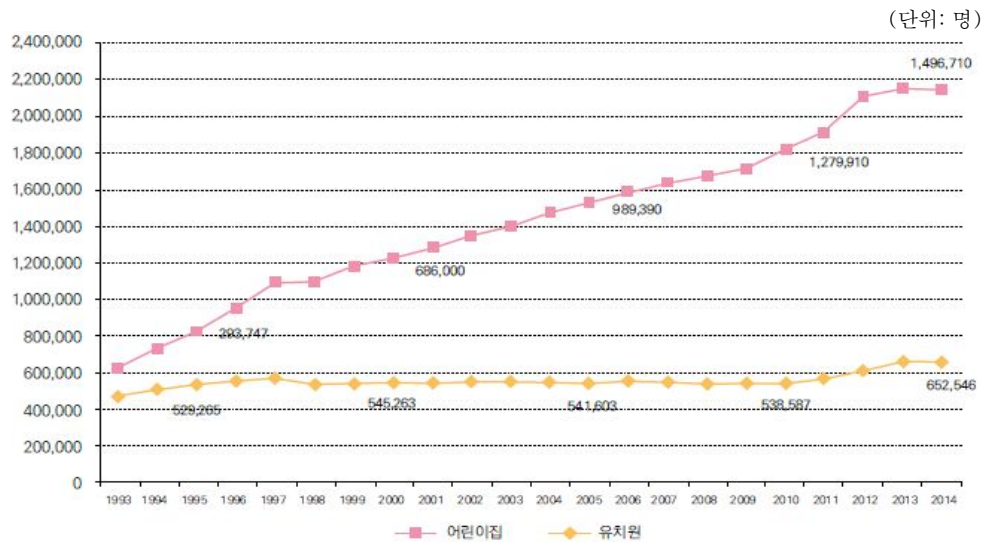
<표 2-6> 연도별 유치원 및 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

(단위: 개)

	유치원				어린이집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1993	8,515	1	4,513	4,001	5,490	837	624	19	1,776	2,205	미분류	29
1994	8,910	1	4,460	4,449	6,975	983	807	17	2,267	2,864	미분류	37
1995	8,960	1	4,416	4,543	9,085	1,029	928	22	3,175	3,844	미분류	87
1996	8,939	1	4,392	4,546	12,098	1,079	1,280	69	4,688	4,865	미분류	117
1997	9,005	3	4,419	4,583	15,375	1,158	1,634	150	6,388	5,887	미분류	158
1998	8,973	3	4,452	4,518	17,605	1,258	1,927	227	7,468	6,541	미분류	184
1999	8,790	3	4,348	4,439	18,768	1,300	1,965	266	8,327	6,703	미분류	207
2000	8,494	3	4,173	4,318	19,276	1,295	2,010	324	8,970	6,473	미분류	204
2001	8,407	3	4,207	4,197	20,097	1,306	1,991	313	9,490	6,801	미분류	196
2002	8,343	3	4,237	4,103	22,147	1,330	1,633	575	10,471	7,939	미분류	199
2003	8,292	3	4,281	4,008	24,142	1,329	1,632	787	11,225	8,933	미분류	236
2004	8,246	3	4,325	3,918	26,903	1,349	1,537	966	12,225	10,583	미분류	243
2005	8,275	3	4,409	3,863	28,367	1,473	1,495	979	12,769	11,346	42	263
2006	8,290	3	4,457	3,830	29,233	1,643	1,475	1,066	12,864	11,828	59	298
2007	8,294	3	4,445	3,846	30,856	1,748	1,460	1,002	13,081	13,184	61	320
2008	8,344	3	4,480	3,861	33,499	1,826	1,458	969	13,306	15,525	65	350
2009	8,373	3	4,490	3,880	35,550	1,917	1,470	935	13,433	17,359	66	370
2010	8,388	3	4,498	3,887	38,021	2,034	1,468	888	13,789	19,367	74	401
2011	8,424	3	4,499	3,922	39,842	2,116	1,462	870	14,134	20,722	89	449
2012	8,538	3	4,522	4,013	42,527	2,203	1,444	869	14,440	22,935	113	523
2013	8,678	3	4,574	4,101	43,770	2,332	1,439	868	14,751	23,632	129	619
2014	8,826	3	4,616	4,207	43,742	2,489	1,420	852	14,822	23,318	149	692

자료: 육아정책연구소(2014). 2014 유아교육·보육 통계. p.16, 표 I-5재인용.

[그림 2-3]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수(1993~2014)



자료: 육아정책연구소(2014). 2014 유아교육·보육 통계. p.17, 그림 I-7재인용.

2014년 12월 말 현재 주민등록 인구통계상 확인되는 만 0~6세 아동 3,210,156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육시설(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은 66.7%로 나타난다. 연령별로는 0세의 16.1%, 1세 70.1%, 2세 86.3%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으며 만 3세 이상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이 평균 90%에 이른다(육아정책연구소, 2014, p.19).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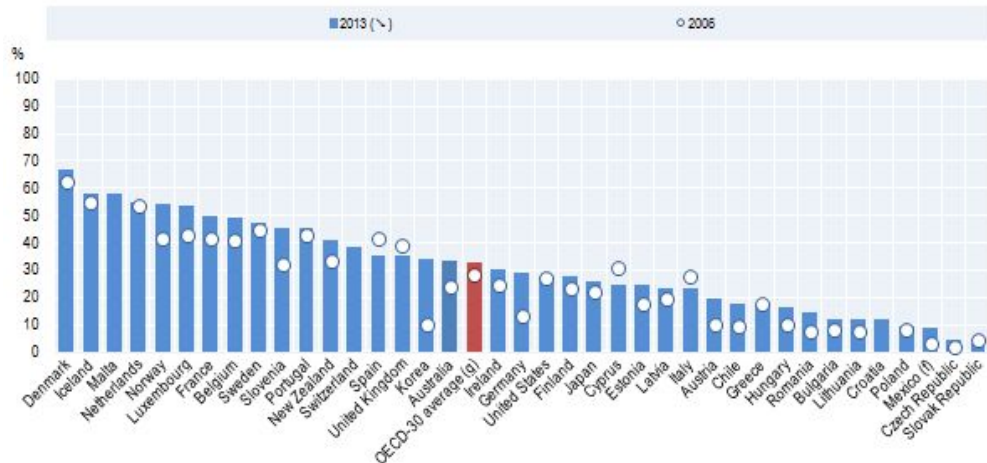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아동발달의 측면에서 가정 내 양육이 바람직한 영아(0~2세)의 시설이용 비율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다는 점이다([그림 2-4]). OECD(2015) 기준에 의한 2013년 현재 영아 보육시설 이용률을 보면 우리나라는 OECD 평균 32.9% 보다 높은 34.1%에 이른다. 여성고용률이 절대적으로 낮은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한국의 0~2세 보육시설 이용률 수준은 이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2006년과 비교해 보면,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 0~2세 보육시설 이용률 상승이 확인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2006년 대비 23.2%p 상승하여 OECD 국가 중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이 가장 빠르게 확대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여

7) 3세 89.1%, 4세 90.5%, 5세 90.3%.

성 중심의 자녀 양육문화를 갖고 있으면서 여성고용률 또한 낮은 국가인 이탈리아('13년 23.1%)나 그리스('13년 16.1%)의 경우 0~2세 보육시설 이용률이 하락한 것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2-4] OECD 국가의 0~2세 보육시설 이용률 추이(2006,2013)



자료: OECD Family Database <http://www.oecd.org/social/family/database.htm> (최종접속 2015.10.20.)

이와 같은 영아(0~2세) 보육시설 이용에 있어서의 이례적 증가는 1세와 2세 아동들의 어린이집 이용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그림 2-4]).

물론 그 직접적인 원인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정부의 시설보육지원 중심의 정책 확대에 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여기에 더하여 양육행태에 따른 지원단가의 차이로 인하여 부모의 선택이 시설보육으로 유인되는 불평등 단가체계의 영향도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림 2-5] 연령별 어린이집 이용률 추이(2008~2014)



자료: 육아정책연구소(2014). 2014 유아교육·보육 통계. p.22, 그림 I-11재인용.

<표 2-7> 영유아 연령별 및 기관유형별 부모보육료 지원단가(2015)

(단위: 원/월)

대상연령	지원단가(원/월)		
	어린이집 (보육료지원 종일반)	유치원	
		국공립	사립유치원
만 0세	406,000	—	—
만 1세	357,000	—	—
만 2세	295,000	—	—
*만 3세	220,000	60,000	220,000
*만 4세	220,000	60,000	220,000
*만 5세	220,000	60,000	220,000
방과 후 과정비	70,000	50,000	70,000

주: * 만 3~5세 보육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액부담
자료: 보건복지부 2015년도 보육사업안내(2014.4 p.272).

<표 2-7>은 유아학비·보육료(누리과정)과 보육료지원 대상 연령 및 금액('15.3.1일 이후 적용)을 보여준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한 보육료지원(통칭 부모보육료)의 경우 종일·야간 동일한 단가가 적용되는데 만 0세가 406,000원, 1세 357,000원, 2세 295,000원이고 24시간 지원 단가는 각각 609,000원, 535,500원, 442,500원이다. 만 3세 이상 어린이집이용 아동의 경우 종일·야간 모두 220,000원으로 동일하고 24시간 지원 단가는 330,000원이다. 한편, 정부지원어린이집을 제외하고, 민간·가정·직장·부모협동 어린이집 중에서 0~2세 영아나 장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으로 기본보

육료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인건비 미지원 장애아전문어린이집 포함) <표 2-8>의 원아 1인당 기본보육료가 추가로 지원된다.

<표 2-8> 기본보육료 지원 단가(1인당)

(단위: 원/월)

대상연령	일반	장애아
만 0세	372,000	372,000
만 1세	180,000	
만 2세	118,000	

자료: 보건복지부 2015년도 보육사업안내(2015.4; p.320)

한편, '09년 차상위 이하 0~1세 양육가구를 대상으로 도입된 가정양육수당제도는 '11년 대상 확대에 따른 지원 액수 차등 상향 조정 이래 단가가 동결되어 있다(<표 2-9>).

<표 2-9> 연도별 가정양육수당

(단위: 원)

연령 (개월)	가정양육수당(월)		
	2009~2010	2011~2012	2013~2015 (전 소득계층)
0~11	100,000	200,000	200,000
12~23	100,000	150,000	150,000
24~35	—	100,000	100,000
36~83	—	—	100,000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각연도

<표 2-10>은 2015년 현재 유형별 가정양육수당 단가현황을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0~11개월까지는 유형별 금액 차이가 없이 동일하지만 연령이 증가함에 따른 감액규모가 다를 수 있다.

<표 2-10> 유형별 가정양육수당

(단위: 원)

연령(개월)	가정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 가정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가정양육수당
0~11	200,000	0~11	200,000	0~35	200,000
12~23	150,000	12~23	177,000		
24~35	100,000	24~35	156,000		
36~83	100,000	35~47	100,000	36~83	100,000
		48~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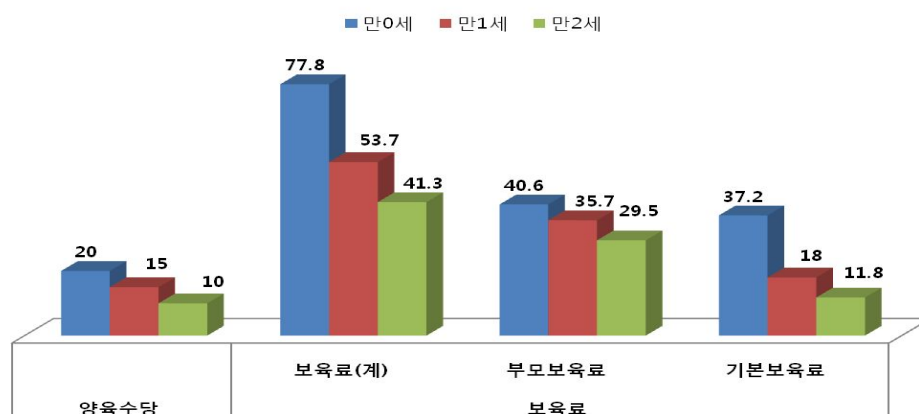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2015년도 보육사업안내(2015.4; p.284)

한편, 0~2세 영아 양육형태에 따라 정부지원 단가를 비교해보면 아래의 [그림 2-5]과 같다. 전체적으로 아동 연령이 증가할수록 지원 금액이 줄어드는 체계는 동일하지만 지원 단가 수준은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에 비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 최소 2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 높게 설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지원 단가의 격차는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현금과 현물지원 제도를 병행하고 있는 정책취지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과소하게 지원되는 양육방식에 대한 부모 선택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의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3절에서 보육지원 형태(현금 vs. 현물)와 정책효율성에 대한 이론을 검토해 보겠다.

[그림 2-6] 0~2세 가정양육수당 vs. 보육료 지원 단가

(단위: 만원)



제3절 보육지원 형태와 정책효율성에 관한 이론적 검토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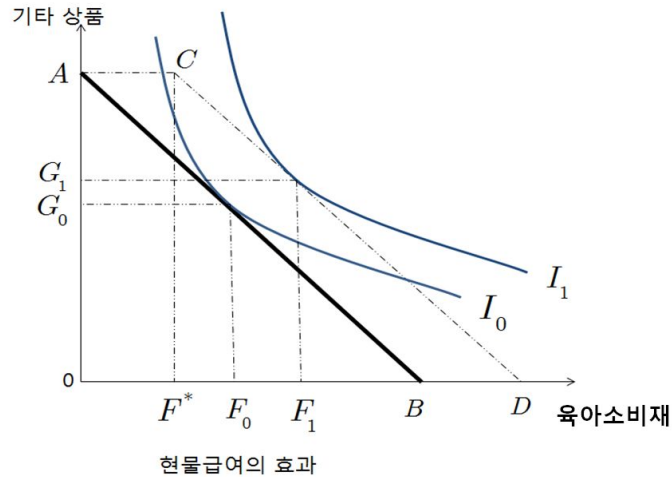
보육지원은 크게 현금급여와 자녀양육과 관련한 상품이나 보육시설이용과 같은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바우처를 포함한 현물급여로 구분할 수 있다. 많은 경우 현물급여가 현금급여보다 열등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복지급여는 현물형태로 지급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정책의 목표효율성(target efficiency) 측면에서 현물급여가 상대적으로 갖는 장점 때문이다. 모든 정책은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있는데, 이를 위해 소비를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량의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해 주는 보조방법 현물급여가 현금급여보다 동등하거나 우월할 수 있다. 이를 이하의 분석을 통해 확인해 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영유아 자녀 양육을 위한 상품과 서비스(이하 ‘육아소비재’)를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상황을 가정해서 보자.

다음 그림에서 육아소비재(보육시설 서비스 포함) 보조가 없을 경우 가계의 소비균형은 F_0 단위의 육아소비재와 G_0 단위의 기타 상품을 소비하는 상황이다. 이제 F^* 만큼의 육아소비재 보조를 바우처의 형태로 정부가 지급하면 가계의 소비균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자. 현물급여 정책은 육아소비재와 기타 상품들 간의 상대가격을 변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초기의 예산제약선의 기울기는 그대로 유지된다. 즉 현물급여는 예산제약선을 F^* 만큼 우측으로 수평 이동시키는 역할만 한다. 따라서 현물급여가 존재할 때 가계의 예산제약식은 점선 ACD처럼 변화하게 된다. 현금급여의 경우와 달리 현물급여의 경우에는 새로운 예산제약선에서 세로축 절편에서부터 이어지는 수평의 선분(AC)이 존재하게 되어 예산제약식은 점 C에서 굴절된(kinked) 형태를 취하게 된다.

이제 가계는 새로운 예산제약선과 무차별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F_1 만큼의 육아소비재와 G_1 만큼의 기타 상품을 구매하게 된다. 이러한 새로운 소비균형점에 육아소비재와 기타 상품의 소비량은 보다 증가된 상태이며, 무차별 곡선도 이전에 비해 바깥쪽에 형성되어 가계의 효용이 명확하게 증가됨을 알 수 있다.

8) 이 절은 고재이 외(2014) 제3장의 내용을 본 연구목적에 맞게 발췌하여 수정·정리한 것이다.

[그림 2-7] 현물급여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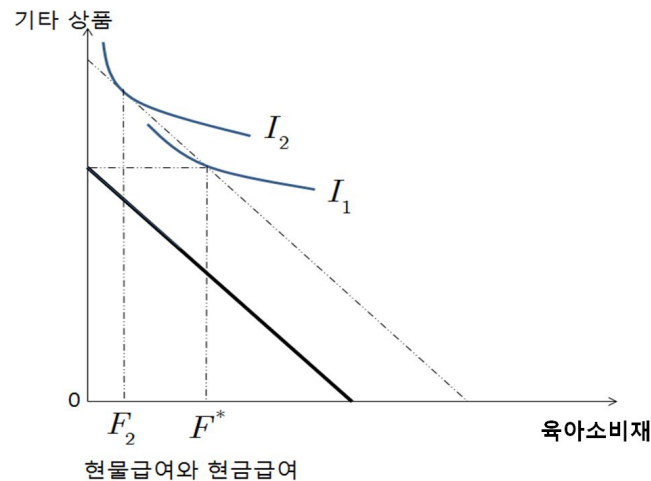
현물급여 이후 가계가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육아소비재 소비량은 이전에 비해 증가하지만 소비의 증가분은 현물급여로 제공된 F^* 보다는 작게 된다. 즉 $F_1 - F_0 < F^*$ 이다. 이에 대한 이유는 가계가 육아소비재를 현물로 보조받게 됨에 따라 원래의 자신의 돈으로 구매하던 육아소비재의 구매를 줄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상의 분석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금급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물급여를 받은 가계의 효용은 명확히 증가한다. 둘째 육아소비재에 대한 현물급여는 육아소비재 뿐만 아니라 다른 기타 상품과 서비스 소비 역시 증가시킨다. 셋째, 현금급여와 마찬가지로 소득효과만 존재하기 때문에 왜곡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1. 현물급여의 한계

이상의 분석에서는 현물급여의 독특한 차별성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제 가계가 바우처로 구매할 수 있는 육아소비재보다 현금을 주고 사야하는 다른 재화를 더 선호하는 상황을 고려해보자. 예컨대, 모유수유를 하는 어머니들은 바우처로 교환할 수 있는 분유보다는 현금을 주고 구매해야 하는 유축기를 더 필요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무차별곡선의 기울기는 매우 완만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 경우 분유 바우처가 제공되면 가게는 분유소비를 F^* 만큼 하지만 가정양육수당이 지급된다면 F_2 만큼만 하게 된다. 이 같이 현물(바우처) 보조의 경우 균형점은 예산제약선의 굴절지점에서 나타나게 된다. 명백히 어머니가 얻는 효용수준은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때 보다 낮게 된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바우처 지급을 통해 기대하는 정책효과는 훨씬 작은 액수의 가정양육수당으로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 2-8] 가정양육수당 vs. 바우처(보육시설서비스 포함)



현물급여가 갖는 또 다른 폐단은 현물급여를 지급받은 가게가 현물급여를 불법적으로 현금화하려고(trafficking) 시도할 경우,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 발생하여 사회적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40만원 상당의 육아 관련 소비를 할 수 있는 바우처를 20만원에 불법적으로 현금화한다면 정부 손실은 20만원이다.

현물급여를 지급 받은 가게가 현물급여를 불법적으로 현금화하려는 이유는 위에서 설명한대로 현물급여의 경우 가게가 얻게 되는 효용수준은 현금급여의 경우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비록 20만원의 손해를 보더라도 현금화로 I_1 수준 이상의 효용을 얻을 수 있는 한 가게는 현금화를 시도할 유인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물급여가 얼마나 불법적으로 현금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

인 연구는 아직 없다.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육아 관련 소비재를 공급해 주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푸드 스탬프를 가게가 불법적으로 현금화하고 있다는 보고가 많다. <표 2-11>은 U.S Department of Agriculture가 측정한 푸드 스탬프 밀매 관련 자료이다. 여기에는 위반율, 밀거래율, 밀거래액 추정규모가 나타나 있다. 아래의 표를 보면 비교적 규모가 큰 상점이나 슈퍼마켓보다는 작은 규모의 상점에서 위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2-11> 푸드스탬프 밀매율(1996~1998)

상점 유형	상점 위반율(%)	밀거래율(%)	밀거래액 추정규모(\$1,000)
수퍼마켓	5.3	1.9	279,163
대형유통시설	9.8	3.2	35,255
소계	6.7	2.0	314,418
소규모 상점	14.4	15.8	154,109
편의점	11.7	10.8	66,809
특수상점	10.7	8.1	55,784
상점 겸용 주유소	12.8	9.7	21,784
기타	16.2	9.4	43,892
소계	13.0	11.5	342,376
합계	11.7	3.5	656,794

자료: Macaluso (2000). Anderson (2003)에서 재인용.

<표 2-12>는 거주지 중 저소득층비율에 따른 위반율과 밀매율을 보여준다. 자료에 따르면, 이웃 중 저소득층이 많을수록 위반율과 밀매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표 2-12> 지역별 소득수준에 따른 밀거래 실태 (1998)

상점주변 지역의 가계빈곤율(%)	상점 위반율(%)	밀거래율(%)	상점수 비중(%)	상환율(%)
0 ~ 10	9.5	2.0	26.5	23.2
11 ~ 20	10.7	3.1	40.5	40.1
21 ~ 30	13.2	3.3	20.5	21.6
30 초과	16.8	7.1	12.4	15.1
계	11.7	3.5	100.0	100.0

자료: Macaluso(2000). Anderson (2003)에서 재인용.

2. 현물급여가 민간업자에 의한 서비스로 제공될 경우의 문제점들

현물급여는 종종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된다.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서비스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복지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여 제공할 경우 민간의 서비스공급자들에 대한 규율과 수혜자들의 도덕적 해이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회보장급여를 현물급여로 제공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꼴이 될 가능성이 많다.

우리나라의 보육서비스 공급체계는 다른 사회복지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민간이 주로 서비스를 전달하는 형태로서 공공보육은 매우 취약하다.

가수요를 유인하는 방식으로 수입을 극대화하는 공급자 행태와 특별활동비와 같이 서비스 단가의 통제로 인한 부모부담을 요구하는 영역에서의 각종 비급여서비스의 양이 증대하는 ‘풍선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무상보육의 확대로 보육서비스의 경우 본인 부담이 거의 없거나 매우 낮기 때문에 어머니들은 필요 이상의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것은 공급자의 수요유인동기와 맞물리면서 자녀보육비 지출을 급증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취약계층이나 맞벌이 가구와 같이 동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용 기회를 제공하되, 이를 상대적으로 덜 필요로 하는 계층의 불필요한 과다이용이나 과소비를 방지할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가. 공급자의 우월한 시장위치

보육(교육)서비스나 의료서비스와 같이 비탄력적 수요를 갖는 서비스의 공급가격은 공급자의 우월한 시장위치에 의해 가격이나 양, 또는 질이 결정되는 특징을 갖는다. 즉, 서비스의 가격이나 질을 결정하는데 있어 공급자(보육서비스)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시장에서 공급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아동의 부모나 정부에 대해 우월한 위치를 점유하게 된다.

첫째, 공급자가 유력한 위치를 점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서비스 적합성에 대해 부모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기 때문이다. 게다가 부모들은 반복적인 구매, 지속적 구매를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평가할 기회가 제한되어 있고, 종종 대안이 없는 상황

에 있는 동안 서비스 이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 결과 부모들은 주로 교육자나 보육서비스 제공자의 충고에 의존하며 이 때 공급자는 수요자의 서비스에 대한 소비나 선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 부모의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아동이나 부모의 이익과 상관없는 서비스 수요를 유발하면 공급자에 의한 유인수요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유인수요가 존재할 때에는 서비스단가에 대한 통제는 보육비 총지출을 낮추지 못할 수 있다.

둘째, 부모가 보육서비스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더라도 어린이집 원장은 어느 정도의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보육서비스란 본질적으로 이질적(heterogeneous)일 뿐 아니라 구입 후 시장에서 재판매가 불가능(non-retradable)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시장은 독점적 경쟁(monopolistic competition)의 양태를 띠기 쉽다. 더구나 직장과 가정이라는 물리적 공간에 있어서의 지리적 독점을 통한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다.

나. 유인수요의 문제

일반적인 상품의 경우 수요와 공급은 대체로 서로 독립적인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자녀에 대한 투자 상품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수요자의 수요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인수요가 존재하게 되면 이용 아동 수가 감소하더라도 보육서비스에 대한 총수요는 증가할 수 있다. 또 급여성서비스부문의 단가를 통제하면 비급여영역이 기형적으로 증대하는 풍선 효과(balloon effect)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보기 위해 어린이집 원장의 유인수요를 설명하는 간략한 모형을 살펴보자.⁹⁾

π 를 어린이집 원장의 이윤, I 를 수요유인의 강도라 하고 원장의 효용함수로 $u = \pi - C(I)$ 를 상정하자. 여기서 $C(\cdot)$ 는 수요를 유인할 때 어린이집 원장이 치러야 하는 물질적 혹은 심리적 비용(예컨대 양심의 가책)을 나타내는데 볼록한(convex) 증가함수라 가정한다. 총 K 개의 서비스가 존재하고 k 번째 서비스에 대한 수요유인의 강도를 i_k , 그리고 총 입소아동 수를 N 이라 하면 수요유인의 총 강도는 $I = N(i_1 + \dots + i_k)$ 이 된다.

9) 이 모형은 McGuire and Pauly(1991)과 Gruber and Owings(1996)을 적절히 변형한 것이다.

한편 k 번째 보육서비스 판매량 x_k 는 그것에 대한 수요유인의 강도의 오목한 (concave) 증가함수라 가정하자: $x_k = f_k(i_k)$. 그러면 원장의 이윤은 $\pi = N(m_1 f_1(i_1) + \dots + m_K f_K(i_K))$ 와 같이 되는데 여기서 m_k 는 k 번째 서비스로부터 원장이 얻게 되는 보육서비스의 단위당 이윤이다.

만일 원장이 자신의 효용을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K 개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유인의 강도 (i_1, \dots, i_K) 를 결정한다고 가정하면 원장은 다음과 같은 효용극대화 문제를 풀게 된다.

$$\begin{aligned} \max \quad & u = \pi - C(I) \\ \text{s.t.} \quad & I = N(i_1 + \dots + i_K) \\ & \pi = N(m_1 f_1(i_1) + \dots + m_K f_K(i_K)) \end{aligned}$$

이 문제의 일계조건은 다음과 같다.

$$m_1 f'_1(i_1) = \dots = m_K f'_K(i_K) = C'(N(i_1 + \dots + i_K)) \quad .$$

즉 어린이집 원장은 각각의 보육서비스에 대해 수요유인의 한계이윤이 한계비용과 같은 점에서 서비스별 유인수요의 강도를 결정하게 된다.

이 단순한 모형으로부터 우리는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1) 먼저 아동 수가 감소하면 (즉 N 이 줄어들면) 보육서비스별 유인수요는 증가하게 된다. 아동 수의 감소는 우선 원장의 이윤 $\pi = N(m_1 f_1(i_1) + \dots + m_K f_K(i_K))$ 를 감소시키지만 이와 동시에 유인수요의 총량 $I = N(i_1 + \dots + i_K)$ 도 감소시킨다. 이에 따라 수요유인의 한계비용 $C'(N(i_1 + \dots + i_K))$ 도 감소하고 따라서 균형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모든 보육서비스에 대해 유인수요는 증가해야 한다. 결국 아동수의 감소는 원장으로 하여금 유인수요를 증가시키게 만든다.

(2) 다음 어떤 보육서비스에 대한 단가(service fee)가 줄어드는 경우 유인수요는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자.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해 보육서비스의 종류는 단 두 가지뿐이고 첫 번째 서비스 단가가 줄어드는 경우를 본다. 첫 번째 서비스 단가가 줄어들면 m_1 이 줄게 되고 이는 첫 번째 서비스의 유인수요로 인한 수익률을 낮춘다. 따라

서 원장은 첫 번째 서비스에 대한 수요유인은 줄이고 대신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더 높아진 두 번째 서비스에 대한 유인수요를 증가시키려 할 것이다. 이러한 예로서 무상보육이 시행되었음에도 단가 통제로 인한 특별활동비와 같은 비급여영역의 확대(소위 말하는 풍선 효과 (balloon effect))를 들 수 있다.

공급자 유인수요가 존재할 때 보육서비스 단가에 대한 통제를 통해서도 자녀양육 가족의 보육비지출 부담을 낮추기 어렵다. 통상 사람들은 단가를 낮춤으로써 보육비부담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보육이나 교육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비탄력적 수요를 갖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면 지출수준이 하락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급자 유인수요가 존재하면 이러한 논리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가격통제에 직면하여 어린이집 원장은 실제 어린이집 운영비용 원가를 낮춤으로써 여전히 이윤폭을 유지할 수 있다. 예컨대 보육교사가 아동 한명에게 투입하는 돌봄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더 많은 아동을 관리하고, 상대적으로 서비스 이용 시간이 적은 미취업모의 아동을 우선적으로 입소시키는 등 가격통제와 그에 따른 소득의 감소를 회피할 수 있다.

다.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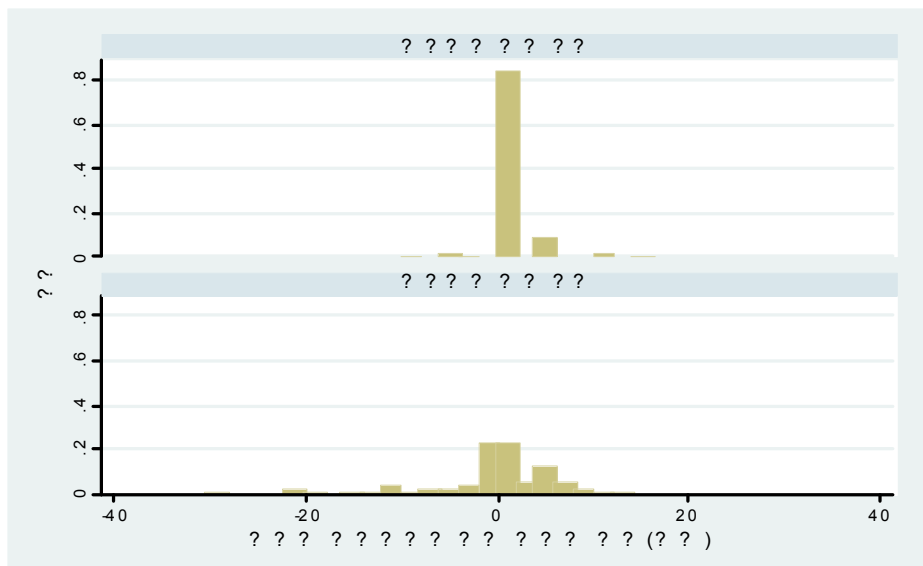
일반재화의 경우 소비자는 재화의 가격 전액을 지불하면서 사용에 대한 비용 전체를 감당하게 된다. 그러나 보육서비스의 경우 조세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하므로 아이 부모가 그 서비스를 이용하고 여기에 대하여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줄 경우 본인이 납부한 세금의 일부와 제3자 지불의 합으로 지불비용이 결정된다. 이때 보육서비스 이용자는 전체 비용의 일부만 간접적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파생될 수 있다.

첫째, 소비자의 부담가격이 낮아짐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보육서비스 수요량을 필요 이상으로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 특히 값비싼 서비스의 수요를 큰 폭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

둘째, 고가의 질 좋은 서비스를 더 선호하게 되며, 소비자가 가격에 둔감해지면서 보육서비스 공급자가 불필요하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견제하는 기능을 상실한다. 실제 이러한 사실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나는데, 단적으로 [그림 2-9]의 양육

형태별 정부지원 금액에 대한 인식률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 수행된 전화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연소 아동 기준 1인당 정부 지원금에 대하여 응답한 483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구 중 아동 연령별 정부지원 단가와 동일한 액수를 답한 비율은 84.7%로 나타났다. 반면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구의 경우 458가구만 이에 대해 응답하였고 정부지원 단가와 일치하는 답변은 15.1%에 불과했다. 이론적 예상과 같이 현물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가격에 둔감하다는 결과는 정부지원 수혜에 대한 체감이 현금수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재정효과가 반감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2-9] 자녀양육 유형별 정부 지원단가 인식률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전화설문조사 자료 분석 결과임

셋째, 소비자로 하여금 더 싸고 질 좋은 효과적인 대체서비스를 찾고자 하는 유인을 저해함으로써 공급자의 독점적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 기여하고 그에 따른 재정누수와 비효율이 초래될 수 있다.

이상의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본 현물급여의 한계는 실제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음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보육의 질 저하 문제, 불필요한 보육서비스 이용 증가로 인한 실수요 가구의 서비스 이용제한, 민간서비스 공급자들의 독점적 지위에 따른 부모 부담 증가와 정책만족도 저하, 그리고 최근 종종 드러나고 있는 어린이

집 원장과 부모들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녀 양육형태(가정 vs. 시설)에 따른 정부지원 격차 해소가 시급하며 그 구체적 방안으로 가정양육수당 지원 단가 조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정부 보육지원의 한 축을 구성하는 가정양육수당의 개념과 목적을 다시 조명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제3장에서 북유럽 선진국의 가정양육수당 도입 배경과 운용사례에 대한 심층적 검토를 통해 바람직한 가정양육수당 지원 체계 마련에 필요한 제도의 정책적 의의와 기능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제 3 장

가정양육수당 해외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제1절 주요국의 가정양육수당 제도 도입 배경

제2절 가정양육수당 정책 현황

제3절 가정양육수당의 효과성

3

가정양육수당 해외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

제1절 주요국의 가정양육수당 제도 도입 배경

가정양육수당 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부부가 함께 노동 시장에서 일하고 자녀 돌봄도 함께하는 가정을 지원하는 가족 정책 모형을 발전시켜 온 북구 유럽 국가이다. 핀란드가 1985년 북구 유럽 국가에서 가정양육수당을 가장 처음 도입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08년 이래로 북구 유럽 국가에서 보편화되어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아이슬란드 등 대부분의 국가가 가정양육수당을 제공하고 있다.

북구 유럽 국가의 가족 정책은 자녀를 가진 여성들의 노동 시장 참여와 자녀 양육에 대한 동등한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아버지 할당이 부여된 유급의 육아 휴직 제도와 양질의 보편적인 공공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모든 아동에게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보육 시설에 자녀를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가정양육수당(Cash for childcare)은 남성 생계 부양자와 여성 돌봄 노동자라는 전통적인 성역할 모형을 지지하는 제도로써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북구 유럽의 가족 정책 모형과는 모순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북구 유럽 국가가 가정양육수당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공적으로 지원하는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부모에게 현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녀 양육 방식의 선택권을 강화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가정양육수당을 운영하게 된 목적은 시설 보육 서비스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핀란드)과 가정양육수당을 도입할 당시 정원과 개소 수에서 취약했던 공공 보육 서비스를 대체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노르웨이)이었다고 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북구 유럽 국가에서 가정양육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인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의 정책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가정양육수당을 도입함으로써 나타난 효과성을 가정양육수당 수급자, 양성평등과 여성 고용, 아동 발달 측면에

서 살펴본다. 그리고 각 국가가 가정양육수당 제도를 도입할 때 경험하였던 논쟁과 쟁점 사항들을 검토하고 이러한 북구 유럽 국가의 정책이 우리나라의 가정양육수당 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제2절 가정양육수당 정책 현황

1. 가정양육수당의 도입 배경

가정양육수당이 도입된 시기는 국가마다 다양하다. 자녀 양육에 대한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것이 가정양육수당 정책이 도입된 주된 목적이었다. 핀란드에서는 1970년대 초반부터 증가일로에 있던 보육시설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 지자체가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Rantalahti, 2009, Ellingsaeter, 2012에서 재구성). 동 시기부터 자녀 양육 방식에 대해 부모들의 선택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슈가 국가적인 가족 정책의 토론의 장에 퍼져 나가기 시작하였다. 가정양육수당이 1985년에 도입되었을 때 보육 시설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체(代替)로서의 성격이 강했다. 중앙당(Centre Party)은 특히 농촌 지역의 부족한 보육 서비스에 대한 보상으로서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지지하였다. 핀란드에서 가정양육수당이 도입된 것은 좌파 정부와 중도 우파 정부 간의 정치적인 타협의 결과이다. 가정양육수당의 도입과 함께 보육 시설 서비스 이용에 대한 권리도 함께 보장되기 시작하였다.

노르웨이에서 가정양육수당은 1998년에 우파 정당이 지지하는 중도 소수당 연합 정부에 의해 도입되었다. 사회 민주당과 좌파 정당은 가정양육수당의 도입을 반대하였다. 가정양육수당이 도입된 목적은 부모들에게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더 많은 시간을 부여하고, 부모들에게 자녀 양육 방식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주고, 가족에 대한 공공 지원을 보다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함이었다(Ellingsaeter, 2003). 가정양육수당의 도입을 지지해 온 기독교민주당은 부모들이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환경을 마련해 주는데 중점을 두고, 서비스 대신 현금 지원, 공공 보육 서비스 대신 민간 보육 서비스를 지원할 것을 주장하였다(Ellingsaeter, 2007).

스웨덴에서 가정양육수당은 2008년 중도 우파 다수당 연합 정부에 의해서 도입되

었는데, 가정양육수당 관련법은 지자체가 자녀 양육을 위한 현금 급여를 지원하도록 규정하였다. 가정양육수당의 주된 목적은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부모들의 선택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이었다. 이때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부모로 하여금 자녀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직장에서의 일과 자녀 양육의 병행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되었다. 2011년 현재 전체 지자체 중 약 37%가 가정양육수당 정책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가정양육수당을 도입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중도 우파 지자체이다(Nyberg, 2010). 중앙 정부가 지원하는 가정양육수당은 1994년 중도 보수 정부에 의해 도입된 바 있으나 사회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이후 곧 폐지되었다.

2. 국가별 제도 현황

핀란드에서 가정양육수당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만 3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게 지급된다.¹⁰⁾ 핀란드의 가정양육수당 금액은 매년 지수에 연동되어 조정되며, 크게 수급 아동에 대해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기본수당(Care allowance)과 가구소득수준을 고려한 보조수당(care supplement)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다.

2015년 9월 현재 기본 가정양육수당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 3세 미만의 아동 1명에 대해서는 월 342.53유로가 지급되며,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그 연령에 따라 추가적으로 가정양육수당이 지급된다. 추가 아동의 나이가 만 3세미만 이라면 추가 아동 1인당 월 102.55유로, 만 3세 이상에서 취학 전까지는 추가 아동 1인당 월 65.89유로가 지급된다. 보조수당은 가구원수와 가구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산출하여 아동 1명에 대해서만 지급되며, 2015년 9월 현재 한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수당 금액은 월 183.31유로('14년 €182.52)이다. 보조수당 금액은 <표 3-2>의 가구규모별 가구 월 소득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주어진 할인율을 적용하여 그 금액만큼 183.31유로에서 차감하여 산출한다.

10) 핀란드는 현재 3세 미만의 공공 또는 민영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수당(child home care allowances)과 공공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민간 보육시설이나 개인적인 보모를 이용할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사보육 수당(private day care allowance) 두 가지 형태로 미취학 아동에 대한 돌봄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수당에 대해서만 살펴본다.

<표 3-1> 핀란드 가정양육수당: 기본수당

(단위: 유로/월)

	2009	2014	2015
만 3세 미만 아동(1명 기준)	314	341.06	342.53
만 3세 미만 추가 아동 1인당	94	102.11	102.55
만 3세 이상의 미취학 아동 1인당	60	65.61	65.89

자료: www.kela.fi/kotihoidon-tuki_maara, 최종접속 2015.9.13.

<표 3-2> 핀란드 가정양육수당: 보조수당

(단위: 유로/월)

가구규모(가구원수)	가구소득 한도 (보조수당 전액 수급)	보조수당 할인율(%)	가구소득 상한 (보조수당 비수급)
2인	1,160	11.5	2,753.96
3인	1,430	9.4	3,380.06
4인 이상	1,700	7.9	4,020.32

자료: www.kela.fi/kotihoidon-tuki_maara, 최종접속 2015.9.13

예컨대 현재 만 1세, 만 2세, 만 5세인 자녀 셋을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5인 가구의 경우 기본수당으로 매월 €342.53(1세)+€102.55(2세)+€65.89(5세)=€510.97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이 가구의 월 소득이 €1,700 이하라면 €183.31의 보조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 가정양육수당으로 총 €694.28을 받을 수 있다. 만일 가구소득이 €2,000라면, 이 가구가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조수당은 소득한도를 초과하는 €300의 7.9%인 €23.7을 최대 보조수당 금액(€183.31)에서 차감한 €159.61이다.

노르웨이는 1998년 8월부터 생후 12~23개월 영아에 대한 가정양육수당지원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듬해부터 지급대상을 생후 24개월까지로 확대하였으나, 2012년 8월 1일부터 생후 13~23개월 아동에 대해서만 정액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노르웨이의 경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는데, 이 경우 주당 20시간 이하의 보육시설 이용에 한하여 가정양육수당의 50%를 지원한다. 가정양육수당 금액은 의회가 법률로 결정하며, 2014년 8월 1일 Cash-for-Care법률 개정에 따라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13~23개월 아동에 대해 월 NOK6,000을 지원하고 있다('12.8.1.~'14년 개정 전까지 13~18개월 NOK5,000, 19~23개월 NOK 3,303).

스웨덴의 경우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공공 보육 시설에 다니지 않는 만 1~2세

아동에 대해 아동 1인당 월 SEK3,000(약 €321, 2015년 현재)을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child raising allowance)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모든 지자체가 동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공통적인 특성을 갖는데, 우선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에 대해서도 부분적인 급여가 지급 된다. 그러나 가정양육수당은 실업 수당, 병가 수당, 망명자 수당, 노후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과 유급 육아 휴직 기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중복수급이 제한되어 있다.

<표 3-3>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의 가정양육수당(2015)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도입연도	1985	1998	2008
법정제도	Yes	Yes	Yes
재정책임	중앙	중앙	중앙
시행주체	중앙 및 지자체	중앙	지자체
아동연령	만 3세 미만	만 1세(13~23개월)	만 1~2세
보육시설 이용 권리	없음	있음	있음
소득요건(보편적 급여)	전소득계층(기본수당) 가족 수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인 추가보조금 지급	전소득계층	기타 급여와의 중복수급 제한
월급여액	3세미만 아동 1인에 한하여 €342.53 3세미만 형제자매 1인당 €102.55, 3세 이상 취학전 형제자매 1인당 €65.89) 차등지급 추가보조금 가구당 최대 €183.31	'14.8.1 이후 13~23개월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1인당 NOK 6,000 (€649.43, '15.09.13 UTC)	SEK 3,000 (€321, '15.09.13 UTC)

주: 핀란드와 노르웨이의 경우 2015년 현황이며 스웨덴은 2013년 현황임

자료: 핀란드(www.kela.fi/kotihoidon-tuki_maara, 최종접속 2015.9.13.), 노르웨이(www.nav.no 최종접속 2015.9.13.), 스웨덴(Duvander and Ferrarini, 2013, p.6 인용).

이처럼 3세 미만 아동들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은 유급 육아 휴직 제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이는 가정양육수당이 대부분 육아 휴직 기간이 끝나고 지급되기 때문이다. 핀란드의 유급 육아 휴직이 가장 짧는데 약 9개월 기간 동안 임금의 70%가 지급된다. 노르웨이는 47 주간의 육아 휴직 기간 동안 임금의 100%가 지급되거나, 57 주간의 육아 휴직 기간 동안 임금의 80%가 지급된다. 스웨덴은 13개월의 육아 휴직 기간 동안 임금의 80%가 지급되며 이후 추가적인 3개월의 육아 휴직 기간 동안 정액

의 급여가 지급된다. 세 국가 모두 아동에게 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1996년부터 핀란드의 부모들은 7세 미만 자녀를 지자체가 운영하는 보육 시설에 맡길 권리를 부여받았다¹¹⁾. 노르웨이는 2009년부터 부모들이 1세부터 전년도 9월 1일 이전에 태어난 아동에 대해 보육시설에 다닐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스웨덴은 1995년부터 3~4개월의 입소 대기 한도 내에서 지자체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 하였다. 부모가 보육 시설에 지불해야 하는 최대 비용은 핀란드 월 233유로, 노르웨이 NOK 2,330 (약 300유로), 스웨덴 SEK 1,260(약 140유로)이다.

<표 3-4> 북구 유럽 국가의 육아휴직 · 보육 서비스 정책 현황(2009년)

구분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육아휴직		• 263일 + 1개월 (아버지의 달)	• 3년 동안 230~280일	• 8년 동안 480일
보 육 서 비 스	종일제 서비스 이용 권리	• 종일제 이용권리	• 종일제 이용 권리	• 종일제 이용 권리 • 부모가 집에 있는 경우 반일제 이용 권리 (하루 당 3시간)
	서비스 이용 비용	• 21~233 유로 (가족규모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 막내: 최대 233 유로 - 둘째: 최대 201 유로 - 이후: 최대 비용의 20%	• 0~280 유로 - 지자체에 따라 다름 - 형제자매가 있거나 사회 적 장애가 있는 가족은 낮은 액수 지불 - 식비로 월 평균 21유로 지원	• 최대 122 유로 상한액 에서 가계 소득의 3% (첫째아), 2%(둘째아), 1%(셋째아) • 4세 이상 아동의 경우 일당 3시간 혹은 주당 15시간 무료로 지원

자료: Rantalaaho (2010)

3. 세 국가의 비교 분석

가. 대상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의 가정양육수당은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라는 면에서는 동일하다. 하지만 각 국가 정책의 세부적인 측면을 볼 때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과 핀란드에서 가정양육수당은 가족을 기초로 한 권리인 반면, 노르웨이의 가정양육수당은 보편적인 수당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핀란드만이 가족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차등이 있는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

11) 3세 미만 아동이 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1990년도부터 보장되었다.

고 있다. 이는 노르웨이와 스웨덴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정책의 양육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과 차별적인 특성이다. 핀란드가 가족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은 가정양육수당이 사회 복지 정책으로서 광범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즉, 핀란드의 가정양육수당은 공공 보육 서비스에 대한 대체로서의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소득이 낮은 가족에게 더 높은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수직적 형평성에 기여하는 기능도 수행한다고도 볼 수 있다 (Hiilamo, 2002). 이러한 사실은 핀란드의 가정양육수당이 노르웨이, 스웨덴과 비교하여 가족을 기반으로 하는 복지적인 성격이 강한 수당 정책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대목이다.

세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가정양육수당의 또 다른 유사점은 동 정책이 자녀 양육 방식에 대한 부모들의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목적 하에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 국가 모두 가정양육수당은 일반적으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선택을 확대시키고 있으나, 스웨덴은 일하는 부모에 한정하여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권은 “일하는 부모”에 한정하여 보장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핀란드도 가정양육수당의 수급 조건에 대해 스웨덴만큼 엄격하지는 않지만 부모의 근로 상태에 대한 조건을 적용하고 있다. 노르웨이의 가정양육수당이 순수한 측면에서 공공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으로서의 대체 기능을 하고 있다. 가정양육수당과 다른 사회 복지 서비스와의 중복 지급 배제 문제에 있어서도 국가마다 상이한 규정이 적용된다. 핀란드에서 가정양육수당은 다른 자녀 양육 지원과 더불어 중복적으로 받을 수 없으며, 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는 것은 실제적인 의미에서 부모가 하루 종일 자녀를 돌본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나. 급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모두 가정양육수당의 급여 수준은 낮다. 모든 국가에서 가정양육수당을 주된 가계 소득으로 삼고 생활하는 것은 낮은 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밖에 없다. 핀란드 만이 가족의 경제적인 수준을 고려한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기본적인 수당을 전체 수급 대상 가족에게 지급하고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인 가정에게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한다.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가정양육수당은 가족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급여를 지급한다.

가정양육수당의 급여액수는 부모들이 자녀 양육 방식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세 국가의 가정양육수당 급여액수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기본적인 가정양육수당 급여액은 2009년 기준 평균 임금의 약 10% 수준에 달한다(<표 3-5>). 가정양육수당의 액수만 가지고 급여 수준을 판단하기보다 보육 서비스 이용 비용, 육아 휴직 급여액수 등 자녀 양육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의 급여액과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양육수당 급여액수의 적절성을 더 잘 판단할 수 있다. 보육 서비스 이용 비용과 비교해 볼 때 스웨덴이 가장 높은 가정양육수당 급여를 제공하고 있으며, 모성 휴가 비용과 비교해 볼 때는 노르웨이가 가장 높은 급여액을 지급하고 있다. 가정양육수당의 급여 조건도 수급자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급여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는 가정양육수당을 다른 사회 보장 급여와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며, 핀란드의 경우 가정양육수당의 급여액이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고 아동의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더 낮게 조정된 금액을 지급받는다.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에서 가정양육수당은 공공 보육 서비스에 대한 보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아동들은 보육 시설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받을 수 없다. 다만,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이러한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는 아동들도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핀란드에서는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아동들은 공공 보육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가정양육수당과 보육 시설 서비스의 중복 수급을 허용하고 있는 노르웨이는 두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하여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시간에 따라 감소된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한다. 이러한 유연성은 부모가 시간제 노동과 시간제 자녀 양육 휴가를 함께 사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스웨덴의 중앙 정부 법은 자녀 양육수당을 유연성 있게 수급 받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은 지방정부가 내리도록 하고 있다.

<표 3-5> 북구 유럽 국가의 가정양육수당 급여 기준 (2009년)

구분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가정양육수당의 상대적인 급여액수	보육시설 최대 이용 비용 = 100	134	144	237
	모성휴가 최소 급여액 = 100	66	121	78
아동 기준		부분적	○	○
가족 기준		○	×	○
소득 기준		부분적	×	×
과세 대상 소득		○	×	×
다른 사회보장급여와의 조정		○	×	○
민간보육서비스 구매하는 것을 허용		○	×	×
보육서비스와 중복 지급 가능		×	○	○
지자체 보조금 지원		○	×	×

주: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소득 수준에 따른 추가적인 가정양육수당은 포함하지 않음
 자료: Rantalaaho (2010)

다. 전달 체계

핀란드와 노르웨이에서 가정양육수당 수급에 대한 권리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스웨덴에서 가정양육수당은 법에 의해 지지되지만 가정양육수당을 이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지자체에 달려 있어 가정양육수당은 지자체의 선택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스웨덴의 모든 지자체가 가정양육수당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스웨덴에서 가정양육수당의 이행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Nyberg, 2010). 이러한 면에서 자녀 양육수당은 스웨덴이 표방하고 있는 양육 지원 정책의 “보편성”에 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녀 가정양육수당과 관련한 기본 원칙은 중앙 정부의 법에 의거하고 있지만, 지자체는 일정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가족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지자체는 중앙 정부의 법에 의해 규정되고 있는 일반적인 원칙과 최대 액수 범위를 초과한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

핀란드에서 지자체의 역할은 스웨덴과 유사하지만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 핀란드의 지자체는 법적으로 규정된 가정양육수당을 이행할 의무 이외에 추가적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많은 지자체가 보육 시설 서비스에 소요되는 재정을 절감하기 위하여 이러한 재량권을 활용하고 있다. 지자체가 제공하는 가정양육수당 보조금은 법적으로 보장된 가정양육수당에 상당 규모로 추가적인 액수이며, 부모로 하여금 가정양육수

당에 대한 선호를 증가시키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렇게 지자체 마다 서로 다른 추가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스웨덴과 유사하게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의 보편적인 특성을 위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종합컨대 노르웨이만이 완전하게 보편적인 가정양육수당 제도를 이행하고 있어 전 노르웨이 지역에 걸쳐 부모들은 동일한 급여액을 동일한 조건으로 받고 있다.

라. 타 사회복지 급여와의 중복 급여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는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정 양육과 다른 복지 재화 및 서비스와의 관계 조정이다. 스웨덴에서 가정양육수당은 일하는 부모를 중점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실업 급여 혹은 육아 휴직 수당 등 다른 사회보장급여를 지급받는 가족들은 시설 보육 서비스를 시간제로 이용할 수 있지만,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없다 (Nyberg, 2010). 이러한 사실은 스웨덴에서 공공 보육 서비스 이용과 가정양육수당 정책들 간의 선택이 모든 부모들 사이에서 동등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핀란드도 가정양육수당과 다른 사회 복지 급여를 조정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조정의 정도는 스웨덴 보다 유연하다. 육아 휴직 수당과 실업 급여를 받는 부모들은 가정양육수당 수급으로부터 배제당하지 않고 다만 급여액이 하향 조정된 가정양육수당을 받는다. 실업 급여를 받는 부모들은 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으며 다만 가정양육수당 급여 액수가 공제된 실업 급여를 받는다. 이러한 조정은 부모 중 한 명이 실업 급여를 받고 다른 한 명은 가정양육수당을 받아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노동 시장에 참여할 수 없는 가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는 가족에게 가정양육수당 수급액 조정은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자녀수가 많은 저소득 가정에 대한 가정양육수당의 경제적인 지원 역할은 유지되고 있다. 종합컨대 핀란드의 가정양육수당과 기타 사회 복지 급여와의 조정은 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는 가정에게 기타 사회복지 급여를 지원하지 않는 스웨덴과 비교하여 보다 유연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스웨덴에서 가정양육수당은 돌봄에 대한 실질적인 필요를 지원하는 것인데 반해, 핀란드에서는 돌봄에 대한 지원보다는 사회복지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핀란드·스웨덴과 대조적으로 노르웨이의 가정양육수당에는 어떠한 조정의 원칙도 없다. 노르웨이에서 가정양육수당은 완전히 아동을 기반으로 한 복지 급여로서 가족이 기타 사회보장급여를 받든지 혹은 부모가 노동 시장에서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모든 가족에게 지급된다. 가정양육수당의 유일한 수급 조건은 아동들이 종일제 공공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업 상태에 있는 부모들은 다른 부모와 마찬가지로 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고, 육아 휴직 중에 있는 부모 역시 육아 휴직 급여와 함께 가정양육수당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부모가 시간제로 육아 휴직을 보내는 경우에도 부모는 가정양육수당과 육아 휴직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즉, 노르웨이 부모들은 육아 휴직, 가정양육수당, 보육서비스(시간제 서비스에만 한정)에 대한 지원을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은 핀란드와 스웨덴과 차별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마. 아동의 연령

모든 세 국가 모두 가정양육수당은 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다. 아동의 연령 기준은 세 국가마다 서로 다양한데 이들 세 국가들이 서로 다른 육아 휴직 정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르웨이에서 가정양육수당은 13~23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육아 휴직 급여를 출생부터 1세가 될 때까지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웨덴에서 육아 휴직 정책은 세 국가 중에서 가장 유연하게 수행하고 있어 육아 휴직을 아동이 8세가 될 때까지 나누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녀 양육수당을 수급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250일의 육아 휴직을 자녀 양육수당을 받기 전에 사용해야 한다(Nyberg, 2010). 핀란드에서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육아 휴직 기간이 종료되고 난 이후의 시점부터로 자녀의 연령이 9~10개월 되는 시기부터이다. 2007년부터 핀란드 아버지들은 자녀의 가정 양육을 방해하지 않는 조건하에 “아버지의 달”을 연기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 경우 육아 휴직 기간 종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모들은 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아동을 기반으로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노르웨이는 1~2세 아동이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가정양육수당을 수급 받을 수 있는 연령대의 자녀가 3명 있는 경우 가족은 3명의 자녀에 대한 가정양육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다. 핀란드의 가정양

육수당은 노르웨이와 스웨덴 보다 좀 더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수급 자격이 있는 막내 자녀에게 기본수당 총액수를 지급하고 취학 전 형제자매에게 연령에 따른 차등 금액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더불어 가구규모별 소득수준에 따른 보조수당도 추가로 지급된다. 이것이 핀란드의 가정양육수당 제도가 스웨덴과 노르웨이와 다른 차이점으로서 3세 이상의 아동에 대한 공공 보육서비스 지원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라 볼 수 있다. 가정양육수당을 3세 이상 취학 전 자녀까지 확대하여 지급하는 것은 정부가 가정양육을 보다 지지한다는 의지의 표명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노르웨이나 스웨덴의 경우처럼 3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만 가정양육수당을 제한적으로 지급함으로써 3세 이상 유아의 조기 교육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지원한다는 목적성이 핀란드에서는 다소 미약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4. 우리나라와의 비교

우리나라의 경우 노르웨이와 유사한 목적에서 가정양육수당지원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과정을 보면, 1991년 1월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면서 우리나라의 보육 지원 정책의 제도적 틀이 형성되었고, 2004년 1월 19일 「영유아보육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차등보육료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저소득층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시작되었다. 당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미흡한 우리나라 보육 시설 인프라 실정과 영아의 가정 내 양육을 선호하는 문화적 환경을 고려, 보육 시설 미이용 영유아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지원정책의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그 배경에는 영유아 양육 지원 정책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개인 양육 서비스를 선호하는 보육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2009년 가정양육수당지원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당시 동 제도의 도입취지 역시 취약한 보육시설 서비스 지원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에 있었다.

한편, 현재 불필요한 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따른 재정비효율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가정양육수당지원 제도 활용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은 핀란드의 제도 도입 배경과 유사하다.

제도의 구조적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핀란드와 유사한 부모의 성별 역할-양육문화를 갖고 있으나 가정양육수당 제도의 도입배경이나 아동의 수나 가구소득과 무관하게 수급아동 연령에 따른 정액 금액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노르웨이의 제도와 닮아 있다.

지원금액의 수준은 북유럽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나, 미취학아동 전체를 지원하고 있어 정책의 대상범위는 보다 포괄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연령별 차등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급여구조는 정책적으로 만 3세 미만을 수급대상으로 하지 만 다자녀 가구일 경우 3세 이상의 아동에 대해서도 형제자매 수를 고려해서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핀란드의 그것과 결과적으로 유사한 구조라 하겠다.

제3절 가정양육수당의 효과성

세 국가가 서로 다른 유형의 가정양육수당 정책을 수행하고 있고 가정양육수당이 도입된 시기도 다르기 때문에 가정양육수당의 효과성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Sipilä 외 2010). 핀란드와 노르웨이가 스웨덴 보다 오랜 기간 가정양육수당 제도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가정양육수당이 갖고 있는 효과성에 대한 연구는 이들 국가들을 대상으로 더 많이 수행되어 왔다. 가정양육수당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는 동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수급자의 특성, 양성 평등과 여성 고용, 아동 발달의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쟁점 사항에 대한 효과성 평가를 수행한 선행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자 한다.

1. 가정양육수당의 수급 현황

핀란드에서 가정양육수당의 수급자 수는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상당히 안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Repo, 2010). 핀란드에서 대부분의 영아는 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다. 9개월~만 3세 미만의 아동 중 가정양육수당을 받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의 비율은 1998년 57%에서 2007년 52%로 소폭 감소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가정양육수당 수급아동 비율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당시 20%이상 급여액수 삭감되었기 때문

이다. 핀란드에서 가정양육수당 수급자의 90% 이상이 여성이다.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여성들의 대다수는 저숙련 노동자로서 소득이 낮고 자녀 수가 많은 여성들이다(Repo 2010). 핀란드에서는 자녀 양육을 위해 오랜 기간 휴직을 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Rantaliho, 2009). 핀란드의 많은 여성들은 가정양육수당을 육아 휴직 급여의 연장으로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영아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이 아동의 이익을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핀란드의 가정양육수당 수급률은 지역적인 격차를 보이는데 이는 문화적인 가치와 노동 시장 구조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기본적인 가정양육수당에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에 따른 보조금은 불평등을 조장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저소득 가정이 자녀를 시설에 맡기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도록 유도하여 시설에서의 자극이 필요한 저소득층 아동들의 건전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자체마다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특별 보조금은 지역 간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노르웨이에서 가정 양육이 도입된 초기에는 많은 부모들이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이후 수급률은 급속도로 감소하였다. 1999년 말에 1~2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75%가 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았는데 2011년도에 와서는 25%로 하락하였다. 가정양육수당을 수급 받는 사람의 84%가 여성이었다. 가정양육수당의 수급률이 감소하게 된 이유는 3세 미만 아동을 돌보는 보육 시설이 증가하고 가정양육수당 급여액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가정양육수당이 도입되었을 때 대부분의 부모들이 단기간 혹은 장기간 가정양육수당을 수급받았다. 1998년에 태어난 아동의 부모 중 91%가 한 달 혹은 그 이상의 기간 동안 가정양육수당을 받았는데, 2007년도에 와서는 이러한 비중이 62%로 감소하였다(Bakkern and Myklebø, 2010, Ellingsaeter, 2012에서 재구성). 양육 수당을 수급 받는 부모들은 두 종류로 구분되었는데 하나는 보육 시설에 자리가 마련될 때까지 단기간 아동을 맡기는 그룹과, 다른 하나는 가능한 오랜 기간 급여를 받는 그룹이었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첫 번째 그룹이 증가하였고 두 번째 그룹은 감소하였다. 양육수당을 받는 평균 기간은 20개월에서 13개월로 감소하였다.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비중은 모든 집단에서 감소하였으나, 수급자의 특성은 보다 동질화되어 노동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근로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학력이 낮은 사람들, 이민자 계층들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소득과 교육 수준이 높은 여성들이 가정양육수당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게 되어 동 그룹에서 수급률 감소폭이 가장 컸다. 가정양육수당의 수급률 감소

가 가장 적게 이루어진 집단은 가정양육수당의 경제적인 가치가 가장 큰 집단인 저소득층이었다.

오늘날 스웨덴에서는 매우 적은 수의 부모들만이 가정양육수당을 받고 있다. 2011년 현재 가정양육수당을 도입한 지자체 중에서 가정양육수당을 수급 받는 부모의 비중은 4.7%로 총 8,568명의 아동이 가정양육수당을 수급 받았는데 이는 1~2세 아동의 2.5%에 해당한다. (Statistiska Centralbyrån, 2012, Ellingsaeter, 2012에서 재구성). 가정양육수당 수급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중 92%가 여성이었다. 가정양육수당 수급의 많은 비중을 이민자들이 차지하고 있었으며, 신청자 중의 17%가 초등학교만 졸업한 사람들이었는데 이는 전체 인구의 초등학교 졸업자 비중 9% 보다 높은 수준이다. 가정양육수당을 수급하는 여성들의 50%가 배우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Kessel and Vinge, 2010, Ellingsaeter, 2012에서 재구성). 1994년도에 가정양육수당 제도 도입의 영향력을 분석한 Segendorf와 Teljosuo(2011, Ellingsaeter, 2012에서 재구성)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여성들은 배우자와 비교하여 임금 수준이 낮고 소규모 분야에 종사하는 경향이 컸다. 소득과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가정양육수당을 수급 받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양성 평등과 여성 고용

가정양육수당은 원칙적으로 젠더 중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아동의 부모 모두가 수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적인 자녀 양육 수당의 수급자는 매우 성별 격차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대부분의 수급자들은 여성이다. 연구 결과들은 가정양육수당이 양성 평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가정에서 양성 분업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노동 시장에서의 양성 평등을 저해하는 것으로 지적하였다. 핀란드의 가정양육수당은 돌봄 노동에서의 성 역할 분업적인 양상을 강화하고 사회 내에서 여성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po, 2010). 노르웨이의 가정양육수당 역시 부부 간의 불평등한 노동 분업을 가져와서 국가가 표방하고 있는 양성 평등 확립이라는 정치적인 목적에 위배되는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Rønson and Kitterød, 2010). 스웨덴의 가정양육수당은 여성이 근로 시간을 줄임에 따라 소득도 낮아지게 되어 여성과 남성 간의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Kessel and Vinge, 2010, Ellingsaeter,

2012에서 재구성).

노르웨이와 스웨덴에서 자녀를 가진 여성과 자녀가 없는 여성 간의 취업률 격차는 어느 정도 사라졌지만 핀란드에서는 여전히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Mandel and Seymonov, 2006). 핀란드에서 3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의 대부분은 가정주부들이다. Haataja와 Nyberg(2006)는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핀란드 여성들의 거의 절반이 복귀할 직장이 없기 때문에 임금 노동과 비임금 노동 간의 실제적인 선택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가장 높은 장기 실업률은 3~6세 자녀를 가진 여성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시기는 가정양육수당의 수급이 종료되는 시점이다. 육아 휴직을 시작하기 전에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했던 여성들은 더 많이 장기간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Eydal과 Rostgaard, 2011). 대부분의 대도시가 지역의 공공 보육 시설 이용을 억제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가정양육수당을 제공하고 있어 이는 여성들로 하여금 집에 남아 자녀들을 돌보도록 하는 재정적인 유인을 더해주고 있다(OECD, 2005). 지자체의 가정양육수당 보조금에 대한 연구에서는 이러한 보조금이 여성들의 노동 공급을 저해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았다(Kosonen, 2011, Ellingsaeter, 2012에서 재구성).

노르웨이에서 가정양육수당을 도입한 초기에는 여성들의 노동 시장 참여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Baklien, Ellingsaeter, Gulbrandsen, 2001, Schöne, 2004, Ellingsaeter, 2012에서 재구성). 1~2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취업률은 감소하지 않았으나 통계 모형 추정 결과에 따르면 여성 취업률은 가정양육수당이 도입되지 않았더라면 상승했을 것으로 나타났고 취업률 감소라는 부정적인 영향력은 향후 2~3년 내로 더욱 커질 것이라고 예측되었다(Rønsen, 2009). 하지만 2000년대 중반에 1~2세 자녀를 가진 여성들의 취업률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노르웨이에서 가정양육수당은 이민자 여성들의 취업률에 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Hardoy와 Schöne(2010)는 가정양육수당이 노르웨이 여성들의 노동 시장 참여율을 4% 감소시킨 반면에, 비서구권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이보다 높은 12%를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비이민자 여성의 3명 중 2명이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으면서 근로를 함께 하고 있는 반면에, 아프리카 혹은 아시아 출신의 이민자 여성 중에서는 3명 중 1명만이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으면서 근로를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에서도 역시 이민자 여성들의 취업률은 낮고 가정양육수당은 이민자 여성들이 비취업 상태를 유지

하도록 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egendorf와 Teljosuo, 2011, Ellingsaeter, 2012에서 재구성).

가정양육수당은 여성들을 노동 시장으로부터 이탈하도록 하여 여성들의 노동 시장에서의 지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Neland(2007)는 가정양육수당이 여성이 직업을 갖고, 승진하고, 자질을 향상하고, 정규직으로 노동 시장에 근로하게 하는 것에 모두 부정적인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Ellingsaeter, 2012에서 재구성). 하지만 노르웨이에서 가정양육수당의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연금 제도가 다소 완화시켜 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노르웨이에서 미취학 자녀를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기 위해 집에 있는 부모들은 매년 연금 포인트를 받는다.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면서 보편적인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부모들은 자동적으로 연간 소득 NOK 356,000에 해당하는 연금 포인트를 받는다. 가정양육수당을 지급 받는 대다수가 여성이라는 사실은 가정양육수당이 가정 내에서의 전통적인 성역할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3.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

가정양육수당을 받으면서 집에서 자녀를 돌보는 비중이 높은 핀란드는 영유아의 보육 서비스 이용률도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다. 핀란드에서 1세 영아의 보육 시설 이용률은 30%인데 이는 스웨덴의 49%, 노르웨이의 71% 보다 낮은 수준이다. 2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나 핀란드의 2세 보육 시설 이용률이 51%인데 반해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각각 89%와 91%로 상대적으로 훨씬 높다. 유아의 경우에도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보육 시설 등록률은 97~99%로 거의 100%에 가까운 반면에 3~5세 핀란드 아동은 약 68~78%가 보육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Nordic Council of Ministers, 2011).

노르웨이에서는 가정양육수당 제도가 도입된 후에 1~2세를 돌보는 보육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오히려 증가하였다(Ellingsaeter와 Gulbrandsen, 2007). 노르웨이의 보육 시설 수는 오랜 기간 덴마크나 스웨덴에 비해 낙후된 실정이었다. 노르웨이가 처음에 가정양육수당 제도를 도입하였을 때 수급자 수는 매우 낮았다. 노르웨이에서 보육 시설 이용 비용은 다른 북구 유럽 국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 시설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공급보다 높았으며 이용을 원하는 대기자 수

가 많았다. 노르웨이의 1~2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취업률이 77%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1~2세 아동의 공공 보육 서비스 충족률이 세 명 중에서 한 명 수준이었기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민간 보육 도우미를 고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가정양육수당이 처음에 도입되었을 때 수급률이 높았던 것은 보육 시설의 부족이 이유였다고 할 수 있다. 2005년 이후 중도 좌파 정부가 특히 3세 미만에 대한 종일제 보육 시설 수를 확대하였다. 부모가 지불하는 보육 서비스 비용에 대해 상한액을 설정하여 보육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더욱 증가시켰다. 2010년 현재 가정양육수당을 수급 받는 부모들 중 41%가 가정양육수당 제도가 철폐되면 보육 서비스 이용을 신청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Moafi와 Bjørkli, 2011, Ellingsaeter, 2012에서 재구성).

스웨덴은 북구 유럽 국가 중에서 보육 시설이 가장 잘 발달된 국가 중의 하나로서 가정양육수당이 도입된 시점에도 공공 보육 서비스가 상당 수준 발달한 상황이었다. 2세의 보육 시설 이용률은 상당히 높았으며, 대부분의 아동이 육아 휴직이 종료되는 18개월부터 보육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1세의 보육 시설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모든 4~5세 아동들은 시간제로 보육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권리가 있다 (Bergqvist와 Nyberg, 2002).

이민자 아동의 가정양육수당 수급과 관련한 이슈는 다음과 같다. 핀란드는 노르웨이나 스웨덴과 비교하여 이민자의 비중이 적다. 따라서 이민자 아동의 가정양육수당 수급에 대한 이슈는 핀란드가 가정양육수당의 수급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나 스웨덴에 비해 심하지 않은 편이다. 노르웨이에서는 가정양육수당 수급자 수가 감소됨과 더불어 아시아와 아프리카 출신 부모들의 수급률도 1999~2009년 기간 76%에서 53%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민자 부모들의 수급률 감소는 비 이민자 부모의 감소율 이 동 기간 45%였다는 점에 미루어 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다 (NOU, 2011, Ellingsaeter, 2012에서 재구성). 이민자 아동의 보육 시설 이용률은 전반적인 보육 시설 이용률의 증가와 더불어 증가하여 전체 아동의 보육 시설 이용률과의 격차는 감소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두 집단 간의 차이는 존재하고 있어 2009년 현재 6세 미만 전체 아동의 73%가 보육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반면에 이민자 아동의 보육 시설 이용률은 54%로 상대적으로 낮다(NOU, 2011, Ellingsaeter, 2012에서 재구성). 이민자 아동의 보육 시설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증가한 것은 가정양육수당을 받기 위해 시설 서비스 이용을 기피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되고 있다. 스웨덴에서

가정양육수당의 수급률이 일반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의 계층간 격차는 증가하고 있어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의 상당 부분을 이민자 아동이 차지하고 있다 (Segendorf 와 Teljosuo, 2011, Ellingsaeter, 2012에서 재구성).

가족의 배경은 아동의 발달과 삶에서 다양한 기회를 갖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유아기 초기 교육은 아동이 자라나는 환경을 평등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영유아기 때에 주어지는 다양한 자극은 수학이나 읽기 말하기와 같은 인지적인 측면과 사회성, 율동성, 감수성과 같은 비인지적인 측면의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Mogstad and Rege, 2009, Ellingsaeter, 2012에서 재구성). 이러한 점에서 교육 수준이 낮거나 이민자 아동의 보육 시설 이용률이 낮은 것은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가정양육수당은 부모로 하여금 보육 시설 서비스 이용을 기피하는 유인으로 작용하여 유아 초기 교육 참여율에서 사회경제적인 격차를 유발하도록 할 수 있다. 가정양육수당은 단기적으로 볼 때 저소득 가정에게 현금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재분배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여성경제활동 참여와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재분배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민자 아동의 발달에 대한 가정양육수당의 부정적 효과는 노르웨이나 스웨덴과 같이 교육수준이 낮은 이민자 비중이 큰 일부 국가에서 나타나는 특수한 사례라 할 수 있다. 한편, 상기 연구결과와 반대로 생애 초기 형성되는 부모-자녀 간의 애착관계가 아동 발달의 초석이 되므로 영아기 가정 내 양육을 지원하는 가정양육수당의 아동발달에 관한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많은 연구들이 있다.

Belsky(1986), Belsky & Rovine(1988), Lamb & Stemberg(1990) 등에 따르면 생후 1년 이내 주 20시간 이상 타인에 의해 양육될 경우 어머니와의 애착관계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어머니나 아버지와 같은 주 양육자의 장기적 부재나 불규칙적인 양육행태는 영아의 주 양육자로부터의 격리상태의 반복을 초래하게 되고, 그 결과 영아의 정서조절능력이나 놀이행동, 수면이나 식사패턴 등에 부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낸다는 연구결과들도 보고되고 있다(Feild, 1994; Schanberg & Feild, 1987). 특히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보다 부모와의 격리상태로부터 스트레스를 겪고 정서조절 능력이 저하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Tronick & Cohn, 1989; Eisenberg & Fables, 1992).

이와 관련하여 Clarke-Stewart(1989), Jaeger & Weinraub(1990) 등은 생애초

기에 주 양육자가 자주 바뀔 경우 양육환경이나 양육행태가 일관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양육환경에 있는 영아는 이것을 부모로부터의 거부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해당 아동은 부정적 의사 표시를 억제하거나 최소화하는 등의 정서표현을 익히게 되어 사회참여에 소극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는 부정적 영향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 아동발달 관점에서는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 즉, 시설에서의 타인양육과 관련하여 “낮은 질의 보육서비스, 장시간 동안의 보육시설 이용, 1세 미만 영아의 보육서비스 이용 등은 아동 행동문제를 유발한다”는 것이다(OECD, 2011). Hill, Waldfogel, Brooks-Gunn & Hann(2005)의 5~6세 아동의 인지능력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0~1세 영아기 때 어머니가 상용근로자로 일한 경우 아동이 만 1세 이상이 될 때까지 (재)취업을 1년 미룬 경우에 비해 아동의 언어 및 수학 성적이 낮게 나타났다. 다만, 저소득 가구일수록 영아기 어머니 취업의 부정적 효과는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밖에도 아동이 1세 미만일 때 어머니의 취업이 아동의 인지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다수의 연구결과가 존재한다(Waldfogel, J., W. Han and J. Brooks-Gunn, 2002; Brooks-Gunn, Hann & Waldfogel, 2010). Felfe & Hsin(2012)은 어머니가 아이의 학습과 놀이 활동에 할애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아이의 인지능력이 향상되고 행동장애를 일으킬 확률이 떨어지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혔다.

한편, 가구소득 역시 아동의 발달에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다. 빈곤이 아동발달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Duncan and Brooks-Gunn(1997), Levy and Duncan(2000), Duncan et.al(2010) 등은 영유아시기 가구소득이 향후 아동의 학업성취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가구소득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경로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아동의 영양, 건강, 학습과 관련한 물질적 투자규모가 가구소득에 의존하는 직접적인 영향과 아동뿐만 아니라 가구원 전체의 소비에 사용됨에 따라 가구 내 경제적 문제에서 비롯되는 갈등을 완화시키는 소득의 spillover 효과가 있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의 실증연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Dahl & Lockner(2012)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EITC와 같은 아동양육에 대한 현금보조가 아동의 인지능력 향상에 상당한 효과를 나타내며 이러한 효과는 저소득층 아동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다. 한편, OECD(2011)는 출산 직후에서 3세 미만의

어린 자녀를 둔 가족이 가장 큰 빈곤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아동발달과 영아기 가정 내 양육과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들은 미국이나 캐나다 등 비유럽국가 사례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유럽국가 사례에서도 아동발달에 가정양육수당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Bettinger, Hægeland & Rege(2013)은 노르웨이 Cash for Care정책의 아동 학업성취에 대한 효과를 실증하였는데, 주로 수혜아동의 학업성취를 살펴보고 있는 기존 연구와 달리 이들 연구는 노르웨이 가정양육수당 시행 전 후 태어난 동생을 둔 초등학교와 중학교 재학생 68,000명의 학교성적과 가정양육수당 수급 여부와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정책효과를 살펴보았다. 이에 따르면, 전체 부모 중 약 5%가 가정양육수당 도입 이후 취업상태를 바꾸었고, 고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일을 그만 두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 반대로 저소득층 부모는 수당을 받더라도 일을 중단하지 않았고 대신 친척이나 친구의 도움을 받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편, 자녀들의 학업성적을 보면,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동생을 둔 학생의 성적이 크게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 10학년을 기준으로 평균성적이 0.2점(6점 만점 기준) 상승하였는데, 이 같은 학업성취도 향상효과는 특히 6~7세 학생들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저자들은 “수당을 받는 영아뿐만 아니라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에게도 가정 내 부모나 친지의 보살핌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여성고용이나 이민자 아동과 같은 취약계층 아동의 발달에 가정양육수당이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지원이라는 경로를 통해서 가정 내 양육을 도모하고 결과적으로 인적자본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가정양육수당제도의 정책적 의의를 제공한다.

이하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가정양육수당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제4장은 가정양육수당제도 관련 이슈별 국민들의 정책인식 동향 파악 및 양육수당 사용실태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제 4 장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한 가정양육수당 만족도 분석

제1절 자료 분석 목적

제2절 자료 분석 방법

제3절 가정양육수당 동향 분석

제4절 채널별 가정양육수당 만족도 분석

제5절 가정양육수당 불만족 이유 및 사용처 분석

4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한 < 가정양육수당 만족도 분석 <

제1절 자료 분석 목적

1. 자료 분석 목적

무상보육이 시작된 2013년을 시작으로 2015년 현재까지 무상보육 특히, 가정양육수당의 정책 및 수급에 대한 찬성과 반대, 만족과 불만족의 의견들이 인터넷상으로 표출되었다. 웹이라는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가정양육수당 관련 의견을 공유하고, 가정양육수당 정책의 찬반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며, 가정양육수당 수급에 있어 만족과 불만족을 웹상에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웹상에 가정양육수당 정책 및 만족도에 대한 반응이 올라온 글들은 가정양육수당에 대한 반응을 분석하기에 좋은 분석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현재는 빅데이터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웹에 있는 글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는 기술인 웹 크롤링(web crawling) 또는 웹 스크래핑(web scrapping) 기술과 자연어 처리 기술의 발달, 그리고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오피니언 마이닝(opinion mining), 감성분석(sentiment analysis) 등 텍스트를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화조사의 경우 연구자가 연구 결과를 얻고자 하는 목적이 정해지면 방향성에 맞춰 설문지가 설계되며, 모집단과 표본프레임, 표본추출방법을 정하여 표본을 추출하게 된다. 추출된 표본은 분명히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을 지니지만, 설문지의 설계 방향에 따라 연구의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즉, 충분한 양의 표본은 대표성을 지닐 수 있지만 편향 문제(biased problem)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에 웹상의 글들은 전화조사의 표본에 비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웹상에 글을 올리는 성향을 가진 사람의 성향에 의해 대표성이 부족할 수 있지만, 전화조사처럼 요구되는 질문에만 답을 하는 특징들에 얽매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양육수당의 정책과 수급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집하여 이를 분

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심층적인 분석을 위해 가정양육수당 관련 정책 및 사건들이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을 이끌어 내었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아래의 표는 자료 분석 기간인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6월 10일까지의 가정양육수당 관련 사건들을 나타내는 표이다. 해당 표의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4-1> 가정양육수당 관련 사건

일시	사건
2013년 1월 1일	- 만 0~5세 전면 무상보육 예산을 확정 - 만 0~5세의 영유아를 둔 가정은 소득과 상관없이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를 수급
2013년 1월 7일	- 무상보육 중단위기가 처음 기사화 - 무상보육 전면 실시로 서울시와 각 자치구의 예산 부족으로 8~9월 보육대란 우려
2013년 1월 27일	- 가정양육수당 신청 접수 날짜(2013년 2월 4일) 및 3월부터 지원 가능하다는 내용 보도
2013년 2월 4일	- 가정양육수당 신청 접수 시작 - 이용자가 한꺼번에 몰려 사이트 접속 장애
2013년 2월 8일	- 복지료를 사칭한 가정양육수당 관련 악성 앱 주의 당부 보도
2013년 2월 13일	- 현금으로 받는 가정양육수당 신청자 수가 절반이 넘을 정도로 가정양육수당이 선호 된다는 것이 보도
2013년 3월 3일	- 무상보육, 재정부족으로 중단위기 될 것이라고 보도
2013년 3월 6일	-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가정양육수당 바우처 제도 검토 보도
2013년 3월 11일	- 해외 체류 한국인 영유아에게도 가정양육수당 지원 보도
2013년 3월 19일	-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손주 돌보미 서비스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지급할 방침이라는 내용 보도 - 두 자녀 이상인 맞벌이 가구의 12개월 이하 아이를 돌보는 친할머니 또는 외할머니 중 한명이 가정양육수당을 받음. 정부에서 지원하는 가정양육수당과 중복 수혜는 안 됨
2013년 3월 24일	- 만 2세 미만 영유아, 어린이집 보다는 가정양육을 택함 보도
2013년 3월 25일	- 가정양육수당 첫 입금
2013년 3월 28일	- 정부, 가정양육수당 실 사용처 실태조사 실시 예정 보도
2013년 4월 17일	- 서울시, 가정양육수당 6월부터 중단 위기 보도
2013년 4월 21일	- 경기도, 가정양육수당 9월부터 중단 위기 보도
2013년 4월 23일	- 보건복지부, 시스템 오류로 가정양육수당 지급 첫 달 2,400여건(3억원) 중복 지급
2013년 5월 7일	- 전국시도지사, 영유아보육비 추경 반영 촉구
2013년 5월 14일	- 당정, 가정양육수당 바우처 방식 도입 추진
2013년 5월 23일	- 서울시, 무상보육 8월 종료, 보육법 통과 시급 보도
2013년 5월 27일	- 기재부, 지자체에 보육료 추가 지원 없다는 내용 보도
2013년 5월 30일	- 당정, 어린이집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안심보육특별대책 추진 - 법을 위반한 어린이집에 한해 가정양육수당 및 보육료 지원 중단 또는 과징금 부과
2013년 6월 25일	- 정부, 지자체에 보육사업·취득세감면분 9,640억원 지원
2013년 7월 29일	- 서울시, 10~11월 가정양육수당 지급 일시 중단 보도 - 서울시 위 보도에 대한 지급 이행하겠다는 해명보도
2013년 8월 6일	- 허위로 미혼여성이 아이도 없이 가정양육수당 받음
2013년 8월 20일	- 강남구, 손주돌보미 사업, 월 최대 24만원 지원
2013년 8월 21일	- 서울시, 정부에 무상보육 지원촉구, 홍보에 버스, 지하철 동원

2013년 9월 1일	- 서울시 17개구 이달 가정양육수당 지급 중단 위기
2013년 9월 5일	- 박원순 서울시 시장, 2천억 빚내서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지급을 계속하겠다고 함
2013년 10월 14일	-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중복수령 상반기 4,300여건
2013년 10월 23일	- 해외 체류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 55억 지급
2013년 12월 31일	- 보건복지부,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마련 - 다양한 수요 반영한 맞춤형 보육지원
2014년 1월 1일	- 올해 복지부 예산 48조 8,995억 확정, 전년 대비 14% 증가
2014년 5월 14일	- 서울시 출생신고, 가정양육수당 신청 원스톱 서비스
2014년 6월 15일	- 가정양육수당을 보육료와 형평에 맞게 두달치 더 지원, 하지만 시행 시기는 미정
2014년 7월 13일	- 시간보육제 이달 말 시범 실시
2014년 7월 27일	- 아동육아휴직제도 법제화 등 보육공약 발표
2014년 9월 3일	- 복지부, 지자체 재정 운영 실태 점검, 중앙정부-지자체 갈등 심화 - 중앙정부 지자체 복지재정 지원 요청 거부
2014년 9월 12일	- 복지부담에 지방세, 주민세, 자동차세 대거 인상, 서민부담 가중
2014년 9월 23일	- 가정양육수당 신청, 연말정산 신고 정부가 신청을 알아서 해줌
2014년 10월 14일	- 올해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중복지원 5,000건 넘어
2014년 10월 16일	- 이중국적 해외체류 아동 가정양육수당 213억
2014년 11월 12일	- 새정치민주연합, 기본적인 복지비용은 중앙정부가 지원토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
2015년 1월 13일	- 인천 어린이집 교사 네 살배기 아이 폭행 기사화
2015년 1월 15일	- 폭행 어린이집 운영 정지 기사화
2015년 1월 23일	- 보건복지부장관, 불필요한 어린이집 수요 줄일 것, 보육개편
2015년 1월 24일	- 황우여 사회부총리 2월 초 아동학대 대책 발표
2015년 2월 8일	- 새누리당, 복지사업 구조조정
2015년 3월 10일	- 90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에 가정양육수당 지급 제한 추진

자료: 저자 작성

2. 자료 설명

자료는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6월 10일까지 뉴스 기사, 블로그, 카페, SNS (트위터)에서 ‘가정양육수당’이라는 키워드 검색을 통해 얻은 결과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뉴스 기사 자료는 네이버 뉴스 검색을 통해 수집하였고, 블로그 자료는 다음 검색을 이용하여 네이버 블로그, 다음 블로그, 티스토리에서 수집하였다. 카페는 다음 카페 검색을 통해 수집한 자료이고, 트위터 자료는 트위터 검색 서비스를 통해 수집한 자료이다. 총 수집한 자료의 개수는 총 27,213건으로 웹 크롤링이 차단된 자료는 자료화하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총 수집된 자료보다 더 많은 키워드 검색 결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해당 수집 자료는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추후의 절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하고, 가정양육수당의 동향 분석, 가정양육수당의 만족도 분석, 가정양육수당 정책 및 수급에 있어서 불만족 이유에 대한 분석, 마지막으로 가정양육수당 수급자들이 수급 받은 가정양육수당을 저축

하는 이유를 분석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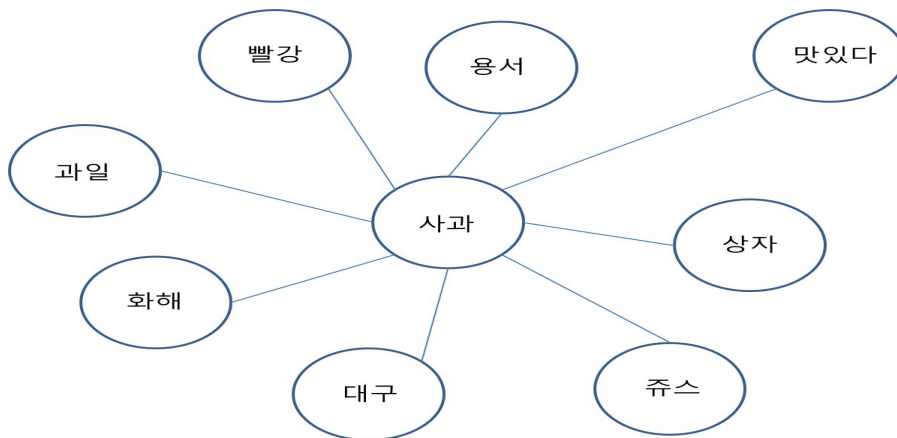
제2절 자료 분석 방법

1. 분석 방법론

가. 텍스트 마이닝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은 텍스트로부터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방법을 이용하여 텍스트에 담겨진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으로 아래의 그림처럼 특정 키워드의 연관 키워드를 찾을 수 있고, 텍스트의 빈도를 빈도표가 아닌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형태로 키워드의 빈도를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그림 4-1] 연관 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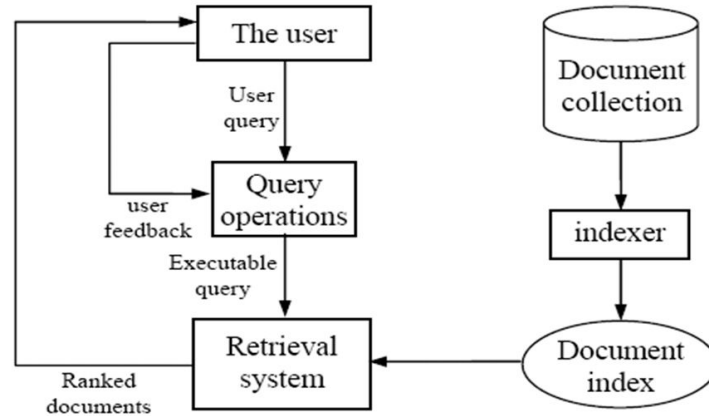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텍스트 마이닝은 데이터로써 텍스트 문서들을 사용하는 데이터마이닝이라고도 불린다. 대부분의 텍스트 마이닝은 정보검색(Information Retrieval(IR))방법을 사용한

다. 개념적으로 IR은 필요한 정보를 찾는 연구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림 4-2] IR 아키텍처



IR모델은 사용자의 질문에 대한 문서의 관련성이 어떻게 정의되는지와 문서 및 질문이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나타낼 수 있다. 빈도수 등 주요 키워드를 추출하는 방법인 정보추출방법으로는 많은 알고리즘이 있으며 그 중에 TF(Term Frequency) 또는 TF-IDF(Term Frequency - Inverse Document Frequency) 방식이 많이 쓰인다. 특정문서 d_j 에서 t_i 번 출현빈도를 보인다고 하면, 이를 f_{ij} 라고 정의할 수 있다. TF는 단어 빈도, IDF는 역단어 빈도, N 은 전체 문서의 수, df_i 는 문서에서 t_i 번 출현 수(특정 단어가 일정 범위의 문서에서 출현 빈도)라고 정의하자.

특정문서 내에서 가장 높은 출현 빈도를 갖는 단어 빈도는 다음과 같다.

$$tf_{ij} = \frac{f_{ij}}{\max\{f_{1j}, f_{2j}, \dots, f_{|V|j}\}}$$

IDF는 $idf_i = \log \frac{N}{df_i}$ 로 표현될 때, 최종가중치(term weight)인 w_{ij} 는

$$w_{ij} = tf_{ij} \times idf_i$$

로 나타낼 수 있다.

또 다른 최종가중치 보정방법으로는

$$w_{ij} = \left(0.5 + \frac{0.5 \times tf_{ij}}{\max(tf_{ij})} \right) \times idf_j$$

이 있다.

TF나 TF-IDF처럼 특정단어에 대한 중요도를 나타내는 방법은 IR에서 가장 기본적인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정 단어의 순위는 검색어와 검색어가 포함된 웹 문서들의 가중치 및 유사도를 계산하여 높은 값부터 차례대로 보여줌으로써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정확도가 검색엔진의 power라고 할 수 있다.

쿼리(질의어 : 정보수집에 대한 요청에 쓰이는 컴퓨터 언어) q 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쿼리 q 에 대한 d_i 의 연관성은 쿼리 q 와 문서 d_i 의 유사도는 두 벡터 사이 각의 코사인으로 정의할 수 있다.

$$\cos(d_j, q) = \frac{\langle d_j \cdot q \rangle}{\|d_j\| \times \|q\|} = \frac{\sum_{i=1}^{|V|} w_{ij} \times w_{iq}}{\sqrt{\sum_{i=1}^{|V|} w_{ij}^2} \times \sqrt{\sum_{i=1}^{|V|} w_{iq}^2}}$$

코사인은 텍스트 클러스터링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기도 하다.

상관성 정도를 나타내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Okapi 방법이 있다. 이는 직접적으로 쿼리 q 에 대한 문서 d_j 의 상관성 스코어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okapi(d_i, q) = \sum_{t_i \in q, d_j} \ln \frac{N - df_i + 0.5}{df_i + 0.5} \times \frac{(k_1 + 1)f_{ij}}{k_1 \left(1 - b + b \frac{dl_j}{avdl} \right) + f_{ij}} \times \frac{(k_2 + 1)f_{iq}}{k_2 + f_{iq}}$$

으로 계산할 수 있다. 여기에서 k_1 은 1과 2 사이의 값, b 는 0.75, k_2 는 1과 1000 사이의 값을 갖는다.

그 밖에도 그래프 이론에 기초한 확률모형인 그래프 모형(graphical model)에 적용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하여 확률적인 접근으로 분석을 진행할 수도 있다. 이와 더불어 다른 방법론으로 군집분석(cluster analysis), 연관규칙 분석(association rule analysis) 등 비지도 학습(unsupervised learning) 방법에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인 연관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 등을 이용한 지도 학습(supervised learning) 방법에도 적용 가능하여 텍스트를 분석하

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적절한 통계적 방법론을 적용함으로써 분석할 수 있다.

나. 감성분석

감성분석(sentiment analysis)은 오피니언 마이닝(opinion mining)의 범주에 속하며 감정분석이라고도 한다. 오피니언 마이닝은 말 그대로 어떤 텍스트 키워드의 선호도를 발견하는 분석 기법을 말한다. Opinionative documents는 의견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 Relevant Opinionative Document(ROD)는 쿼리에 대한 관련있는 의견을 포함하는 문서들을 의미한다. ROD의 문서 Opinion Similarity score에 의한 순위는

$$OSim_{sentence\ score}(d, Q) = \begin{cases} \sum_{s \in R(d)} score(s), & \text{if } d \in D \\ 0, & \text{otherwise} \end{cases}$$

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d 는 문서, D 는 쿼리 Q 의 ROD로써 분류된 문서 셋, $R(d)$ 는 D 에서 문서 d 에 relevant opinionative 문장들의 셋, s 는 문장, $score(s)$ 는 s 의 분류 스코어이다.

감성분석은 특히, 특정 텍스트에 대한 긍정, 부정, 중립을 판별한다. 오픈한글과 같이 한글의 자연어 처리를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감성 사전의 api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가정양육수당 만족도 조사를 목적으로 하므로 수집된 텍스트 중 어떤 사람이 가정양육수당에 대한 개인의 감성을 밝힌 부분을 긍정, 부정, 중립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여기서 수집된 텍스트에서 개인의 견해를 밝히는 부분을 걸러내야 하는데 이를 주관성 탐지(subjectivity detection)라 하고, 걸러낸 자료 중에서 해당 텍스트가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판단하는 것을 극성 탐지(polarity detection)라고 한다.

3. 자료 분석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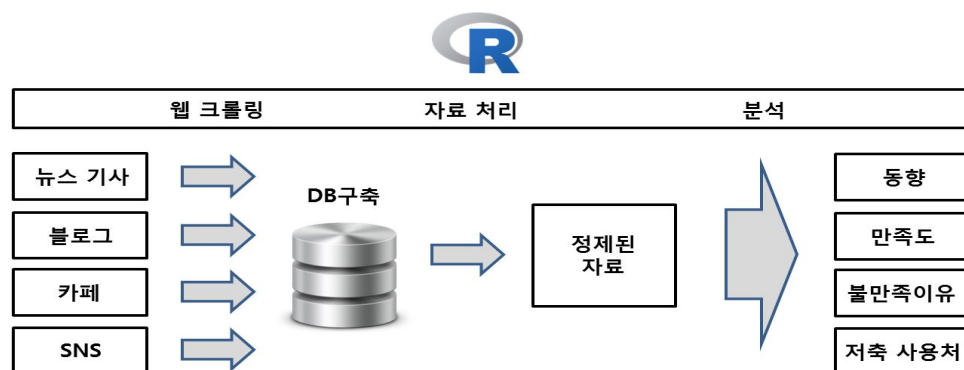
가. 웹 크롤링

뉴스 기사, 블로그, 카페, SNS(트위터)의 자료는 R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R에서 웹 크롤링을 하기 위해 스크립트(script)를 작성하였고, 이를 실행하여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네이버 블로그의 경우 URL을 얻은 후에 scan() 함수로

URL에 접근하여 처리하였고, 다음의 경우에는 scan() 함수나 다른 패키지의 접근으로 글을 수집할 수 없고, 다음 개발자 api를 이용해 json 문서로 글을 수집하여 json 패키지를 이용해 자료를 최종 수집하였다. 트위터는 R에서 twitter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트위터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텍스트 자료 처리 및 분석을 위해 사용한 R은 통계 분석을 최적으로 하는 오픈소스 통계 패키지이다. 버전은 3.2.1을 사용하였고, 웹크롤링에서는 문자열 제어를 위해 stringr 패키지와 json 형식으로 자료를 가져오기 위해 rjson 패키지를 사용하고, 자료 정제를 위해 한글 처리 패키지인 KoNLP를 사용하였다.

[그림 4-3] 자료 분석 과정



자료: 저자 작성

나. 자료 처리

웹에서 얻은 자료로부터 연구 목적에 맞는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은 힘든 작업이다. 웹으로 부터 얻은 자료 중 분석에 용이한 자료를 신호(signal)라고 하면 이는 극히 일부분이고, 나머지는 신호에 섞인 잡음(noise)에 불과하다. 연구 목적에 따라 잡음의 정도가 달라지겠지만 가정양육수당 만족도 분석을 위해 수집한 자료의 상당수가 잡음에 해당했다. 이러한 잡음을 걸러내는 작업을 통해 최종 분석을 위한 정제된 자료를 구축하였다. 가정양육수당의 저축 후의 사용처 분석을 위한 자료 처리 방법으로 저축과 저금이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자료를 따로 추출하여 이 중 사용처를 밝히지 않은 데이터를 걸러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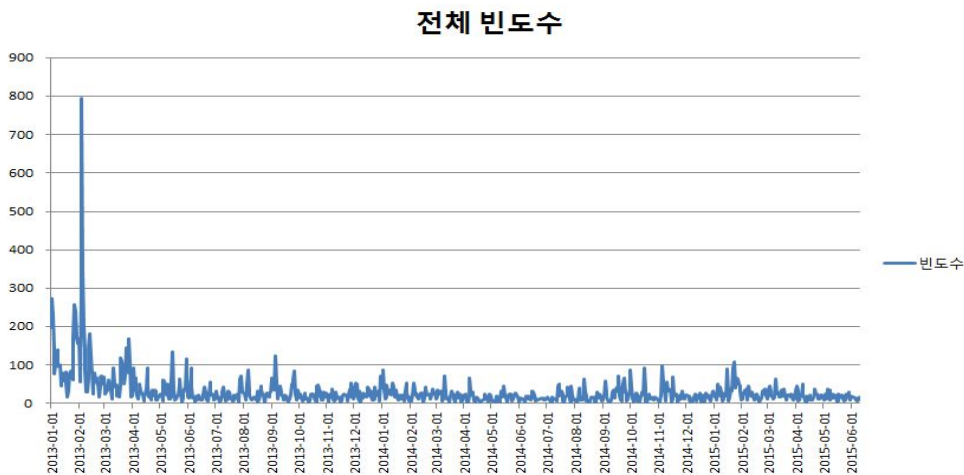
는 방식으로 자료를 최종 구축하였다. 위의 자료 처리 과정은 모두 R을 사용하였다.

제3절 가정양육수당 정책인식 동향 분석

1. 전체 동향 분석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가정양육수당 키워드가 포함된 뉴스기사, 블로그, 카페, SNS(트위터)의 노출횟수(버즈량)를 보고자 한다. 아래 그림을 보면 자료 수집의 시작인 2013년 1월 1일 시점을 기준으로 1~2달간 높은 빈도수를 보이다가 그 이후에는 특정 시점에서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그림 4-4] 가정양육수당 키워드가 포함된 전체 노출 빈도수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텍스트마이닝 분석결과

2013년 1월 1일 만 0~5세 전면 무상보육 예산을 확정 한 날을 기점으로 2~3일 정도 빈도수가 약 140~280 정도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그 이후 2013년 1월 27일에 가정양육수당 신청 접수 날짜(2013년 2월 4일)와 3월부터 지원 가능하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해당 일에 빈도수가 258건을 기록하며 높은 빈도수를 보였다. 가정양육수당 신청 접수가 시작된 2013년 2월 4일에는 자료가 수집된 기간 중 가장 높은 빈도수를 기록했다. 가정양육수당에 대한 관심이 전체 기간 중 가장 높았다고 분석할 수 있다. 접수 당일에는 가정양육수당 신청자가 복지포 사이트에 한꺼번에 몰리면서 이에 대한

내용이 기사 및 다양한 채널로 표출되었다. 접수일의 여파가 2~3일 정도 이어져 접수 당일 이후에도 가정양육수당 키워드에 대한 검색 건수가 높은 빈도수를 보였다.

2013년 3월 19일에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손주 돌보미 서비스로 가정양육수당을 증액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을 보도 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낮게 유지되던 빈도수가 다시 높은 값을 기록했다. 그 이후, 가정양육수당이 처음 지급된 2013년 3월 25일에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2013년 3월 28일에 정부가 가정양육수당 실 사용처 실태조사 실시를 한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가정양육수당 접수일 이후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였다.

한 달 정도, 특별히 높은 노출 빈도수를 기록하지 않다가 2013년 5월 15일 100 이상의 높은 노출 빈도수를 보였다. 이는 하루 전인 2013년 5월 14일에 가정양육수당 바우처 방식 도입 추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면서 다시 가정양육수당에 대한 높은 관심을 불러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13년 9월 5일, 가정양육수당 키워드의 높은 노출 빈도수를 보인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 시장은 2천억 원의 빚을 내어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지급을 계속 하겠다는 보도를 냈다. 당일 이전까지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가정양육수당 예산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기사들이 종종 보도되었다.

2013년 말에 다시 높은 빈도수를 보이고, 2014년에 들어서는 약 3분기 정도 별다른 반응이 나타나지 않다가 2014년 10월 16일 다시 높은 빈도수를 보였다. 이는 당일 이중국적 해외체류 아동에게 지급된 가정양육수당이 213억에 달한다는 기사가 보도되었고 그에 대한 부정적 반응에 기인한다.

2015년 1월 13일, 인천 어린이집 교사가 네 살배기 아이를 폭행한 사건이 기사화가 되었고 그 이틀 후인 2015년 1월 15일 폭행 어린이집 운영 정지 기사가 보도되면서 가정양육수당 키워드 노출 횟수가 높은 수치를 보였다.

그리고 2015년 1월 23일에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불필요한 어린이집 수료를 줄이고, 가정양육수당을 인상하는 보육개편 방향을 제안하면서 가정양육수당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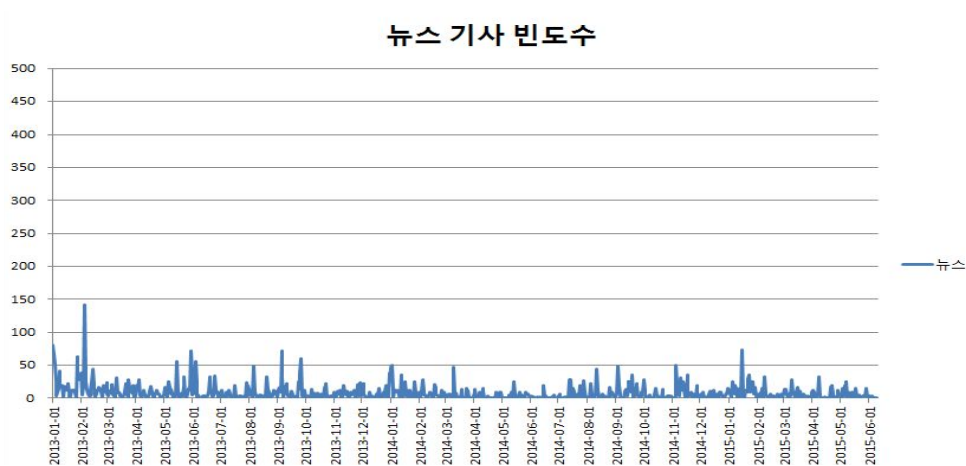
뉴스 기사, 블로그, 카페, 트위터를 각 채널 별로 구분 없이 가정양육수당 키워드의 노출 빈도수를 분석함으로써 전체적인 관심 수준 정도를 파악할 수 있었고, <표 4-1>에서 보이는 주요 사건들과 높은 빈도수를 보이는 날이 잘 일치해 됨을 알 수 있다. 가정양육수당 관련 이슈들이 발생하면서 각각의 빈도수의 높고 낮음을 파악하여 사람들

이 어떤 사건에 더 많이 반응했는지를 파악했다.

2. 채널 별 동향 분석

위에서 높은 반응을 보인 사건들은 채널에 따라 높은 반응과 낮은 반응을 보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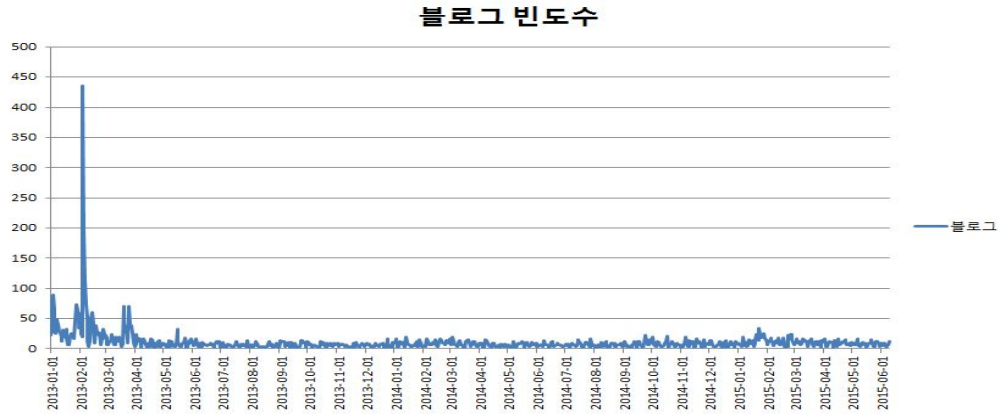
[그림 4-5] 뉴스 기사 빈도수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텍스트마이닝 분석결과

먼저 위의 뉴스 기사 빈도수 그림을 보면 전체적으로 계속 꾸준히 높은 빈도를 보인다. 가정양육수당 신청일인 2013년 2월 4일에 전체 빈도수에서 보인 것과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빈도수를 기록했다. 그리고 2013년 5월 30일에 당정은 어린이집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안심보육특별대책을 추진했고, 법을 위반한 어린이집에 한해 가정양육수당 및 보육료 지원 중단 또는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해당 날에는 다른 채널들에 비해 뉴스 채널에서 특히 높은 빈도수를 보였다.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직접적인 반응을 표출하는 것은 뉴스 기사를 제외한 블로그, 카페, 트위터이므로 해당 사건의 경우 보도된 것에 비해 사람들은 낮은 반응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추후 2015년 1월 15일에는 폭행 어린이집 운영 정지한다는 것이 기사화 되면서 다시 높은 빈도수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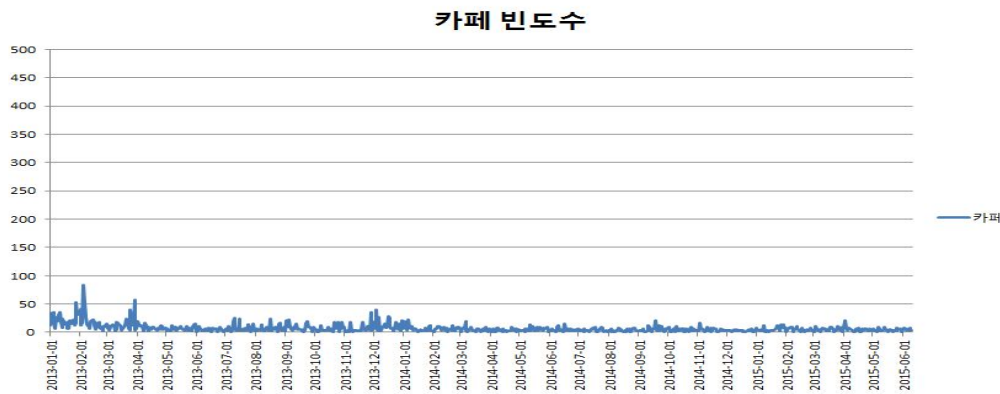
[그림 4-6] 블로그 빈도수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텍스트마이닝 분석결과

위의 블로그 빈도수를 보면 가정양육수당이 도입되는 초기에 높은 빈도수를 보이고 그 이후에는 거의 높은 빈도수를 보이지 않는다. 가정양육수당 신청일에 400건이 넘는 매우 높은 빈도수를 보이고 있다. 다른 채널에서도 가정양육수당 신청일에는 높은 빈도를 보이지만 블로그에서 특히 높은 빈도를 보인다. 그리고 높은 빈도를 가지는 날이 없다가 2015년 1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육개편을 추진하였을 때 높은 빈도수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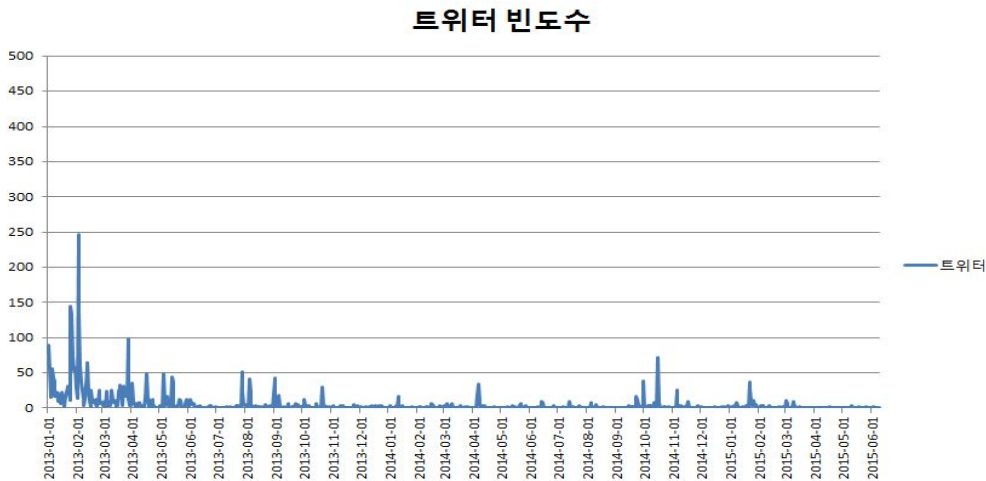
[그림 4-7] 카페 빈도수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텍스트마이닝 분석결과

카페의 경우 가정양육수당 신청일에 제일 높은 빈도수를 보였고, 2013년 12월 초에 전체를 봤을 때 약간 높은 빈도수를 보였다. 다른 채널에 비해 특정 날짜에 매우 큰 값을 보이지는 않으며 뉴스 기사처럼 계속적으로 꾸준한 빈도수를 보이고 있다.

[그림 4-8] 트위터 빈도수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텍스트마이닝 분석결과

트위터는 가정양육수당 키워드가 노출된 날과 노출되지 않은 날이 거의 명확히 구분된다. 가정양육수당 관련 이슈가 있을 때는 매우 높은 빈도수를 보여주며 그렇지 않을 때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모든 채널이 마찬가지로 가정양육수당 신청일에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이고, 가정양육수당 도입 초에 높은 빈도를 보인다. 2013년 8월 6일에 허위 미혼여성이 아이 없이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사건이 있었을 때 블로그와 카페에 비해 트위터가 특히 높은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2014년 10월 16일에 가정양육수당 키워드의 높은 노출 빈도를 보이는 데 이 때 이중국적 해외체류 아동이 가정양육수당을 213억 받았다는 내용이 기사화가 되었다. 다른 채널들과 비교해 봤을 때 부정적인 사건들이 높은 빈도를 보였다.

제4절 채널별 가정양육수당 만족도 분석

1. 전체 만족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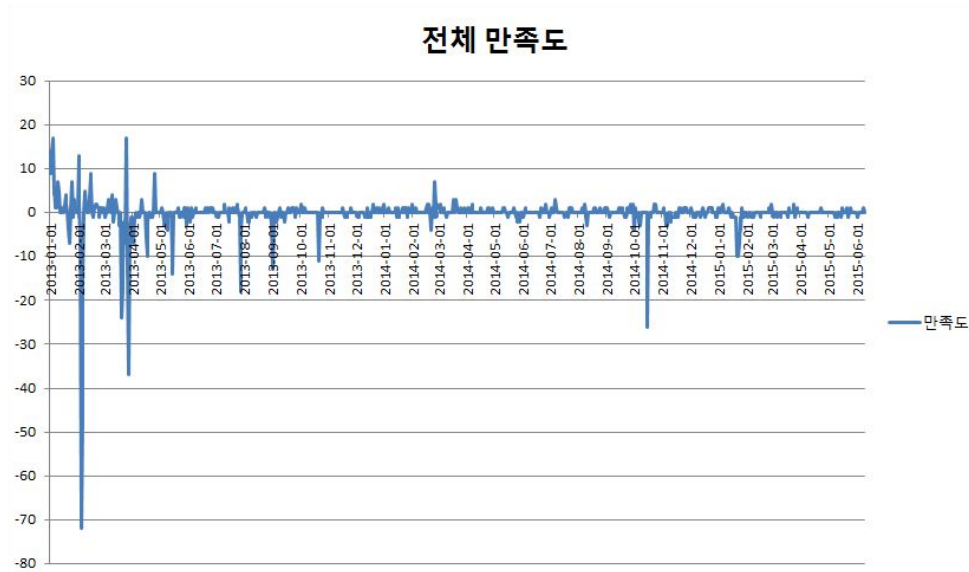
빈도수를 통해서는 가정양육수당이 이슈화되었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에 그친다. 하지만 이런 추이 중에서 어떤 특정 시점에서의 가정양육수당에 대한 반응이 긍정인지 부정인지는 분명 달라질 수 있다. 해당 시점의 사건으로 볼 때, 빈도수가 높다고 하여 이에 대한 반응이 긍정 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지는 알 수 없다. 가정양육수당 정책 및 가정양육수당 수급 만족도에 따라 긍정과 부정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감성분석을 통해 해당 이슈가 긍정 또는 부정인지를 알아보기로 한다.

감성분석의 결과로 가정양육수당에 대해 사람들이 느끼는 바를 파악할 수 있다. 설문지 및 전화 조사 등 리서치의 영역을 활용하여 조사할 수도 있지만 온라인에서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사람의 긍정/부정 등 감정의 표현을 계량화하여 판단할 수 있다.

주관성 탐지를 통해 사람의 감정을 표현한 자료들을 걸러내고 해당 자료를 긍정, 부정, 중립으로 나누고 각각 1점, -1점, 0점으로 점수를 부여하였다. 긍정과 부정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이에 대한 가중치를 따로 주지는 않았다. 한글의 특성상 영어와 달리 긍정과 부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양하고, 문맥과 어감에 따라 텍스트가 표현하는 의미는 달라진다.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 블로그, 카페, 트위터 등으로 표현되는 사람들의 감정 표현은 비속어, 은어, 신조어로 많이 채워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한계점을 가질 수 있다. 오픈한글이라는 감성사전 api를 제공하고 있으나, 아직은 감성분석을 하는데 있어 정확한 분류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되고, 본 연구의 목적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감성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 분류하였다.

그리고 뉴스 기사에서는 사람들의 반응보다는 정보 전달에 초점이 맞춰지므로 블로그, 카페, 트위터를 대상으로 만족도 분석을 하였다.

[그림 4-9] 가정양육수당 전체 만족도 결과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텍스트마이닝 분석결과

위 그림을 보면 가정양육수당 복지부 예산안이 발표된 2013년 1월 1일을 시작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정양육수당에 대한 만족도가 많은 변동을 보여준다. 특히, 일부 특정시점에서 만족도에 대한 반응이 긍정과 부정으로 명확하게 나타난다. 위의 결과에서는 긍정과 부정이 명확하게 나타내는 지점을 기점으로 어떤 사건이 가정양육수당 만족도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2013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가정양육수당 도입 초창기에는 전체의 흐름을 봤을 때, 만족도가 양의 값을 갖는 날 중에서 꽤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다. 2013년 1월 1일에는 보육 예산이 지난해 보다 1조 779억 원 늘어난 4조 1,778억 원으로 예산안을 통과하였다. 만 0~5세 전면 무상보육 예산을 확정함으로써 만 0~5세 영유아를 둔 가정은 소득에 상관없이 가정양육수당 또는 보육료를 받게 되었다. 이때의 가정양육수당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작용하여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2013년 2월 4일에는 조사가 이루어진 전체 기간 중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 날에는 가정양육수당 신청 접수가 시작되어 이용자들이 한꺼번에 복지포 사이트에 몰

려 접속 장애를 일으켜 많은 이용자들이 신청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었다.

2013년 3월 19일에는 조운선 여성가족부 장관의 손주 돌보미 서비스에 대해 가정양육수당 지급 방침이라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19일에는 만족도가 0(긍정과 부정이 동일한 횟수를 보임)이고, 하루가 지난 20일에는 만족도가 음의 값으로 더 낮게 나오면서 이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많이 보였다.

그리고 2013년 3월 28일 정부의 가정양육수당 실 사용처 실태조사 실시 예정이라는 보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부정적이라고 보는 면에서는 높은 금액을 주지 않으면서 너무 정부가 가정양육수당 사용에 대해 간섭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2013년 5월 14일에 가정양육수당 바우처 방식 도입 추진 논란이 일면서 14일과 15일에 낮은 만족도를 보였고, 2013년 7월 28일에 서울시 가정양육수당 지급 중단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서울시 가정양육수당 지급 중단 관련하여 2013년 9월 1일에도 또한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2013년 10월 22일에는 해외 체류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 55억이 지급된다는 것에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반면에 2014년 2월 25일은 매달 가정양육수당이 지급되는 날로 가정양육수당 만족도가 평상시보다 약간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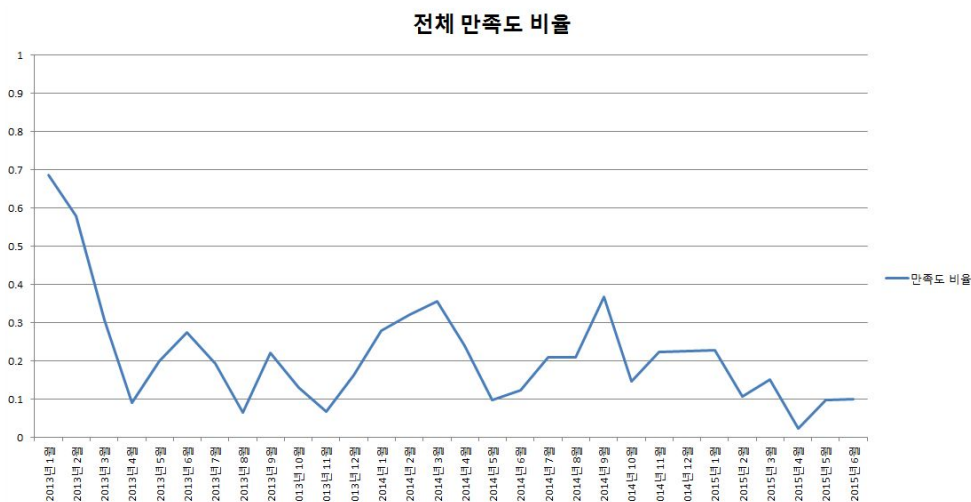
그리고 2014년 10월 16일에 평이하던 만족도가 갑자기 하락하였다. 해당 일에는 이중국적 해외체류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이 213억이 지급된 정보가 공개됨에 따라 그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표출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2015년 1월 22일과 23일에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의 보육개편 추진 방안 발표 이후 전업주부들의 부정적 반응이 크게 나타났다.

가정양육수당 정책 및 수급에 대한 만족도는 특정 사건에 따라 만족도가 긍정과 부정으로 달라짐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사건마다 사람들의 만족도의 긍정 및 부정의 정도는 달랐다. 가정양육수당 관련하여 반응한 사람들 중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의 비율을 계산하면 평균이 0.216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이 값은 전화 설문조사에서 가정양육수당 금액의 만족도 설문의 결과인 0.288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모집단과 비교 기준이 다르므로 비약이 있지만 이를 비교해 보면, 텍스트 마이닝 결과로 얻은 값은 가정양육수당 전반에 대한 만족도 결과이므로 금액 만족도에 추가적으로 가정양육수당 정책 및 관련 사건들에 대한 불만족이 더해져 조금 더 낮은 수

치를 갖는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처럼 만족도에 대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은 전화 설문조사가 적절한 결과를 제공해 준다고 볼 수 있다.

긍정인 사람의 비율을 위처럼 일별로 보면 특정일의 당일 사건에 대한 반응은 얻을 수 있지만, 사람들의 전체적인 만족도 추이를 살펴보는 것은 어렵다. 그러므로 월별로 구간을 나누어 살펴보면 전체적인 만족도 추이를 살펴보는 데 용이하다. 만족도 비율로 월별 평균 만족도의 그림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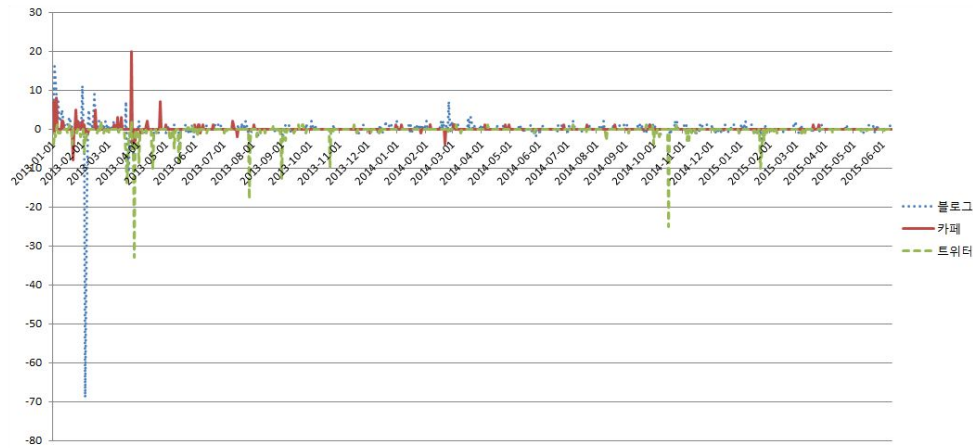
[그림 4-10] 가정양육수당 전체 만족도 추이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텍스트마이닝 분석결과

위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무상보육 예산이 확정된 조사 초기 시점에는 높은 만족도를 보이다가 점점 만족도가 하락하고, 그 이후에는 평균값인 0.216 근처에서 약 0.1 정도의 범위에서 변동을 보인다. 그리고 조사 기간의 마지막에는 긍정적인 만족도 비율이 약 0.1 정도로 낮은 만족도를 보임을 알 수 있다. 확실히 시행 초기에는 가정양육수당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지만, 이후 발생하는 가정양육수당 관련 정책에 따라 사람들의 반응은 낮게 유지되었다. 즉, 가정양육수당 정책은 초기에 사람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충분히 이끌어냈지만, 대체로 가정양육수당 관련 정책 및 사건들은 초기 도입 시점만큼 긍정적 파급 효과를 나타내지는 못했다.

[그림 4-11] 채널별 가정양육수당 만족도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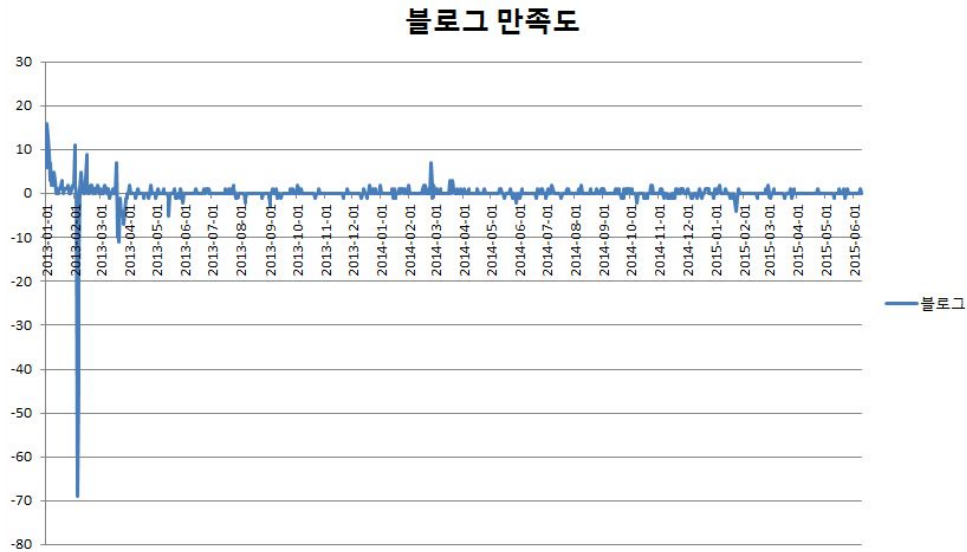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텍스트마이닝 분석결과

그리고 위에서 분석했던 동향 분석과 마찬가지로 가정양육수당 정책 및 수급에 대한 만족도 또한 채널별로 상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그림을 보면 채널별로 가정양육수당 만족도가 확연히 달라짐을 파악할 수 있다.

2. 블로그 만족도 분석

블로그는 대다수에 해당하는 정보 전달 차원의 글을 제외하고 보통 가정양육수당을 직접적으로 수급하는 부모가 대부분 글을 웹상에 올리게 된다. 본인이 자녀들과의 일상을 블로그에 기록하게 되며 가정양육수당을 수급 받는 입장에서 글을 게재한다. 따라서 블로그를 통한 만족도에 대한 반응은 직접적으로 가정양육수당 수급을 받는 부모의 입장이 많이 대변된 반면, 가정양육수당 수급을 받지 않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은 많이 대변하지는 못한다.

[그림 4-12] 블로그에서 가정양육수당 만족도 결과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텍스트마이닝 분석결과

블로그에서는 가정양육수당이 도입되었을 당시 다른 채널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다른 채널 특히, 트위터에서는 가정양육수당 정책 도입에 대해 불만을 표현한 반면 블로그에서는 대부분 가정양육수당을 수급하는 부모 입장에서 가정양육수당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리고 가정양육수당이 신청 시작일인 2013년 2월 4일에는 다른 두 채널에 비해 매우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가정양육수당 신청 당일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직접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고자 하는 부모들이 매우 많은 불편을 느꼈다. 신청하는 시스템에 불만을 지극히 감정적으로 부정적으로 표현한 사람이 대다수이고, 가정양육수당 신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비해 전산시스템이나 신청 체계에 대해 준비가 미흡했다는 평이 있었다. 반면 주민센터를 통해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한 사람들이 원활하게 신청할 수 있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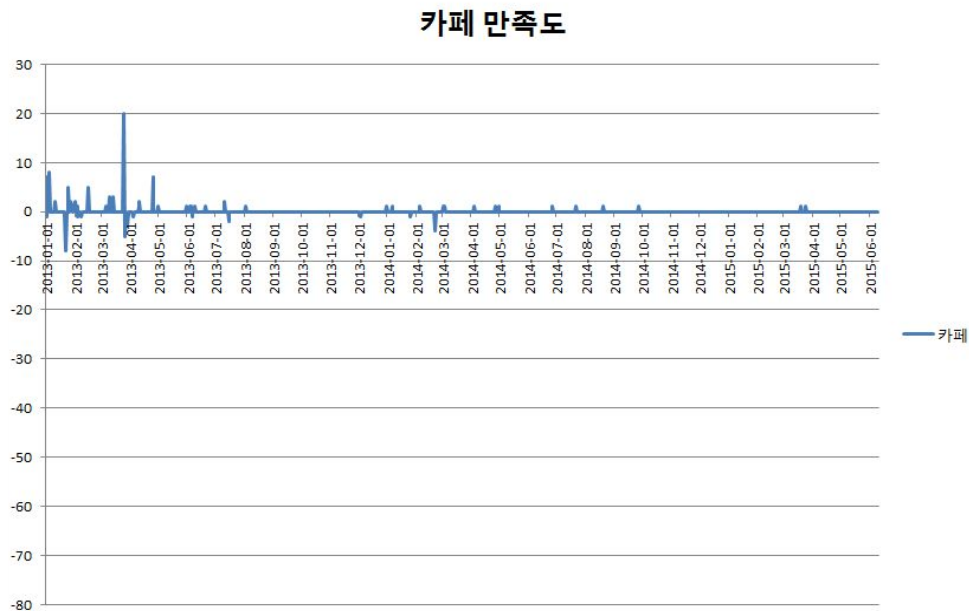
그리고 손주 돌보미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바우처 전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바우처 전환에 대해서는 모든 채널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전반적인 가정양육수당 정책에 대해서는 매일 나타나는 만족도가 다르며 가정양육

수당을 받는 입장에서는 우선 가정양육수당을 받게 되는 것 자체로 좋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며, 불만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금액에 대한 불만족과 추후 세금 인상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3. 카페 만족도 분석

[그림 4-13] 카페에서 가정양육수당 만족도 결과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텍스트마이닝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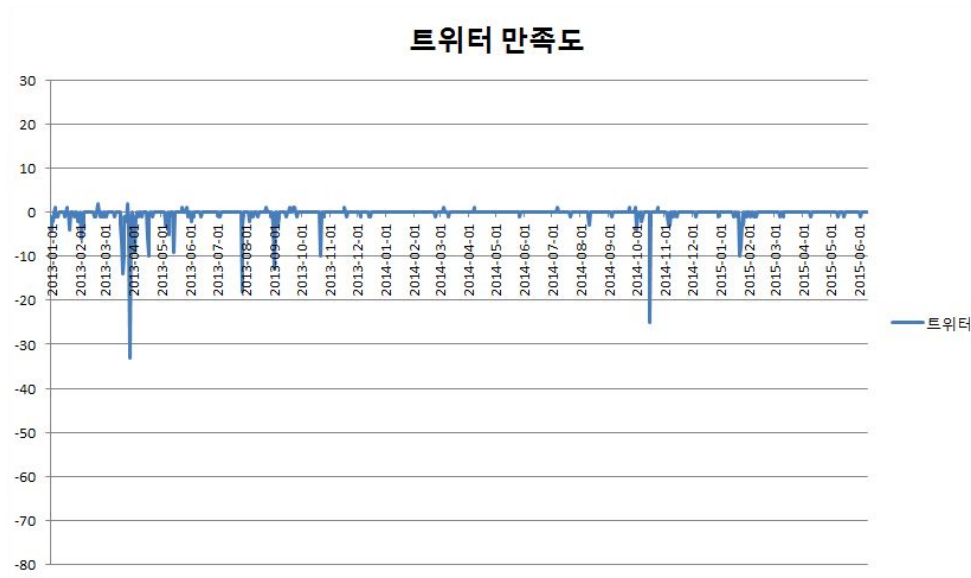
카페에서는 감성에 대한 부분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가정양육 키워드가 노출된 카페 자료는 6,000건 이상으로 상당히 많았으나 대부분의 경우 가정양육수당에 대한 정보전달에 그쳤으며, 이에 대한 댓글 또한 정보에 대한 고마움 정도의 표현에 그쳐 정책에 대한 반응을 표한한 자료의 수가 적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댓글 또한 카페에 올라온 정보에 대한 고마움 정도의 표시에 그친다.

카페에서도 블로그와 마찬가지로 가정양육수당 도입 초기 가정양육수당에 대한 긍정적인 만족도를 보이며 가정양육수당을 처음 수급 받은 2013년 3월 25일에 제일 높

은 만족도를 보인다.

4. 트위터 만족도 분석

[그림 4-14] 트위터에서의 가정양육수당 만족도 결과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텍스트마이닝 분석결과

트위터 만족도 결과를 보면 다른 채널과 다르게 대부분 불만족을 보인다. 긍정이라고 만족도를 나타낸 사람은 블로그의 경우와 같이 대부분 본인이 가정양육수당을 받기 때문에 이에 대해 좋다고 반응한 사람이다. 부정적으로 반응한 사람은 가정양육수당 실 사용처 사용 및 바우처 관련 사건을 제외하고 대다수가 가정양육수당을 수급받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가 아니다.

가정양육수당 정책이 발표된 2013년 초에도 트위터에서는 불만족을 표현하는 글들이 주를 이루었다. 가장 낮은 반응을 보인 2013년 3월 28일은 정부가 가정양육수당 실 사용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예정 보도한 날이다. 일반적으로 트위터에서 불만족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가정양육수당을 수급 받는 부모가 아닌 일반인이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현한다. 하지만 해당 일에는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부모들이 트위터에서 불만을 나타냈다. 2013년 7월 28일과 2013년 9월 1일에는 가정양육수당 지급 중단에 대한 불만이 나타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낮은 만족도를 보인 날은 2014년 10월 16일로

이중국적 해외체류 아동에게 213억의 가정양육수당이 지급되었다는 내용에 대한 불만이 나타난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채널에서 이슈가 되었더라도 거의 불만을 나타내지 않은 것에 비해 트위터에서는 이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반응하였다. 그리고 2015월 1월 22일과 23일에 걸쳐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의 불필요한 어린이집 수요를 줄이고, 가정양육수당을 증액하는 보육개편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제5절 가정양육수당 불만족 이유 및 가정양육수당 사용처 분석

1. 가정양육수당 불만족 이유 분석

가정양육수당 정책이 시행되면서 여러 사건들이 있었고, 사건들마다 사람들은 만족, 불만족으로 반응을 표현했다. 가정양육수당에 만족하는 이유는 보편적 복지가 실현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수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불만족이 나타나는 이유는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전화조사는 짧은 기간 안에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동일한 시점에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전화 조사 중간에 가정양육수당 수급자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실시되지 않는 이상 모든 조사 대상자는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가정양육수당에 대한 만족 여부를 응답했을 것이다. 하지만 웹으로부터 얻은 자료는 약 2년 5개월 이상의 기록이므로 시간에 따라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불만족 이유는 변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족 이유를 분석하는 이유는 다수의 사람들이 현재까지 가정양육수당에 대해 어떤 불만사유를 가지고 있었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정양육수당 정책의 불만족 이유 분석 결과는 <표 4-2>와 같다. 가장 높은 불만족을 나타낸 것은 가정양육수당 신청 당일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려 복지로 사이트가 마비된 사건이고, 가정양육수당 현금 지급 방식을 바우처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에 대해 두 번째로 높은 불만족을 보였다. 정책에 대한 신뢰부족과 육아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 등 전반적인 현 정책에 대한 불만을 많이 표출했고, 예산 부족에 대한 우려와 가정양육수당 및 보육료의 지급이 중단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다. 가정

양육수당의 금액이 낮다는 것에 대한 불만족이 나타났고, 해외 거주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불만족 또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의 보육개편 발언에 대해서도 전업 주부들이 많은 불만을 표출하였다. 그 다음에 손주 돌보미 사업에 대한 불만과 보육료에 비해 적은 가정양육수당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 기타에 속하는 불만족 이유들로는 복지 비용 증가를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고, 가정양육수당 입금이 지연 됐다거나, 가정양육수당 정책이 아닌 어린이집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리고 가정양육수당 수급으로 인해 추가적인 세금 인상에 대한 우려와 가정양육수당 정책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불만족을 나타내는 사람도 있었다.

<표 4-2> 불만족 이유 분석 결과

불만족 이유	블로그	카페	트위터	합계
신청 시스템 불만족	165	0	13	178
바우처 방식 전환	61	0	60	121
현 정책에 대한 불만족	7	9	75	91
예산 부족에 대한 우려,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지급 중단 우려	24	3	62	89
가정양육수당 금액이 낮음	33	1	19	53
해외 거주 아동의 가정양육수당 수급 불만족	8	0	42	50
보건복지부 장관 보육개편 발언	8	0	20	28
손주 돌보미 사업	5	0	5	10
보육료에 비해 적은 가정양육수당	2	1	5	8
기타	22	13	26	6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텍스트마이닝 분석결과

위 분석은 전화조사의 범주에서 파악하지 못했던 가정양육수당의 불만족 이유들을 각 채널별로 상세히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가정양육수당 사용처 분석

2013년 3월 28일, 정부가 가정양육수당 실 사용처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위의 만족도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불만을 나타내었다.

<표 4-3> 가정양육수당 사용처

(단위: 개, %)

사용처	빈도수	비율(%)
기저귀	93	48.7
분유, 이유식	51	26.7
적금, 저축	26	13.6
책	10	5.2
옷	4	2.1
장난감	3	1.6
기타	4	2.1
합계	191	1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텍스트마이닝 분석결과

구축한 자료로부터 가정양육수당의 사용처로 예상되는 항목이 포함된 문서를 추출하였다. TF 방식으로 추출된 키워드로 빈도를 도출할 수 있지만, 텍스트 문서에는 분석하고자 하는 키워드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기저귀를 갈았다.’, ‘분유가 다 떨어졌네.’라는 문장도 충분히 문서에 포함될 수 있는데, 이 문장으로 부터 가정양육수당을 기저귀 또는 분유 구입을 위해 소비했다고 추정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다. 이러한 잡음을 최대한 제거하여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위와 같이 사용처가 포함된 문서를 추출하고, 사용처의 명백한 사용 목적을 판단하여 분석하였다.

가정양육수당의 실 사용처에 대한 텍스트 마이닝 분석 결과는 위의 표와 같이 가정양육수당을 기저귀, 분유, 적금, 저축, 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적금, 저축, 기타를 제외하면 84.3%의 높은 비율로 대부분 아이를 위해 가정양육수당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래 표와 같이 다음 장의 전화설문을 통한 가정양육수당 사용처에 대한 조사결과와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표 4-4> 사용처 분석 결과 비교

(단위: 개, %)

분석 방법	저축	아이를 위해 모두 지출	가구 전체를 위한 생활비 등으로 지출	기타	계
전화설문조사	15.0	77.4	6.8	0.8	100
텍스트마이닝	13.6	84.3		2.1	1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전화설문조사 및 텍스트마이닝 분석결과

가정양육수당의 사용처를 기저귀, 분유, 이유식에 응답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급 받은 가정양육수당을 이정도 금액이면 기저귀 값, 분유 값 정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글을 작성하였다. 즉, 가정양육수당은 가구의 생활비에 추가되어 아이를 위한 소비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정양육수당 사용처 중에서 13.6%를 차지하는 적금, 저축을 하는 이유를 분석함으로써 가정양육수당의 궁극적인 사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적금과 저축이라는 용어가 포함된 문장을 찾고 해당 문장이 포함된 글을 추출하여 적금과 저축의 사용처를 살펴보았다.

<표 4-5> 적금 및 저축 사용처

사용처	빈도수
아이의 미래를 위한 준비	10
여행	7
자녀 결혼 자금	3
대학등록금	2
유치원비	2
초등학교 입학자금	1
자녀 차 구입	1
옷	1
장난감	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텍스트마이닝 분석결과

위의 결과를 보면 아이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적금 및 저축을 한다는 빈도가 제일 높다. 그리고 여행을 가기 위해 양육수당을 모은다는 의견이 다음으로 높았고, 자녀 결혼 자금, 대학등록금, 유치원비 등이 다음을 이었다. 해당 사용처들 중 해외여행이나 옷 구매를 제외하고는 아이의 미래를 위해 사용하기 위하여 저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정양육수당을 사용하는 가구의 소비 패턴은 다양하지만 궁극적으로 가정양육수당이 아이를 위해서 소비되는 비율은 93.7%로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상기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용처에 대해 명확하게 밝힌 글이 많지 않아 표본수가 매우 적다는 점은 동 분석결과의 한계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웹에 글을 올리는 사람의 특성이 반영되므로 위 결과에 대한 편이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적금 및 저축 사용처에 대한 조사를 받는 환경에서 벗어나 제약 없이 사용처를 밝혔다는 점에서 위의 결과는 신뢰할 수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하여 다양한 채널 별로 가정양육수당 관련 정책 및 사건들을 짚어봄으로써 가정양육수당의 동향을 분석하고 감성분석을 통해 가정양육수당에 대한 만족도와 불만족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불만족 이유와 가정양육수당 사용처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도 얻을 수 있었다.

가정양육수당 신청 접수가 시작된 시점에는 가정양육수당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으며, 전반적으로 각 채널별로 다른 특성을 보였다. 뉴스 기사와 카페에서는 가정양육수당 키워드 노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반면에, 가정양육수당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아이의 부모)의 의견이 반영되는 블로그의 경우 가정양육수당이 도입되었을 때 다른 채널에 비해 높은 만족도를 보이다가 가정양육수당 신청일에는 신청시스템에 대한 불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트위터는 가정양육수당 키워드가 노출된 시점과 노출되지 않은 시점이 명확히 구분되는데, 가정양육수당 정책이 발표된 시점에도 불만족을 표현하는 글이 다수였다. 이는 트위터를 이용하는 대다수가 가정양육수당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집단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중국적 해외체류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이 지급되었다는 내용과 2015년 초의 가정양육수당을 증액하는 보육개편에 대한 불만족이 다른 채널에 비해 높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블로그와 트위터에서 가정양육수당 불만족 이유 항목에 대한 빈도가 다른 것은 각 채널의 이용자 모집단이 다름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방대한 양의 자료가 축적되어 있는 텍스트를 분석할 경우, 현재의 자료가 미래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는 통계학의 기본가정이 성립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현재 텍스트가 생산·축적되는 모집단 자체가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오미애, 2014). 그 예로, 트위터 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주식투자에 이용하여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였던 어느 빅데이터 회사가 2012년 대선 이후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이유

는 2012년 대선 이후에 진보적 성향의 트위터 이용자들이 대거 트위터를 탈퇴했기 때문으로 사후 조사되었다. 많은 경우 SNS와 같이 빅데이터를 생산하는 모집단은 시간에 따라 변화되며, 이러한 변화를 인지하는 것이 성공적인 텍스트 마이닝 분석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오피니언 마이닝은 SNS에서 개인의 의견이나 감성을 읽을 수 있는 수단으로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텍스트 마이닝은 실시간으로 국민의 정서를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대응 체계 마련의 근거 및 기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정책적으로 뉴스기사, 블로그, 카페, 트위터 등 각 채널별로 모니터링하면서 국민들의 반응에 관심을 갖는 것은 정책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정책입안자는 여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가정양육수당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해 분석 결과를 즉각적으로 파악하여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를 받아들이되, 그렇지 못한 경우는 부처의 입장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들에게 정책을 이해시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가정양육수당과 관련하여 각 채널별로 접근하여 채널의 특성에 맞게 맞춤형 정책 홍보를 한다면 향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단가 조정 등의 제도개편 시 국민의 정책 이해도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제 5 장

적정 가정양육비용 추정을 위한 설문조사

제1절 조사 목적 및 개요

제2절 부모의 경제활동과 자녀 양육 실태

제3절 보육지원 정책 반응도 분석

5

적정 가정양육비용 추정을 위한 설문조사

제1절 조사 목적 및 개요

1. 설문 조사 표본 설계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구 및 어린이집 이용 가구 부모 설문 조사는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받는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며, 향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단가 조정 등 제도개편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본 실태조사는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의 가정양육수당 지원아동 현황자료DB와 영유아보육료지원아동 현황자료DB를 활용하여 표본설계가 이루어졌는데, 가구의 표본 규모는 1,000명으로, 전국을 모집단으로 하여 표본추출 작업을 진행하였다.

조사의 모집단은 2015년 7월 보건복지부의 가정양육수당 지원아동 현황DB, 영유아보육료지원아동 현황DB에 기재된 전국에 거주하는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의 등록 아동이다. 연령집단은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세 이상의 5개 집단을 고려하였으며, 가정양육수당 지원아동과 영유아보육료(누리보육료 포함)지원아동으로 나누어 표본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전화조사의 특성 상 연령집단, 성별로 표본대상자들이 산재되어 있어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층화추출방법으로 표본을 설계하였다.

모집단을 대표하는 아동 1,000명을 추출하기 위하여 연령별로 1차 층화한 뒤, 지역과 성별을 내재적 층화 변수로 사용하여 표본 추출하였다. 각 연령별로 비교 가능한 분석을 위해 200명씩 배분하였으며, 전체 목표표본오차는 3.09%, 각 연령 집단별 목표오차는 6.96% 이다.

표본설계과정에서는 1,000명의 아동을 조사하기 위해 20배수인 20,000명의 표본을 추출하였다. 이는 조사과정에서 표본이 응답거절, 접촉 불가 등의 사유로 탈락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표 5-1> 표본 배분 현황

연령대	표본수
만 0세	200 (가정양육수당 100/ 보육료 100)
만 1세	200 (가정양육수당 100/ 보육료 100)
만 2세	200 (가정양육수당 100/ 보육료 100)
만 3세	200 (가정양육수당 100/ 보육료 100)
만 4세 이상	200 (가정양육수당 100/ 보육료 100)

2. 조사 방법 및 내용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전국에 거주하는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구 부모 500명과 어린이집 이용 가구 부모 500명이다. 조사는 표집리스트를 이용한 전화조사로서 조사전문업체의 전화면접조사(CATI: Computer Aided Telephone Interview) 시스템을 통해 구조화된 질문지에 대한 답변을 얻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조사내용은 부모의 경제활동과 자녀 양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구원수, 수혜 아동의 수, 아동 연령(최연소 연령 기준), 가구 소득수준, 부모의 취업여부, 어머니의 취업상태, 미취업 사유, 아동 1인당 평균 양육비지출 수준 등 조사 대상 가구의 인적구성과 경제적 특성에 대한 질문과 가정양육수당 금액 조정 시의 기대 효과 등 보육지원 정책에 대한 반응도를 살펴보기 위한 설문 문항으로 구성하였다(<표 5-2>). 기본적인 조사내용은 자녀 양육 형태별 큰 차이가 없으나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구에 한하여 가정양육수당 금액에 대한 만족여부와 불만족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양육 형태를 선택한 이유에 대한 선택항목의 내용이 급여유형에 따라 다소 차별되게 구성되었다(<부록 설문조사표 참조>).

<표 5-2> 조사 내용

구분	설문내용	비고
부모의 경제활동과 자	가구·부모 응답자의 아동과의 관계 가구원 수 수혜아동 수 가구 소득수준 부모 소득활동 아동 어머니 취업형태 미취업모의 미취업 사유 육아휴직급여 수급 경험 자녀양육형태 선택이유	공통

구분	설문내용	비고
녀 양 육 실 태	양육비지출 수준	
	최연소 수혜아동 만 연령 보육반 연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수급액(최연소 수급아동 기준)	어린이집 이용 가구 설문
정책반응	가정양육수당 금액 만족여부 불만족 사유 가정양육수당 사용처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구 설문
	양육형태 전환계획(가정내양육↔어린이집이용) 양육형태 전환의사(가정내양육↔어린이집이용) 가정양육수당 인상금액 수준별 가정내 양육 전환 여부 가정양육수당 인상금액 수준별 경제활동참여 의사 추가 자녀출산 계획 여부 자녀출산 결정과 계획에 대한 보육지원 정책 인식 가정양육수당 인상금액 수준별 추가출산 의사	공통

제2절 부모의 경제활동과 자녀 양육 실태

조사된 가구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최연소 수혜아동을 기준으로 성별 분포를 보면, 가정양육수당 수급아동은 남아가 46.6%, 여아가 53.4%로 나타났고, 어린이집 이용아동의 경우 남아가 51%, 여아가 49%로 조사되었다. 아동의 부모 중 어머니가 응답한 비율은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구의 경우 61%, 어린이집 이용 가구의 경우 87.8%였다. 평균 가구원수는 각각 3.86명(가정양육수당 수급 가구)과 4명(어린이집 이용 가구)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자녀 양육형태는 부모의 소득활동 유형에 따라 확실히 구분되는데,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구의 경우 아이 아버지만 일하는 외벌이 형태가 70.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맞벌이 27.6%, 아이 어머니만 일하는 외벌이 1.4% 등으로 나타나 취업모 가구 비율은 29%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린이집 이용 가구의 경우 맞벌이가 51.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아이 아버지만 일하는 외벌이 44.8%, 아이 어머니만 일하는 외벌이 2.4% 등으로 확인되었으며, 따라서 취업모 비율은 가정양육수당 가구의 약 2배에 이르는 54.2%로 나타났다. 한편, 아이 어머니가 미취업 상태인 가구는 전체 조사가구의 58.4%(584가구)에 이르며, 미취업모 가구의 39%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3> 설문조사 대상가구 특성

구분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구		어린이집 이용 가구	
Base=전체	사례수 (명)	세로 비율(%)	사례수 (명)	세로 비율(%)
■ 전체 ■	(500)	100.0	(500)	100.0
아이 성별				
남자	(233)	46.6	(255)	51.0
여자	(267)	53.4	(245)	49.0
아동과 관계				
어머니	(305)	61.0	(439)	87.8
아버지	(195)	39.0	(61)	12.2
수혜아동 수				
1명	(374)	74.8	(324)	64.8
2명	(119)	23.8	(168)	33.6
3명 이상	(7)	1.4	(8)	1.6
아동의 나이				
만 0세	(100)	20.0	(100)	20.0
만 1세	(100)	20.0	(100)	20.0
만 2세	(100)	20.0	(100)	20.0
만 3세	(100)	20.0	(100)	20.0
만 4세 이상	(100)	20.0	(100)	20.0
가구원수				
2명	(4)	0.8	(7)	1.4
3명	(202)	40.4	(146)	29.2
4명	(191)	38.2	(230)	46.0
5명	(77)	15.4	(82)	16.4
6명	(20)	4.0	(30)	6.0
7명	(4)	0.8	(3)	0.6
8명	(1)	0.2	(2)	0.4
9명	(1)	0.2	—	—
가구소득				
150만원 미만	(18)	3.6	(24)	4.8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36)	7.2	(54)	10.8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61)	32.2	(129)	25.8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133)	26.6	(118)	23.6
4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96)	19.2	(118)	23.6
600만원 이상	(56)	11.2	(57)	11.4
가구 소득 유형				
맞벌이	(138)	27.6	(259)	51.8
아이 아버지만 일을 하는 외벌이	(352)	70.4	(224)	44.8
아이 어머니만 일을 하는 외벌이	(7)	1.4	(12)	2.4
모두 일을 하지 않음	(2)	0.4	(4)	0.8
무응답	(1)	0.2	(1)	0.2
어머니 취업형태				
상용근로자	(102)	70.3	(186)	68.6
임시근로자	(16)	11.0	(36)	13.3
일용근로자	(5)	3.4	(11)	4.1
자영업자	(22)	15.2	(38)	14.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전화설문조사 자료 분석 결과임

가구의 소득활동 범주를 부모 모두 무직(1), 외벌이(2), 맞벌이(3)의 순으로 변환하여 가구 소득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예상할 수 있듯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며, 이러한 결과는 자녀 양육 형태와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표 5-4> 자녀 양육 형태별 가구 소득활동 유형 결합확률분포

(단위: %)

구분	소득구간/소득유형	맞벌이	아이 아버지만 일하는 외벌이	아이 어머니만 일하는 외벌이	부모 모두 일하지 않음	무응답	계
		3	2		1		
가정양육수당수급	150만원 미만	0.0	2.8	0.2	0.4	0.2	3.6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0.8	6.4	0.0	0.0	0.0	7.2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4.2	27.4	0.6	0.0	0.0	32.2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5.0	21.4	0.2	0.0	0.0	26.6
	4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9.0	9.8	0.4	0.0	0.0	19.2
	600만원 이상	8.6	2.6	0.0	0.0	0.0	11.2
	계	27.6	70.4	1.4	0.4	0.2	100.0
어린이집이용	150만원 미만	0.8	2.2	0.8	0.8	0.2	4.8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2.6	7.4	0.8	0.0	0.0	10.8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7.8	17.6	0.4	0.0	0.0	25.8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12.2	11.2	0.2	0.0	0.0	23.6
	4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18.2	5.2	0.2	0.0	0.0	23.6
	600만원 이상	10.2	1.2	0.0	0.0	0.0	11.4
	계	51.8	44.8	2.4	0.8	0.2	100.0
전체가구	obs. = 1,000						
	Pearson $\chi^2(10) = 397.2400$		Pr = 0.000				
	likelihood-ratio $\chi^2(10) = 274.3743$		Pr = 0.000				
	Cramer's V = 0.4457						
	gamma = 0.6312		ASE = 0.033				
구	Kendall's tau-b = 0.4123		ASE = 0.02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전화설문조사 자료 분석 결과임

취업모의 취업형태를 보면,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구의 경우 취업모의 70.3%가 상용근로자이고 다음으로 자영업자(15.2%), 임시근로자(11.0%), 일용근로자(3.4%) 순이며, 어린이집 이용 가구의 경우 68.6%가 상용근로자, 이어서 자영업자(14%), 임시근로자(13.3%), 일용근로자(4.1%)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를 둔 미취업 여성의 미취업 사유로는 ‘일자리는 있으나 자녀 양육과 가사 때문’

이라는 응답이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구와 어린이집 이용 가구 각각 88.4%와 71.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일하고 싶으나 적당한 일자리가 없어서(5.1%, 12.7%)’라는 의견과 ‘기타(3.1%, 9.6%)’라는 응답이 높았다. 한편, ‘일하고 싶지 않아서’라는 의견은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구에서 네 번째로 높은 응답률(2.5%)을 보인 반면에 어린이집 이용 가구의 경우에는 동 항목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자녀 양육과 가사 때문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차이로 확인된다.

<표 5-5> 미취업 사유

설문 : 어머니께서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위: 명, %)

	사례수 (명)	일하고 싶지 않아서	일하고 싶으나 적당한 일자리가 없어서	일자리 는 있으나, 자녀양육 과 가사 때문에	건강상 이유로	기타	계
가정양육수당 수급	(354)	2.5	5.1	88.4	0.8	3.1	100.0
어린이집 이용	(228)	0.9	12.7	71.1	5.7	9.6	100.0
전체가구	(582)	(11)	(47)	(475)	(16)	(33)	
아동의 연령							
만 0세	(116)	2.6	7.8	83.6	0.9	5.2	100.0
만 1세	(114)	0.0	5.3	83.3	3.5	7.9	100.0
만 2세	(131)	2.3	6.1	87.8	1.5	2.3	100.0
만 3세	(123)	2.4	8.9	77.2	4.1	7.3	100.0
만 4세 이상	(98)	2.0	13.3	74.5	4.1	6.1	10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전화설문조사 자료 분석 결과임

다음으로 자녀 양육 형태의 선택 이유를 살펴보았다.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구의 경우 응답자 10명 중 7명 가까이(67.6%)는 어린이집에 보내는 대신 가정양육수당을 받고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하여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이 아이에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주변에 어린이집은 있으나 믿을 수 없어서(17.6%)’, ‘주변에 자녀를 보낼만한 어린이집이 없어서(11.2%)’, ‘가정양육수당을 받으면 보육부담이 줄기 때문에(3.6%)’의 순을 보였다. 즉, 상당수의 부모들이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을 아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주변에 어린이집과 같은 시설의 부재와 시설에 대한 신뢰 부재 또한

부모들이 가정양육수당 수급을 통해 가정양육을 택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동의 나이를 세분화하여 살펴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아동의 나이가 어릴수록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이 아이에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가정양육수당을 받고 가정에서 돌본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고, 아동의 나이가 많을수록 ‘주변에 자녀를 보낼만한 어린이집이 없어서’라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p<.001$). 이는 부모들이 어린 나이일수록 자녀 발달에 있어서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어린이집과 같은 시설과 관련된 응답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볼 때, 가정양육수당 선택 결정이 시설과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부모가 가정양육수당을 받고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요인에는 연령이 낮을수록 가정양육의 중요성이 작용하며, 연령이 높을수록 어린이집과 같은 시설의 중요성이 작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5-6> 가정양육수당 수급 이유

설문: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대신 가정양육수당을 받고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위: 명, %)

	사례수 (명)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이 아이에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주변에 자녀를 보낼만한 어린이집이 없어서	주변에 어린이집은 있으나 믿을 수 없어서	가정양육수당을 받으면 보육부담이 줄기 때문에	계
▣ 전체 ▣	(500)	67.6	11.2	17.6	3.6	100.0
아동의 나이						
만 0세	(100)	85.0	4.0	11.0	0.0	100.0
만 1세	(100)	79.0	2.0	17.0	2.0	100.0
만 2세	(100)	68.0	12.0	20.0	0.0	100.0
만 3세	(100)	62.0	14.0	18.0	6.0	100.0
만 4세 이상	(100)	44.0	24.0	22.0	10.0	100.0
X2(df)	67.50(12)***					
가구소득						
150만원 미만	(18)	72.2	5.6	11.1	11.1	100.0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6)	75.0	8.3	13.9	2.8	100.0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61)	75.2	8.1	16.8	0.0	100.0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33)	72.9	9.0	16.5	1.5	100.0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96)	56.3	17.7	19.8	6.3	100.0
600만원 이상	(56)	46.4	17.9	23.2	12.5	100.0

	사례수 (명)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이 아이에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주변에 자녀를 보낼만한 어린이집이 없어서	주변에 어린이집은 있으나 믿을 수 없어서	가정양육수 당을 받으면 보육부담이 줄기 때문에	계
X2(df)	43.03(15)***					
가구 소득 유형						
맞벌이	(138)	54.3	19.6	18.1	8.0	100.0
아이 아버지만 일하는 외벌이	(352)	73.0	7.1	17.9	2.0	100.0
아이 어머니만 일을 하는 외벌이	(7)	42.9	57.1	0.0	0.0	100.0
부모 모두 일을 하지 않음	(2)	100.0	0.0	0.0	0.0	100.0
무응답	(1)	100.0	0.0	0.0	0.0	100.0
X2(df)	45.66(12)***					
어머니 취업형태						
상용근로자	(102)	57.8	21.6	13.7	6.9	100.0
임시근로자	(16)	37.5	25.0	31.3	6.3	100.0
일용근로자	(5)	80.0	20.0	0.0	0.0	100.0
자영업자	(22)	40.9	18.2	27.3	13.6	100.0
X2(df)	8.88(9)					

*p<.1, *p<.05, **p<.01, ***p<.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전화설문조사 자료 분석 결과임

가구소득별로 살펴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이 아이에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고, 소득이 높을수록 ‘주변에 자녀를 보낼만한 어린이집이 없어서’, ‘주변에 어린이집은 있으나 믿을 수 없어서’라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p<.001$).

가구 소득 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 맞벌이와 아이 아버지만 일하는 외벌이의 경우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이 아이에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아이 어머니만 일하는 외벌이의 경우 ‘주변에 자녀를 보낼만한 어린이집이 없어서’라는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p<.001$).

어머니 취업형태별로 살펴보았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경우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이 아이에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률이 과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임시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경우 ‘주변에 보낼 수 있는 어린이집이 없어서’라는 응답률과 ‘주변에 어린이집은 있으나 믿을 수 없어서’라는 응답률의 합이 각각 56.3%와 45.5%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어린이집 이용 가구의 경우 가정양육수당을 받고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대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 ‘기타 및 무응답(36.6%)’을 제외하고는 ‘어린이집 보육프로그램이 좋아서(27.0%)’가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육아가 힘들어서(23.2%)’, ‘가정양육수당 금액이 너무 적어서(8.6%)’, ‘보육료지원 금액이 가정양육수당보다 많기 때문에(4.6%)’의 순서로 응답률이 높았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가정양육수당 금액과 관련된 경제적 이유보다는 육아의 고통과 보육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아이의 성장발달에 좋은 영향을 주고자 하는 부모의 심리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의 나이를 세분화하여 살펴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아동의 나이가 많을수록 ‘어린이집 보육프로그램이 좋아서’라는 응답률이 높아졌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p < .001$). 특히 어린이집 보육프로그램이 좋아서라고 응답한 만 4세 이상의 비율은 47.0%이다. 그리고 해당 답에 대한 연령별 비율은 나이가 증가할수록 비율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아이가 취학의 나이에 가까워지면서 자녀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부모의 심리가 작용하여 이와 같은 결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가구소득별로 살펴보았을 때 소득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 ‘육아가 힘들어서’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인 경우 ‘어린이집 보육 프로그램이 좋아서’라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300만원 이상의 경우 ‘기타·무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p < .001$).

가구 소득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 맞벌이의 경우 ‘기타·무응답(53.7%)’, 아이 아버지만 일을 하는 외벌이의 경우 ‘어린이집 보육프로그램이 좋아서(43.3%)’, 아이 어머니만 일을 하는 외벌이의 경우 ‘육아가 힘들어서(41.7%)’,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구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p < .001$). 어머니 취업형태별로 살펴보았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상용근로자의 경우 ‘육아가 힘들어서’,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경우 ‘어린이집 보육프로그램이 좋아서’, 자영업자의 경우 ‘육아가 힘들어서’와 ‘어린이집 보육프로그램이 좋아서’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5-7> 어린이집 이용 이유

설문 : 가정양육수당을 받으면서 가정에서 돌보는 대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위: 명, %)

	사례수 (명)	가정양육수 당 금액이 너무 적어서	보육료지원 금액이 가정양육수당 보다 많기 때문에	육아가 힘들어서	어린이집 보육프로그램이 좋아서	기타·무 응답	계
□ 전체 □	(500)	8.6	4.6	23.2	27.0	36.6	100.0
아동의 나이							
만 0세	(100)	11.0	6.0	22.0	13.0	48.0	100.0
만 1세	(100)	12.0	2.0	29.0	19.0	38.0	100.0
만 2세	(100)	9.0	8.0	19.0	28.0	36.0	100.0
만 3세	(100)	9.0	6.0	25.0	28.0	32.0	100.0
만 4세 이상	(100)	2.0	1.0	21.0	47.0	29.0	100.0
X2(df)	47.68(16)***						
가구소득							
150만원 미만	(24)	12.5	4.2	45.8	25.0	12.5	100.0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54)	13.0	9.3	13.0	38.9	25.9	100.0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29)	12.4	3.9	24.8	31.8	27.1	100.0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18)	8.5	5.9	21.2	28.8	35.6	100.0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118)	3.4	4.2	23.7	20.3	48.3	100.0
600만원 이상	(57)	5.3	0.0	22.8	15.8	56.1	100.0
X2(df)	49.91(20)***						
가구 소득 유형							
맞벌이	(259)	7.7	3.5	21.6	13.5	53.7	100.0
아이 아버지만 일하는 외벌이	(224)	9.4	6.3	22.8	43.3	18.3	100.0
아이 어머니만 일을 하는 외벌이	(12)	16.7	0.0	41.7	16.7	25.0	100.0
부모 모두 일을 하지 않음	(4)	0.0	0.0	100.0	0.0	0.0	10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X2(df)	103.41(16)***						
어머니 취업형태							
상용근로자	(186)	8.1	3.8	24.2	9.7	54.3	100.0
임시근로자	(36)	11.1	0.0	19.4	22.2	47.2	100.0
일용근로자	(11)	9.1	9.1	9.1	27.3	45.5	100.0
자영업자	(38)	5.3	2.6	21.1	21.1	50.0	100.0
X2(df)	12.12(12)						

*p<.1, *p<.05, **p<.01, ***p<.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전화설문조사 자료 분석 결과임

월평균 아동 1인당 양육비 지출 수준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먼저 가정양육 수급 가구의 경우 매월 지출하는 자녀 양육비가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25.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30만원 이상~40만원 미만(19.2%)’, ‘60만원 이상(14.6%)’,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13.8%)’, ‘40만원 이상~50만원 미만(13.4%)’, ‘50만원 이상~60만원 미만(10.2%)’, ‘10만원 미만(3.0%)’의 순서로 나타났다.

아동의 나이를 세분화하여 살펴보았을 때 만 0세의 경우 월 자녀 양육비 지출이 ‘30만원 이상~40만원 미만’이 28.0%로 가장 높았고, 만 1세부터 만 3세까지의 경우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의 선택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만 4세 이상의 경우 ‘60만원 이상’이라는 응답률이 26.0%로 가장 높았고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p<.05$).

가구소득별로 살펴보았을 때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월 자녀 양육비를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 지출한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고,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자녀 양육비 지출 ‘60만원 이상’의 응답률이 44.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p<.001$).

가구 소득 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 맞벌이의 경우 월 자녀 양육비 지출이 ‘60만원 이상’이라는 응답률이 26.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의 경우는 모두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p<.05$). 어머니 취업형태별로 살펴보았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상용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경우 월 자녀 양육비 지출이 ‘60만원 이상’이라는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임시근로자의 경우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의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5-8> 월평균 아동 양육비 지출(최연소 수급아동 기준,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구)

설문: 현재 자녀양육비로 매월 얼마나 지출하십니까?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자녀 중 가장 나이가 어린 자녀 1명을 기준으로 하며, 사교육비는 제외합니다.

(단위: 명, %)

	사례수 (명)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 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 40만원 미만	4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 60만원 미만	60만원 이상	계
■ 전체 ■	(500)	3.0	13.8	25.8	19.2	13.4	10.2	14.6	100.0
아동의 나이									
만 0세	(100)	2.0	12.0	23.0	28.0	17.0	5.0	13.0	100.0
만 1세	(100)	1.0	15.0	31.0	18.0	15.0	6.0	14.0	100.0

	사례수 (명)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 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 40만원 미만	4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 60만원 미만	60만원 이상	계
만 2세	(100)	2.0	19.0	26.0	15.0	12.0	15.0	11.0	100.0
만 3세	(100)	5.0	16.0	29.0	16.0	11.0	14.0	9.0	100.0
만 4세 이상	(100)	5.0	7.0	20.0	19.0	12.0	11.0	26.0	100.0
X2(df)	41.42(24)*								
가구소득									
150만원 미만	(18)	16.7	27.8	27.8	11.1	5.6	11.1	0.0	100.0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6)	5.6	19.4	36.1	16.7	11.1	2.8	8.3	100.0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61)	3.1	16.8	26.7	23.6	14.9	8.1	6.8	100.0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33)	0.8	16.5	25.6	21.8	14.3	13.5	7.5	100.0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96)	4.2	8.3	26.0	15.6	7.3	13.5	25.0	100.0
600만원 이상	(56)	0.0	0.0	16.1	10.7	21.4	7.1	44.6	100.0
X2(df)	109.40(30)***								
가구 소득 유형									
맞벌이	(138)	1.4	8.0	19.6	17.4	15.2	11.6	26.8	100.0
아이 아버지만 일하는 외벌이	(352)	3.7	16.5	27.6	19.9	12.8	9.7	9.9	100.0
아이 어머니만 일하는 외벌이	(7)	0.0	0.0	42.9	14.3	14.3	14.3	14.3	100.0
부모 모두 일을 하지 않음	(2)	0.0	0.0	50.0	50.0	0.0	0.0	0.0	100.0
무응답	(1)	0.0	0.0	100.0	0.0	0.0	0.0	0.0	100.0
X2(df)	37.44(24)*								
어머니 취업형태									
상용근로자	(102)	2.0	6.9	21.6	18.6	14.7	8.8	27.5	100.0
임시근로자	(16)	0.0	12.5	25.0	12.5	18.8	18.8	12.5	100.0
일용근로자	(5)	0.0	20.0	20.0	0.0	40.0	20.0	0.0	100.0
자영업자	(22)	0.0	4.5	13.6	18.2	9.1	18.2	36.4	100.0
X2(df)	13.20(18)								

*p<.1, *p<.05, **p<.01, ***p<.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전화설문조사 자료 분석 결과임

한편, 어린이집 이용 가구의 경우 매월 지출하는 자녀 양육비로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28.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23.2%)’, ‘30만원 이상~40만원 미만(15.2%)’, ‘40만원 이상~50만원 미만(12.8%)’, ‘60만원 이상(8.4%)’, ‘10만원 미만(6.6%)’, ‘50만원 이상~60만원 미만(5.8%)’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나이를 세분화하여 살펴보았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만 0세부터 만 2세까지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 지출한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고, 만 3세와 만 4세 이상의 경우 월 자녀 양육비를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 지출한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 살펴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월 자녀 양육비를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 지출한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고, 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자녀 양육비를 '60만원 이상' 지출한다는 응답률이 2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p<.001$).

가구 소득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 자녀 양육비를 '60만원 이상' 지출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맞벌이에서 가장 높았고 '10만원 미만' 지출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맞벌이에서 가장 낮았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p<.001$).

어머니 취업형태별로 살펴보았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일용근로자를 제외하고 모두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5-9> 월평균 아동 양육비 지출(최연소 수급아동 기준, 어린이집 이용 가구)

설문: 현재 자녀양육비로 매월 얼마를 지출하십니까? 어린이집을 다니는 자녀 중 가장 나이가 어린 자녀 1명을 기준으로 하며, 사교육비는 제외합니다.

(단위: 명, %)

	사례수 (명)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 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 40만원 미만	4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 60만원 미만	60만원 이상	계
■ 전체 ■	(500)	6.6	23.2	28.0	15.2	12.8	5.8	8.4	100.0
아동의 나이									
만 0세	(100)	3.0	21.0	26.0	20.0	15.0	7.0	8.0	100.0
만 1세	(100)	8.0	15.0	32.0	16.0	8.0	10.0	11.0	100.0
만 2세	(100)	8.0	22.0	28.0	10.0	16.0	6.0	10.0	100.0
만 3세	(100)	6.0	30.0	29.0	12.0	15.0	0.0	8.0	100.0
만 4세 이상	(100)	8.0	28.0	25.0	18.0	10.0	6.0	5.0	100.0
X2(df)		30.26(24)							
가구소득									
150만원 미만	(24)	12.5	29.2	29.2	4.2	16.7	4.2	4.2	100.0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54)	3.7	37.0	20.4	18.5	5.6	9.3	5.6	100.0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29)	5.4	26.4	38.8	14.0	9.3	3.1	3.1	100.0

	사례수 (명)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 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 40만원 미만	4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 60만원 미만	60만원 이상	계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18)	9.3	25.4	26.3	16.9	11.9	3.4	6.8	100.0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118)	5.9	15.3	23.7	15.3	20.3	10.2	9.3	100.0
600만원 이상	(57)	5.3	12.3	22.8	15.8	12.3	5.3	26.3	100.0
X2(df)	70.77(30)***								
가구 소득 유형									
맞벌이	(259)	5.4	20.1	27.8	13.9	16.6	6.2	10.0	100.0
아이 아버지만 일하는 외벌이	(224)	6.7	26.8	29.9	17.4	8.0	4.5	6.7	100.0
아이 어머니만 일을 하는 외벌이	(12)	8.3	25.0	0.0	8.3	25.0	25.0	8.3	100.0
부모 모두 일을 하지 않음	(4)	50.0	25.0	25.0	0.0	0.0	0.0	0.0	100.0
무응답	(1)	100.0	0.0	0.0	0.0	0.0	0.0	0.0	100.0
X2(df)	53.55(24)***								
어머니 취업형태									
상용근로자	(186)	5.4	18.3	25.3	15.6	16.7	7.5	11.3	100.0
임시근로자	(36)	5.6	22.2	27.8	16.7	13.9	8.3	5.6	100.0
일용근로자	(11)	0.0	54.5	18.2	0.0	27.3	0.0	0.0	100.0
자영업자	(38)	7.9	18.4	34.2	5.3	18.4	5.3	10.5	100.0
X2(df)	17.52(18)								

*p<.1, *p<.05, **p<.01, ***p<.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전화설문조사 자료 분석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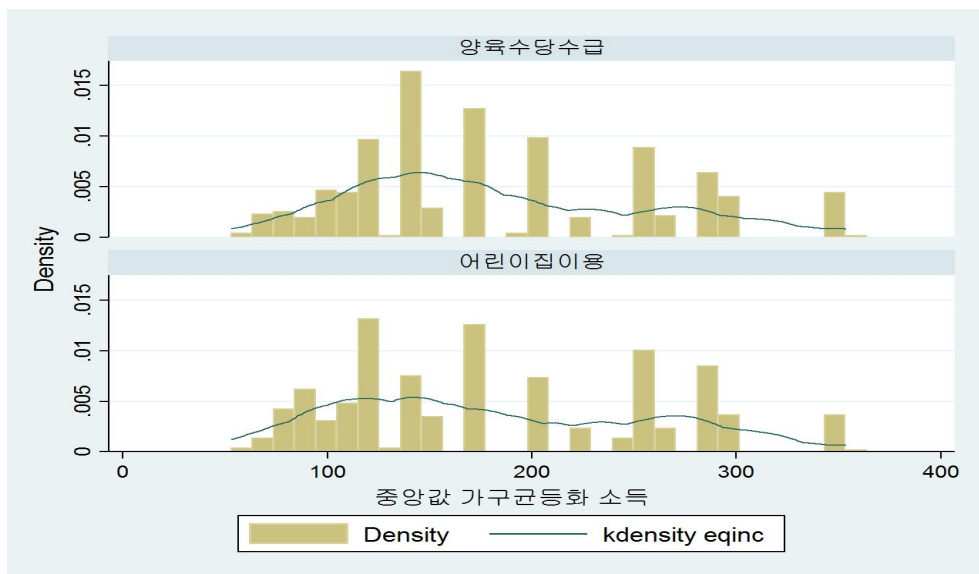
이상에서는 전화조사의 성격을 고려하여 구간 값으로 수집한 가구의 소득과 지출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검토해 보았다. 여기서는 가구의 자녀 양육 형태별 소득 및 지출특성을 보다 직관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구간 값으로 얻은 가구소득과 아동 1인당 양육비지출을 각 구간의 중앙값을 취하여 사용한다. 또한 가구규모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중앙값 가구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균등화하여 자녀 양육 형태, 가구소득 유형, 아동 어머니의 취업상태별 평균 소득과 지출수준을 구하여 살펴보겠다.

[그림 5-1]은 자녀 양육 유형별 가구소득분포를 보여주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가구소득 유형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이에 대해 응답하지 아니한 가구를 제외하고 보면, 자녀 양육형태에 상관없이 맞벌이가구 집단의 평균소득과 아동 1인당 양육비 지출 수준이 가장 높다.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구에서는 어머니만

일하는 외벌이, 아버지가 일하는 외벌이, 부부 모두 일하지 않는 가구 순으로 평균 가구소득과 양육비 지출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데 비해 어린이집 이용 가구에서 보면 아버지만 일하는 외벌이 집단이 어머니만 일하는 외벌이 집단에 비해 소득과 양육비 지출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 아동 1인당 양육비 지출 수준은 대체로 소득 수준에 비례하는 것으로 확인되나, 어린이집 이용 가구에서 특히 어머니만 일하는 외벌이의 경우 맞벌이에 비해 평균 양육비 지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는 전술한 바와 같이 제한된 자료에 기초한 것으로서 단순 참고 수준에서만 이해해야 할 것이다.

어머니의 취업상태 및 형태를 기준으로 평균가구소득을 살펴보면 가정양육수당 수급 또는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경우 어머니가 상용근로자인 집단의 평균소득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자영업자, 임시근로자, 미취업모, 일용근로자 순으로 확인된다. 아동 1인당 양육비 지출은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구에서 어린이집 이용 가구에 비해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특히 자영업자 집단의 평균 양육비 지출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5-1] 자녀양육 유형별 조사대상 가구소득분포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전화설문조사 자료 분석 결과임

<표 5-10> 자녀 양육 형태·가구소득 유형·모의 취업상태별 가구소득 및 양육비지출

(단위: 만원)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구			어린이집 이용 가구		
	가구총소득	균등화 소득	아동양육비지출	가구총소득	균등화소득	아동양육비지출
가구소득 유형						
맞벌이	456.5	239.6	41.6	425.0	218.2	32.3
아버지 외벌이	317.3	163.4	33.7	296.1	148.4	28.3
어머니 외벌이	321.4	188.8	38.6	220.8	130.5	37.5
부부모두일안함	150.0	67.1	30.0	150.0	75.9	15.0
무응답	150.0	86.6	25.0	150.0	86.6	10.0
평균	354.8	184.3	35.9	359.6	183.4	30.5
어머니 취업여부 및 형태						
미취업	315.9	162.6	33.7	292.9	146.9	28.0
상용근로자	470.1	247.0	41.1	442.9	231.6	33.5
임시근로자	382.8	201.3	38.8	361.1	179.0	30.8
일용근로자	280.0	157.8	37.0	238.6	116.5	25.0
자영업자	444.3	235.8	46.4	387.5	191.9	31.4
평균	354.8	184.3	35.9	359.6	183.4	30.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전화설문조사 자료 분석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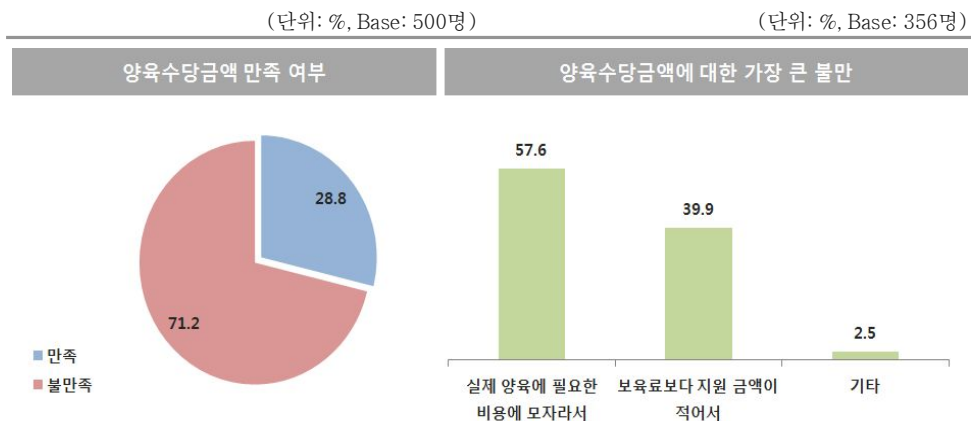
제3절 보육지원 정책 반응도 분석

1. 가정양육수당 금액 만족 여부와 이유

여기서는 현재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구에 한하여 지원받는 가정양육수당 금액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았다¹²⁾. 현재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구 응답자 10명 중 7명 가까이(71.2%)는 가정양육수당 금액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을 보인 반면, 28.8%는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가정양육수당 금액에 불만족하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 10명 중 6명 가까이(57.6%)는 ‘실제 양육에 필요한 비용에 모자라서’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보육료 보다 지원 금액이 적어서(39.9%)’, ‘기타(2.5%)’로 응답하였다.

[그림 5-2] 가정양육수당 금액 만족 여부와 불만족 이유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전화설문조사 자료 분석 결과임

아동의 나이를 세분화하여 살펴보았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현재 받고 있는 가정양육수당 금액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률

12) 가정양육수당 지원 정책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제4장의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한 가정양육수당 만족도 분석에서 다루었다.

이 높고, 특히 만 2세에서 만족한다는 응답률이 가장 낮게 나타난다.

<표 5-11> 가정양육수당 금액 만족 여부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구)

설문 : 현재 받고 있는 가정양육수당 금액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단위 : 명, %)

	사례수 (명)	만족	불만족	계
■ 전체 ■	(500)	28.8	71.2	100.0
아동의 나이				
만 0세	(100)	30.0	70.0	100.0
만 1세	(100)	34.0	66.0	100.0
만 2세	(100)	19.0	81.0	100.0
만 3세	(100)	30.0	70.0	100.0
만 4세 이상	(100)	31.0	69.0	100.0
X2(df)	6.38(4)			
가구소득				
150만원 미만	(18)	27.8	72.2	100.0
150만원 이상	(36)	22.2	77.8	100.0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161)	24.8	75.2	100.0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133)	26.3	73.7	100.0
~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96)	31.3	68.8	100.0
~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	(56)	46.4	53.6	100.0
X2(df)	11.17(5)*			
가구 소득 유형				
맞벌이	(138)	35.5	64.5	100.0
아이 아버지만	(352)	26.4	73.6	100.0
일하는 외벌이				
아이 어머니만	(7)	14.3	85.7	100.0
일을 하는 외벌이				
부모 모두 일을	(2)	50.0	50.0	100.0
하지 않음	(1)	0.0	100.0	100.0
무응답				
X2(df)	5.56(4)			
어머니 취업형태				
상용근로자	(102)	30.4	69.6	100.0
임시근로자	(16)	43.8	56.3	100.0
일용근로자	(5)	60.0	40.0	100.0
자영업자	(22)	40.9	59.1	100.0
X2(df)	3.21(3)			

*p<.1, *p<.05, **p<.01, ***p<.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전화설문조사 자료 분석 결과임

가구소득별로 살펴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현재 받고 있는 가정양육수당 금액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으나, 소득이 높을수록 점차 그 비율이 낮아졌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p<.05$). 가구 소득 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현재 받고 있는 가정양육수당 금액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고, 맞벌이의 경우 부모 중 한 명만 일하는 외벌이의 경우보다 가정양육수당 금액에 만족하는 비율이 높았다. 한편, 어머니 취업 형태별로 살펴보았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 가정양육수당 금액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이 만족한다는 응답률 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가정양육수당 금액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실제 양육에 필요한 비용에 모자라서’라는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만 4세 이상의 경우 ‘실제 양육에 필요한 비용에 모자라서(47.8%)’라는 응답률과 ‘보육료보다 지원 금액이 적어서(46.4%)’라는 응답률이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

<표 5-12> 불만 사유(가정양육수당 수급 가구)

설문 : 가장 큰 불만은 무엇입니까?

(단위 : 명, %)

	사례수 (명)	실제 양육에 필요한 비용에 모자라서	보육료보다 지원 금액이 적어서	기타	계
■ 전체 ■	(356)	57.6	39.9	2.5	100.0
아동의 나이					
만 0세	(70)	64.3	35.7	0.0	100.0
만 1세	(66)	60.6	39.4	0.0	100.0
만 2세	(81)	54.3	43.2	2.5	100.0
만 3세	(70)	61.4	34.3	4.3	100.0
만 4세 이상	(69)	47.8	46.4	5.8	10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전화설문조사 자료 분석 결과임

가구소득별로 살펴보았을 때 소득이 높을수록 ‘실제 양육에 필요한 비용에 모자라서’라는 응답률이 낮았고, ‘보육료보다 지원 금액이 적어서’라는 응답률은 높아졌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p<.01$).

가구 소득 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가정양육수당 금액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실제 양육에 필요한 비용에 모자라서’라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고, 아이 어머니만 일을 하는 외벌이의 경우 불만의 이유로 ‘기타’라는 응답값이 33.3%로 다른 가구소득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p<.01$)

어머니 취업형태별로 살펴보았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가정양육수당 금액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실제 양육에 필요한 비용에 모자라서’라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고, 자영업자의 경우 ‘기타’ 응답값이 15.4%로 다른 응답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조사방식의 차이로 기존 유사 설문조사 결과와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지난 2014년 5월 육아정책연구소가 실시한 가정양육수당 정책에 대한 부모설문조사의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구의 가정양육수당 금액 만족도 조사 결과와 (만족 응답률 23.4%) 단순 비교했을 때 만족한다는 응답률은 상대적 높게 나타났다.

<표 5-13> 가정양육수당 금액 만족도 비교(2015년 조사 vs. 2014년 조사)

(단위 : 명, %)

	사례수 (명)	만족	불만족	계
2015년 조사결과	(500)	28.8	71.2	100.0
2014년 육아연 조사결과	(1,011)	23.4	76.6	100.0

주: 2014년 육아정책연구소 조사(이정원·이혜민, 2014)에서는 매우만족(3.6), 만족(19.8), 보통(42.6), 불만족(26.9), 매우 불만족(7.1) 5개 답변항목으로 구성되며, 비교 표에서 만족에 해당되는 항목으로 매우만족한다와 만족한다는 답변항목만을 고려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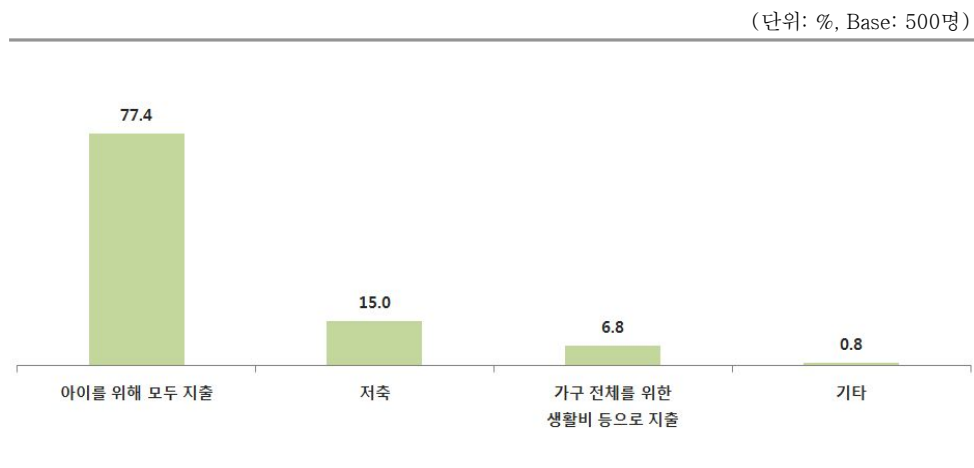
자료: 이정원·이혜미(2014) . p.107. <표 IV-2-20>.

가정양육수당 금액에 대한 불만족 이유로 2014년 조사에서는 ‘실제 소요되는 양육 비용에 비해 금액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69.4%를 차지하고, ‘보육료 지원에 비해 금액이 적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30.6%를 차지했다. 2015년 8월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는 ‘실제 양육에 필요한 비용에 모자라서’가 57.6%, ‘보육료보다 지원 금액이 적어서’가 39.9%, 기타 2.5%로 이전 조사에 비해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지원 금액간의 차이에 대한 불만족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연말 부터 2015년 초반까지 일련의 보육정책 논란과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을 거치면서 가정양육수당 수급자들의 가정양육수당지원 정책과 보육료지원 정책에 대한 인식 변화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다음 장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2. 가정양육수당 사용 실태

현재 가정양육수당 수급 응답자 10명 중 8명 가까이(77.4%)는 가정양육수당을 ‘아이를 위해 모두 지출’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어서 ‘저축(15.0%)’, ‘가구 전체를 위한 생활비 등으로 지출(6.8%)’, ‘기타(0.8%)’의 응답률을 보였다.

[그림 5-3] 가정양육수당 사용 실태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전화설문조사 자료 분석 결과임

아동의 나이를 세분화하여 살펴보았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가정양육수당을 ‘아이를 위해 모두 지출’한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가정양육수당을 ‘아이를 위해 모두 지출’한다는 응답률이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그 비율이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p < .05$).

가구 소득 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가정양육수당을 ‘아이를 위해 모두 지출’한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 취업 형태별로 살펴보았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가정양육수당을 ‘아이를 위해 모두 지출’한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고, 자영업자의 경우 가정양육수당을 ‘저축’에 사용한다는 응답률이 27.3%로 다른 어머니의 취업형태별 응답률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한편, 자녀 양육비 지출금액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아이를 위해 모두 지출’이라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고, 자녀 양육비 지출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가정양육수당을 ‘저축’에 사용한다는 응답률이 40.0%로 ‘아이를 위해 모두 지출(53.3%)’과 근소한 차이를 보인다.¹³⁾

<표 5-14> 가정양육수당 사용 실태(가정양육수당 수급 가구)

설문 : 현재 받고 계신 가정양육수당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단위: 명, %)

	사례수 (명)	아이를 위해 모두 지출	저축	가구 전체를 위한 생활비 등으로 지출	기타	계
▣ 전체 ▣	(500)	77.4	15.0	6.8	0.8	100.0
아동의 나이						
만 0세	(100)	78.0	15.0	7.0	0.0	100.0
만 1세	(100)	78.0	14.0	7.0	1.0	100.0
만 2세	(100)	70.0	22.0	7.0	1.0	100.0
만 3세	(100)	79.0	13.0	7.0	1.0	100.0
만 4세 이상	(100)	82.0	11.0	6.0	1.0	100.0
X2(df)	6.81(12)					
가구소득						
150만원 미만	(18)	83.3	5.6	11.1	0.0	100.0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6)	69.4	19.4	11.1	0.0	100.0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61)	84.5	9.3	4.3	1.9	100.0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33)	79.7	17.3	3.0	0.0	100.0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96)	71.9	16.7	10.4	1.0	100.0
600만원 이상	(56)	64.3	23.2	12.5	0.0	100.0
X2(df)	25.83(15)*					
가구 소득 유형						
맞벌이	(138)	73.9	16.7	8.7	0.7	100.0
아이 아버지만 일하는 외벌이	(352)	78.7	14.5	6.0	0.9	100.0
아이 어머니만 일하는 외벌이	(7)	85.7	14.3	0.0	0.0	100.0
부모 모두 일을 하지 않음	(2)	50.0	0.0	50.0	0.0	100.0
무응답	(1)	100.0	0.0	0.0	0.0	100.0
X2(df)	8.61(12)					

13) 저축의 목적에 대해서는 제4장의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한 가정양육수당 만족도 분석에서 살펴보았다.

	사례수 (명)	아이를 위해 모두 지출	저축	가구 전체를 위한 생활비 등으로 지출	기타	계
어머니 취업형태						
상용근로자	(102)	70.6	16.7	11.8	1.0	100.0
임시근로자	(16)	93.8	6.3	0.0	0.0	100.0
일용근로자	(5)	100.0	0.0	0.0	0.0	100.0
자영업자	(22)	72.7	27.3	0.0	0.0	100.0
X2(df)	10.31(9)					
자녀양육비 지출금액						
10만원 미만	(15)	53.3	40.0	6.7	0.0	100.0
10만원 이상 ~ 20만원 미만	(69)	78.3	11.6	8.7	1.4	100.0
20만원 이상 ~ 30만원 미만	(129)	72.9	14.7	10.9	1.6	100.0
30만원 이상 ~ 40만원 미만	(96)	86.5	9.4	4.2	0.0	100.0
4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	(67)	79.1	16.4	4.5	0.0	100.0
50만원 이상 ~ 60만원 미만	(51)	74.5	21.6	2.0	2.0	100.0
60만원 이상	(73)	78.1	15.1	6.8	0.0	100.0
X2(df)	23.83(18)					

*p<.1, *p<.05, **p<.01, ***p<.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전화설문조사 자료 분석 결과임

3. 가정양육수당 금액에 따른 자녀양육 유형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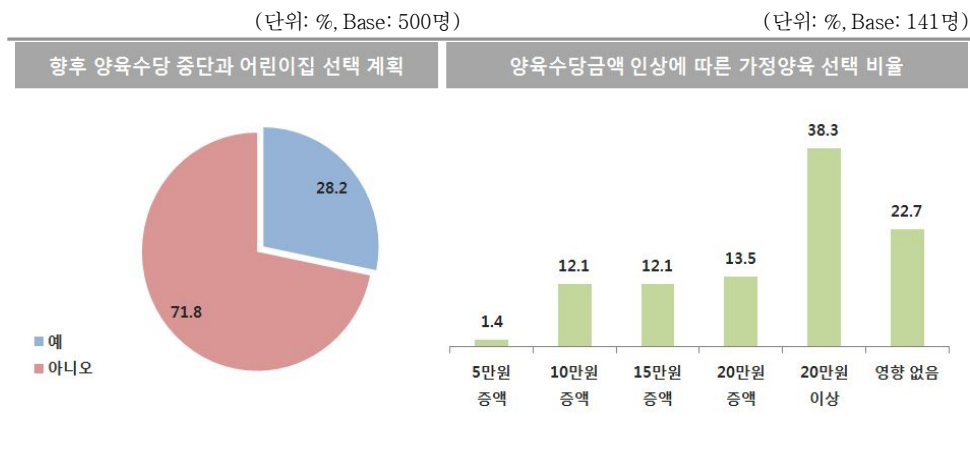
본 조사에서는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구와 어린이집 이용 가구 부모를 대상으로 향후 6개월 이내에 자녀양육 행태를 바꿀 계획이 있는지 설문하고, 장래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계획이 있는 가구에 대하여 가정양육수당 금액 인상에 따른 가정양육 의사를 확인해 보았다.

가.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구의 가정양육 유지 비율

먼저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구 부모 설문조사의 10번 문항을 통해 향후 6개월 이내 가정양육수당 수급을 중단하고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낼 계획이 있는 지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였다. 응답자 500명 중 28.2%인 141명이 향후 6개월 이내에 가정양육수당 수

급을 중단하고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낼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즉, 71.8%의 많은 수의 가정이 가정양육수당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만 0세, 만 4세 이상, 만 3세, 만 1세, 만 2세 순으로 연령에 따라 가정양육수당 수급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다. 특히 영아기(만 0~2세)까지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집에 보낼 계획이 있다는 응답률이 높아지다가 취학연령에 근접하면서 응답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p<.1$).

[그림 5-4] 향후 어린이집 이용 계획과 가정양육수당 금액 인상에 따른 가정양육 선택 비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전화설문조사 자료 분석 결과임

가구 소득별로는 전체적으로 가정양육수당 수급을 중단하고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낼 계획이 없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고, 소득이 높을수록 그 비율이 높아졌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p<.1$).

가구 소득 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가정양육수당 수급을 중단하고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낼 계획이 없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고, 아이 어머니만 일을 하는 외벌이의 경우, 맞벌이나 아이 아버지만 일하는 외벌이의 경우에 비해 가정양육수당 수급을 중단하고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낼 계획이 없다는 응답률이 57.1%로 낮게 나타났다. 한편, 어머니 취업 형태별로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에 보낼 계획이 없다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5-15> 향후 양육수당 수급 중단과 어린이집 이용 계획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구)

설문: 향후 6개월 이내에 양육수당수급을 중단하고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실 계획이 있습니까?

(단위: %)

	사례수 (명)	예	아니오	계
□ 전체 □	(500)	28.2	71.8	100.0
가구소득				
150만원 미만	(18)	38.9	61.1	100.0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6)	25.0	75.0	100.0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61)	35.4	64.6	100.0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133)	26.3	73.7	100.0
4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96)	24.0	76.0	100.0
600만원 이상	(56)	17.9	82.1	100.0
X2(df)		9.37(5)*		
가구 소득 유형				
맞벌이	(138)	25.4	74.6	100.0
아이 아버지만 일하는 외벌이	(352)	29.0	71.0	100.0
아이 어머니만 일을 하는 외벌이	(7)	42.9	57.1	100.0
부모 모두 일을 하지 않음	(2)	50.0	50.0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X2(df)		2.26(4)		
어머니 취업형태				
상용근로자	(102)	23.5	76.5	100.0
임시근로자	(16)	37.5	62.5	100.0
일용근로자	(5)	40.0	60.0	100.0
자영업자	(22)	27.3	72.7	100.0
X2(df)		1.94(3)		

*p<.1, *p<.05, **p<.01, ***p<.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전화설문조사 자료 분석 결과임

한편, 어린이집으로 전환한다고 응답한 총 141명은 10-1번 문항에서 가정양육수당 금액을 어느 정도 인상했을 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대신 가정양육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물음에 ‘20만원 이상’이 38.3%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다음으로 ‘영향 없음(22.7%)’, ‘20만원 증액(13.5%)’, ‘10만원 증액(12.1%)’, ‘15만원 증액(12.1%)’, ‘5만원 증액(1.4%)’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나이를 세분화하여 살펴보았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20만원 이상’ 가정양육수당 금액을 인상해야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

는 대신 가정양육을 택하겠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고, 만 0세의 경우 만 0세는 20만원 7.1%, 20만원 이상 64.3%로 최소 20만원 이상의 추가 지원 금액 지원이 있을 시 어린이집으로 전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만 1세와 만 3세 연령에서는 최소 10만원 이상의 지원이 있을 시에 가정양육수당 수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만 0세의 경우에 20만원 이상의 고액 인상이 있을 시에 64.3%가 어린이집으로 전환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하여 모든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리고 나머지 연령에서는 20만원 이상의 고액 인상에 대해서는 대략 35%정도 내외로 응답하였다. 또한, 추가 지원 금액에 '영향 없음'이라고 답한 연령 중 만 4세 이상의 경우 5.0%로 추가 지원 금액이 있을 시 가정양육수당 수급을 그대로 유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만 0세 28.6%, 만 1세 27.3%, 만 2세 23.8%, 만 3세 25.0%로 대략 비슷한 비율로 추가 지원 금액에 영향이 없음을 보여준다. 연령을 영아(만 0~2세)와 영유아 전 연령을 고려하였을 때, 추가 지원 금액 구간별 비율의 차이는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5-16> ①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정양육 유지비율(=유지응답자수/전체응답자수)

설문: 가정양육수당 금액을 어느 정도 인상했을 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대신 가정양육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단위 :명, %)

연령 \ 추가지원금액	5만원	10만원	15만원	20만원	20만원 이상	영향 없음	계
만 0세	(0) 0.0	(0) 0.0	(0) 0.0	(1) 7.1	(9) 64.3	(4) 28.6	(14) 100.0
만 1세	(0) 0.0	(6) 18.2	(5) 15.2	(1) 3.0	(12) 36.4	(9) 27.3	(33) 100.0
만 2세	(1) 2.4	(4) 9.5	(5) 11.9	(6) 14.3	(16) 38.1	(10) 23.8	(42) 100.0
만 3세	(0) 0.0	(5) 15.6	(3) 9.4	(5) 15.6	(11) 34.4	(8) 25.0	(32) 100.0
만 4세 이상	(1) 5.0	(2) 10.0	(4) 20.0	(6) 30.0	(6) 30.0	(1) 5.0	(20) 100.0
X2(df)	23.37(20)						
영아(만 0~2세)	1.1	11.2	11.2	9.0	41.6	25.8	100.0
전연령	1.4	12.1	12.1	13.5	38.3	22.7	100.0

*p<.1, *p<.05, **p<.01, ***p<.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전화설문조사 자료 분석 결과임

가구소득별로 살펴보았을 때 소득이 400만원 미만인 가구들은 ‘20만원 이상’ 가정양육수당 금액을 인상해야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대신 가정양육을 택하겠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고, 소득이 400만원 이상인 가구들은 ‘영향 없음’이라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p<.1$). 한편, 가구 소득 유형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20만원 이상’ 가정양육수당 금액을 인상해야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대신 가정양육을 택하겠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 취업형태별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20만원 이상’ 가정양육수당 금액을 인상해야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대신 가정양육을 택하겠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고, 다만 자영업자의 경우 ‘15만원 증액’과 ‘영향 없음’의 응답률이 각각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5-17>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정양육 유지비율(계속)

설문 : 가정양육수당 금액을 어느 정도 인상했을 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대신 가정양육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단위 : %)

[illegible]

어머니 취업형태								
상용근로자	(24)	0.0	8.3	12.5	25.0	33.3	20.8	100.0
임시근로자	(6)	16.7	0.0	16.7	0.0	50.0	16.7	100.0
일용근로자	(2)	0.0	0.0	0.0	0.0	100.0	0.0	100.0
자영업자	(6)	16.7	0.0	33.3	16.7	0.0	33.3	100.0
X2(df)	15.13(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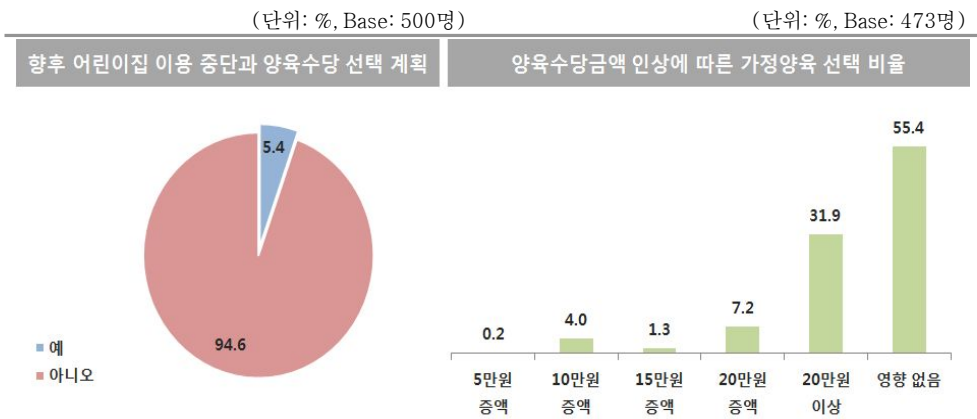
*p<.1, *p<.05, **p<.01, ***p<.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전화설문조사 자료 분석 결과임

나. 어린이집 이용 가구의 가정양육 전환비율(=전환응답자수/전체응답자수)

어린이집 이용 가구의 가정양육으로의 전환 계획에 대한 설문(어린이집 이용 가구 설문 8번) 결과 응답자 500명 중 94.6%인 473명은 향후 6개월 이내에 어린이집 이용을 중단하고 가정양육수당을 받으면서 집에서 자녀를 돌볼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대부분의 어린이집 이용 가구의 부모는 어린이집을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5] 향후 가정양육 계획과 가정양육수당 금액 인상에 따른 가정양육 선택 비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전화설문조사 자료 분석 결과임

<표 5-18> 향후 어린이집 이용 중단과 양육수당 선택 계획(어린이집 이용 가구)

설문: 향후 6개월 이내에 어린이집 이용을 중단하고 양육수당을 받으면서 집에서 자녀를 돌볼 계획이 있습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예	아니오	계
■ 전체 ■	(500)	5.4	94.6	100.0
가구소득				
150만원 미만	(24)	12.5	87.5	100.0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54)	1.9	98.1	100.0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29)	9.3	90.7	100.0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118)	4.2	95.8	100.0
4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118)	4.2	95.8	100.0
600만원 이상	(57)	1.8	98.2	100.0
X2(df)		9.65(5)*		
가구 소득 유형				
맞벌이	(259)	3.1	96.9	100.0
아이 아버지만 일하는 외벌이	(224)	7.6	92.4	100.0
아이 어머니만 일하는 외벌이	(12)	0.0	100.0	100.0
부모 모두 일을 하지 않음	(4)	25.0	75.0	100.0
무응답	(1)	100.0	0.0	100.0
X2(df)		26.02(4)***		
어머니 취업형태				
상용근로자	(186)	3.2	96.8	100.0
임시근로자	(36)	2.8	97.2	100.0
일용근로자	(11)	0.0	100.0	100.0
자영업자	(38)	2.6	97.4	100.0
X2(df)		0.40(3)		

*p<.1, *p<.05, **p<.01, ***p<.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전화설문조사 자료 분석 결과임

아동의 나이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향후 6개월 이내에 어린이집 이용에서 가정양육으로 전환할 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으나 그 비율은 아동의 나이가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한편, 가구 소득별로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소득이 150만원 미만인 구간에서 어린이집 이용을 중단하겠다는 응답률이 다른 소득구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p<.1). 가구 소득 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향후 6개월 이내에 어린이집 이용을 중단하고 가정양육수당을 받으면서 집에서 자녀를 돌볼 계

획이 없다는 응답률이 높았고, 구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

어머니 취업 형태별로 살펴보았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향후 6개월 이내에 어린이집 이용을 중단하고 가정양육수당을 받으면서 집에서 자녀를 돌볼 계획이 거의 없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가정양육수당 수급으로 전환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473명에게 가정양육수당 금액을 어느 정도 인상했을 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대신 가정양육을 선택할 것인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표는 아래와 같다.

<표 5-19> ② 어린이집 이용 가구의 가정양육 전환비율(=전환응답자수/전체응답자수)

설문 : 가정양육수당 금액을 어느 정도 인상했을 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대신 가정양육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단위 :명, %)

연령 \ 추가지원금액	5만원	10만원	15만원	20만원	20만원 이상	영향 없음	계
만 0세	(0) 0.0	(5) 5.3	(0) 0.0	(5) 5.3	(40) 42.6	(44) 46.8	(94) 100.0
만 1세	(0) 0.0	(5) 5.4	(0) 0.0	(6) 6.5	(30) 32.6	(51) 55.4	(92) 100.0
만 2세	(0) 0.0	(2) 2.1	(2) 2.1	(11) 11.6	(26) 27.4	(54) 56.8	(95) 100.0
만 3세	(0) 0.0	(2) 2.1	(2) 2.1	(5) 5.2	(31) 32.3	(56) 58.3	(96) 100.0
만 4세 이상	(1) 1.0	(5) 5.2	(2) 2.1	(7) 7.3	(24) 25.0	(57) 59.4	(96) 100.0
X2(df)	21.47(20)						
영아(만 0~2세)	0.0	4.3	0.7	7.8	34.2	53.0	100.0
전연령	0.2	4.0	1.3	7.2	31.9	55.4	100.0

* $p<.1$, * $p<.05$, ** $p<.01$, *** $p<.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전화설문조사 자료 분석 결과임

위 결과표와 같이 아동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0세(46.8%)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약 55% 정도의 가구가 추가지원 금액에 관계없이 가정양육수당 수급으로 전환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추가지원 금액이 20만원 이상일 경우 만 0세 42.6%, 만 1세 32.6%, 만 2세 27.4%, 만 3세 32.3%, 만 4세 이상 25.0%가 가정양육으로 전환할 의사를 보이고 있다. 통계적 차이는 유의하지 않으나 대부분 연령에서 가정양육수당 인상금액이 높아질수록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대신 가정양육을 선택하고자 하는 비율이 높아진다. 앞서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구 설문결과와 마찬가지로 영아(만

0~2세)와 전 연령 범위에서 추가지원 금액별 비율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5-20> ②-1어린이집 이용 가구의 가정양육 전환비율(=전환응답자수/전체응답자수, 보육반 연령 기준)

설문: 가정양육수당 금액을 어느 정도 인상했을 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대신 가정양육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단위:명, %)

추가지원금액 보육반 연령	5만원	10만원	15만원	20만원	20만원 이상	영향 없음	계
만 0세 반	(0) 0.0	(8) 5.6	(0) 0.0	(10) 6.9	(51) 35.4	(75) 52.1	(144) 100.0
만 1세 반	(0) 0.0	(2) 2.3	(1) 1.1	(7) 7.9	(31) 34.8	(48) 53.9	(89) 100.0
만 2세 반	(0) 0.0	(2) 4.2	(1) 2.1	(5) 10.4	(14) 29.2	(26) 54.2	(48) 100.0
만 3세 반	(1) 0.8	(3) 2.4	(3) 2.4	(8) 6.5	(35) 28.5	(73) 59.4	(123) 100.0
만 4세 반 이상	(0) 0.0	(4) 5.8	(1) 1.5	(4) 5.8	(20) 29.0	(40) 58.0	(69) 100.0
X2(df)	12.48(20)						
영아반(만 0~2세)	0.0	4.3	0.7	7.8	34.2	53.0	100.0
전체	0.2	4.0	1.3	7.2	31.9	55.4	100.0

*p<.1, *p<.05, **p<.01, ***p<.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전화설문조사 자료 분석 결과임

한편,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만 연령 대신 보육반 연령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만원 이상 추가 지원이 있을 경우 만 0세 반 35.4%, 만 1세반 34.8%, 만 2세반 29.2%, 만 4세 반 이상 29%, 그리고 만 3세반 28.5%가 가정양육수당으로 전환의사를 나타냈다. 앞서 아동의 만 연령을 기준할 때와 마찬가지로 통계적 차이는 유의하지 않지만 전 보육반 연령에서 가정양육수당 인상금액이 클수록 가정양육으로 전환한다는 응답이 높아진다. 영아반(0~2세반)과 전체 보육연령을 고려했을 때 이 경우에도 역시 추가지원 금액별 비율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가구소득별로 살펴보았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가정양육 수당 금액을 어느 정도 인상했을 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대신 가정양육을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가구 소득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정양육수당 금액을 어느 정도 인상했을 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대신 가정양육을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이러한 구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p<.05$). 어머니 취업형태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가정양육수당 금액을 어느 정도 인상했을 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대신 가정양육을 선택하겠다는 응답률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임시근로자의 경우 다른 취업형태 구간에 비해 ‘20만 원 이상(40.0%)’ 인상하면 가정양육을 선택하겠다는 응답률과 ‘영향 없음(48.6%)’이라는 응답률이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표 5-21> 어린이집 이용 가구의 가정양육 전환비율(계속)

설문 : 가정양육수당 금액을 어느 정도 인상했을 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대신 가정양육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단위: 명, %)

	사례수 (명)	5만원 증액	10만원 증액	15만원 증액	20만원 증액	20만원 이상	영향 없음	계
■ 전체 ■	(473)	0.2	4.0	1.3	7.2	31.9	55.4	100.0
가구소득								
150만원 미만	(21)	0.0	0.0	0.0	9.5	33.3	57.1	100.0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53)	0.0	1.9	3.8	7.5	39.6	47.2	100.0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17)	0.0	6.0	0.9	10.3	33.3	49.6	100.0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113)	0.9	6.2	0.9	6.2	37.2	48.7	100.0
4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113)	0.0	2.7	0.9	5.3	23.0	68.1	100.0
600만원 이상	(56)	0.0	1.8	1.8	5.4	28.6	62.5	100.0
X2(df)	25.58(25)							
가구 소득 유형								
맞벌이	(251)	0.0	3.2	0.8	3.2	29.1	63.7	100.0
아이 아버지만 일하는 외벌이	(207)	0.5	4.8	1.9	12.1	35.3	45.4	100.0
아이 어머니만 일을 하는 외벌이	(12)	0.0	8.3	0.0	8.3	33.3	50.0	100.0
부모 모두 일을 하지 않음	(3)	0.0	0.0	0.0	0.0	33.3	66.7	100.0
X2(df)	25.18(15)*							
어머니 취업형태								
상용근로자	(180)	0.0	3.3	0.6	3.3	25.6	67.2	100.0
임시근로자	(35)	0.0	5.7	0.0	5.7	40.0	48.6	100.0
일용근로자	(11)	0.0	0.0	0.0	0.0	36.4	63.6	100.0
자영업자	(37)	0.0	2.7	2.7	2.7	35.1	56.8	100.0
X2(df)	8.97(12)							

* $p<.1$, * $p<.05$, ** $p<.01$, *** $p<.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전화설문조사 자료 분석 결과임

다. 총괄(전체가구)

이제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구와 어린이집 이용 가구의 설문조사 결과를 결합한 가정양육 유지 및 전환 비율을 살펴보자. 아래의 표는 6개월 이내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부모의 설문결과이다. 가정양육 가정 설문에서는 141명이 향후 6개월 이내에 가정양육수당 수급을 중단하고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낼 계획이라고 응답하였고, 어린이집 이용 가정 설문에서는 473명이 향후 6개월 이내에 어린이집 이용을 중단하고 가정양육수당을 받으면서 집에서 자녀를 돌볼 계획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들 총 614명(141명+473명)의 아동 연령별 가정양육수당 금액 인상 수준에 따른 가정양육으로의 양육 형태 전환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5-22> 가정양육 유지·전환비율(전체가구)

(단위: 명, %)

연령 \ 추가지원금액	5만원	10만원	15만원	20만원	20만원 이상	영향 없음	계
만 0세	(0) 0.0	(5) 4.6	(0) 0.0	(6) 5.6	(49) 45.4	(48) 44.4	(108) 100.0
만 1세	(0) 0.0	(11) 8.8	(5) 4.0	(7) 5.6	(42) 33.6	(60) 48.0	(125) 100.0
만 2세	(1) 0.7	(6) 4.4	(7) 5.1	(17) 12.4	(42) 30.7	(64) 46.7	(137) 100.0
만 3세	(0) 0.0	(7) 5.5	(5) 3.9	(10) 7.8	(42) 32.8	(64) 50.0	(128) 100.0
만 4세 이상	(2) 1.7	(7) 6.0	(6) 5.2	(13) 11.2	(30) 25.9	(58) 50.0	(116) 100.0
X2(df)	26.8(20)						
영아(만 0~2세)	0.3	6.0	3.2	8.1	36.0	46.5	100.0
전 연령	0.5	5.9	3.8	8.6	33.4	47.9	100.0

*p<.1, *p<.05, **p<.01, ***p<.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전화설문조사 자료 분석 결과임

어린이집 이용 가구 설문 표본이 473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앞서 살펴본 어린이집 이용 가구 분석과 대동소이한 결과를 보여준다. 가정양육수당 인상 금액 수준과 상관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47.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20만원 이상 증액(33.4%)’, ‘20만원 증액(8.6%)’, ‘10만원 증액(5.9%)’, ‘15만원 증액(8.6%)’, ‘5만원 증액(0.5%)’ 순을 보인다.

앞의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15만원 증액’ 보다 ‘10만원 증액’ 시 전환의사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다시 말하면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선호—그것이 개인적 선호이든 경제적 여건 등 제반 환경이 가정양육을 제약함에 따른 강제된 선호이든—가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금전적 인센티브에도 모두 반응했기 때문이라 추정할 수 있다.

아동 연령별로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가정양육수당 금액을 어느 정도 인상했을 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대신 가정양육을 선택하겠다는 질문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그 비율은 아동의 나이가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한편 대부분의 연령에서 가정양육수당 인상 금액이 커질수록 가정양육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지는데, ‘20만원 이상 증액’ 시 만 0세 45.4%, 만 1세 33.6%, 만 2세 30.7%, 만 3세와 만 4세 이상 각각 32.8%와 25.9%가 가정양육수당으로 전환할 의사를 보였다.

<표 5-23> 어머니 취업상태·형태별 전환비율(전체가구)

(단위: %)

	5만원	10만원	15만원	20만원	20만원 이상	영향 없음	계
■ 전체 ■	0.5	5.9	3.8	8.6	33.4	47.9	100.0
어머니 취업여부 및 형태							
미취업	0.3	8.0	4.8	11.8	36.7	38.3	100.0
상용근로자	0.0	3.9	2.0	5.9	26.5	61.8	100.0
임시근로자	2.4	4.9	2.4	4.9	41.5	43.9	100.0
일용근로자	0.0	0.0	0.0	0.0	46.2	53.9	100.0
자영업자	2.3	2.3	7.0	4.7	30.2	53.5	100.0
X ² (df)	45.67(20)**						

*p<.1, *p<.05, **p<.01, ***p<.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전화설문조사 자료 분석 결과임

아동 어머니의 취업 상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미취업모일 경우 가정양육수당 금액 인상 수준과 상관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38.3%로 취업모의 57.8% 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p<0.01$). 취업모의 취업형태를 세분하여 보면, 상용근로자의 경우 ‘영향 없음(61.8%)’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고, 임시근로자인 경우에 미취업모 다음으로 가정양육수당 금액 인상 시 가정양육으로 전환할 의사가 높게 나타났다. 자영업자와 임시근로자의 경우 미취업모와 비슷하게 상대적으로 낮은 인상금액에 대해서도 전환 의사가 확인된다. 또한 가장 취약한 소

득계층으로 볼 수 있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20만원 이하의 인상금액에서는 전혀 반응하지 않으며 상용근로자 다음으로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강한 선호를 보인다.

라. 기존 조사결과와의 비교

한편, 이상에서 살펴본 가정양육수당 금액 인상 수준에 따른 가정양육 유지 및 전환 효과에 관한 분석은 지난 2014년 육아정책연구소 조사(이정원·이혜민 2014)를 통해서도 이루어졌다. 다만 설문 방식과 조사 대상에 있어 본 연구조사와 다소 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2014년 조사에서는 먼저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가정양육수당 인상 시 어린이집 이용으로 전환 시점 연기 의사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결과로서 응답자의 34.1%가 가정양육 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있다고 하였고, 27.8%는 금액 인상 수준에 따라 다르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38.1%가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인상 금액에 따라 가정양육 지속 여부가 유동적인 사례를 대상으로 인상 금액에 따른 가정양육 연장 여부를 질문한 결과, 월 5~10만원 인상 시 37.0%가 연장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63.0%가 의향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 중 5세, 6세가 다른 연령에 비해 가장 높은 50%로 가정양육 지속 의사를 보였고, 2세의 경우가 27.3%로 가장 낮은 지속 의향을 보였다. 그리고 월 5~10만원 인상 시 가정양육 지속의향이 없는 가구를 대상으로 월 10~15만원 인상 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양육을 지속할 것인지에 대해 설문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22.9%가 가정양육을 지속할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77.1%가 가정양육을 지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월 10~15만원 인상 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양육 지속 의향이 없다는 사람들에게 대해 월 15~20만원 인상 시 가정양육 지속 여부에 대해 설문하였다. 해당 설문 대상자는 130명이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52.3%이고, 해당 인상 금액에도 반응하지 않은 대상자는 47.7%로 나타났다.

앞서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014년 육아정책연구소 조사에서는 어린이집 이용 가구를 대상으로 가정양육수당 인상에 따른 가정양육 전환 가능성에 대해 설문을 하였다. 가정양육수당 인상 시 가정 양육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8%, 인상 금액 수준에 따라 다르다고 응답한 비율이 19.2%였

다. 마찬가지로 어린이집 이용 가구 중 가정양육수당 인상 시 가정양육 전환에 유동적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인상금액별 전환의사에 대하여 설문하였다. 월 5~10만원 정도 인상 시 전환 의사 여부에서는 21.3%가 전환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78.7%가 전환 의사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여기서 전환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사례를 대상으로 월 10~15만원 인상 시 가정양육 전환 의사를 설문한 결과 27.1%가 전환 의사를 밝혔다. 이중 아직도 전환 의향이 없는 사례자를 대상으로 월 15~20만원 인상 시 전환 의사를 설문한 결과 32.7%가 전환 의향이 있다고 밝혔고, 67.3%가 전환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이상과 같이 2014년도에 보고된 가정양육 유지 및 전환에 대한 응답률과 관측수를 기준으로 빈도수를 역산하여 가정양육수당 인상금액 구간별 응답률을 구하여 본 연구의 조사결과와 함께 정리하면 아래의 <표 5-24>와 같다.

<표 5-24> 가정양육 유지·전환 비율 (2014 vs. 2015)

(단위: 명, %)

2014	5~10만원	10~15만원	15~20만원	—	계
가정양육수당 수급	48.6	18.7	32.7	—	100.0 (208)
어린이집 이용	35.4	34.5	30.1	—	100.0 (113)

2015	5만원	10만원	15만원	20만원	20만원 초과	계
가정양육수당 수급	1.8	15.6	15.6	17.4	49.5	100.0 (109)
어린이집 이용	0.5	9.0	2.8	16.1	71.6	100.0 (211)

주: 괄호 안은 관측수이며, 2014년도 결과는 이정원·이혜민(2014) 조사결과 pp110~125를 바탕으로 재계산한 수치임

단순히 비교해 보면, 가정양육 유지 또는 시설양육에서 가정양육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필요로 하는 가정양육수당의 인상 금액은 2015년 조사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2015년도 조사의 경우 가정양육을 중단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할 예정인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구와 계속 어린이집을 이용하고자 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가정양육수당 인상 금액별 양육행태 변화 의사를 살펴본 반면에 2014년 조사에서는 가정양육수당 인상 시 가정양육수당을 계속 수급할 의사가 있는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구와 가정양육으로 전환할 의사가 있는 어린이집 이용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즉, 설문 문항의 설계와 조사 방식에 있어 본 조사와 차별적일 뿐만 아니라 최종 결과로 보고된 정보만 활용가능하기 때문에 동 항목에 대한 두 조사결과간의 직접비교는 의미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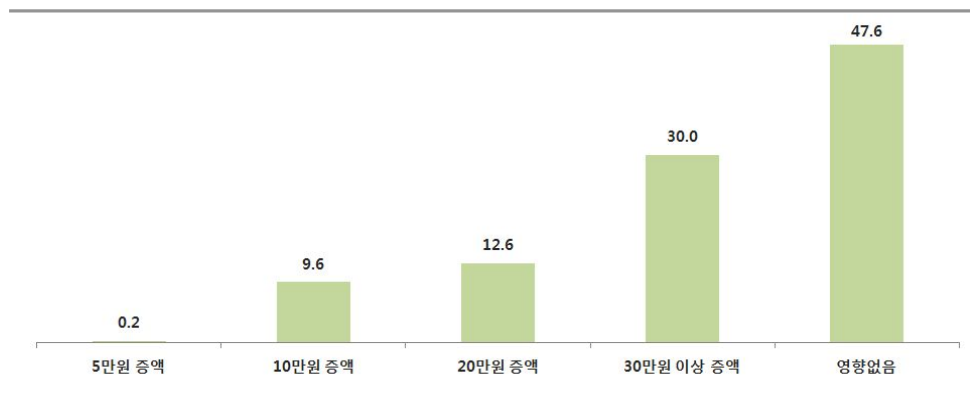
4. 가정양육수당 금액 인상에 따른 경제활동 선택

가.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구

가정양육수당 금액을 어느 정도 인상했을 때 현재의 소득활동과 구직활동을 중단하겠냐는 물음에 ‘영향 없음’이라는 응답이 47.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30만원 이상 증액(30.0%)’, ‘20만원 이상 증액(12.6%)’, ‘10만원 증액(9.6%)’, ‘5만원 증액(0.2%)’의 순을 보였다. 응답자의 대략 절반 정도가 가정양육수당 금액과 소득활동 및 구직활동 중단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30만원 이상 증액하는 경우 소득활동을 중단한다는 응답이 30%로 높게 나타나므로 가정양육수당 인상이 부모의 소득활동이나 구직활동 중단 여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림 5-6] 가정양육수당 인상금액 구간별 소득 및 구직활동 중단 의사(가정양육수당 수급 가구)

(단위: %, Base: 500명)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전화설문조사 자료 분석 결과임

아동의 나이를 세분화하여 살펴보았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가정양육수당 금액을 어느 정도 인상했을 때 현재 하고 있는 소득활동이나 구직활동을 중단하겠다는 질문에 전체적으로 ‘영향 없음’이라는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구 소득수준별로 소득이 높을수록 가정양육수당 금액을 어느 정도 인상해도 소득활동과 구직활동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이 크게 나타나는데, 소득이 150만원 미만 구간의 응답률은 38.9%, 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구간에서는 69.6%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p < .01$). 이러한 결과는 유보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저소득층의 경우 가정양육으로 전환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돌봄소득(가정양육수당)과 노동시장소득과의 격차가 고소득층에 비해 더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가정양육수당 인상에 대해 상대적으로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가구 소득 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 가정양육수당 금액을 어느 정도 인상했을 경우 현재 하고 있는 소득활동이나 구직활동을 중단하겠다는 질문에 전체적으로 ‘영향 없음’이라는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특히 아이 어머니만 일을 하는 외벌이(85.7%)가 가장 높았고, 맞벌이(60.1%), 모두 일을 하지 않음(50.0%), 아이 아버지만 일하는 외벌이(41.8%)의 순을 보였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p < .1$). 어머니 취업형태별로 살펴보았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가정양육수당 금액을 어느 정도 인상했을 때 현재 하고 있는 소득활동이나 구직활동을 중단하겠다는 질문에 전체적으로 ‘영향 없음’이라는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임시근로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인상금액에서도 취업을 중단할 의사를 보이고 있는데, 소득수준이 더 낮은 일용직 근로자에 비해서도 반응이 크게 나타났다.

<표 5-25> 가정양육수당 인상금액 구간별 소득 및 구직활동 중단 여부(가정양육수당 수급 가구)

설문 : 가정양육수당 금액을 어느 정도 인상했을 때 현재 하고 계신 소득활동이나 구직활동을 중단하시겠습니까?

(단위: 명, %)

	사례수 (명)	5만원 증액	10만원 증액	20만원 증액	30만원 이상 증액	영향 없음	계
■ 전체 ■	(500)	0.2	9.6	12.6	30.0	47.6	100.0
아동의 나이							
만 0세	(100)	0.0	7.0	10.0	32.0	51.0	100.0
만 1세	(100)	1.0	11.0	15.0	27.0	46.0	100.0
만 2세	(100)	0.0	12.0	20.0	28.0	40.0	100.0

	사례수 (명)	5만원 증액	10만원 증액	20만원 증액	30만원 이상 증액	영향 없음	계
만 3세	(100)	0.0	11.0	10.0	28.0	51.0	100.0
만 4세 이상	(100)	0.0	7.0	8.0	35.0	50.0	100.0
X2(df)	17.38(16)						
가구소득							
150만원 미만	(18)	0.0	22.2	5.6	33.3	38.9	100.0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6)	2.8	19.4	5.6	27.8	44.4	100.0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61)	0.0	8.7	12.4	36.6	42.2	100.0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33)	0.0	12.0	17.3	28.6	42.1	100.0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96)	0.0	5.2	14.6	26.0	54.2	100.0
600만원 이상	(56)	0.0	3.6	5.4	21.4	69.6	100.0
X2(df)	44.83(20)**						
가구 소득 유형							
맞벌이	(138)	0.0	4.3	8.7	26.8	60.1	100.0
아이 아버지만 일하는 외벌이	(352)	0.3	11.6	14.5	31.8	41.8	100.0
아이 어머니만 일을 하는 외벌이	(7)	0.0	0.0	0.0	14.3	85.7	100.0
부모 모두 일을 하지 않음	(2)	0.0	50.0	0.0	0.0	50.0	100.0
무응답	(1)	0.0	0.0	0.0	0.0	100.0	100.0
X2(df)	26.15(16)*						
어머니 취업형태							
상용근로자	(102)	0.0	2.9	6.9	28.4	61.8	100.0
임시근로자	(16)	0.0	18.8	12.5	18.8	50.0	100.0
일용근로자	(5)	0.0	0.0	20.0	20.0	60.0	100.0
자영업자	(22)	0.0	0.0	9.1	22.7	68.2	100.0
X2(df)	12.3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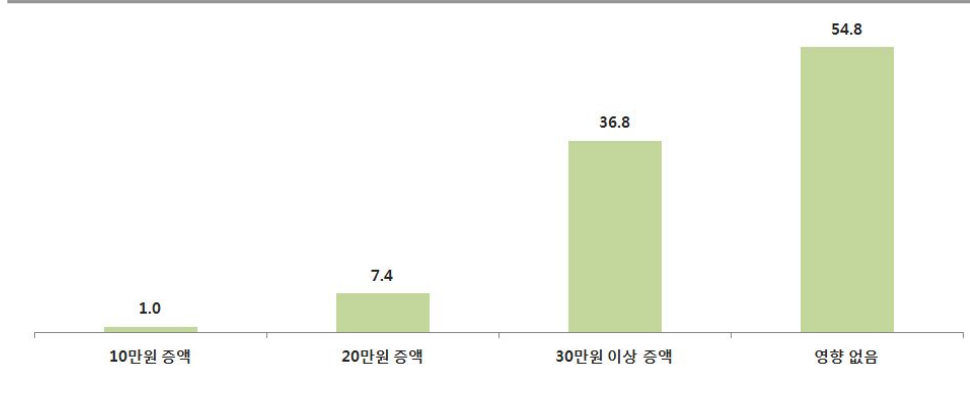
*p<.1, *p<.05, **p<.01, ***p<.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전화설문조사 자료 분석 결과임

나. 어린이집 이용 가구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도 동일한 설문을 실시하였는데, ‘영향 없음’이라는 응답이 54.8%로 가장 높았고, ‘30만원 이상 증액(36.8%)’, ‘20만원 이상 증액(7.4%)’, ‘10만원 증액(1.0%)’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5만원 증액’ 구간에 대한 응답은 없었다.

[그림 5-7] 가정양육수당 인상금액 구간별 소득 및 구직활동 중단 의사(어린이집 이용 가구)
(단위: %, Base: 500명)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전화설문조사 자료 분석 결과임

아동의 나이를 세분화하여 살펴보았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가정양육수당 금액을 어느 정도 인상했을 때 현재 하고 있는 소득활동이나 구직활동을 중단하겠다는 질문에 전체적으로 ‘영향 없음’이라는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구 소득별로 살펴보았을 때 가구 소득 150만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 가정양육수당 금액을 어느 정도 인상했을 때 현재 하고 있는 소득활동이나 구직활동을 중단하겠다는 질문에 전체적으로 ‘영향 없음’이라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고, 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 70.2%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소득 수준이 낮아질수록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p < .001$). 가구 소득 유형별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맞벌이와 아이 어머니만 일하는 외벌이의 경우 ‘영향 없음’이라는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아이 아버지만 일하는 외벌이의 경우 ‘30만원 이상 증액(44.2%)’이라는 응답률이 ‘영향 없음(43.3%)’와 근소한 차이를 보이며 높게 나타났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p < .01$).

어머니 취업 형태별로 살펴보았을 때 가정양육수당 금액을 어느 정도 인상했을 경우 현재 하고 있는 소득활동이나 구직활동을 중단하겠다는 질문에 전체적으로 ‘영향 없음’이라는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자영업자의 경우 73.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상용근로자 66.1%, 일용근로자 54.5%, 임시근로자 50.0% 순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취업형태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5-26> 가정양육수당 인상금액 구간별 소득 및 구직활동 중단 의사(어린이집 이용 가구)

설문 : 가정양육수당 금액을 어느 정도 인상했을 때 현재 하고 계신 소득활동이나 구직활동을 중단하시겠습니까?

(단위: 명, %)

	사례수 (명)	5만원 증액	10만원 증액	20만원 증액	30만원 이상 증액	영향없음	계
■ 전체 ■	(500)	0.0	1.0	7.4	36.8	54.8	100.0
아동의 나이							
만 0세	(100)	0.0	0.0	9.0	37.0	54.0	100.0
만 1세	(100)	0.0	2.0	7.0	42.0	49.0	100.0
만 2세	(100)	0.0	0.0	4.0	47.0	49.0	100.0
만 3세	(100)	0.0	1.0	9.0	31.0	59.0	100.0
만 4세 이상	(100)	0.0	2.0	8.0	27.0	63.0	100.0
X2(df)	16.20(12)						
가구소득							
150만원 미만	(24)	0.0	8.3	4.2	45.8	41.7	100.0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54)	0.0	0.0	7.4	38.9	53.7	100.0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29)	0.0	2.3	10.9	38.8	48.1	100.0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18)	0.0	0.0	8.5	44.9	46.6	100.0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118)	0.0	0.0	5.9	28.0	66.1	100.0
600만원 이상	(57)	0.0	0.0	1.8	28.1	70.2	100.0
X2(df)	39.06(15)***						
가구 소득 유형							
맞벌이	(259)	0.0	0.8	4.6	30.5	64.1	100.0
아이 아버지만 일하는 외벌이	(224)	0.0	1.3	11.2	44.2	43.3	100.0
아이 어머니만 일을 하는 외벌이	(12)	0.0	0.0	0.0	25.0	75.0	100.0
부모 모두 일을 하지 않음	(4)	0.0	0.0	0.0	50.0	50.0	10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X2(df)	27.57(12)**						
어머니 취업형태							
상용근로자	(186)	0.0	0.5	4.3	29.0	66.1	100.0
임시근로자	(36)	0.0	0.0	8.3	41.7	50.0	100.0
일용근로자	(11)	0.0	9.1	0.0	36.4	54.5	100.0
자영업자	(38)	0.0	0.0	2.6	23.7	73.7	100.0
X2(df)	17.29(9)*						

*p<.1, *p<.05, **p<.01, ***p<.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전화설문조사 자료 분석 결과임

다. 총괄(전체가구)

이하에서는 전체 조사가구(1,000)를 기준으로 가정양육수당 금액인상 구간별 부모의 노동공급 의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가정양육수당 인상 구간별 노동공급 의사에 대한 설문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어린이집 이용 가구의 경우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구에 비하여 공적이전소득 증가에 따른 노동공급 감소효과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구집단에 비해 부모의 경제활동 참여율이나 고용안정성이 높은 어린이집 이용 가구의 특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표 5-27>).

<표 5-27> 자녀 양육 형태별 부모 경제활동 특성

(단위: %)

	맞벌이 가구	미취업(모)	상용근로자(모)	육아휴직급여 수급 경험
가정양육수당	34.8	60.8	35.4	43.4
어린이집	65.2	39.2	64.6	56.6
계(가구수)	(397)	(584)	(288)	(265)
	100.0	100.0	100.0	10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전화설문조사 자료 분석 결과임

아래 <표 5-28>의 아동 연령별로 보았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지만 만 1세와 2세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가정양육수당 인상구간에서도 노동공급을 중단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8> 하단은 미취업모의 구직활동 중단 여부까지 고려하여 자녀를 둔 여성의 노동공급 의사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인상의 정책영향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정보를 보여준다. 미취업모의 경우 모든 인상금액 구간에서 취업모에 비해 정책반응도가 더욱 민감하게 나타나며, 가정양육수당 금액 인상이 구직활동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응답은 42.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5-28> 가정양육수당 인상금액 구간별 소득 및 구직활동 중단 의사(미취업모 포함, 전체가구)

설문: 가정양육수당 금액을 어느 정도 인상했을 때 현재 하고 계신 소득활동이나 구직활동을 중단하시겠습니까?

(단위: %)

	사례수 (명)	5만원 증액	10만원 증액	20만원 증액	30만원 이상 증액	영향없음	계
■ 전체 ■	(1,000)	0.1	5.3	10.0	33.4	51.2	100.0
아동의 나이							
만 0세	(200)	0.0	3.5	9.5	34.5	52.5	100.0
만 1세	(200)	0.5	6.5	11.0	34.5	47.5	100.0
만 2세	(200)	0.0	6.0	12.0	37.5	44.5	100.0
만 3세	(200)	0.0	6.0	9.5	29.5	55.0	100.0
만 4세 이상	(200)	0.0	4.5	8.0	31.0	56.5	100.0
X2(df)	14.7(16)						
어머니 취업 여부 및 형태							
미취업	(584)	0.2	7.7	13.0	36.6	42.5	100.0
상용근로자	(288)	0.0	1.4	5.2	28.8	64.6	100.0
임시근로자	(52)	0.0	5.8	9.6	34.6	50.0	100.0
일용근로자	(16)	0.0	6.3	6.3	31.3	56.3	100.0
자영업자	(60)	0.0	0.0	5.0	23.3	71.7	100.0
X2(df)	61.6(16)***						

*p<.1, *p<.05, **p<.01, ***p<.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전화설문조사 자료 분석 결과임

5. 보육지원 정책과 자녀 계획

정부의 보육지원 정책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정책 기능 중 하나인 출산에 대한 영향을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해보기 위하여 모든 조사대상 가구에 대해 1) 추가 자녀 출산 계획 여부와 사유, 2) 지금까지의 정부 보육지원 정책이 개별 가구의 자녀 출산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프로그램이 가장 긍정적 효과를 보였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그리고 3) 가정양육수당 지원 금액 수준에 따른 추가 자녀 출산 의사에 대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하에서는 이들 결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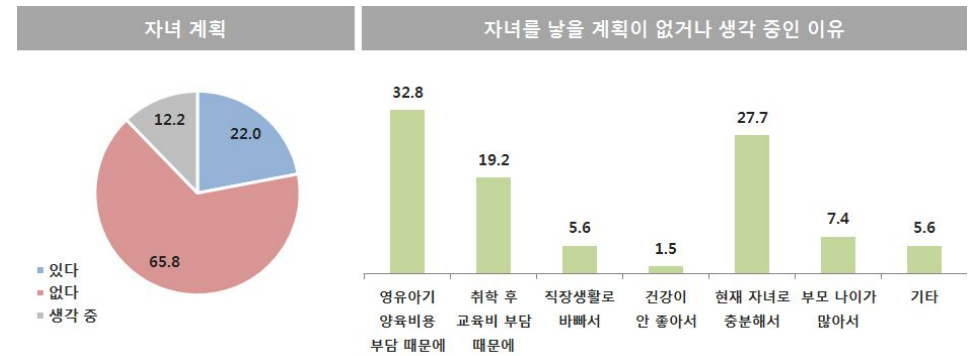
1) 추가 자녀 출산계획 여부와 사유

가.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구

[그림 5-8]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구의 추가 자녀 계획과 이유

(단위:%, Base: 500명)

(단위: %, Base: 390명)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전화설문조사 자료 분석 결과임

응답자 10명 중 7명 가까이(65.8%)는 자녀를 더 낳을 계획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계획이 ‘있다(22.0%)’, ‘생각 중(12.2%)’의 비율을 보였다. 자녀를 낳을 계획이 없거나 생각 중인 이유에 대해 ‘영유아기 양육비용 부담 때문에(32.8%)’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다. 그 다음으로 ‘현재 자녀로 충분해서(27.7%)’, ‘취학 후 교육비 부담 때문에(19.2%)’, ‘부모 나이가 많아서(7.4%)’, ‘직장생활로 바빠서(5.6%)’, ‘기타(5.6%)’, ‘건강이 안 좋아서(1.5%)’라는 답변이 많았다.

아동의 나이를 세분화하여 살펴보았을 때 아동의 나이가 어릴수록 자녀를 낳을 계획이 있거나 생각 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아동의 나이가 만 0세의 경우 자녀를 더 낳을 계획이 없다는 응답률이 45.0%, 만 4세 이상에서 응답률이 81.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p < .001$). 가구소득별로 살펴보았을 때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를 낳을 계획이 있거나 생각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가구소득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의 경우 자녀를 더 낳을 계획이 없다는 응답률이 50.0%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가구소득 4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의 경우 응답률이 76.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p<.05$). 가구 소득 유형별로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자녀를 더 낳을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특히 아이 어머니만 일하는 외벌이의 경우 추가 출산 계획이 없다는 응답률이 71.4%로 가장 높았다. 어머니 취업 형태별로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자녀를 더 낳을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일용근로자의 80%가 추가 자녀 출산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표 5-29>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구 특성별 추가 자녀 출산계획

설문 : 앞으로 자녀를 더 낳을 계획이 있습니까?

(단위: 명, %)

■ 전체 ■	사례수 (명)	있다	없다	생각 중	계
	(500)	22.0	65.8	12.2	36.8
아동의 나이					
만 0세	(100)	35.0	45.0	20.0	100.0
만 1세	(100)	23.0	61.0	16.0	100.0
만 2세	(100)	28.0	62.0	10.0	100.0
만 3세	(100)	11.0	80.0	9.0	100.0
만 4세 이상	(100)	13.0	81.0	6.0	100.0
X2(df)		42.82(8)***			
가구소득					
150만원 미만	(18)	33.3	66.7	0.0	100.0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36)	33.3	50.0	16.7	100.0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61)	25.5	58.4	16.1	100.0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133)	21.8	67.7	10.5	100.0
4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96)	14.6	76.0	9.4	100.0
600만원 이상	(56)	14.3	75.0	10.7	100.0
X2(df)		18.86(10)*			
가구 소득 유형					
맞벌이	(138)	19.6	68.8	11.6	100.0
아이 아버지만 일하는 외벌이	(352)	22.4	64.8	12.8	100.0
아이 어머니만 일하는 외벌이	(7)	28.6	71.4	0.0	100.0
부모 모두 일을 하지 않음	(2)	50.0	50.0	0.0	100.0
무응답	(1)	100.0	0.0	0.0	100.0
X2(df)		6.40(8)			
어머니 취업형태					
상용근로자	(102)	20.6	66.7	12.7	100.0
임시근로자	(16)	25.0	75.0	0.0	100.0
일용근로자	(5)	20.0	80.0	0.0	100.0
자영업자	(22)	13.6	72.7	13.6	100.0
X2(df)		3.68(6)			

* $p<.1$,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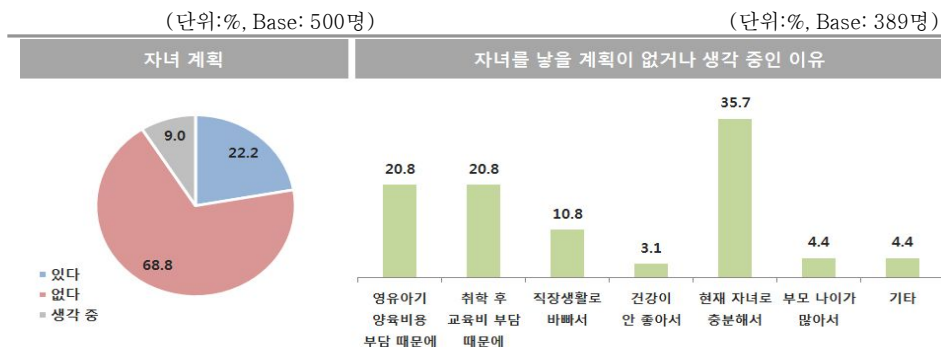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전화설문조사 자료 분석 결과임

아동의 나이를 세분화하여 살펴보았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만 0세, 만 2세, 만 3세에서는 ‘영유아기 양육비용 부담 때문에’라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만 1세와 만 4세 이상에서는 ‘현재 자녀로 충분해서’라는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구 소득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데($p < 0.001$), 150만원 미만 소득구간을 제외하고 150만원 이상부터 400만원 미만 소득구간까지 ‘영유아기 양육비용 부담 때문에’라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400만원 이상 부터는 ‘현재 자녀로 충분해서’라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가구 소득 유형별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데, 맞벌이의 경우 ‘현재 자녀로 충분해서(30.6%)’, 아이 아버지만 일하는 외벌이의 경우 ‘영유아기 양육부담 때문에(37.4%)’, 아이 어머니만 일하는 외벌이의 경우 ‘기타(60.0%)’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p < .001$). 어머니 취업 형태별로 살펴보았을 때 상용근로자의 경우 ‘현재 자녀로 충분해서(32.1%)’, 임시근로자의 경우 ‘영유아기 양육비용 부담 때문에(33.3%)’, 자영업자의 경우 ‘취학 후 교육비 부담 때문에(31.6%)’의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p < .05$).

한편, 자녀 낳을 계획별로 살펴보았을 때 추후 자녀 계획이 없거나 자녀계획을 생각중인 경우 ‘영유아기 양육비용 부담 때문에’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 계획이 없는 경우 ‘현재 자녀로 충분해서’라는 응답률이 높았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p < .001$).

나. 어린이집 이용 가구

[그림 5-9] 어린이집 이용 가구의 추가 자녀 계획과 이유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전화설문조사 자료 분석 결과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구의 경우 자녀를 낳을 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68.8%로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녀를 낳을 계획이 없거나 생각 중인 이유에 대하여 ‘현재 자녀로 충분해서’가 35.7%로 가장 높았고, 영유아기 양육비용 부담 때문에(20.8%), ‘취학 후 교육비 부담 때문에(20.8%)’, ‘직장생활로 바빠서(10.8%)’, ‘부모 나이가 많아서(4.4%)’, ‘기타(4.4%)’, ‘건강이 안 좋아서(3.1%)’의 순을 보였다. 아동의 나이를 세분화하여 살펴보았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자녀를 더 낳을 계획이 없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고, 그 비율은 아동의 나이가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가구 소득별로 살펴보았을 때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자녀를 더 낳을 계획이 없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고 소득이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인 경우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구 소득 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자녀를 더 낳을 계획이 없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고, 무응답을 제외하고 아이 어머니만 일을 하는 외벌이의 경우 그 비율이 가장 높았다. 어머니 취업 형태별로 살펴보았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자녀를 더 낳을 계획이 없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고, 일용근로자의 경우 그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5-30> 어린이집 이용 가구 특성별 추가 자녀 출산계획

설문 : 앞으로 자녀를 더 낳을 계획이 있습니까?

(단위: 명, %)

	사례수 (명)	있다	없다	생각중	계
■ 전체 ■	(500)	22.2	68.8	9.0	100.0
아동의 나이					
만 0세	(100)	27.0	62.0	11.0	100.0
만 1세	(100)	27.0	61.0	12.0	100.0
만 2세	(100)	23.0	70.0	7.0	100.0
만 3세	(100)	16.0	77.0	7.0	100.0
만 4세 이상	(100)	18.0	74.0	8.0	100.0
X2(df)		10.02(8)			
가구소득					
150만원 미만	(24)	12.5	66.7	20.8	100.0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54)	16.7	68.5	14.8	100.0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29)	27.1	65.1	7.8	100.0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118)	20.3	72.9	6.8	100.0

	사례수 (명)	있다	없다	생각중	계
4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118)	22.9	69.5	7.6	100.0
600만원 이상	(57)	22.8	68.4	8.8	100.0
X2(df)		10.84(10)			
가구 소득 유형					
맞벌이	(259)	23.6	68.0	8.5	100.0
아이 아버지만 일하는 외벌이	(224)	21.4	68.8	9.8	100.0
아이 어머니만 일하는 외벌이	(12)	16.7	83.3	0.0	100.0
부모 모두 일을 하지 않음	(4)	0.0	75.0	25.0	100.0
무응답	(1)	0.0	100.0	0.0	100.0
X2(df)		4.66(8)			
어머니 취업형태					
상용근로자	(186)	24.7	66.1	9.1	100.0
임시근로자	(36)	25.0	69.4	5.6	100.0
일용근로자	(11)	0.0	81.8	18.2	100.0
자영업자	(38)	21.1	76.3	2.6	100.0
X2(df)		6.9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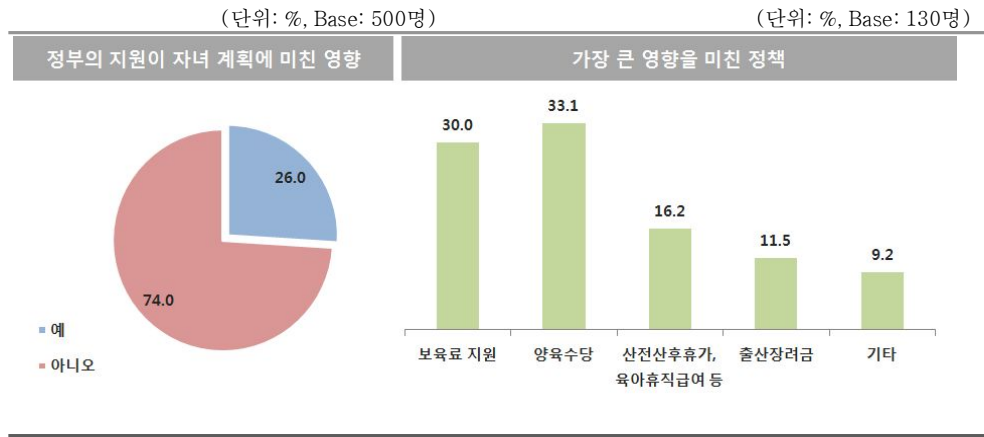
*p<.1, *p<.05, **p<.01, ***p<.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전화설문조사 자료 분석 결과임

2) 정부의 보육지원 정책이 자녀 계획에 미친 영향

가.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구

[그림 5-10]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구의 자녀 출산 계획에 대한 정부 보육지원정책의 영향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전화설문조사 자료 분석 결과임

정부 정책이 자녀 출산 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구의 26%만이 그렇다라는 응답을 하였고, 나머지 74%는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하였다. 긍정적 영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130명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프로그램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가정양육수당’이라는 응답이 3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보육료 지원(30.0%)’, ‘산전산후휴가, 육아휴직급여 등(16.2%)’, ‘출산장려금(11.5%)’, ‘기타(9.2%)’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 연령별로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만 0~2세 영아의 경우 ‘가정양육수당’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만 3세 이상에서는 ‘보육료 지원’이라는 답변이 많았다. 가구 소득별로 살펴보았을 때 소득이 높을수록 ‘산전산후휴가, 육아휴직급여 등’을 선택한 비율이 높아졌고,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p < .1$). 가구 소득 유형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맞벌이의 경우 ‘보육료 지원’이라는 응답률이 근소한 차이로 가장 높았고, 아이 아버지만 일하는 외벌이의 경우 ‘가정양육수당’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어머니 취업 형태별로 보았을 때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지만 상용근로자의 경우 ‘산전산후휴가, 육아휴직급여 등’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임시근로자의 경우 ‘가정양육수당’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자영업자의 경우 ‘보육료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5-31>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구의 자녀 출산 계획에 긍정적 영향을 준 보육지원정책

설문 : 어떤 정책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습니까?

(단위: 명, %)

	사례수 (명)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 수당	산전산후휴가, 육아휴직 급여 등	출산장려금	기타	계
■ 전체 ■	(130)	30.0	33.1	16.2	11.5	9.2	100.0
아동의 나이							
만 0세	(32)	31.3	34.4	12.5	9.4	12.5	100.0
만 1세	(22)	18.2	36.4	18.2	18.2	9.1	100.0
만 2세	(26)	23.1	50.0	7.7	15.4	3.8	100.0
만 3세	(24)	37.5	29.2	20.8	4.2	8.3	100.0
만 4세 이상	(26)	38.5	15.4	23.1	11.5	11.5	100.0
X2(df)	13.80(16)						
가구소득							
150만원 미만	(6)	16.7	50.0	16.7	16.7	0.0	100.0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1)	27.3	27.3	18.2	27.3	0.0	100.0

	사례수 (명)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 수당	산전산후휴가, 육아휴직 급여 등	출산장려금	기타	계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40)	32.5	47.5	5.0	7.5	7.5	100.0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4)	35.3	29.4	8.8	8.8	17.6	100.0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24)	20.8	25.0	25.0	16.7	12.5	100.0
600만원 이상	(15)	33.3	13.3	46.7	6.7	0.0	100.0
X2(df)	31.19(20)*						
가구 소득 유형							
맞벌이	(44)	29.5	22.7	27.3	9.1	11.4	100.0
아이 아버지만 일하는 외벌이	(85)	30.6	37.6	10.6	12.9	8.2	100.0
부모 모두 일을 하지 않음	(1)	0.0	100.0	0.0	0.0	0.0	100.0
X2(df)	9.68(8)						
어머니 취업형태							
상용근로자	(30)	26.7	16.7	36.7	6.7	13.3	100.0
임시근로자	(6)	16.7	50.0	16.7	16.7	0.0	100.0
일용근로자	(2)	50.0	50.0	0.0	0.0	0.0	100.0
자영업자	(6)	50.0	16.7	0.0	16.7	16.7	100.0
X2(df)	10.45(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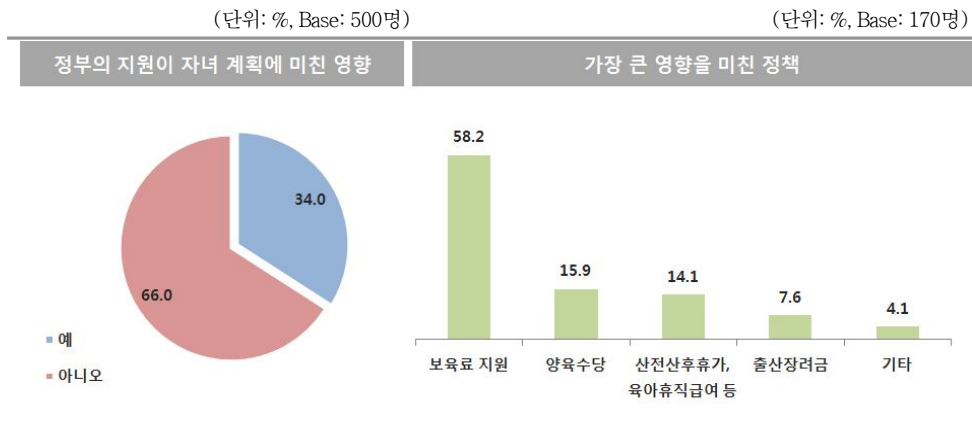
*p<.1, *p<.05, **p<.01, ***p<.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전화설문조사 자료 분석 결과임

나. 어린이집 이용 가구

어린이집 이용 가구의 경우 동일한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의 34%가 정부 보육지원 정책이 자녀 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였고, 이들 중 58.2%가 ‘보육료 지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정책이라고 답변하였다. 그 다음으로 ‘가정양육수당(15.9%)’, ‘산전산후휴가, 육아휴직급여 등(14.1%)’, ‘출산장려금(7.6%)’, ‘기타(4.1%)’의 순을 보인다.

[그림 5-11] 어린이집 이용 가구의 자녀 출산 계획에 대한 정부 보육지원정책의 영향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전화설문조사 자료 분석 결과임

아동을 연령별로 세분화해서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보육료 지원’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가구소득별로 살펴 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보육료 지원’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고, 소득이 높을수록 ‘산전산후휴가, 육아휴직급여 등’이라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p < .1$). 가구소득 유형별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데, 전체적으로 ‘보육료 지원’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고, 맞벌이와 아이 어머니만 일하는 외벌이의 경우 ‘산전산후휴가, 육아휴직급여 등’이라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p < .05$). 어머니 취업 형태별로 살펴보았을 때 상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의 경우 ‘보육료 지원’의 응답률이 각각 59.4%, 53.3%로 ‘과반 이상’이었고 일용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경우 ‘보육료 지원’의 응답률이 각각 75.0%, 72.7%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p < .1$).

<표 5-32> 어린이집 이용 가구의 자녀 출산 계획에 긍정적 영향을 준 보육지원정책

설문: 어떤 정책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습니까?

(단위: 명, %)

	사례수 (명)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 수당	산전산후휴가, 육아휴직 급여 등	출산장려금	기타	계
■ 전체 ■	(170)	58.2	15.9	14.1	7.6	4.1	100.0
아동의 나이							
만 0세	(33)	54.5	9.1	21.2	12.1	3.0	100.0
만 1세	(33)	39.4	21.2	27.3	9.1	3.0	100.0
만 2세	(40)	60.0	17.5	10.0	5.0	7.5	100.0
만 3세	(31)	71.0	16.1	3.2	6.5	3.2	100.0
만 4세 이상	(33)	66.7	15.2	9.1	6.1	3.0	100.0
X2(df)	16.84(16)						
가구소득							
150만원 미만	(11)	45.5	27.3	0.0	18.2	9.1	100.0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6)	56.3	18.8	0.0	18.8	6.3	100.0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43)	55.8	25.6	7.0	7.0	4.7	100.0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40)	72.5	7.5	12.5	7.5	0.0	100.0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42)	54.8	11.9	26.2	2.4	4.8	100.0
600만원 이상	(18)	50.0	11.1	27.8	5.6	5.6	100.0
X2(df)	28.66(20)*						
가구 소득 유형							
맞벌이	(89)	59.6	11.2	19.1	4.5	5.6	100.0
아이 아버지만 일하는 외벌이	(75)	56.0	22.7	8.0	10.7	2.7	100.0
아이 어머니만 일을 하는 외벌이	(5)	80.0	0.0	20.0	0.0	0.0	10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X2(df)	23.94(12)*						
어머니 취업형태							
상용근로자	(64)	59.4	6.3	26.6	4.7	3.1	100.0
임시근로자	(15)	53.3	13.3	6.7	6.7	20.0	100.0
일용근로자	(4)	75.0	25.0	0.0	0.0	0.0	100.0
자영업자	(11)	72.7	27.3	0.0	0.0	0.0	100.0
X2(df)	19.70(12)*						

*p<.1,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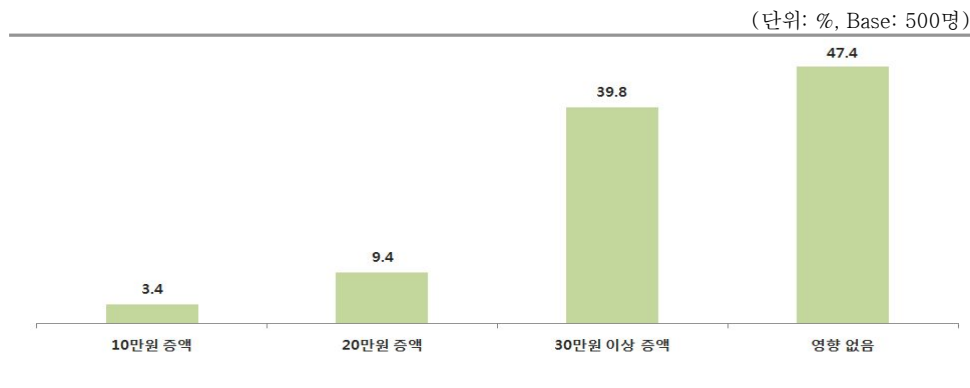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전화설문조사 자료 분석 결과임

3) 가정양육수당 금액인상에 따른 추가 자녀 출산 의사

가.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구

가정양육수당 금액 인상에 따른 추가 자녀출산 의향을 물어본 결과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구의 절반 가까이(47.4%)는 가정양육수당 금액인상이 향후 자신들의 자녀 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응답자의 39.8%가 ‘30만원 이상 증액’, 9.4%는 ‘20만원 증액’, 3.4%는 ‘10만원 증액’ 시 현재 계획보다 자녀를 더 출산할 의사가 생길 것이라는 응답을 하였고, ‘5만원 증액’ 구간에서 그러한 의사를 보인 응답자는 없었다.

[그림 5-12]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구의 가정양육수당 금액인상 구간별 추가 자녀 출산 의사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전화설문조사 자료 분석 결과임

아동의 나이를 세분화하여 살펴보았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영향 없음’이라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 소득별로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영향 없음’의 응답률이 높아졌으며, 소득이 600만원 이상에서는 69.6%가 주어진 인상금액에 반응하지 않았다($p < .001$). 반대로 가구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낮은 인상금액 구간에서의 반응도가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나타났다.

한편, 자녀 낳을 계획별로 살펴보았을 때 자녀를 낳을 계획이 있거나 생각 중인 경우

‘30만원 이상 증액’이라는 응답률이 각각 48.2%와 50.8%로 가장 높았지만, 자녀를 더 낳을 계획이 없는 경우 ‘영향 없음’이라는 응답률이 57.4%로 가장 높았는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p<.001$).

<표 5-33>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구 아동 연령별 가구소득수준별 가정양육수당 금액인상에 따른 추가 자녀 출산 의사

설문: 가정양육수당 금액을 어느 정도 인상했을 때 현재 생각하시는 것보다 자녀를 더 낳을 의사가 생기겠습니까?

(단위: 명, %)

	사례수 (명)	10만원 증액	20만원 증액	30만원 이상 증액	영향 없음	계
■ 전체 ■	(500)	3.4	9.4	39.8	47.4	100.0
아동의 나이						
만 0세	(100)	2.0	10.0	48.0	40.0	100.0
만 1세	(100)	5.0	10.0	38.0	47.0	100.0
만 2세	(100)	3.0	14.0	39.0	44.0	100.0
만 3세	(100)	6.0	7.0	36.0	51.0	100.0
만 4세 이상	(100)	1.0	6.0	38.0	55.0	100.0
X2(df)	14.36(12)					
가구소득						
150만원 미만	(18)	16.7	0.0	38.9	44.4	100.0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6)	13.9	8.3	38.9	38.9	100.0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61)	1.2	13.0	47.2	38.5	100.0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33)	3.0	12.0	40.6	44.4	100.0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96)	2.1	5.2	35.4	57.3	100.0
600만원 이상	(56)	1.8	3.6	25.0	69.6	100.0
X2(df)	50.11(15)***					
자녀낳을계획						
있다	(110)	7.3	17.3	48.2	27.3	100.0
없다	(329)	1.8	5.8	35.0	57.4	100.0
생각 중	(61)	4.9	14.8	50.8	29.5	100.0
X2(df)	47.65(6)***					

* $p<.1$,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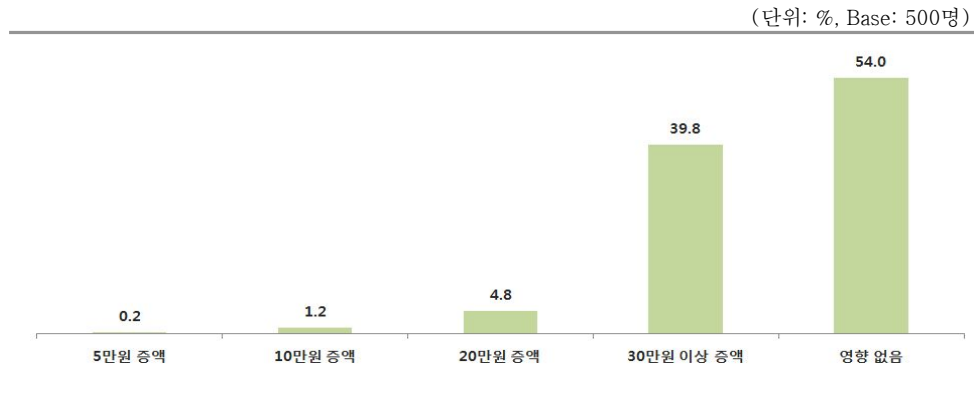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전화설문조사 자료 분석 결과임

나. 어린이집 이용 가구

어린이집 이용 가구의 과반 이상이(54.0%) 가정양육수당 금액을 인상해도 향후 본인들의 자녀 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39.8%가 ‘30

만원 이상 증액', 4.8%가 '20만원 증액', 1.2%가 '10만원 증액', 그리고 0.2%가 '5만원 증액' 시 현재 계획보다 추가적으로 자녀를 출산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5-13] 어린이집 이용 가구의 가정양육수당 금액인상 구간별 추가 자녀 출산 의사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전화설문조사 자료 분석 결과임

아동의 나이를 세분화하여 살펴보았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가정양육수당 금액을 어느 정도 인상하더라도 영향이 없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 소득별로 살펴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가정양육수당 금액을 어느 정도 인상하더라도 영향이 없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고, 소득이 높을수록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p < .1$). 앞서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구의 응답 결과와 비교했을 때, 어린이집 이용 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금액 구간에서 반응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경제 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어린이집 이용 가구의 특성에 기인한다.

한편, 자녀 낳을 계획별로 살펴보았을 때 자녀를 낳을 계획이 있거나 생각 중이라고 응답한 구간에서는 '30만원 이상 증액'의 응답률이 각각 52.3%와 6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녀를 낳을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구간에서는 '영향 없음'의 응답률 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p < .001$).

<표 5-34> 어린이집 이용 가구 아동 연령별 가구소득수준별 가정양육수당 금액인상에 따른 추가 자녀 출산 의사

설문: 가정양육수당 금액을 어느 정도 인상했을 때 현재 생각하시는 것보다 자녀를 더 낳을 의사가 생기겠습니까?

(단위: 명, %)

	사례수 (명)	5만원 증액	10만원 증액	20만원 증액	30만원 이상 증액	영향 없음	계
■ 전체 ■	(500)	0.2	1.2	4.8	39.8	54.0	100.0
아동의나이							
만 0세	(100)	0.0	1.0	4.0	46.0	49.0	100.0
만 1세	(100)	0.0	1.0	6.0	42.0	51.0	100.0
만 2세	(100)	0.0	1.0	5.0	39.0	55.0	100.0
만 3세	(100)	1.0	2.0	8.0	29.0	60.0	100.0
만 4세 이상	(100)	0.0	1.0	1.0	43.0	55.0	100.0
X2(df)	15.88(16)						
가구소득							
150만원 미만	(24)	0.0	4.2	4.2	45.8	45.8	100.0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54)	0.0	1.9	5.6	37.0	55.6	100.0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29)	0.0	0.8	10.9	44.2	44.2	100.0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18)	0.8	0.8	0.8	41.5	55.9	100.0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118)	0.0	1.7	4.2	38.1	55.9	100.0
600만원 이상	(57)	0.0	0.0	0.0	29.8	70.2	100.0
X2(df)	31.10(20)*						
자녀낳을계획							
있다	(111)	0.0	1.8	14.4	52.3	31.5	100.0
없다	(344)	0.3	1.2	1.5	33.1	64.0	100.0
생각 중	(45)	0.0	0.0	6.7	60.0	33.3	100.0
X2(df)	64.08(8)***						

*p<.1, *p<.05, **p<.01, ***p<.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전화설문조사 자료 분석 결과임

4) 총괄(전체가구)

먼저 앞서 살펴본 추가 자녀에 대한 출산계획 및 이에 대한 정책영향에 대한 인식을 자녀 양육 형태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현재 자녀를 더 출산할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구나 어린이집 이용 가구 각각 22% 수준으로 거의 유사한 비율을 보이고 있지만, 생각 중이라는 유보적 의견은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추가 자녀 출산 계획이 없거나 생각 중인 이유로는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구의 경우 영유아기 양육부담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현재 자녀로 충분하기 때문이라는 응답률이 높았고 취학 후 교육비 부담 때문이라

는 의견이 세 번째로 많았다. 반면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구의 경우 현재 자녀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영유아기 양육비용 부담과 취학 후 교육비 부담 때문이라는 의견이 각각 20.8%로 동일한 응답률을 보였다. 직장 생활로 바쁘기 때문이라는 답변은 모든 경우 네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나 특히 취업모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어린이집 이용 가구에서의 응답률이 약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정부의 보육지원 정책의 자녀 출산계획에 대한 영향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 했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는데 특히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구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 가구에 비해 저출산 대책으로서의 정부 보육지원 정책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자녀 출산 계획에 정부 정책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평가를 한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구(130가구)와 어린이집 이용 가구(170가구)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정책프로그램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자의 경우 응답자 10명 중 약 4명 가량이 현금지원(가정양육수당 33.1%와 출산장려금 11.5%)을 후자의 경우 10명 중 6명 정도가 보육서비스(보육료지원 58.2%)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정양육수당 금액인상 구간별 추가 자녀 출산 의사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면, 자녀 양육 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경우 가정양육수당 금액 인상이 자녀 출산 의사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인상 구간별로 보면 적어도 현재보다 30만원 이상 증액할 경우 자녀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각각 39.8%로 높았고 그 이하 구간에서는 10명중 1명 내외의 낮은 반응도가 확인되었다.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구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정양육수당 인상에 대한 반응이 민감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아동 연령별로 보았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아동의 나이가 어릴수록 가정양육수당 인상에 따른 추가 출산 반응이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 보았을 때, 소득이 증가할수록 가정양육수당 금액이 인상되더라도 현재 자녀 출산 계획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고, 30만원 이상 증액 구간에 대한 응답률은 대체로 하락하는 추이를 보였는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p<.001$). 어머니의 취업 여부와 형태에 따라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는데, 전체적으로 가정양육수당 금액이 자녀 출산 계획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응답은 아동의 어머니가 미취업일 때 45.2%로 가

장 낮았고 다음으로 임시근로자(46.2%)일 때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러나 이상의 결과는 앞으로 자녀를 더 낳을 계획 있다는 가구의 응답까지 포함하고 있어 실제 가정양육수당 금액 인상을 통한 추가 자녀 출산 유인 영향을 다소 과다하게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이에 현 시점에서 추가 자녀 출산 계획이 없거나 생각중이라고 응답한 779가구를 기준으로 가정양육수당 금액인상에 따른 추가 자녀 출산 의사를 살펴보자. 아래의 표는 아동 연령과 가구소득 구간 및 어머니 취업여부와 형태에 따른 인상 금액 구간별 응답 결과를 보여준다.

앞서 출산계획이 있는 가구를 포함했을 때의 결과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아동 연령별로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으며 대체적으로 주어진 금액에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가구소득별로 보았을 때 400만원 이하의 경우 상대적으로 인상금액에 대한 반응이 민감한 것으로 확인되며 대체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영향 없음’이라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600만원 이상에서는 응답률이 약 74%에 이르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한편, 어머니의 취업 여부와 형태에 따라서도 차이가 확인되는데, 전체적으로 가정양육수당 인상이 자녀 출산 계획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응답은 아동의 어머니가 미취업인 경우 50.3%로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임시근로자(53.9%)로 다른 취업 형태에 비해 가정양육수당 금액 인상에 대한 반응은 이들 두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자영업자일 경우 ‘영향 없음’이라는 응답이 74.1%로 가장 높아 가정양육수당 금액 인상에 대한 반응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5> 가정양육수당 금액인상 구간별 추가 자녀 출산 의사(현재 출산계획이 있는 가구 제외, 전체가구)

설문: 가정양육수당 금액을 어느 정도 인상했을 때 현재 생각하시는 것보다 자녀를 더 낳을 의사가 생기겠습니까?

(단위 :명, %)

	사례수 (명)	5만원 증액	10만원 증액	20만원 증액	30만원 이상 증액	영향 없음	계
■ 전체 ■	(779)	0.1	1.7	4.6	36.8	56.7	100.0
아동의나이							
만 0세	(138)	(0) 0.0	(3) 2.2	(5) 3.6	(54) 39.1	(76) 55.1	100.0
만 1세	(150)	(0) 0.0	(3) 2.0	(8) 5.3	(59) 39.3	(80) 53.3	100.0
만 2세	(149)	(0) 0.0	(1) 0.7	(11) 7.4	(57) 38.3	(80) 53.7	100.0
만 3세	(173)	(1) 0.6	(4) 2.3	(8) 4.6	(52) 30.1	(108) 62.4	100.0

	사례수 (명)	5만원 증액	10만원 증액	20만원 증액	30만원 이상 증액	영향 없음	계
만 4세 이상	(163)	0.6 (0) 0.0	2.3 (2) 1.2	4.6 (4) 2.4	30.1 (65) 38.5	62.4 (98) 58.0	100.0 100.0
X2(df)	14.61(16)						
가구소득							
150만원 미만	(33)	0.0	3.0	3.0	39.4	54.6	100.0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69)	0.0	4.4	2.9	37.7	55.1	100.0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214)	0.0	0.9	8.4	41.1	49.5	100.0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98)	0.5	2.0	4.6	38.9	54.0	100.0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173)	0.0	1.2	2.9	35.3	60.7	100.0
600만원 이상	(92)	0.0	1.1	1.1	23.9	73.9	100.0
X2(df)	31.64(20)***						
어머니 취업상태 및 유형							
미취업	(455)	0.2	1.8	7.0	40.7	50.3	100.0
상용근로자	(221)	0.0	1.4	1.8	30.3	66.5	100.0
임시근로자	(39)	0.0	5.1	0.0	41.0	53.9	100.0
일용근로자	(15)	0.0	0.0	0.0	33.3	66.7	100.0
자영업자	(49)	0.0	0.0	0.0	28.6	71.4	100.0
X2(df)	33.69(16)***						

*p<.1, *p<.05, **p<.01, ***p<.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전화설문조사 자료 분석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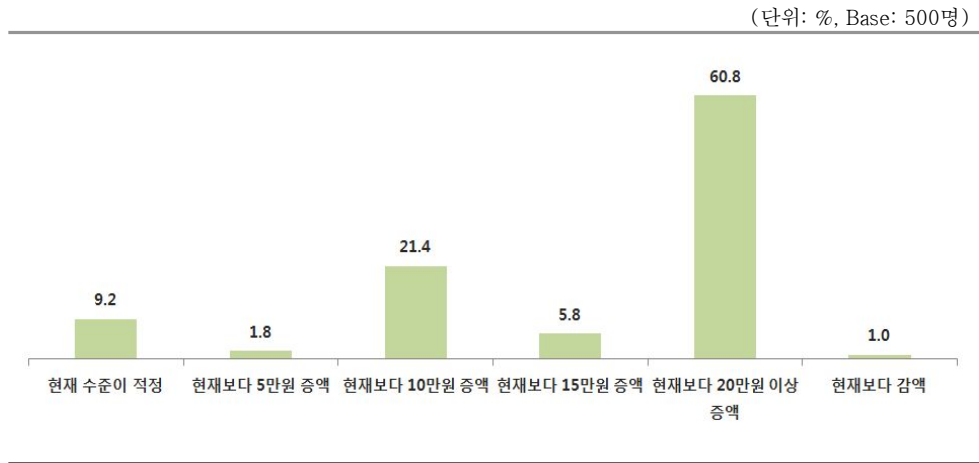
6. 적정 가정양육수당에 대한 의견

마지막으로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적정 가정양육수당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자녀 양육 형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구

현재 가정양육수당을 수급중인 500가구의 60.8%는 현재보다 20만원 이상 가정양육수당이 인상되어야 적정하다는 응답을 하였다. 그 다음으로 ‘현재보다 10만원 증액(21.4%)’, ‘현재 수준이 적정(9.2%)’, ‘현재보다 15만원 증액(5.8%)’, ‘현재보다 5만원 증액(1.8%)’, ‘현재보다 감액(1.0%)’이라는 의견 순이었다.

[그림 5-14]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구가 기대하는 적정 가정양육수당 수준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전화설문조사 자료 분석 결과임

아동의 나이를 세분화하여 살펴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현재보다 20만원 이상 증액’이라는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만 4세 이상의 경우가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p < .01$). 가구소득별로 살펴보았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현재보다 20만원 이상 증액’이라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고, ‘현재 수준이 적정’이라는 응답률은 소득이 600만원 이상일 경우 17.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구 소득 유형에 따라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맞벌이와 아이 아버지만 일하는 외벌이, 아이 어머니만 일하는 외벌이의 경우 ‘현재보다 20만원 이상 증액’이라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표 5-36> 아동 연령·가구특성별 적정 가정양육수당 수준(가정양육수당 수급 가구)

설문 : 적정 가정양육수당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명, %)

	사례수 (명)	현재 수준이 적정	현재보다 5만원 증액	현재보다 10만원 증액	현재보다 15만원 증액	현재보다 20만원 이상 증액	현재보다 감액	계
■ 전체 ■	(500)	9.2	1.8	21.4	5.8	60.8	1.0	100.0
아동의 나이								
만 0세	(100)	7.0	1.0	16.0	6.0	69.0	1.0	100.0
만 1세	(100)	11.0	5.0	22.0	10.0	51.0	1.0	100.0
만 2세	(100)	4.0	1.0	29.0	4.0	62.0	0.0	100.0

	사례수 (명)	현재 수준이 적정	현재보다 5만원 증액	현재보다 10만원 증액	현재보다 15만원 증액	현재보다 20만원 이상 증액	현재보다 감액	계
만 3세	(100)	15.0	2.0	29.0	3.0	49.0	2.0	100.0
만 4세 이상	(100)	9.0	0.0	11.0	6.0	73.0	1.0	100.0
X2(df)	41.95(20)**							
가구소득								
150만원 미만	(18)	11.1	0.0	27.8	5.6	55.6	0.0	100.0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6)	11.1	5.6	22.2	13.9	47.2	0.0	100.0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61)	6.8	2.5	20.5	3.7	66.5	0.0	100.0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33)	9.0	0.8	24.8	6.0	58.6	0.8	100.0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96)	7.3	1.0	20.8	5.2	63.5	2.1	100.0
600만원 이상	(56)	17.9	1.8	14.3	7.1	55.4	3.6	100.0
X2(df)	28.38(25)							
가구 소득 유형								
맞벌이	(138)	11.6	2.2	17.4	7.2	60.9	0.7	100.0
아이 아버지만 일하는 외벌이	(352)	8.2	1.7	22.7	5.4	60.8	1.1	100.0
아이 어머니만 일을 하는 외벌이	(7)	0.0	0.0	14.3	0.0	85.7	0.0	100.0
부모 모두 일을 하지 않음	(2)	50.0	0.0	50.0	0.0	0.0	0.0	100.0
무응답	(1)	0.0	0.0	100.0	0.0	0.0	0.0	100.0
X2(df)	15.0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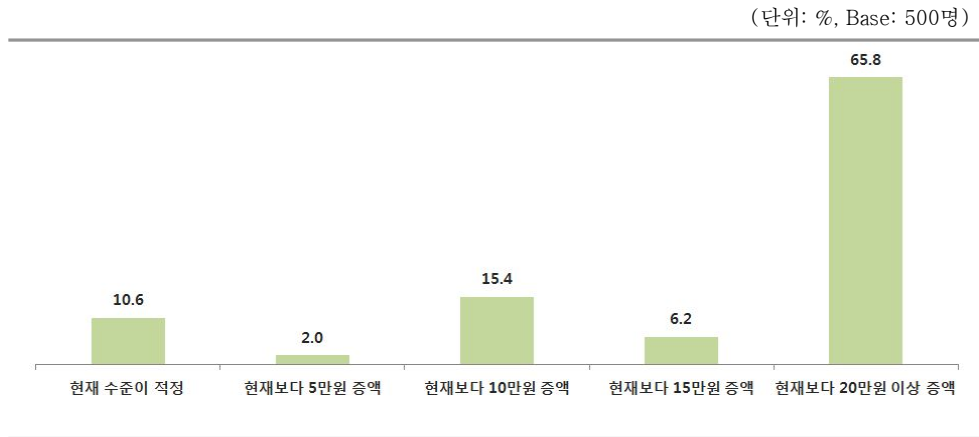
*p<.1, *p<.05, **p<.01, ***p<.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전화설문조사 자료 분석 결과임

나. 어린이집 이용 가구

어린이집 이용 가구의 경우에도 현재보다 20만원 이상 가정양육수당이 인상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65.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현재보다 10만원 증액(15.4%)’, ‘현재 수준이 적정(10.6%)’, ‘현재보다 15만원 증액(6.2%)’, ‘현재보다 5만원 증액(2.0%)’의 순을 보였다.

[그림 5-15] 어린이집 이용 가구가 기대하는 걱정 가정양육수당 수준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전화설문조사 자료 분석 결과임

아동의 나이를 세분화하여 살펴보았을 때에도 ‘현재보다 20만원 이상 증액’이라는 응답률이 전체적으로 가장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구에서의 경우와 달리 만 1세~2세에서 그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구 소득별로 살펴보았을 때 소득이 높을수록 ‘현재보다 20만원 이상 증액’이라는 응답률이 낮게 나타났고 ‘현재 수준이 적정’하다는 응답률은 높게 나타났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p < .05$). 가구 소득 유형별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걱정 가정양육수당이 ‘현재보다 20만원 이상 증액’이라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고, 특히 맞벌이의 경우 현재 수준이 적정하다는 반응이 다른 구간에 비해 높았다.

<표 5-37> 아동 연령·가구특성별 걱정 가정양육수당 수준(어린이집 이용 가구)

설문: 걱정 가정양육수당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명, %)

	사례수 (명)	현재 수준이 적정	현재보다 5만원 증액	현재보다 10만원 증액	현재보다 15만원 증액	현재보다 20만원 이상 증액	계
■ 전체 ■	(500)	10.6	2.0	15.4	6.2	65.8	100.0
아동의나이							
만 0세	(100)	10.0	2.0	17.0	4.0	67.0	100.0
만 1세	(100)	8.0	1.0	15.0	5.0	71.0	100.0

	사례수 (명)	현재 수준이 적정	현재보다 5만원 증액	현재보다 10만원 증액	현재보다 15만원 증액	현재보다 20만원 이상 증액	계
만 2세	(100)	10.0	0.0	15.0	5.0	70.0	100.0
만 3세	(100)	10.0	5.0	18.0	9.0	58.0	100.0
만 4세 이상	(100)	15.0	2.0	12.0	8.0	63.0	100.0
X2(df)	15.72(16)						
가구소득							
150만원 미만	(24)	4.2	0.0	8.3	0.0	87.5	100.0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54)	9.3	1.9	16.7	5.6	66.7	100.0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29)	7.0	3.9	14.0	8.5	66.7	100.0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18)	5.9	1.7	17.8	9.3	65.3	100.0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118)	14.4	1.7	14.4	4.2	65.3	100.0
600만원 이상	(57)	24.6	0.0	17.5	1.8	56.1	100.0
X2(df)	32.46(20)*						
가구 소득 유형							
맞벌이	(259)	14.3	1.2	13.1	4.6	66.8	100.0
아이 아버지만 일하는 외벌이	(224)	7.1	3.1	19.2	8.5	62.1	100.0
아이 어머니만 일을 하는 외벌이	(12)	0.0	0.0	0.0	0.0	100.0	100.0
부모 모두 일을 하지 않음	(4)	0.0	0.0	0.0	0.0	100.0	100.0
무응답	(1)	0.0	0.0	0.0	0.0	100.0	100.0
X2(df)	23.41(16)						

*p<.1, *p<.05, **p<.01, ***p<.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전화설문조사 자료 분석 결과임

다. 총괄(전체가구)

전체 조사가구를 기준으로 적정 가정양육수당 수준에 대한 설문 응답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3.3%가 현재보다 20만원 이상 증액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현재보다 10만원 증액이라는 응답이 18.4%로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현재가 적정하다는 의견도 9.9%로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15만원 증액(6%)과 5만원 증액(1.9%) 그리고 현재보다 감액(0.5%)의 순서로 나타났다.

아동 연령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20만 원 이상 이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지만 아이가 취학연령에 가

까울수록 현재가 적정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가구 소득 구간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현재보다 20만원 이상 증액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이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다. 한편, 현재가 적정하다고 답한 경우와 현재보다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은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많았는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p < 0.05$).

가구 소득 유형별로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맞벌이 가구와 아이 아버지만 일하는 가구의 경우 다른 가구 소득 유형에 비해 현재 수준에 만족하거나 요구하는 인상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편, 가정양육수당 지급 가구 중 현재 지원 받고 있는 가정양육수당 금액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는 경우에도 현재보다 20만원 이상 증액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8.2%, 10만원 이상 증액해야 한다는 응답은 26.4%에 이르며 현재 수준이 적정하다고 생각하거나 현재보다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은 27.1%에 그치고 있다. 한편, 현재의 금액 수준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부모들의 경우 절대 다수인 69.9%가 20만원 이상 증액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p < .001$).

<표 5-38> 아동 연령·가구특성별 적정 가정양육수당 수준 (전체가구)

설문 : 적정 가정양육수당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명, %)

	사례수 (명)	현재 수준이 적정	현재보다 5만원 증액	현재보다 10만원 증액	현재보다 15만원 증액	현재보다 20만원 이상 증액	현재보다 감액	계
■ 전체 ■	(1,000)	9.9	1.9	18.4	6.0	63.3	0.5	100.0
아동의 나이								
만 0세	(200)	8.5	1.5	16.5	5.0	68.0	0.5	100.0
만 1세	(200)	9.5	3.0	18.5	7.5	61.0	0.5	100.0
만 2세	(200)	7.0	0.5	22.0	4.5	66.0	0.0	100.0
만 3세	(200)	12.5	3.5	23.5	6.0	53.5	1.0	100.0
만 4세 이상	(200)	12.0	1.0	11.5	7.0	68.0	0.5	100.0
X2(df)		30.23(20)						
가구소득								
150만원 미만	(42)	7.1	0.0	16.7	2.4	73.8	0.0	100.0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90)	10.0	3.3	18.9	8.9	58.9	0.0	100.0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290)	6.9	3.1	17.6	5.9	66.6	0.0	100.0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251)	7.6	1.2	21.5	7.6	61.8	0.4	100.0
400만원 이상	(214)	11.2	1.4	17.3	4.7	64.5	0.9	100.0

	사례수 (명)	현재 수준이 적정	현재보다 5만원 증액	현재보다 10만원 증액	현재보다 15만원 증액	현재보다 20만원 이상 증액	현재보다 감액	계
~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	(113)	21.2	0.9	15.9	4.4	55.8	1.8	100.0
X2(df)	40.52(25)*							
가구 소득 유형								
맞벌이	(397)	13.4	1.5	14.6	5.5	64.7	0.3	100.0
아이 아버지만 일하는 외벌이	(576)	7.8	2.3	21.4	6.6	61.3	0.7	100.0
아이 어머니만 일을 하는 외벌이	(19)	0.0	0.0	5.3	0.0	94.7	0.0	100.0
부모 모두 일을 하지 않음	(6)	16.7	0.0	16.7	0.0	66.7	0.0	100.0
무응답	(2)	0.0	0.0	50.0	0.0	50.0	0.0	100.0
X2(df)	26.28(20)							
어머니 취업여부 및 형태								
미취업	(584)	7.9	2.2	21.4	6.5	61.3	0.7	100.0
상용근로자	(288)	12.2	1.7	15.6	4.2	66.0	0.4	100.0
임시근로자	(52)	17.3	1.9	13.5	7.7	59.6	0.0	100.0
일용근로자	(16)	12.5	0.0	6.3	0.0	81.3	0.0	100.0
자영업자	(60)	11.7	0.0	10.0	10.0	68.3	0.0	100.0
X2(df)	24.93(20)							
가정양육수당 금액 만족여부	(500)							
현재 금액수준 만족	(144)	24.3	3.5	26.4	4.9	38.2	2.8	100.0
현재 금액수준 불만족	(356)	3.1	1.1	19.4	6.2	69.9	0.3	100.0
X2(df)	79.35(5)***							

*p<.1, *p<.05, **p<.01, ***p<.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전화설문조사 자료 분석 결과임

제 6 장

적정 가정양육수당 지원 수준 추정

- 제1절 물량방식 접근에 따른 양육수당 결정방식의 한계
- 제2절 영유아 양육비지출과 정부지원 수준
- 제3절 정책기능별 적정 가정양육비용 지원 수준
- 제4절 제도개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시뮬레이션
- 제5절 요약 및 정책제언

6

적정 가정양육수당 지원 수준 < 추정 <

제1절 물량방식 접근에 따른 양육수당 결정방식의 한계

정부 보육정책, 구체적으로 가정양육수당 지원 제도는 그 사업 목적으로 영유아 양육가구의 자녀 양육부담 완화를 명시하고 있다. 가정양육수당의 궁극적 목적이 영아의 가정 내 양육 지원을 통한 건강한 아동발달 도모라는 측면에서 보면, 동 사업목표는 직접적인 효과만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지만 실제 정부 정책의 궁극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실제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수준이어야 함은 당연하다. 따라서 적정 가정양육수당 지원 수준의 결정을 위해 개별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정해볼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여겨지며, 실제 그러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적정 양육수당 수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근거로 삼고자 하는 것은 일견 설득력이 있는 접근방식이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양육에 필요한 비용 추정에 있어 통상적인 접근은 소비바스켓 계측을 통한 추정이나 소비항목에 대한 지출금액 조사를 활용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일반적 접근은 소비 항목의 설정 범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한계가 있다. 특히 현재 소비에 대해서만 비용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급여의 성격을 단순한 현재 소비에 대한 보전으로 국한하는 것으로 논쟁의 여지가 크다 하겠다.

더욱이 양육비용을 물량방식에 근거하여 추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양한 이론적, 현실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필요 양육비용 추정에 앞서 통상적으로 활용되는 물량방식 접근에 따른 양육수당 결정의 기본 논리구조와, 그러한 접근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를 검토하고 그 한계를 적시하기로 한다.

양육수당의 결정을 물량 방식에 근거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접근을 의미할 것이다. 우선 가구 내에 영유아 1명이 존재할 경우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소비금액을 추정한다. 이때 소비금액의 추정을 위해서는 세 가지 요인, 즉 해당 영유아가 소비해야 할

소비재(예컨대 분유, 기저귀 등)의 품목, 일정한 기간(예, 1개월) 영유아 1명이 소비하는 해당 소비재의 수량, 그리고 각 소비재 단위당 가격 등이다. 이 세 가지를 곱할 경우 일정 기간 당 영유아가 소비하는 금액이 추산되고, 이것에 근거하여 양육수당의 수준을 결정하려는 것이 마켓바스켓 접근방법이다.

전물량 방식이란 마켓바스켓 접근 방식 가운데 하나이다. 즉 소비 품목을 고려할 때 영유아의 소비와 관련된 일체의 소비재를 포함시킬 것인가 아니면 일부 소비품목만을 고려할 것인가에 따라 전물량 방식인지 반물량 방식인지가 구분된다. 그런데 영유아가 소비하는 품목에는 영유아가 배타적으로 소비하는 품목도 있지만 다른 가구원과 공동으로 소비하는 품목도 있을 수 있다. 후자의 대표적인 예로 주거시설을 들 수 있다. 만일 전물량 방식을 따른다면 영유아가 소비하는 분유, 옷, 유모차 등의 품목은 물론 주거, 광열, 교통 및 통신 등 가구 단위의 생활과 관련된 각종 품목까지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전물량 방식 접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첫째, 전물량 방식의 접근이 양육수당의 근본적 취지와 일치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만일 양육수당이 영유아기의 아동을 양육하는 데 소요되는 직간접 비용을 보전하는 목적의 지원제도라면 전물량 방식 자체는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해서도 양육수당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제기될 수 있다. 현행 보육료 지원 제도 하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보육시설의 이용과 관련된 비용일 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시간 동안의 소비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육수당을 소비보전 개념으로 접근할 경우 지원 대상 영유아의 수와 지원 금액은 현재보다 확대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만일 양육수당이 소비보전의 의미가 아니라 소득지원의 의미로 이해된다면 양육수당의 기준을 정할 때 소비바스켓을, 그것도 전물량방식으로 확정된 소비바스켓을 근거로 하는 것은 논리적인 필연성이 없다.

둘째, 양육수당이 소비보전의 취지를 따른다면 필연적으로 모든 소득계층에 대해 비용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설득력을 얻게 된다. 영유아의 추가적 소비분을 감당할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 가구에 대해서도 정부가 비용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커질 수 있다.

셋째, 만일 전물량 방식에 따라 양육수당의 적정 금액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소비실태조사(영유아를 둔 가구에 대한) 조

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는 주기적으로 반복되어야 한다. 전물량 방식의 취지상 경제사회적 여건을 반영한 소비바스켓 조정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사가 반복적으로 실시되지 않은 한 타 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구의 소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편 타 조사 결과 자료를 이용한다고 하였을 때, 가장 적절한 자료는 기존의 최저생계비 계측 조사 자료일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이루어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을 계기로 기초보장급여의 소득기준선 결정 방식이 최저생계비를 이용한 절대적 방식에서 중위소득을 이용한 상대적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그 결과 이전과 같은 형식의 최저생계비 계측조사가 이뤄지기 어렵게 되었고, 따라서 양육비용을 추정할 조사 자료의 가용성이 더욱 제약되게 되었다. 실질적으로 전물량 방식의 소비바스켓 구성을 전제로 한 다른 조사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 전물량 방식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근거로 소비실태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양육수당의 적정 수준을 어느 정도로 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정책적, 규범적 판단이 개입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영유아의 최저생활(그러한 규정이 가능하다면)을 보장하는 선이 되어야 할 것인가, 영유아의 건강한 양육이 가능한 수준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각 수준은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등에 대해 수많은 논의 과정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근의 복지정책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감안하여 절대적 기준선보다 상대적 기준선을 채택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2015년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상대 기준선 방식의 개별급여로 전환되어 시행되기 시작했고, 여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복지제도 역시 이러한 변화에 상응하여 대상자 선정기준을 변화시켜가고 있다.

이상의 문제점과 현실적 경향을 고려할 때, 양육수당의 수준을 결정할 때 마켓바스켓 방식을 이용하는 것, 더구나 전물량 방식에 근거하여 마켓바스켓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한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양육비용을 추정해보고자 하는 이유는 가정양육수당 지원단가의 적정성을 평가해보자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평균적인 가구가 영유아 자녀를 양육할 때 필요로 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했을 때 소요된 것으로 짐작되는 현재 소비지출 규모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가늠해 보는 것에 있다. 이점에 유의하여 다음의 양육비 추정결과를 살펴보자.

제2절 영유아 양육비지출과 정부지원 수준

객관적 추계방식으로서 전물량 방식 이외에 가계소비지출조사 자료에 기반 하여 분석하는 방식도 있다. 이때, 자녀 양육비 지출에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1인당 비용 접근 방식과 한계비용 접근으로 구분된다. 가구 공통 소비항목에 대한 직접적 측정은 불가능하며, 가구원수 증가에 따른 규모의 경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가장 큰 쟁점이다. 1인당 비용 접근의 경우 가구 공통 소비에 대해서는 모든 가구원이 동일한 규모로 지출한다는 가정 하에 비용을 추정하는 것이며, 한계비용 접근법의 경우 부모의 효용수준을 측정하는 방법론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비용을 추정하게 된다. 그런데 한계비용 접근방식의 경우 과거 30여 년 전에 사용하던 방식으로 효용수준의 측정에 있어 효용함수의 정의, 소비항목의 구성 등에 대한 임의적 가정에 크게 의존하는 등 방법론적 한계로 인하여 최근에는 1인당 비용 접근이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미국 USDA가 그 대표적인 예로서 1인당 비용 접근법에 기초하여 17세 이하 자녀에 대한 양육비용을 매년 산출하고 있다. 그리고 그 추정결과는 한부모 가정 자녀 등에 대한 주정부 지원금 산정이나 이혼 시 자녀 양육비 청구 시 기초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에 이와 유사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2012)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및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인데, 현재 우리나라 가정법원은 이 연구결과에 기초해서 표준양육비를 산출하여 공개하고 있다. 동 연구는 아동 연령별 지출을 조사하여 비용을 추정하였는데, 이때 소비지출의 구분이 세분화 되지 않은 대분류 항목에 기초한다는 점과 더불어 매 3년 주기로 조사됨에 따라 현실적인 양육비용 계산에 한계가 있다 할 것이다.

그 외에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육아에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160개) 항목별 가격동향 조사를 매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 연령이나 가구 소득 등 특성에 따른 각 항목별 소비량에 대한 정보가 없어 영유아 양육가구의 실제 관련 지출수준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용에 한계가 있다.

한편, 2014년도 육아물가지수연구(II)의 <부록 표>에 소득계층(상,중,하)별 영유아 가구 소비지출 및 소득현황이 보고된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소득대비 육아관련 소비 지출 비중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일 정도로 높게 나타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표 6-1>).

이에 아동 연령 및 가구 특성별 영유아 양육 지출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나라 대표 미시조사 원자료(가계동향조사 2014, 한국노동패널조사 2014) 분석에 기초하여 현재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는데 소요되는 필수 비용을 추정해보기로 한다.

<표 6-1> 소득계층별(상중하) 영유아 가구 소비지출 및 소득현황(육아정책연구소 2014 KICCE조사결과)

(단위: 원/월)

	하층	중층	상층
월평균 소비지출	1,378,378	2,041,451	2,920,000
월평균 지출총액	1,962,581	2,991,029	4,582,308
월평균 소득총액 (a)	1,955,806	3,670,422	7,559,487
월평균 육아품목지출총액(육아품목=160) (b)	906,065	1,400,356	1,966,892
월평균 육아대표품목 지출총액 (c)	725,173	668,425	1,495,443
소득대비 육아품목총지출 비중 (b/a)	46.3	38.2	26.0
소득대비 대표육아품목지출 비중(c/a)	37.1	18.2	19.8

자료: 최윤경·박진아·최종화(2014). KICCE 육아물가지수 연구(II), 육아정책연구소, p.119 <부표 II-2>를 재구성

1. 2014년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분석

가정양육수당의 수급 대상 가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아동(만 0~5세)이 있는 가구의 구성, 소득 및 지출 실태에 대해 분석해보았다. 이를 위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2014)> 원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자료는 농어가를 제외한 전국가구(1인 가구 포함)에 대해 가구주 및 가구 구성원의 연령, 성별, 학력, 가구주와의 관계, 취업여부 등과 관련된 인구학적, 경제적 특성정보는 물론 가구 소득과 소비실태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미시조사자료이다. 다만 가구를 조사기 본 단위로 하며 가정양육수당의 수급여부나 수급액과 관련된 구체적 정보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가정양육수당 수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개별 가구원의 연령, 학력 등 특성 및 가구주와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기준으로 미취학자녀 양육가구 여부 구분이 가능하며, 따라서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표준적인 영유아 양육가구의 소득과 지출구성에 대한 세부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하에서는 가정양육수당 및 보육료 지원 대상 연령층의 아동이 있는 가구의 일반적 소득 및 지출실태와 관련된 분석결과를 보겠다. 아동이 있는 가구의 분포는 2014년을

기준으로 농어가를 제외한 전국가구 가운데 22.3%가 1인 가구이다. 가구원수 2인 이상인 8,056가구 중 만 0~5세의 아동이 있는 가구 비율은 18.7%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가구원의 특성정보와 가구주와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기준으로 조사단위를 개인화한 후 자녀가 있는 가구 중 최연소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가구를 구분하여 미취학 자녀수를 살펴보았다. 최연소 아동 연령 기준 0~5세 자녀 수 분포를 보면 <표 6-2>와 같다.

<표 6-2> 최연소 아동 연령별 영유아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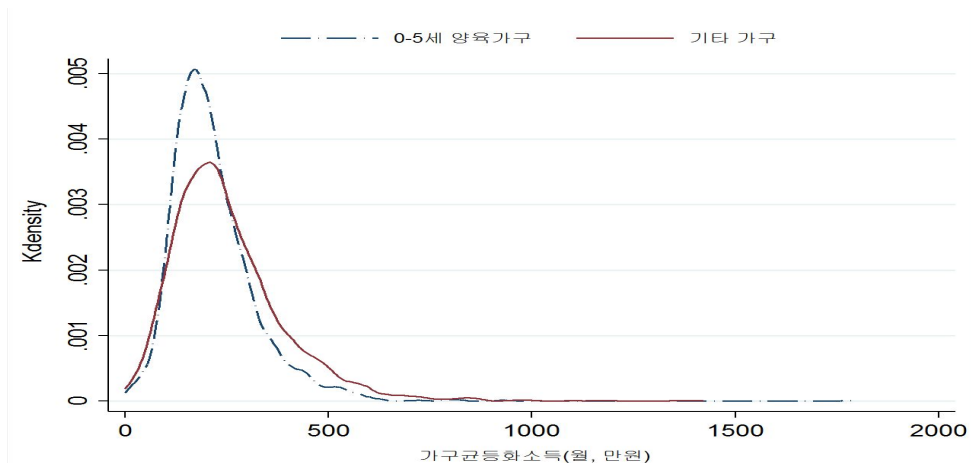
(단위: %)

최연소 아동 연령	만 0~5세 아동 수				
	1	2	3	4	계
만 0세	50.4	44.0	5.3	0.4	100.0
만 1세	55.8	40.2	4.1	0.0	100.0
만 2세	60.0	38.2	1.9	0.0	100.0
만 3세	75.2	24.8	0.0	0.0	100.0
만 4세 이상	91.8	8.2	0.0	0.0	100.0
계	67.8	29.9	2.2	0.1	100.0

자료: 2014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에 기초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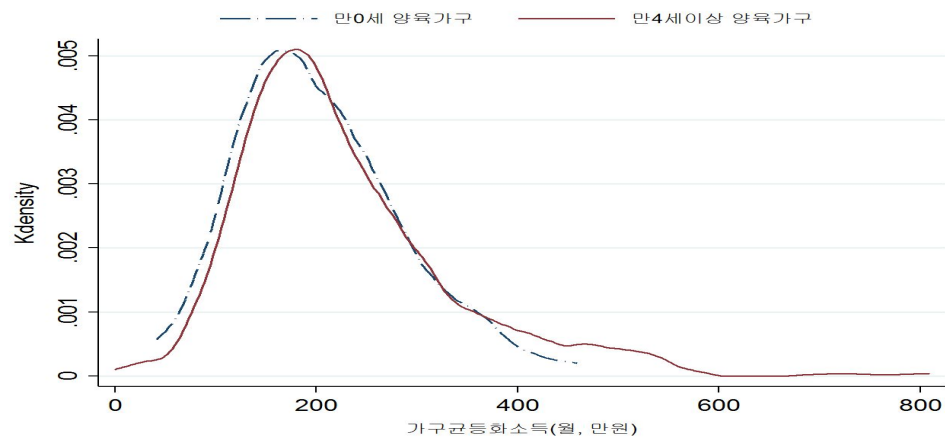
영유아 양육가구의 소득분포를 보면, 만 0~5세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중간 소득층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만 0~5세의 아동이 있는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1, 2 분위의 비중이 작고 또한 9, 10분위의 비중도 작으며, 이러한 현상은 0~2세의 아동을 둔 가구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된다([그림 6-1]). [그림 6-2]는 자녀연령이 어릴수록 가구소득수준이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6-1] 만 0~5세 아동 양육가구와 비양육가구의 소득분포



자료: 2014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에 기초하여 저자 직접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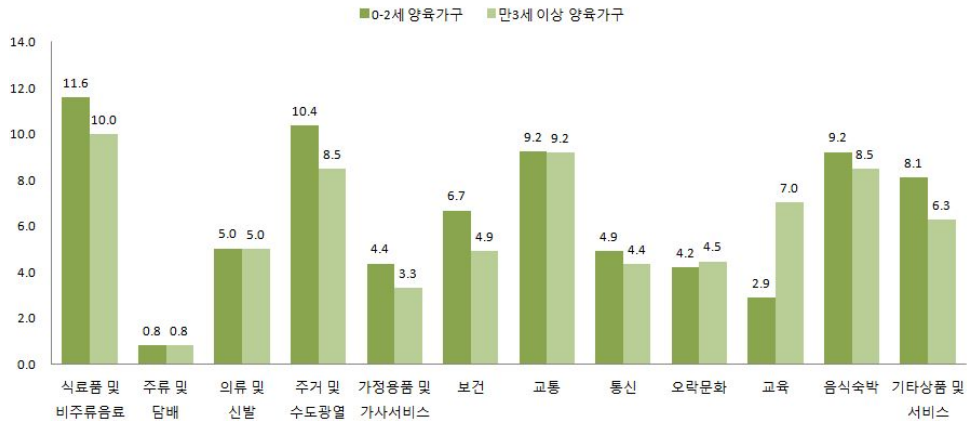
[그림 6-2] 만 0세 아동 양육가구와 만 4세 이상 아동 양육가구의 소득분포



자료: 2014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에 기초하여 작성

한편 만 0~5세 아동 양육가구의 지출구조를 보면, 영아(만 0~2세)가 있는 가구와 유아(만 3세 이상) 양육가구 사이에 지출품목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데, 0~2세의 아동이 있는 가구는 보건의료비,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비, 기타서비스비 등의 가처분소득 대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림 6-3] 가구 경상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중(%)



주: <가계동향조사>자료에서 보육료는 기타서비스 항목의 하나로 분류되며, 가사사용인(가사도우미)급료는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비의 하나로 분류됨

자료: 2014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에 기초하여 작성

영유아 아동 보육·양육관련 지출항목에서도 대상 아동 유무 및 아동 연령별 차이가 확인된다. 전체 가구 가운데 아동의류 및 운동화 소비지출이 있는 가구는 96.6%, 장난감 소비지출은 약 90%, 유치원, 보육료 지출이 있는 가구는 각각 22.2%, 37.7%, 그리고 비성인 대상 학원 및 보습교육비 지출(사교육비지출)이 있는 가구는 약 69%에 이른다.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하여 영유아 자녀 1인당 소비지출 비용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우선 1인당 비용 접근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 가구 경상소비지출 항목을 <표 6-3>과 같이 가구원 공통 소비와 영유아 자녀 소비로 구분하였다. 이를 각각 가구원 수와 미취학자녀 수로 나누어 1인당 비용으로 환산한 후 합산한 값을 영유아 자녀 1인당 소비로 계산하였다.¹⁴⁾ 그 결과는 <표 6-4>와 같다.

14) 예컨대, 성인 3명과 만 1세아 1명으로 구성된 4인 가구의 월 식료품지출이 40만원이고, 분유와 이유식 지출 각 1만원과 2만원이라면, 영유아자녀 1인당 소비지출은 13만원으로 계산됨(40/4+1/1+2/1).

<표 6-3> 가계동향조사 경상소비 항목 분류

가구공동	영유아 자녀
식료품비(분유, 이유식 제외), 주거광열비,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보건의료, 교통, 통신비, 오락문화(장난감 제외), 음식숙박(주점, 커피숍 제외) 기타(이미용관련) *개인소비가 명백한 교복을 포함한 의류, 취학자녀 소비인 교육비, 성인가구원 소비재인 주류 및 담배 등은 제외함	분유, 이유식, 아동용의의, 아동용 내의, 아동용 운동화, 장난감, 보육료

자료: 저자 작성

<표 6-4> 아동1인당 월평균 양육관련 소비지출

(단위: 원/월, %)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세 이상
가구원 공동 소비	식료품	81,714	95,827	94,916	97,170	93,913
	주거광열비	74,838	88,612	84,975	79,713	74,671
	가정용품및가사서비스	43,991	48,283	35,477	55,924	33,561
	보건	66,505	52,439	48,549	42,689	37,339
	교통	87,832	88,132	91,194	105,231	96,388
	통신	41,812	39,460	40,788	41,174	40,066
	오락문화(장난감제외)	34,858	42,796	40,851	48,038	46,694
	음식숙박 (주점커피숍제외)	73,869	82,385	74,778	81,540	81,041
영유아 자녀	기타(이미용관련)	18,640	21,489	22,744	22,005	20,365
	소계	524,059	559,423	534,272	573,482	524,040
	분유	26,652	16,268	2,312	214	208
	이유식	2,520	2,076	926	-	-
	아동용외투	24,258	31,716	37,704	38,343	45,048
	아동내의	5,139	4,958	4,736	4,474	4,900
	아동운동화	2,678	5,628	6,763	7,962	8,993
	장난감	13,585	14,847	17,779	22,384	19,315
	보육료 ¹⁵⁾	9,083	14,466	22,700	29,648	26,661
	소계	83,915	89,960	92,920	103,024	105,125
	(보육료 제외 시)	(74,832)	(75,494)	(70,220)	(73,376)	(78,464)
	계(보육료포함)	607,974	649,383	627,192	676,506	629,164

자료: 2014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에 기초하여 작성

그러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는 기저귀 소비지출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지 않고 있다. 기저귀가 영유아 자녀 양육에 필수적인 소비상품인가에 대한 논의와 별개로 연간 기저귀 판매량 등에 비추어 동 재화의 소비 보편성만을 고려하기로 한다. 이 경우

15) 소비지출 대항목 12. 기타 상품 및 서비스> 지출세목 '사회복지'는 산후조리원, 보육료, 기타사회복지 지출로 구성된다. 여기서 보육료는 보육시설이용료로 특별활동비나 사설서비스 이용료등이 포함되어 있다.

<표 6-4>의 결과는 평균적인 기저귀 구매 비용만큼 과소추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보정이 필요하다.

기저귀 구입 비용과 관련한 기존 연구들을 보면, 최윤경·박진아·최종화(육아정책연구소, 2014)는 가구소득 계층별 육아품목의 가구평균지출 조사를 통해 영유아 자녀를 키우는 가구의 월평균 기저귀 지출비용이 52,794원~70,091원 수준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이삼식 외(2013)는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을 위한 연구에서 0~12개월 영아에 대한 월평균 기저귀 지출비용을 추정하였는데 그 결과는 아래의 <표 6-5>와 같다.

<표 6-5> 월평균 종이기저귀 이용비용 추정결과

구분	종이기저귀			천기저귀
	공급관점(시장가격)		수요관점(0~12개월 영아 양육가정 지출)	
	온라인쇼핑몰 최저가 평균	다양한 판매처별 가격 평균	실태조사결과(3개월 이동평균 적용)	
월평균 이용비용	64,000원	76,000원	86,000원	25,000원

자료: 이삼식 외(2013) 표 4-22p.101재인용

정부는 이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2015년부터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4인 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169만원(중위소득의 40% 이하) 이하인 만 1세 미만 영아 양육가구로서 생후 60일 이내 신청 시 최대 지원 한도 12개월, 생후 60일 이후 신청 시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 동안 월 단위로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기본 유형 기저귀 지원 월 3만 2천원, 산모 사망 또는 질환에 따른 모유수유 불가 아동에 대한 조제분유 병행 지원 월 7만 5천원(별도로 구분하여 지원할 경우 조제분유 지원 월 4만 3천원)으로 구분하여 지급된다. 이때 정부 기저귀 지원 단가는 15일 사용량에 기초하여 산정된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지원 단가(15일)*2=64,000원을 월평균 기저귀 지출비용으로 외삽하여 사용한다.

한편 본래 가정양육수당 제도의 도입 취지가 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대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아동 연령별 사보육 비용까지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상기 표에서 확인되는 가계동향조사 상의 보육료의 경우 양육형태 구분이 어렵고, 가구전체의 보육료 지출정보로서 개별 아동의 연령에 따른 지출수준을 식별할 수 없는 문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아동별 양육형태와 사보육 지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노동패널조

사자료를 활용하여 가정에서 양육 중인 미취학 아동의 연령별 사보육 지출 비용을 확인하여 양육비 추정에 활용하기로 한다.

2. 2014년도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분석

가계동향조사는 기본적으로 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가구원 정보에 기초한 개인화 과정에서 정보의 손실 등 한계가 있다. 자녀교육 및 보육지원정책에 관한 개인별 정보를 제공하는 제17차 한국노동패널조사(2014, 학술대회용) 가구 및 가구원 자료를 이용한다. 이 자료는 도시지역거주 한국의 5,000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패널표본 구성원을 대상으로 1998년 1차 조사를 시작으로 2014년 17차 조사까지 완료되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동관련 가구 및 가구원 패널조사로 특히 아동별 사교육 및 보육기관 이용 실태와 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특히 17차 조사의 경우 보편적 보육지원 정책의 완전 시행 이후 개별가구의 아동별 보육행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단, 보육비용을 제외하고 아동 양육과 관련한 소비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양육비용 산출에는 한계가 있다.

보육료 지원 및 가정양육수당 수급 아동별 보육 및 양육서비스 지출실태와 관련된 분석이 가능하므로 이하에는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먼저 만 0~5세 아동 양육가구의 분포를 보자.

<표 6-6> 최연소 아동 연령별 영유아수 분포

(단위: %)

최연소 아동 연령	만 0~5세 아동 수				
	1	2	3	4	계
만 0세	57.8	39.1	1.6	1.6	100.0
만 1세	55.2	41.9	2.9	0.0	100.0
만 2세	67.2	31.8	1.0	0.0	100.0
만 3세	75.8	22.4	1.2	0.6	100.0
만 4세 이상	95.6	4.4	0.0	0.0	100.0
계	74.6	24.0	1.2	0.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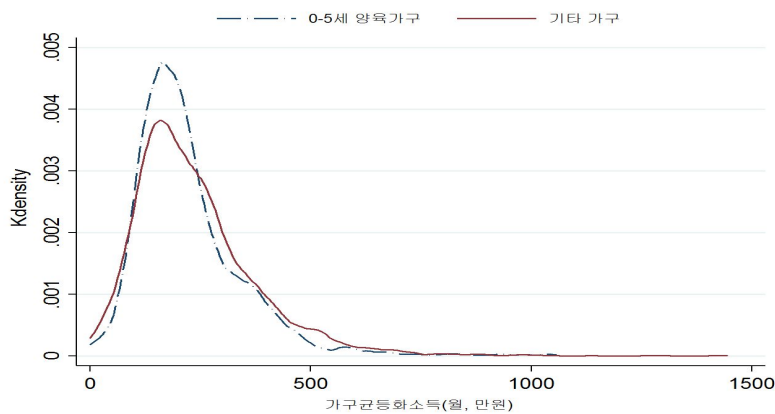
자료: 제17차 노동패널조사 원자료에 기초하여 작성

2014년 기준 전국 도시 거주 2인 이상 5,311가구 중 만 0~5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은 16.3%이며 아동 연령별 영유아수의 분포는 다음의 <표 6-6>과 같

다. 앞서 가계동향조사와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아동수가 적게 나타나는데 이는 도시거주가구 한정이라는 조사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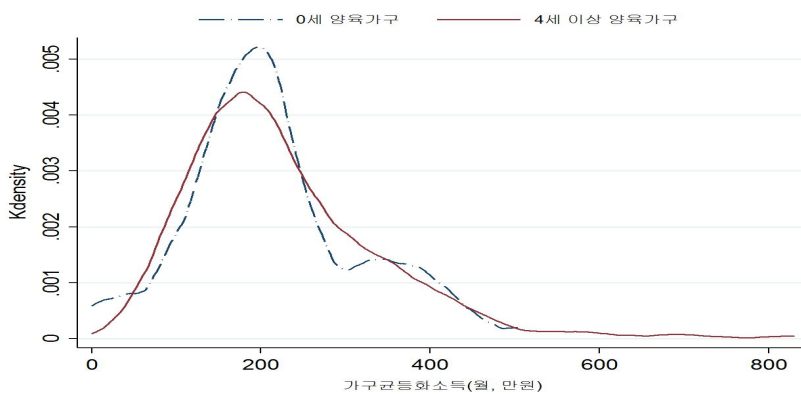
영유아 양육가구의 소득분포를 보면, 동 자료에서도 역시 만 0~5세 아동 양육가구의 균등화 가치분소득이 중상위층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계동향조사와 비교했을 때 평균 소득수준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아동연령 기준 가구 간의 소득격차는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그림 6-4], [그림 6-5]).

[그림 6-4] 만 0~5세 아동 양육가구와 비양육가구의 소득분포



자료: 제17차 노동패널조사 원자료에 기초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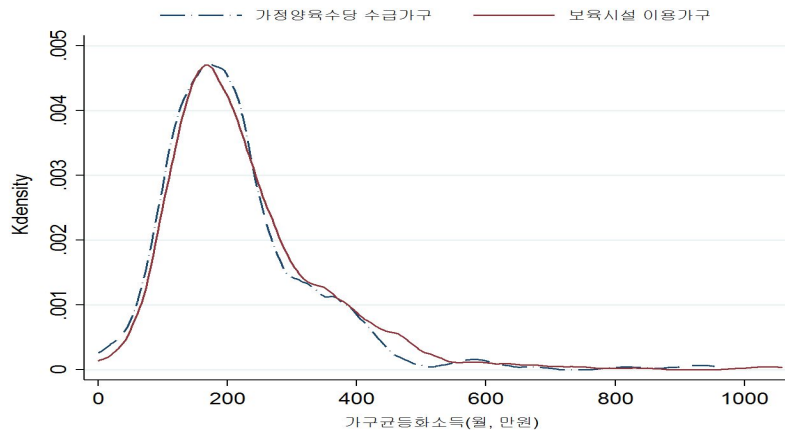
[그림 6-5] 만 0세 아동 양육가구와 만 4세 이상 아동 양육가구의 소득분포



자료: 제17차 노동패널조사 원자료에 기초하여 작성

영유아 양육가구 중 39.2% 만이 가정양육수당을 받고 가정 내 자녀양육을 하고 있으며, 보육시설 이용 가구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중간소득층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그림 6-6]).

[그림 6-6]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구 vs. 보육시설 이용 가구 소득분포



자료: 제17차 노동패널조사 원자료에 기초하여 작성

한편, 동 조사 자료는 학술대회용으로 공개된 자료로서 만 0~5세 아동별 사보육서비스 이용여부와 교육 및 보육비(부대비용 포함)지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구와 보육시설 이용 가구의 소득 대비 사보육비 지출 비율을 비교해보면, 만 1세 이상부터 보육시설 이용 가구의 사보육비 지출비율이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구의 2배를 상회 한다. 사보육비 지출규모는 보육시설 이용 시 납부하는 특별활동비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보육시설이용과 특별활동이 사실상 product-tying된 결과에 기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이론적 예상과 같이 서비스 지원에 따른 풍선효과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라 하겠다.

<표 6-7> 아동 연령별 1인당 사보육비 지출(제17차 노동패널조사)

(단위: 원/월)

구분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세 이상
0~5세 양육가구 전체	가구가처분소득	3,981,549	4,195,237	4,227,992	4,365,792	4,399,776
	가구사보육비	167,344	304,738	460,182	510,416	609,328
	아동1인당사보육비	97,188	191,255	363,029	424,873	591,561
보육시설 이용	가구가처분소득	4,576,778	4,297,567	4,453,289	4,468,725	4,392,595
	가구사보육비	142,000	607,400	602,895	551,522	611,644
	아동1인당사보육비	103,000	403,567	467,164	456,749	591,242
양육수당 수급	가구가처분소득	3,799,337	4,177,834	3,922,232	3,805,833	4,448,190
	가구사보육비	175,102	253,265	266,500	286,800	593,714
	아동1인당사보육비(A)	95,408	155,147	221,702	251,467	593,714

주: 아동1인당 사보육비는 원자료상 파악되는 아동 연령별 사보육비의 평균값으로, 가구특성과 연령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음

자료: 제17차 노동패널조사 원자료에 기초하여 작성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미취학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하는데 필요한 현재 소비재 구입비용을 추정해본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6-8> 아동 연령별 1인당 양육비용

(단위: 원)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세 이상
식료품	81,714	95,827	94,916	97,170	93,913
보건	66,505	52,439	48,549	42,689	37,339
분유	26,652	16,268	2,312	214	208
이유식	2,520	2,076	926	—	—
아동용외투	24,258	31,716	37,704	38,343	45,048
아동내의	5,139	4,958	4,736	4,474	4,900
아동신발	2,678	5,628	6,763	7,962	8,993
장난감	13,585	14,847	17,779	22,384	19,315
기저귀(외삽)	64,000	—	—	—	—
사보육비 ¹	95,408	155,147	221,702	251,467	593,714
필수 양육비 계(a)	382,459	378,906	435,387	464,703	803,430
(보육료 제외 시, b)	(287,051)	(223,759)	(213,685)	(213,236)	(209,716)
가정양육수당 보조율(지원단가/a) ²	52.3%	39.6%	23.0%	21.5%	12.4%
(보육료 제외 시, 지원단가/b)	(69.7%)	(67.0%)	(46.8%)	(46.9%)	(47.7%)

주: 1. 사보육비는 가정양육가구 아동1인당 사보육비 (A)임

2. 2015년 현재 연령별 부모보육료 지원단가/필수 양육비

한편, 본 연구에서 전화조사를 통해 사교육비를 제외한 월평균 양육비지출에 대하여 조사한 지출구간 중간 값으로 계산한 양육비 지출수준은 <표 6-9>와 같다. 지출구간의 중간 값을 가정함에 따라 상기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추정한 양육비 지출수준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사교육비를 제외한 경우 아동 연령별 필요양육비 수준은 대략 20만원에서 35만원 수준으로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아동 연령이 증가할수록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하는 현재의 가정양육수당 단가체계로 인하여 아동 연령별 양육비용 대비 가정양육수당 비율은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급격히 감소한다.

<표 6-9> 아동 연령별 1인당 양육비지출 및 보조율(2015 전화설문조사 기준)

(단위: 원/월, %)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세 이상
양육비지출(a) (2015 전화설문조사)	341,000	336,000	331,000	310,000	343,000
양육비 보조율 (가정양육수당/양육비지출(a))	58.7%	44.6%	30.2%	32.3%	29.2%

한편, 가계동향조사와 2015년 전화조사를 통해 파악되는 사교육비를 제외한 필요 양육비 지출수준이 30만원 정도로 나타나는데 비해 이정원·이혜민(2014)은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77만 6천원에서 150만원 사이로 보고하고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3절 정책기능별 적정 가정양육수당 지원 수준

이하에서는 전화면접조사 결과를 비롯하여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 목적별 적정 가정양육수당 인상 수준을 추정해보기로 한다.

1. 재정효율화 : 불필요한 보육시설 이용 통제(전환을 고려)

여기서는 가정양육에 대한 금전적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보육시설 가수요를 통제하고 가정양육수당 고유의 정책 목적인 아동 발달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때 필요로 하는 인상 수준을 추정해본다. 이를 위하여 제5장의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구와 어린이집 이용 가구의 설문조사 결과를 결합한 가정양육 유지 및 전환 비율 분석결과를 활용한다.

<표 5-23>과 <표 5-24>에서 보았듯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 614가구에 대한 조사결과를 다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정양육수당 인상 금액 수준과 상관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47.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20만원 이상 증액(33.4%)’, ‘20만원 증액(8.6%)’, ‘10만원 증액(5.9%)’, ‘15만원 증액(8.6%)’, ‘5만원 증액(0.5%)’ 순을 보였다. 대부분의 연령에서 가정양육수당 인상 금액이 커질수록 가정양육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어머니의 취업 상태를 기준으로 보면, 미취업모일 경우 가정양육수당 금액 인상 수준과 상관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38.3%로 취업모의 57.8% 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났고, 취업형태를 세분하여 보면, 상용근로자의 경우 ‘영향 없음(61.8%)’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고, 임시근로자인 경우에 미취업모 다음으로 가정양육수당 금액 인상 시 가정양육으로 전환할 의사가 높게 나타났다. 자영업자와 임시근로자의 경우 미취업모와 비슷하게 상대적으로 낮은 인상금액에 대해서도 전환 의사가 확인되었다.

앞서 어머니의 취업 여부 및 형태와 가구소득수준과의 관계를 고려해보면, 금전적 유인에 대하여 소득이 낮을수록 반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 다소 차이가 나타남을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표 5-10> 참조). 물론 본 조사에서 제안된 금액인상 수준이 평균임금수준에 한참 미달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주어진 조건에서는 가정양육에 따른 어머니의 기회비용이 단순히 노동 소득 수준의 함수가 아니라 노동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할 수 있다.

가정양육수당 인상 유인에 대한 개별 부모의 선택점 즉 유보가격(reservation price)이 이들 소득 수준에 대한 단조함수가 아니라는 점에서, 일정 수준 이하-예컨대 20만원 이하-의 가정양육수당 인상을 통해서는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저소득층 영아에 대한 보육서비스 대체 영향이 우려할 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어린이집 이용을 계획하고 있는 가구의 자녀 양육 형태를 가정양육으로 전환하기 위해 요구되는 평균유보가격을 아동 연령별로 산출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상한이 없는 ‘20만원 이상 증액’을 임의적으로 25만원으로 가정하여 인상금

액을 등간화 하였고, ‘영향 없음’이라는 응답을 제외하고 각 인상 금액과 구간별 응답자수를 곱하여 아동 연령별 전환의사를 밝힌 응답자 총수로 나누어 필요인상금액을 계산하였다.¹⁶⁾ 그 결과는 <표 6-10>과 같다.

<표 6-10> 가정양육 전환에 필요한 연령별 평균유보가격

(단위: 만원)

구분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세 이상	전 연령
'15년 가정양육수당 금액(a)	20	15	10	10	10	-
필요인상금액(b)	23.3	21.2	21.4	21.8	20.3	21.6
유보가격(a+b)	44.3	36.2	31.4	31.8	30.3	-
평균 양육비용*	34.1	33.6	33.1	31.0	34.3	33.2

주: *는 본 연구 설문조사에서 금액구간으로 조사된 아동 1인당 양육비지출의 중간 값을 활용하여 계산한 연령별 평균 양육비임
자료: 저자 산출

어린이집 이용을 계획하고 있는 가구의 가정양육 전환을 위한 연령별 유보가격은 지난 2014년 육아정책연구소 조사에서 가정양육수당 금액 불만족 가구를 대상으로 파악한 연령별 요구금액과 근사하다. 특히 흥미로운 사실로는 영아(만 0~2세)의 경우 현 정부의 종일반 보육료지원 단가에 상당히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1> 2014년 아동 연령별 가정양육수당 요구액 (육아정책연구소 전화조사)

(단위: 만원)

구분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세	만 5세
가정양육수당 금액	41.72	34.21	31.06	27.86	26.73	29
불만족 가구 요구금액						

자료: 이정원·이혜민(2014). 2014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표 6-12> 영유아 보육료지원(통칭 부모보육료) 연령별·유형별 지원 단가

(단위: 원)

대상연령	보육료(월)		
	종일	야간	24시
만 0세	406,000	406,000	609,000
만 1세	357,000	357,000	535,500

16) 예시: 만 0세 23.3만원=[(10만원x5)+(20만원x6)+(25만원*49)]÷60

대상연령	보육료(월)		
	종일	야간	24시
만 2세	295,000	295,000	442,500
*만 3세	220,000	220,000	330,000
*만 4세	220,000	220,000	330,000
*만 5세	220,000	220,000	330,000

주:* 만 3~5세 보육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액부담

자료: 보건복지부 2015년도 보육사업안내(2014.4 p.272)

2. 여성경제활동참여 제고(일-가정양립)

제5장의 가정양육수당 인상 구간별 노동공급 의사에 대한 설문결과 분석을 통해 부모의 경제활동 참여율이나 고용안정성이 높을수록 가정양육수당 인상에 따른 노동공급 중단의사가 약하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아동의 연령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가정양육수당 인상에 대해서도 노동공급 중단의사를 보였다. 또한 취업모에 비해 미취업모의 경우 모든 인상구간에 대하여 구직활동을 중단할 의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그러나 단순히 가상의 상태변화에 대한 개인의 선택에 대한 ‘의사’에 기초한 것이다. 그리고 실제 노동공급에 대한 의사결정은 가정양육수당 인상 수준 이외에도 개별 가구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준거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취업여성이나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를 저해하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가정양육수당에 대한 반대 입장을 완전히 부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가정양육수당이 자녀의 연령에 따라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급여로서 일정 기간 동안의 노동공급 중단 즉, 노동공급 시기의 이연을 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 대상이 주로 현재 실업 상태에 있거나 한계고용상태에 있는 계층에 한정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에서 우려할 만큼의 심각한 역기능을 초래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에 있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자녀출산 및 육아에 따른 경력단절의 위험인데, 이는 노동공급의 불가분성(indivisibility)에 따른 인적자본량 축적 기회의 단절로서 주로 고학력-고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을 지닌 일부 근로계층에 국한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그러하다 하여도 가정양육수당 인상이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들의 근로의욕

을 저해하는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는바, 여성의 노동공급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액 인상의 임계수준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가정양육수당 인상으로 소득활동이나 구직활동을 중단할 수 있다고 답한 488명을 기준으로 아동 연령별 평균 노동공급 중단 인상금액을 산출해 보았다. 이를 위해 아동 연령별로 각 구간 인상 금액에 대한 응답자 수를 인상 금액에 곱하여 노동공급 중단의사가 있다고 밝힌 총 응답자 수로 나누어 평균 노동공급 중단을 초래 할 수 있는 인상 수준을 구하였다. 이때, 상한이 주어지지 않은 ‘30만원 이상 증액’ 구간에 대해서는 먼저 가정양육수당 조정 이후 받을 수 있는 최대 가정양육수당 금액이 여성 비정규 근로자 중 임금 수준이 가장 낮은 단시간 근로자의 월평균급여(‘14년 기준 약 55.4만원)를 초과하지 않는 30~40만원 범위내에서 등간화를 고려하여 30만원 일 때와 40만원 일 때 각각의 경우를 가정하여 계산하였다(<표 6-13> 참조).

<표 6-13> 2014년 고용형태별-성별 월평균 급여

(단위: 만원)

	계	남성	여성	여성평균급여/ 전체평균급여
전체근로자(특수형태 제외)	235.3	276.1	174.2	0.7
정규근로자	269.8	305.3	207.0	0.8
비정규근로자	130.5	157.9	105.2	0.8
일일근로자	121.2	—	97.0	0.8
단시간근로자	69.2	—	55.4	0.8
기간제근로자	193.8	—	155.0	0.8
한시적근로자	152.5	—	122.0	0.8

주: 비정규근로자 세부유형별 여성 월평균 급여수준은 비정규근로자 전체평균 대비 여성 비정규근로자 평균급여의 비율 80%를 적용한 값임.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통계청(<http://www.kosis.kr> 최종접속 2015.8.27.)

여성 노동시장 참여를 저해할 수 있는 가정양육수당 인상금액의 아동 연령별 평균금액은 아래의 표와 같다. 이에 따르면 상한 금액을 30만원과 40만원으로 각각 가정했을 때, 가정양육수당 금액을 평균 25만 7천원과 32만 6천원 이상 인상할 경우 자녀를 둔 여성들 중 일부는 노동시장에서 이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표 6-14> 소득활동이나 구직활동을 중단하기 위해 요구되는 아동 연령별 평균유보가격

(단위: 만원)

구분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세 이상	전 연령
'15년 가정양육수당 금액(a)	20	15	10	10	10	-
상한 30만원						
노동공급 중단 인상금액(b)	26.5	25.2	25.7	25.2	26.1	25.7
유보가격(a+b)	46.5	40.2	35.7	35.2	36.1	-
상한 40만원						
노동공급 중단 인상금액(c)	33.8	31.8	32.4	31.8	33.2	32.6
유보가격(a+c)	53.8	46.8	42.4	41.8	43.2	-
평균 양육비용*	34.1	33.6	33.1	31.0	34.3	33.2

주: *는 구간으로 조사된 아동 1인당 양육비지출의 중간 값을 활용하여 계산한 연령별 평균 양육비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전화설문조사에 기초하여 작성함

3. 저출산 대응

앞서 살펴본 가정양육수당 금액인상 구간별 추가 자녀 출산 의사에 대한 설문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정양육수당 금액인상을 통해서도 자녀 출산 계획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아동 연령별로 보았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대체로 주어진 인상금액에 반응하지 않았다. 가구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정책반응도는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나타났지만 절대적 반응크기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 보육지원 정책의 한 축을 담당하는 가정양육수당 제도가 개별 가구의 자녀 출산 계획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우리는 추가 자녀 출산 계획이 없거나 생각중인 이유에 대한 설문 결과로부터 ‘영유아기 양육비(779가구 기준 26.8%)와 취학 후 교육비부담(779가구 기준 20%)’과 같은 자녀 양육·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 문제가 추가 자녀 출산 계획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임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이를 달리 해석하면 개별 가구의 자녀 출산 계획에서 자녀 양육·교육에 따른 직접적인 비용부담 이외에 다른 인구사회동태적 변화에 따른 문제와 결합된 사적영역에서의 적정 자녀수에 대한 선호와 선택이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사실은 자녀 양육을 위해 취학 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보육지원 정책은 저출산 대책으로서의 한계가 분명 존재함을 의미하며,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들 중 일부가 선택하는 가정양육수당 지원 정책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 점은 조사대상 1,000가구 중 30%만이 정부 보육지원 정책이 본인들의 자녀 출산 결정이나 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응답했고, 가장 주요한 정책프로그램으로 가정양육수당을 선택한 경우가 70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는 조사결과가 뒷받침 한

다. 따라서 매년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아동 보육지원을 위해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적 시각은 합리적 근거가 부족한 지적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가정양육수당 지원 제도와 같은 직접적인 양육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보육지원 제도가 도입·시행된 지 이제 만 5년을 경과하고 있고 정책 대상이 전체 미취학아동으로 확대된 지 불과 2년 남짓한 짧은 제도 역사와 월평균 양육비 지출수준에 훨씬 미달하여 지급되는 현행 가정양육수당 수준을 고려해보면, 이를 통해 초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큰 욕심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정 수준의 가정양육수당 금액 인상이 있을 경우 극히 소수일 수는 있지만 일부 가구에 대해서는 그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적정 자녀수보다 더 많은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부모의 추가 자녀 출산 의지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최소 수준의 가정양육수당 금액을 계산해보았다.

이를 위하여 현재 자녀를 추가로 출산할 계획이 없거나 생각 중에 있는 가구 중 가정양육수당 금액 인상에 대해 반응을 보인 337가구와 현행 제도하에서도 추가 자녀 출산 의사를 밝힌 가구 중 가정양육수당이 인상될 경우 현재 계획보다 더 많이 자녀를 낳을 수 있다고 응답한 156가구(총 493가구)를 기준으로 아동 연령 및 인상 금액 구간별 응답자 수와 구간별 인상금액을 곱하여 연령별 응답자 총수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이때, 상한이 주어지지 아니한 '30만원 이상'의 구간에 대해서는 임의대로 30만원으로 가정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에 정리되어 있다.

<표 6-15> 추가 자녀 출산 의사를 유인하는 아동 연령별 평균유보가격

(단위: 만원)

구분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세 이상	전 연령
'15년 가정양육수당 금액(a)	20	15	10	10	10	—
필요인상금액(b)	28.2	27.3	27.3	26.2	28.8	27.6
유보가격(a+b)	48.2	42.3	37.3	36.2	38.8	—
평균 양육비용*	34.1	33.6	33.1	31.0	34.3	33.2

주: *는 구간으로 조사된 아동 1인당 양육비지출의 중간 값을 활용하여 계산한 연령별 평균 양육비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전화설문조사에 기초하여 작성함

4. 정책수요 대응

전체 조사가구를 기준으로 적정 가정양육수당 수준에 대한 설문 응답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3.3%가 현재보다 20만원 이상 증액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현재보다 10만원 증액이라는 응답이 18.4%로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현재가 적정하다는 의견도 9.9%로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15만원 증액(6%)과 5만원 증액(1.9%) 그리고 현재보다 감액(0.5%)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앞서 현재 금액 수준에 불만족하다고 응답했음에도 적정 가정양육수당 금액 수준에 대해서는 현재가 적정하다는 응답자가 11명, 현재보다 감액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도 1명이나 확인된다.¹⁷⁾ 이들 응답 결과의 합리성을 확인해보기 위하여 불만족 사유를 살펴본 결과, 현재가 적정 수준이라 응답한 11명 중 6명은 보육료 지원 금액보다 가정양육수당 금액이 적어서 불만이라 하였다. 나머지 5명은 실제 양육비용보다 적어서라고 응답하였는데, 이들의 아동 1인당 양육비 지출에 대한 응답 결과를 확인해 본 결과 실제로 지원되는 가정양육수당보다 더 적은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의 적정 가정양육수당에 대한 응답은 일관성이 결여된 일종의 이상치(outlier)로 볼 수 있다. 나머지 현재보다 감액해야 한다고 응답한 1인의 경우에도 가정양육수당 불만족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이상치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현재보다 감액해야 한다고 응답한 5명 모두 현재 가정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아이 어머니로서 앞서 이상치로 확인되는 1명을 제외한 4명은 현재 가정양육수당 금액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들의 경제적 특성을 보면 1명의 상용근로자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미취업상태에 있으며, 월평균 가구소득은 4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과 600만원 이상 구간에 각각 2명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들이 생각하는 적정 가정양육수당 금액이 지금보다 적어야 한다는 의견은 이들이 현재 경제적으로 안정된 집단에 속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응답이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이상치로 판단되는 6명의 응답을 제외한 994가구를 기준으로 아동 연령별 평균 적정 가정양육수당 금액을 계산해보기로 한다. 앞에서의 방식과 마찬가지로

17) 현재보다 감액해야 한다는 응답자 수는 총5명임.

각 아동 연령별로 조정 금액 구간별 응답자 수와 그에 해당하는 조정 금액을 곱하고 응답자 총 수로 나누어 각 아동 연령별 평균 조정 금액을 산출한다. 이때 현재가 적정하다고 했을 때의 조정 금액은 0원이며, 하한이 규정되지 아니한 감액 규모는 등간성을 고려하여 5만원 감액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6-16> 부모가 생각하는 적정 가정양육수당 금액

(단위: 만원)

구분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세 이상	전 연령
'15년 가정양육수당 금액(a)	20	15	10	10	10	-
필요인상금액(b)	16.1	15.5	16.2	14.2	15.9	15.6
유보가격(a+b)	36.1	30.5	26.2	24.2	25.9	-
평균 양육비용*	34.1	33.6	33.1	31.0	34.3	33.2

주: *는 구간으로 조사된 아동 1인당 양육비지출의 중간 값을 활용하여 계산한 연령별 평균 양육비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부모전화설문조사에 기초하여 작성함

제4절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정책시뮬레이션

1. 정책시나리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의 4가지로 정책조정 목적을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불필요한 어린이집 이용 통제에 따른 재정효율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때 재정효율화의 의미는 재정절감을 의미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재정효율화는 가정양육에 대한 금전적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보육시설 가수요를 통제하고 시설과 가정양육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는 보육지원 기능을 확보함과 동시에 고유의 정책 목적인 아동 발달을 효과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재정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에 <표 6-10> 상단의 필요인상금액(b)를 (시나리오 1) 보육서비스 가수요 통제를 통한 재정효율화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모의실험결과를 비교해보겠다.

둘째,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실제 요구하는 금액수준을 모두 지원하는 형태로 정책 만족도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안이다. 즉, <표 6-26>의 부모들이 요구하는 양육수당 인상 금액을 적용하는 조정안이다. 이를 (시나리오 2) 정책수요 대응을 위한 조정

이라 하겠다.

셋째, 양육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저해하지 않는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으로 <표 6-14> 상단의 노동공급 중단 인상 금액(b)를 적용한다. 이를 (시나리오 3)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저해하지 않는 최대수준 조정이라 하겠다.

넷째, 아동발달 측면에서 만 3세 이상의 경우 시설보육의 중요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가정양육수당에 대한 선호도나 출산인센티브에 대한 반응도가 크고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고 양육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0~2세 가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0~2세에 국한해서만 양육수당 금액을 인상하는 것을 전제로 (시나리오 4)~(시나리오 6)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시나리오 4) 0~2세 한정 0세 22만원, 1~2세 각 21만원 인상하는 안으로서 상기 정책목적의 중요도가 모두 동등하고 따라서 세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가정에 따라 0~2세 인상금액에 대한 산술평균값을 계산한 값이다.

(시나리오 5) 0~2세 한정 각 10만원 인상하는 안으로 이는 재원조달의 부담을 고려하여 상기 인상금액의 약 절반 수준을 임의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시나리오 6) 0~2세 한정 필요 양육비 보전에 필요한 금액을 인상하는 안으로서 0세 182,459원, 1세 228,906원, 2세 335,387원 인상하는 경우를 가정한다. 이때 2세에 대한 인상금액은 앞서 논의한 노동공급 중단을 야기할 수 있는 임계수준(25.7만원)을 초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정책효과에 대한 비교·검토를 위하여 동 금액을 인정하기로 한다.

아래의 <표 6-17>은 이상의 인상금액 시나리오를 정리하고 있다.

<표 6-17> 아동 연령별 가정양육수당 인상 시나리오

(단위: 만원)

구분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세 이상
시나리오 1(제정효율화)	23.3	21.2	21.4	21.8	20.3
시나리오 2(정책수요대응)	16.1	15.5	16.2	14.2	15.9
시나리오 3(최대인상)	26.5	25.2	25.7	25.2	26.1
시나리오 4(0~2세 한정 1)*	22	21	21	0	0
시나리오 5(0~2세 한정 2)**	10	10	10	0	0
시나리오 6(0~2세 한정 3)	18.2	22.9	33.5	0	0

주: *시나리오 1~3의 산술평균 값으로 0~2세에만 한정 적용

**시나리오 4의 약 50%수준 0~2세에만 한정 적용

2. 부분균형 정태분석: 단기 소득재분배 효율성

가정양육수당은 조세수입을 주요재원으로 하는 예산사업이므로 소득재분배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제17차 노동패널조사 원자료상 확인되는 가정양육수당 수급 아동 및 가구 정보에 기초하여 소득재분배 측면에서의 현행 가정양육수당제도의 기능을 살펴보고, 정책조정에 따른 효과를 가늠해보기 위하여 앞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책시나리오를 설정하여 각각의 경우에 대한 단기 소득재분배 효과를 비교해보았다.

이때 소득재분배 지수는 S-gini inequality index를 기준으로 파라미터값 ($v=2$)를 기준으로 산출한다(Donaldson and Weymark, 1980, Yizhaki, 1983, Duclos and Arrar, 2004).

$$G_X(v) = \int_0^1 (p - L_X(p))w(p;v)dp, \quad \text{단,} \quad w(p;v) = v(v-1)(1-p)^{v-2}, \quad v > 1$$

(1)

$v=2$ 는 일반적인 지니계수와 같음. $v > 2 (< 2)$ 는 저소득층(고소득층)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경우임.

노동패널조사자료의 가구 소득은 전년도 세후 소득이며, 가구의 가정양육수당수급액은 당해 연도의 정보를 파악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효과성 시산을 목적으로 편의상 전년도 세후소득을 당해의 가처분소득으로 가정하고 이를 N_0 라 한다. 가구에 지급된 가정양육수당 총액을 C_0 라 할 때 이는 공적이전으로서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N_0 에서 C_0 를 차감하여 가구의 세전 소득 또는 양육수당 지급 전 소득 X_0 를 산출한다.

가구 규모를 고려하여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N_0, X_0 를 나누어 가구균등화 수당지급 전과 지급 후 소득을 각각 N, X 로 정의하고 위 산식에 따라 양육수당 지급 전 소득지니계수 $G_X(v=2)$ 와 양육수당 지급 후 소득지니계수 $G_N(v=2)$ 를 산출한다. 소득불평등 개선 정도를 $\rho = \frac{(G_X - G_N)}{G_X}$ (지니계수의 변화율)로 정의하

여 정책효과를 시산할 수 있다. 단, 이때 가구규모는 2인 이상 그리고 가구주 연령은 65세 이하로 한정하고, 현행 제도 및 양육수당 단가조정에 따른 단기 소득

재분배 효과를 측정·비교하였다.

<표 6-17>의 시나리오별 인상금액을 현재 가정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에 적용, C_0 에 추가된다는 가정 하에 전술한 방식에 따라 소득재분배 효과를 시산한 결과는 다음의 표에 정리하였다.

<표 6-18> 소득재분배 효과 시산결과

	현행제도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시나리오 4	시나리오 5	시나리오6
양육수당 지급 전 소득지니계수	0.3133	0.3133	0.3133	0.3133	0.3133	0.3133	0.3133
양육수당 지급 후 소득지니계수	0.3119	0.3103	0.3107	0.3101	0.3106	0.3113	0.3104
지수변화	-0.0014	-0.0031	-0.0026	-0.0032	-0.0027	-0.0020	-0.0029
소득재분배 효과	0.4%	1.0%	0.8%	1.0%	0.9%	0.6%	0.9%

자료: 저자 산출

제17차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에 나타난 가구 소득 및 특성, 아동별 가정양육수당 수급 정보를 활용하여 현행의 가정양육수당 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측정해본 결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미취학아동에 대하여 소득 제한 없이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이기에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소득격차를 0.4% 줄이는 것으로 확인된다(전국 2인 이상 도시가구 기준). 이것은 영유아 양육가구의 가구구성이나 소득 수준과 같은 가구특성과 현행 연령별 차등금액 지원 구조가 결합된 결과이다. 소득 개념과 그에 따른 분포의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현행 누진적 소득과세 체계에서 발생하는 소득재분배 효과는('14년도 소득세수 53.3조원) 약 5%내외로 알려져 있다. 반면에,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영유아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가계에 대한 약 2조 원의 직접적인 재정지출('14년도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국비+지방비 확정 예산 1.89조 원)로 0.4%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시산결과는 정책의 재정효율성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인상금액 시나리오별로 보면, 평균 인상단가가 가장 높은 시나리오 3(최대인상)과 이의 약 80~90% 수준에서 단가를 인상하는 시나리오 1(정책수요대응)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대동소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만 0~2세에 한정하여 21~22만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시나리오 4의 경우 평균 인상 단가 측면에서 가장 효과성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평균 인상 단가 만을 고려한 진단에 불과한 것으로서 시나리오별 소득재분배 효과의 크기는 소요되는 재정규모까지 감안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아래 표는 현행 제도 기준으로 단가 인상에 따른 실제 가구들의 추가수급액(추가재정소요) 대비 추가 소득재분배 효과를 비교하고 있다. 여기서 추가재정소요 규모는 2014년 현재 가정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아동이 각 조정시나리오에 따라 받게 되는 추가금액을 가구별 합산하여 연간화 한 후에 가구가중치를 적용해서 구한 가중합계금액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양육행태 전환이나 아동 월령 증가로 인한 수급아동 수의 변화 등에 따른 수급액 변동은 반영하지 않았다. 여기서는 다만 추가 재정소요 천억 원 당 소득재분배 효과를 비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결과를 보면, 부모들이 바라는 평균인상금액 만큼 올려주는 시나리오 2의 경우 가장 비용효율적인 재분배 기능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6-19> 시나리오별 단가 소득재분배 효과 비교

(단위: 백만원, %)

현행제도 기준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시나리오 4	시나리오 5	시나리오 6
추가재정소요	2,821,171	2,054,479	3,353,873	2,272,513	1,071,504	2,655,016
소득재분배 효과	0.51	0.38	0.58	0.42	0.19	0.48
천억 원 당 재분배효과	0.0182	0.0187	0.0172	0.0183	0.0180	0.0181
단기 재분배 효율성 순위	3	1	6	2	5	4

자료: 저자 산출

결과가 그렇다 하여도 이를 합리적 조정안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다소 근거가 부족하다. 우선, 전술한바와 같이 여기서의 시산결과는 직접적인 가구소득 증가에 따른 단기 재분배효율성에 국한된다. 이것은 특히 주어진 자료에서 확인되는 양육수당 수급아동의 가구구성 분포와 전체 소득분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수급자의 요구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응이 항상 정책적으로 바람직하다 볼 수 없다. 더구나 아동 발달 측면에서 만 3세 이상부터는 체계적인 보육의 중요성이 강조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에 미취학 아동 전체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인상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정부의 현금이전지출이라는 급여 특성을 고려하여 이하에서는 생산-분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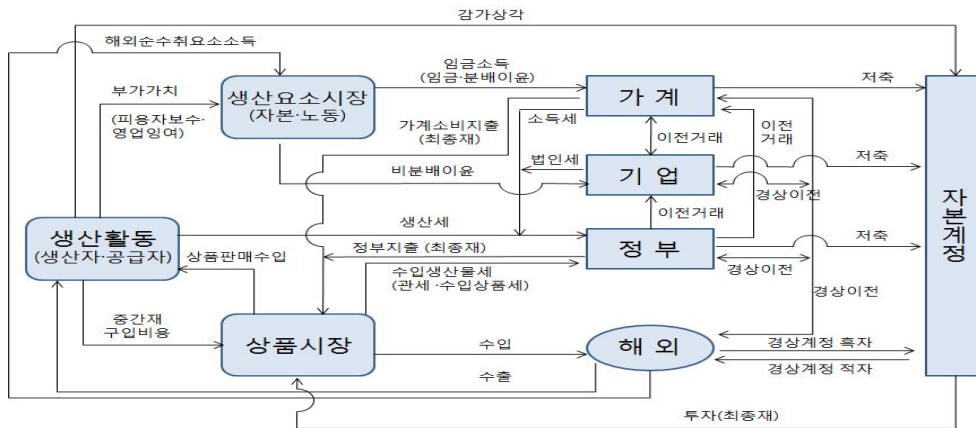
-지출의 일반균형적 시각에서 가정양육수당 조정이 유발하는 국민경제 각 부문에 대한 소득유발 효과와 소득재분배 효과를 측정하여 정책수단의 효과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3. 일반균형 정태분석: SAM기반 성장-분배 효율성

여기서는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정책의 국민경제 각 부문에 대한 총소득효과와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을 위해 사회계정행렬(social accounting matrix)을 작성하고 이에 기초한 시나리오별 모의실험 결과를 살펴보겠다.¹⁸⁾

사회계정행렬(SAM)은 부가가치와 최종지출간의 상호관계를 설명하는데 이용되는 방법론으로 국민경제의 소득흐름을 나타내기 위해 공급표와 사용표, 또는 투입산출표를 제도부문과 연결하여 행렬의 형태로 확장한 것이다.¹⁹⁾ SAM을 이용한 승수분석은 가격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경제주체의 행태를 선형으로 가정하는 정태분석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유도형 방정식을 이용한 예측에 중점을 둔 계량경제모형에 비해 분석대상이 포괄적이고 덜 민감한 결과를 가져다준다는 점에서 정책적인 판단에 있어 매력적인 도구이다. SAM은 생산활동의 직접 결과가 아닌 경상이전 효과에 대한 정책분석의 기초자료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림 6-7] 개방경제의 소득순환



18) SAM 구조와 작성방법에 대해서는 고제이 외(2014)에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 여기서는 SAM기반 정책시나리오별 경제적파급효과 시산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19) 이하의 SAM작성과 관련한 내용은 고제이 외(2014) pp. 97~110의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다.

자료: 노용환 (2006)을 기본으로 수정한 고제이 외(2014) p. 158 [부도 1] 재인용.

기본적으로 SAM은 「산업연관표」에 제도부문의 수입과 지출 구조를 연계하여 특정 기간 동안 한 경제의 ‘소득순환’ (circular flow of income)을 나타낸다. 구체적으로는 [그림 6-7]이 보여주는 것과 같은 생산활동에 따른 요소소득의 발생, 상품시장에서의 최종생산물에 대한 지출 과정 등의 국민소득순환 경로를 따라 작성하게 된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총소득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GDP와 다른 경제 전체의 소득흐름 총량이라는 개념에 가깝다. 따라서 절대적 규모는 GDP나 GNP와 차이가 있지만 경제규모의 변화에 대한 가늠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

SAM은 「산업연관표」, 「국민소득계정」, 「가계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등 거시 통계와 미시통계를 모두 이용하여 작성한다. 따라서 기존의 「산업연관표」만을 이용한 투입-산출분석을 통해서는 한 산업부문에 대한 최종 수요 증가에 따른 각 산업의 총소득(gross income) 증가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반면에, SAM을 이용할 경우 총소득의 절대적 증감은 물론 증가된 소득이 생산활동이나 가계 등 경제부문에 대한 재분배효과까지 측정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고제이 외(2014)에서 한국은행 2010년 산업연관표, 국민계정자료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하여 작성한 SAM을 기반으로 제17차 노동패널조사 정보를 활용하여 가정양육수당 조정이 야기하는 국민경제 각 부문에서 발생하는 성장효과와 그로 인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비교분석한다. 지면상 SAM구조와 작성방식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SAM의 기본형태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겠다.

기본적으로 생산활동과 상품계정은 아래의 표와 같이 「산업연관표」의 통합대분류(30 부문)에 기초하여 대분류 상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부문만 ‘의료 및 보건’, ‘사회보험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세 부문으로 세분화하여 총 32부문으로 분할되어 있다.

<표 6-20> 생산활동과 상품 계정의 분할

1. 농림수산물	12. 전기 및 전자기기	23. 금융 및 보험 서비스
2. 광산물	13. 정밀기기	24. 부동산 및 임대
3. 음식료품	14. 운송장비	25.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4. 섬유 및 가죽제품	15. 기타 제조업 제품 및 임가공	26. 사업지원서비스
5. 목재 및 종이, 인쇄	16. 전력, 가스 및 증기	27. 공공행정 및 국방
6. 석탄 및 석유제품	17. 수도, 폐기물 및 재활용서비스	28. 교육서비스
7. 화학제품	18. 건설	29. 의료 및 보건
8. 비금속광물제품	19. 도소매 서비스	30. 사회보험서비스
9. 1차 금속제품	20. 운송 서비스	31. 사회복지서비스
10. 금속제품	21.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32. 문화 및 기타서비스
11. 기계 및 장비	22.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가계부문은 소득재분배 효과 시산을 위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2인 이상 전가구 대상 10분위 소득계층별 수입과 지출을 국민계정과 연계하여 가계수입부문 각 항목의 수입분포(10×1 행렬)과 소비지출분포(32×10 행렬)로 구성하였다. 특히 가계소비의 경우 10분위 소득계층의 산업별 상품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정보가 없는 관계로 「가계동향조사」 소득분위별 소비지출 항목분류를 161부문 「산업연관표」와 연계하여 <표 6-21>과 같이 구성하였다.

<표 6-21> 가계소비지출 항목 분류

A. 가계조사 소비지출 항목의 소득분위별 비율을 연관 상품부문에 적용

가계조사 소비항목	산업연관표 161부문 산업 (괄호는 분류코드)
1. 식료품·비주류음료	곡물 및 식량작물(1), 채소 및 과일(2), 기타작물(3), 낙농 및 육우(4), 기타 축산(5), 수산물(7), 육류 및 낙농품(13), 수산가공품(14), 정곡 및 제분(15), 제당 및 전분(16), 떡, 과자 및 면류(17), 조미료 및 유지(18), 기타 식료품(19), 비알콜음료 및 얼음(22)
2. 주류·담배	주류(21), 담배(23)
3. 의류·신발	섬유사(24), 섬유직물(25), 섬유표백 및 염색(26), 직물제품(27), 의복제품(28), 가죽제품(29), 화학섬유(41)
4. 주거·수도·광열	석탄(9), 원유 및 천연가스(10), 석탄제품(36), 석유제품(37),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101), 도시가스(102), 증기 및 온수(103), 수도(104)
5. 가정용품·가사서비스	목재(30), 목제품(31), 펄프(32), 종이류(33), 종이제품(34), 도료 및 잉크(44), 비누 및 화장품(45), 기타 화학제품(46), 플라스틱 1차제품(47), 기타 플라스틱 제품(48), 타이어 및 튜브(49), 기타 고무제품(50), 유리 및 유리제품(51), 도자기 및 요업제품(52), 컴퓨터 및 주변기기(86), 가정용 전기기기(89), 가구(99), 기타 제조업 제품 및 임가공(100)
6. 보건	의료 및 측정기기(90)
7. 교통	자동차(92), 특장차 및 트레일러(93), 자동차 부품(94), 선박(95), 철도차량(96), 항공기(97), 기타 운송장비(98), 철도운송서비스(116), 도로운송서비스(117), 소화물 전문 운송서비스(118), 수상운송서비스(119), 항공운송서비스(120), 운송보조서비스(121),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124)

8. 통신	통신 및 방송장비(87), 우편서비스(127), 유, 무선 통신서비스(128), 기타 전기통신서비스(129)
9. 오락·문화	영상 및 음향기기(88), 방송서비스(130), 정보서비스(131), 출판서비스(134), 영상, 오디오 물 제작 및 배급(135), 문화서비스(157), 스포츠 및 오락 서비스(158)
10. 교육	인쇄 및 복제(35), 연구개발(144)
11. 음식·숙박	음식점 및 주점(125), 숙박서비스(126)
12. 기타상품·서비스	임산물(6), 농림어업서비스(8), 금속광물(11), 비금속광물(12), 사료(20), 기초유기화학물질(38), 기초무기화학물질(39),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40), 비료 및 농약(43), 시멘트(53), 콘크리트 제품(54), 기타 비금속광물제품(55), 선철 및 조강(56), 열간압연강재(57), 냉간압연강재(58), 기타 철강1차제품(59), 비철금속괴(60), 비철금속1차제품(61), 금속 주물(62), 구조용 금속제품 및 탱크(63), 금속 단조, 야금 및 압형 제품(64), 금속처리 가공품(65), 기타 금속제품(66), 내연기관 및 터빈(67), 펌프 및 압축기(68), 일반목적용기계 부품(69), 산업용 운반기계(70), 공기 및 액체 조절장치(71), 기타 일반목적용기계(72), 농업 및 건설용 기계(73), 금속가공용 기계(74), 금형 및 주형(75),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기계(76), 기타 특수목적용기계(77), 발전기 및 전동기(78), 전기변환·공급제어장치(79), 전지(80), 기타 전기장치(81), 반도체(82), 전자표시장치(83), 인쇄회로기판(84), 기타 전자부품(85), 기타 정밀기기(91), 폐수처리(105), 폐기물처리(106), 자원재활용서비스(107), 주거용 건물(108), 비주거용 건물(109), 건축보수(110), 교통시설 건설(111), 일반토목시설 건설(112), 산업시설 건설(113), 기타건설(114), 도소매 서비스(115), 하역 서비스(122), 보관 및 창고 서비스(123), 소프트웨어개발공급(132), 컴퓨터관리서비스(133), 중앙은행 및 예금취급기관(136), 기타 금융기관(137), 보험서비스(138), 금융 및 보험 보조서비스(139), 주거서비스(140), 부동산 임대 및 공급(141), 부동산관련 서비스(142), 기계장비 및 용품 임대(143), 법무 및 경영지원 서비스(145), 광고(146), 건축, 토목 관련 서비스(147),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148), 청소소독 및 시설유지서비스업(149), 인력공급 및 알선업(150), 기타사업지원서비스(151), 공공행정 및 국방(152), 사회단체(159), 수리서비스(160), 개인 서비스(161)

B. 가계조사 원시자료의 소득분위별 소비지출 항목을 집계하여 상품부문에 적용

SAM의 상품부문	가계조사 원시자료의 소비항목
의약품	조제약약, 판매약약, 한약 및 한약재
교육서비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국공립대학, 사립대학, 대학원, 입시 및 보습, 음악학원, 미술학원, 운동학원, 직업준비학원, 방문학습지, 체험교육, 기타학원교육비, 개인과외비, 성인직업학원, 외국어학원, 운동 및 교양교육, 학교보충교육비, 평생교육원, 국내교육연수, 국외연수비
의료 및 보건	인삼, 영양보조제, 보건의료 소모품, 안경 및 콘택트, 기타보건의료기구, 일반병의원외래비, 한방병원외래비, 치과외래비, 기타보건의료서비스, 병원입원치료비
사회보험서비스	생명보험, 화재보험, 연금보험
사회복지서비스	산후조리원, 보육료, 기타사회복지

기본적으로 총수입(행 합계)과 총지출(열 합계)이 일치하는 완전균형 가정을 만족하기 위하여 투입산출표와 국민계정 통계 그리고 미시가계조사 통계 간의 불일치 문제에 대해 RAS 행렬조정을 거쳐 최종 80×80 SAM을 도출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SAM은 개별 계정을 구성하는 수입과 지출을 정방행렬의 형태로

기록하여 한 경제의 소득이 어떻게 순환되는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SAM을 이용한 승수분석은 정책 변화의 파급효과를 SAM 계정이 식별하고 있는 경제 전 부문에서 수량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강력한 정책분석방법론이다. 승수분석을 위해서는 내생부문과 외생부문을 설정해야 하는데, 통상 소득변화에 따라 지출변화가 수반되기 쉬운 경제부문이 내생계정, 반대로 지출이 소득과 독립적으로 결정되는 경제부문은 외생계정으로 설정한다. 본고에서는 생산요소(노동, 자본), 제도부문(가계, 기업) 그리고 생산활동과 상품계정을 내생계정으로 정의하고 정부, 자본계정 및 해외계정을 외생으로 설정하였다.

Stone (1978), Pyatt and Round (1979), Defourny and Thorbecke (1984)에 따라 $n=77$ 개 내생계정으로 구성된 SAM의 승수행렬 $M_n = (I - A_n)^{-1}$ 과 외생변수의 지출함으로 표시되는 정책충격벡터 x 의 연산 식(2)와 같이 가정양육수당 조정효과를 측정하였다.

$$y_n = A_n y_n + x = (I - A_n)^{-1} x = M_n x \quad (2)$$

$$\text{단, } A_n = \begin{pmatrix} O & O & A_{13} \\ A_{21} & A_{22} & O \\ O & A_{32} & A_{33} \end{pmatrix}$$

A_n : n 개 내생계정으로 구성된 SAM을 생산요소, 제도, 생산 부문으로 분할할 때 각 계정의 평균지출성향을 의미함

여기서 SAM 승수행렬 $M_n = (I - A_n)^{-1}$ 은 외생계정 1단위 변화(dx_n)가 내생계정의 ‘절대소득 변화’(dy_n)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총소득효과를 측정한다. 특히 M_n 의 요소 m_{ij} 는 계정 j 의 외생적 소득주입 1단위 발생에 따라 유발되는 계정 i 의 ‘총소득 효과’ (gross income effect)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특정 부문에 대한 정부지출 증가가 다른 내생부문의 소득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이 가능하므로 소득효과가 높은 산업, 이익을 더 많이 얻게 되는 소득계층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정책효과 시산에 적용하는 외생충격벡터 x 는 제17차 노동패널조사 자료를 통

해 확보할 수 있는 2014년도 현행 제도하에서의 10분위 소득계층별 가정양육수당 수급액분포와 <표 6-17>의 조정시나리오 적용 후 수급액 분포를 각각 사용하였다.

<표 6-22> 2014년도 가정양육수당 소득분위별 지급액 추정치

(단위: 백만 원)

소득분위	가정양육수당 수급액 추정치(C_0)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전체	2,169,875	151,506	1,872,858	2,466,892
1분위	91,856	27,828	37,302	146,410
2분위	167,990	39,934	89,701	246,278
3분위	270,005	53,119	165,868	374,141
4분위	200,425	40,072	121,867	278,984
5분위	233,868	53,463	129,057	338,679
6분위	372,863	66,229	243,024	502,701
7분위	313,676	56,278	203,346	424,006
8분위	154,085	37,927	79,732	228,438
9분위	193,200	40,858	113,101	273,299
10분위	171,908	49,056	75,737	268,080

주: 제17차 한국노동패널조사 기준, 가구가중치 적용 가정양육수당 수급액 소득분위별 수급총액 2인 이상 가구 기준
가구균등화 가처분소득 10분위

자료: 저자 산출

<표 6-22>는 2014년 영유아 양육가구가 수급한 가정양육수당 총수급액 규모와 10분위 소득계층별 수급액 분포를 보여준다. 총수급액은 2조 1,699억 원으로 <표 2-4>의 2014년도 가정양육수당지원 예산총액(국비+지방비) 1조 8,916억 원에 비해 과다 추정되었다. 이것은 수당 수급아동의 월평균 수급액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는 조사 자료의 특성 상 금액의 연간화 과정에서 아동의 월령 변화에 따른 수급액 감소나 양육 행태 변화에 따른 수급액 증감 요인을 정확히 포착하지 못하는 것에 따름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소득분위별 실제 수급 규모와 관련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따라서 상기의 소득분위별 수급액 분포를 적용하되 예산총액 규모와 수급액 총액 추정치와의 차이비율을 보정계수(0.1282)로 사용하고, 각 정책조정 시나리오에 모두 적용하였다.

아래의 <표 6-23>은 보정된 10분위 소득계층별 수급액분포로서 최종적으로 정책효과 분석에 적용할 가계소득에 대한 정책충격벡터 x 를 보여준다.

<표 6-23> 정책시나리오별 가정양육수당 수급액 분포

(단위: 백만원)

구분	현행제도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시나리오 4	시나리오 5	시나리오 6
1분위	80,076	202,876	170,041	226,622	169,416	121,818	187,754
2분위	146,447	331,005	281,812	367,070	293,785	216,154	320,096
3분위	235,379	529,036	450,219	585,169	473,372	347,812	529,218
4분위	174,723	424,332	355,428	470,493	369,654	266,871	420,151
5분위	203,877	466,006	392,848	512,138	443,095	316,145	463,342
6분위	325,047	734,813	622,981	810,331	673,896	489,259	736,899
7분위	273,450	637,415	536,870	705,355	556,706	406,970	592,293
8분위	134,325	308,188	261,953	342,618	269,869	198,663	295,278
9분위	168,424	379,341	322,670	421,110	320,097	240,244	344,601
10분위	149,863	337,981	287,800	374,475	302,805	221,769	316,516
재정규모	1,891,610	4,350,994	3,682,623	4,815,382	3,872,696	2,825,704	4,206,146

자료: 저자 산출

식(2)에 따른 가정양육수당 조정시나리오별 소득유발 효과 모의실험 결과는 <표 6-24>와 같이 내생계정 항목별로 확인할 수 있다. 경제순환에 따른 가계소득분포의 변화는 <표 6-25>에서 볼 수 있다.

<표 6-24> 가정양육수당 소득유발 효과 모의실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현행제도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시나리오 4	시나리오 5	시나리오 6
1. 농림수산물	156,361	360,353	304,930	398,870	320,544	233,766	348,722
2. 광산물	3,973	9,151	7,744	10,128	8,142	5,938	8,854
3. 음식료품	283,902	654,299	553,661	724,229	582,044	424,463	633,241
4. 섬유 및 가죽제품	98,956	227,535	192,589	251,816	202,505	147,782	219,915
5. 목재 및 종이, 인쇄	47,117	108,400	91,744	119,969	96,493	70,398	104,830
6. 석탄 및 석유제품	106,153	244,504	206,915	270,629	217,534	158,665	236,549
7. 화학제품	139,298	320,652	271,381	354,911	285,236	208,105	309,940
8. 비금속광물제품	11,199	25,766	21,808	28,517	22,932	16,731	24,917
9. 1차 금속제품	37,548	86,377	73,105	95,595	76,887	56,096	83,521
10. 금속제품	34,809	80,080	67,775	88,625	71,287	52,008	77,447
11. 기계 및 장비	22,593	51,975	43,990	57,522	46,267	33,755	50,262
12. 전기 및 전자기기	113,401	260,916	220,826	288,765	232,248	169,438	252,356
13. 정밀기기	10,593	24,373	20,628	26,974	21,697	15,829	23,572
14. 운송장비	97,404	223,980	189,570	247,872	199,396	145,496	216,484

구분	현행제도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시나리오 4	시나리오 5	시나리오6
15. 기타 제조업 제품 및 임가공	51,015	117,335	99,315	129,863	104,403	76,188	113,372
16. 전력, 가스 및 증기	152,807	351,989	297,873	389,597	313,190	228,420	340,611
17. 수도, 폐기물 및 재활용서비스	34,168	78,632	66,548	87,026	69,993	51,059	76,066
18. 건설	13,031	29,966	25,362	33,162	26,687	19,470	28,989
19. 도소매 서비스	349,360	803,580	680,122	889,315	715,442	521,971	777,267
20. 운송 서비스	142,918	328,720	278,213	363,791	292,632	213,510	317,815
21.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230,827	530,740	449,197	587,319	472,738	344,895	513,553
22.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183,600	422,431	357,514	467,502	376,131	274,379	408,768
23. 금융 및 보험 서비스	320,946	738,074	624,693	816,805	657,190	479,490	713,887
24. 부동산 및 임대	372,084	855,619	724,186	946,881	761,883	555,880	827,587
25.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52,366	120,455	101,948	133,307	107,246	78,242	116,512
26. 사업지원서비스	58,472	134,490	113,827	148,837	119,749	87,365	130,092
27. 공공행정 및 국방	6,702	15,416	13,047	17,060	13,727	10,014	14,911
28. 교육서비스	212,903	488,863	413,785	540,878	435,931	318,073	472,849
29. 의료 및 보건	101,462	233,791	197,846	258,798	207,826	151,609	225,912
30. 사회보험서비스	0	0	0	0	0	0	0
31. 사회복지서비스	48,651	111,888	94,666	123,769	100,006	72,865	108,729
32. 문화 및 기타서비스	212,186	487,934	412,989	539,992	434,416	316,970	471,767
33. 농림수산물	189,859	437,556	370,259	484,325	389,219	283,849	423,432
34. 광산물	150,429	346,480	293,214	383,499	308,279	224,849	335,234
35. 음식료품	347,868	801,722	678,408	887,409	713,190	520,102	775,926
36. 섬유 및 가죽제품	140,101	322,144	272,668	356,521	286,707	209,231	311,357
37. 목재 및 종이, 인쇄	57,238	131,686	111,452	145,740	117,222	85,520	127,351
38. 석탄 및 석유제품	164,035	377,826	319,741	418,196	336,148	245,180	365,532
39. 화학제품	193,262	444,876	376,517	492,408	395,734	288,725	430,008
40. 비금속광물제품	14,408	33,150	28,056	36,688	29,502	21,525	32,054

206 영유아 적정 가정양육비용 산출을 위한 통계자료 분석

구분	현행제도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시나리오 4	시나리오 5	시나리오6
41. 1차 금속제품	54,548	125,486	106,206	138,878	111,700	81,496	121,335
42. 금속제품	38,462	88,486	74,890	97,929	78,767	57,466	85,571
43. 기계 및 장비	35,396	81,427	68,916	90,116	72,484	52,883	78,745
44. 전기 및 전자기기	164,480	378,438	320,292	418,831	336,860	245,757	366,026
45. 정밀기기	23,753	54,653	46,255	60,486	48,651	35,493	52,858
46. 운송장비	121,201	278,705	235,887	308,434	248,116	181,044	269,380
47. 기타 제조업 제품 및 임가공	64,026	147,262	124,646	162,986	131,029	95,619	142,285
48. 전력, 가스 및 증기	153,071	352,595	298,386	390,268	313,732	228,816	341,200
49. 수도, 폐기물 및 재활용서비스	34,209	78,728	66,629	87,131	70,078	51,121	76,161
50. 건설	13,031	29,966	25,362	33,162	26,687	19,470	28,989
51. 도소매 서비스	354,248	814,822	689,637	901,757	725,452	529,275	788,142
52. 운송 서비스	179,524	412,918	349,475	456,973	367,587	268,199	399,219
53.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257,971	593,155	502,022	656,388	528,331	385,454	573,946
54.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194,523	447,564	378,784	495,316	398,509	290,703	433,090
55. 금융 및 보험 서비스	329,079	756,780	640,525	837,506	673,847	491,642	731,983
56. 부동산 및 임대	385,515	886,503	750,326	981,060	789,381	575,945	857,457
57.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64,354	148,034	125,289	163,828	131,799	96,155	143,189
58. 사업지원서비스	73,804	169,752	143,672	187,861	151,146	110,272	164,200
59. 공공행정 및 국방	6,726	15,469	13,092	17,118	13,774	10,049	14,964
60. 교육서비스	220,790	506,973	429,113	560,915	452,079	329,855	490,366
61. 의료 및 보건	101,659	234,246	198,232	259,302	208,230	151,903	226,351
62. 사회보험서비스	0	0	0	0	0	0	0
63. 사회복지서비스	48,748	112,111	94,855	124,016	100,202	73,009	108,945
64. 문화 및 기타서비스	217,114	499,270	422,583	552,537	444,506	324,332	482,725
65. 노동요소	630,790	1,450,655	1,227,769	1,605,355	1,291,934	942,529	1,403,235
66. 자본요소	610,013	1,403,300	1,187,688	1,553,039	1,249,302	911,441	1,357,332
67. 가계소득	109,826	271,303	227,955	302,349	230,343	166,268	253,938

구분	현행제도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시나리오 4	시나리오 5	시나리오6
1분위							
68. 가계소득	188,174	426,976	363,038	473,279	379,241	278,500	412,925
2분위							
69. 가계소득	289,320	653,095	555,218	722,461	583,844	428,408	649,215
3분위							
70. 가계소득	245,156	586,325	492,532	649,765	513,904	372,110	576,841
4분위							
71. 가계소득	281,428	644,367	543,805	709,524	601,923	432,019	635,864
5분위							
72. 가계소득	412,229	935,323	792,684	1,032,227	852,447	619,523	930,843
6분위							
73. 가계소득	376,300	873,962	737,073	967,132	767,346	560,644	821,094
7분위							
74. 가계소득	246,213	565,515	479,744	627,391	499,020	365,842	544,181
8분위							
75. 가계소득	300,499	683,099	579,757	757,266	590,596	437,588	638,416
9분위							
76. 가계소득	358,090	816,900	693,136	904,479	729,257	532,892	779,749
10분위							
77. 기업	385,310	886,277	750,124	980,855	788,962	575,635	856,987
소득증가총액	12,533,576	28,834,163	24,403,713	31,911,032	25,669,469	18,727,203	27,887,942
총제정소요	1,891,610	4,350,994	3,682,623	4,815,382	3,872,696	2,825,704	4206146

자료: 저자 산출

<표 6-25> 경제순환에 따른 10분위 가계소득분포 변화

(단위: 백만 원)

구분	현행제도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시나리오 4	시나리오 5	시나리오6
1분위	24,473,028	24,634,505	24,591,157	24,665,551	24,593,545	24,529,470	24,726,965
2분위	34,365,549	34,604,351	34,540,413	34,650,654	34,556,616	34,455,875	34,778,474
3분위	44,242,631	44,606,406	44,508,529	44,675,772	44,537,155	44,381,719	44,891,846
4분위	55,258,781	55,599,950	55,506,157	55,663,390	55,527,529	55,385,735	55,835,622
5분위	61,266,289	61,629,228	61,528,666	61,694,385	61,586,784	61,416,880	61,902,153
6분위	69,148,446	69,671,540	69,528,901	69,768,444	69,588,664	69,355,740	70,079,289
7분위	79,432,941	79,930,603	79,793,714	80,023,773	79,823,987	79,617,285	80,254,035
8분위	88,397,204	88,716,506	88,630,735	88,778,382	88,650,011	88,516,833	88,941,385
9분위	103,703,539	104,086,139	103,982,797	104,160,306	103,993,636	103,840,628	104,341,955
10분위	155,097,481	155,556,291	155,432,527	155,643,870	155,468,648	155,272,283	155,877,229
지니계수	0.2743	0.2735	0.2737	0.2733	0.2736	0.2740	0.2729

자료: 저자 산출

아래의 <표 6-26>은 현행 제도를 기준했을 때 수당금액 인상 시나리오별 단위 소득 유발 효과와 이에 수반되는 가계소득 증가로 인한 단위 소득재분배 효과를 정리·비교하여 보여준다.

<표 6-26> 정책개편 시나리오 성장-분배 효율성 비교

(단위: 백만 원, %)

구분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시나리오 4	시나리오 5	시나리오 6
추가재정소요	2,459,384	1,791,013	2,923,772	1,981,086	934,094	2,314,536
추가소득증가 소득증가배수	16,300,587 6.62791	11,870,137 6.62761	19,377,456 6.62755	13,135,893 6.63065	6,193,626 6.63062	15,354,366 6.63388
소득재분배 효과(%)	0.3001	0.2188	0.3555	0.2454	0.1159	0.5206
추가재정 천억원 당 재분배효과(%)	0.01220	0.01221	0.01216	0.01239	0.01241	0.02249
성장효율성순위	4	5	6	2	3	1
분배효율성순위	5	4	6	3	2	1

자료: 저자 산출

이에 따르면, 제2절에서 미취학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하는데 필요한 현재 소비재 필수 구입비 추정액을 전액 보전해주는 시나리오 6의 경우 성장과 분배 양측면에서 가장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 결과는 노동공급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최적의 조정안으로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시나리오 6에서는 만 2세 아동의 경우 33만 5천원을 추가 지급하게 되는데 이는 노동공급 중단 임계치 25만 7천원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부모의 노동시장 참여를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정책명제에 어긋난다. 이러한 사정은 현재 가정양육수당 사업비 총액의 2배가 넘는 추가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정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게 한다.

이로써 시나리오 6을 배제하면 성장-분배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정안으로 시나리오 4와 시나리오 5가 두드러진다. 시나리오 4의 경우 성장측면에서 시나리오 5는 분배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성장과 분배라는 개념은 상호 등가교환관계로 해석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님은 주지하는 사실이며 따라서 그 선택은 정책결정자의 기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다만 정책가중치가 동일하다고 하면 두 번째 고려대상은 필요 재원의 규모와 이에 대한 정부의 조달능력이다. 이와 같이 정부 재정부담 측면까지 고려할 경우 시나리오 4에서 필요로 하는 재원규모의 약 절반 수준만 요구되는 시나리오 5가 합리적 대안일 수 있다.

이상의 모의실험은 그런데 가정양육수당지원 제도만을 고려한 것으로 현재 보육시설이용 지원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두 제도가 동시

에 작동하고 있을 때 가정양육수당 금액인상의 효과는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보육료지원이나 가정양육수당지원이 없는 상황을 초기상태로 가정하고 1) 두 제도가 개별적으로 도입되었을 때 나타나는 효과와 2) 동시에 작동하고 있을 때의 효과 그리고 3) 제도 개편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때 정부의 재정투자 규모는 2014년도 국비+지방비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보육체계 개편에 따른 효과는 우선 가정양육수당 단가 인상에 따라 혹은 시설이용 시간에 대한 조정에 의해 불필요한 수요가 줄어들고 따라서 관련 정부예산이 감소함을 가정한다. 이때 감액규모는 분석의 편의를 위해 임의적으로 10% 라고 설정하였다. 그리고 가정양육수당은 2014년 현재보다 인상하는 것으로 전제하되, 그 수준은 앞서 타당성을 검토한 시나리오 4와 시나리오 5를 각각 적용하였다. 이상의 모의실험 내용을 정리하면 <표 6-27>과 같다.

<표 6-27> 보육체계 개편안 모의실험 시나리오

(단위: 억 원)

구분	조정방식	재정투입액
초기상태	정부 개입전	0
보육료지원	2014년 현행 보육료지원 적용	50,701
보육서비스 이용 감소	보육서비스 가수요 통제, 예산10% 감소	45,631
가정양육수당지원	2014년 현행 가정양육수당지원 제도 적용	18,916
2014년 현행 보육체계	2014년 현행 보육료지원+가정양육수당지원	69,617
시나리오 4	보육서비스 가수요 통제+양육수당 0세 22만원, 1~2세 각 21만원 추가지급	84,358
시나리오 5	보육서비스 가수요 통제+양육수당 0~2세 각 10만원 추가지급	73,888

자료: 저자 산출

이상의 모의실험에 따른 효과는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된다.

<표 6-28> 소득유발 효과 및 소득재분배 효과 모의실험결과

(단위: 백만원, %)

구분		합계	총재정소요	소득증가배수	지니계수
초기총소득(총량)		8,099,934,170	-	-	0.2749
보육료지원	소득증가액	41,924,740	5,070,110	8.2690	0.2750
	증가율 %	0.52			
보육시설 이용 감소	소득증가액	37,732,266	4,563,099	8.2690	0.2750
	증가율 %	0.47			
가정양육수당지원	소득증가액	12,533,576	1,891,610	6.6259	0.2743
	증가율 %	0.15			
2014년 현행 (보육료지원+가정양육수당)	소득증가액	54,458,316	6,961,720	8.4370	0.2744
	증가율 %	0.67			

구분		합계	총재정소요	소득증가배수	지니계수
시나리오 4	소득증가액	63,401,735	8,435,795	7.5158	0.2737
	증가율 %	0.78			
시나리오 5	소득증가액	56,459,468	7,388,803	7.6412	0.2741
	증가율 %	0.70			

자료: 저자 산출

위 결과를 보면, 가계에 직접적으로 소득을 주입하는 가정양육수당지원의 경우 보육 시설에 대한 지원에 비해 소득유발 효과가 낮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보육료지원과 가정양육수당지원을 비교해보면, 전자의 경우 소득재분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반면에 후자의 경우 재분배효과가 크게 나타난다(지니계수 0.2749→보육료지원 후 0.2750, 가정양육수당지급 0.2743). 불필요한 보육시설이용을 통제함으로써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가 현재보다 10% 감소할 경우 결과적으로 경제 전체의 소득흐름 총량 증가율은 0.05%p 하락하지만 소득분배상태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표의 5번째 행은 두 제도가 동시에 운용됨으로써 나타나는 소득효과와 재분배효과를 보여준다. 앞서 보았듯이 두 제도가 소득재분배에 있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용함에 따라 지니계수가 가정양육수당만을 지급할 경우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성장 효과는 개별 제도만 적용했을 때 보다 확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6번째와 7번째 행은 가정양육수당 인상과 보육서비스 가수요 통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한 모의실험 결과이다. 이에 따르면, 모든 경우에서 현재보다 소득증가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아지지만²⁰⁾ 소득불평등은 크게 개선된다. 시나리오 4와 5를 비교해보면, 0~2세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할 때 현재보다 10만원 씩 양육수당을 인상하는 시나리오 5가 성장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전체적인 소득재분배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데, 총 재정투자액 규모의 차이에서 비롯한 결과일 수 있다. 이에 보육체계 개편에 따른 추가 재정투자액 천억 원 당 소득재분배 효과를 계산해보았다. <표 6-29>는 추가적인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율성 측면에서 시나리오 5가 보다 우월한 선택임을 보여준다.

20) 소득증가효과가 하락하는 것은 불필요한 어린이집 이용아동 수의 감소에 따른 재정지원 규모의 감소를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표 6-29> 보육체계 개편안 소득재분배 효율성 비교

(단위: 백만원, %)

구분	추가재정소요	재분배효과 (현재도 기준, %)	추가 재정 천억 원 당 재분배효과(%)	분배 효율성 순위
시나리오 4	1,981,086	0.2493	0.0126	2
시나리오 5	934,094	0.1203	0.0129	1

자료: 저자 산출

한편, 앞서 보육료지원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의 효과성 측정결과와 비교해보면, 가정양육수당 조정 시나리오 5의 경우 재정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 하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성장이나 분배측면에서 다른 인상안에 비해 절대적 우위를 보이지 못했다. 반면에 이상에서와 같이 실제 두 가지 제도가 동시에 작용하는 현실적인 가정에서는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가정양육수당 조정안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재정효율화라는 의미는 단순히 정부지원 예산규모의 감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보다시피 불필요한 시설서비스 이용을 줄이고, 다양한 보육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보다 궁극적으로는 아동에게 바람직한 양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충분한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한다는 점에서 재정의 효율적 운용이라는 것을 말한다. 즉, 보육체계 개편으로 현재 보다 더 많은 재원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세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로서 보육체계의 개편은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정책과제이다. 그리고 이때 조정방식의 선택에 있어서는 결국 비용 대비 효과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그 효과성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경제적 효율성과 분배적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제5절 요약 및 정책제언

지금까지 우리는 현재 시설보육 중심의 보육지원 체계에서 발생하는 재정의 비효율적 배분과 관련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보육료지원과 가정양육수당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적절한 재정지원을 통해 영아의 가정 내 양육을 보조함으로써 아동 발달을 도모함과 동시에 부모의 노동시장 참여유인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합리적 가정양육수당 지원수준을 모색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현행 보육체계 재정현황

에 대한 실태분석과 이론적 검토를 비롯하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을 중심으로 가정양육수당 제도를 비롯한 유럽 선진국의 가족정책 전반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미래세대의 건전한 육성이라는 보육지원 정책의 궁극적 목적달성과 합리적 보육재정의 배분을 통한 재정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현행의 보육료 지원 수준의 절반이하로 설정되어 있는 가정양육수당 지원 체계의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국민들의 가정양육수당지원 정책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 양육수당 수급실태 분석을 위하여 텍스트 마이닝과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심층분석 자료와 함께 2014년도 가계동향조사,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시자료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필요 양육비 수준을 추정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적정 가정양육수당 지원 수준을 모색을 위해 이들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정책기능을 고려한 6가지 지원 금액 인상 시나리오를 도출하였고, 각 시나리오별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모의실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정책모의실험에 적용한 6가지 가정양육수당 금액 조정시나리오의 내용과 모의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시나리오 1은 불필요한 보육서비스 이용을 줄이고 가정 내 양육을 적절히 지원함으로써 합리적 보육재정의 배분을 의미하는 재정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여 만 0세아, 만 1세아, 만 2세아, 만 3세아, 만 4세아 이상에 대하여 각각 현재 보다 233,000원, 212,000원, 214,000원, 218,000원, 203,000원의 수당금액을 인상하는 조정안이다. 시나리오 2는 부모들이 요구하는 양육수당 인상금액으로 아동 연령 집단별 각각 161,000원, 155,000원, 162,000원, 142,000원, 159,000원씩 추가로 지급하는 안이다. 시나리오 3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의사를 저해하지 않는 최대 수준을 인상하는 안으로써 아동 연령집단별 265,000원, 252,000원, 257,000원, 252,000원과 261,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한편, 가정양육수당에 대한 선호도, 출산인센티브에 대한 반응도, 가수요 원인과 아동발달에 대한 정책고려, 현재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고 출산·양육에 따른 소득충격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0~2세 양육가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영아(만 0~2세)에 한정하여 추가로 지원하는 3가지 시나리오를 도출하였다. 시나리오 4는 앞서 세 가지 시나리오에서 추구하는 정책목표가 동일한 가중치를 갖고 동시에 추진된다는 가정에 따라 만 0~2세 아동에 대하여 각각 220,000원, 210,000원, 210,000원을 인상하여 지급하는 방식이다. 시나리오 5는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임의적으로 시나리오 4의 절반수준에 해당하는 각

100,000원을 인상하는 안이다. 마지막으로 시나리오 6은 본 연구에서 추정된 필요 양육비용을 전액 보전해주기 위하여 0세 182,459원, 1세 228,906원, 2세 335,387원을 인상하는 방안이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조세를 근간으로 하는 예산사업이고 정책적으로 사회에 진입한지 얼마 지나지 아니한 젊은 경제활동 세대의 자녀 출산·양육에 따른 소득감소 충격에 대한 기회비용 보전 또는 빈곤위험에 대한 사회안전망 기능을 고려하여 정책효과성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제17차 한국노동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전 소득계층에 대한 보편적 지원이 시행된 이후 가구의 소득과 해당 가구의 영유아 자녀 양육행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기초로 상기 정책시나리오별 단기 소득재분배 효과를 비교·측정하였다. 한편, 가구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이전지출이라는 급여 형태를 감안했을 때 가구 소득증가로 인한 소비지출 과급경로를 통해 경제 각 분야에 대한 성장효과와 그에 수반되는 가구소득의 증가분을 살펴볼 수 있는 SAM 기반 일반균형 정태분석을 통해 정책시나리오별 성장-분배 효율성을 측정하여 비교해보았다. 이러한 모의실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가정양육수당 제도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미취학 아동에 대해 주어지는 보편적 현금급여라는 점에서 소득재분배 기능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현재의 제도 상태에서도 상당한 재분배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모든 금액인상 시나리오에서 성장과 분배측면에서 긍정적인 과급효과를 유발하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가정양육수당 단가 인상의 정당성을 뒷받침 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정책조정 시나리오별 사회경제적 과급효과 모의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가정양육수당지원 제도만을 고려했을 때, 만 0~2세에 한정하여 21~22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시나리오 4가 단기적 분배효율성은 물론 장기적인 성장-분배효율성까지 만족시키는 조정안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정부의 추가재원 마련에 대한 부담까지 고려할 경우, 단기적인 분배효율성은 다소 미흡하지만 장기적인 효율성측면에서 시나리오 4와 대동소이한 결과를 보이면서 필요로 하는 재원규모는 절반 수준인 시나리오 5가 최적의 선택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보육료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했을 때에는 시나리오 5가 성장과 분배 양 측면에서 가장 우월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조정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는 모의실험에 기초자료로 활용된 미시조사자료 상에 나타난 수급 가구의 소득과 수급아동 분포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현실적으로 가용한 분석방법론이 정태적 분석 틀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 예컨대, 양육수당 단가인상에 따른 수급아동 수나 연령분포의 변화 혹은 출생과 아동 월령 증가로 인한 수급아동수의 자연 증감요인을 포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추가재정 규모 등은 단순히 정책모의실험의 시산결과로서만 이해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책설계를 위한 몇 가지 첨언을 하면서 결론에 갈음하겠다.

첫째, 불필요한 보육시설 이용을 통제하고 보육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만 0~2세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지원단가를 현재보다 최소 10만원 이상 인상할 필요가 있으며, 이의 정책적 실행에 있어 점진적인 단가인상은 지양해야 한다. 지원단가의 인상은 필연적으로 막대한 재정지출을 수반하며, 실제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는 현실적인 재정부담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점진적으로 단가인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런데 필요로 하는 인상수준보다 낮은 금액에서의 인상은 초기에는 어느 정도의 전환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다시 원래의 양육형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막기 어렵다. 이러한 ‘되먹임 효과’는 최근 담뱃값 인상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재정적 지원을 통해 개인들의 행태변화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충격이 필요하다. 점진적 단가인상은 기대하는 전환효과 없이 지원금액 현실화를 기대하는 부모들의 불만을 증폭시키고 재정부담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계해야 한다.

둘째, 정책적으로 저출산 대응성 강화에 무게중심을 둘 경우 별도의 출산유인 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는 가정양육수당 단가인상을 통해 여성노동시장 참여 제고와 자녀출산 도모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동시에 충족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현행 아동 연령별 차등하여 지급되는 수당체계와 별개로 다자녀 가구 지원이나 출산연령의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인센티브체계를 고안해볼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때에는 재정적 부담과 실질적인 출산제고에 대한 유인책으로서의 효과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예컨대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 자녀수에 따라 추가급여를 지급하되 특정 시기(eg. 2016년 이후) 출생한 0~2세 자녀가 최소 2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거나, 모의 출산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자녀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게 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전술한 바와 같이 자녀양육 기간 중 한시적으로, 특히 영아기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을 선택한 일부 가구에 대한 지원이라는 점에서 자녀관련 비용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제고라는 정책목표는 무리한 설정일 수 있다. 가정양육수당 제도는 오히려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젊은 경제활동 인구에 대한 한시적 소득보장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아동의 건전한 발달지원 즉, 미래세대에 대한 인적자원 투자로서의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다자녀를 양육하는 젊은 부모에 대한 지원 확대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 더불어 전체 소득보장체계의 큰 틀에서 가정양육수당지원 제도의 기능을 점검하고 그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꾸준한 정책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참고문헌 <

<

- 고제이 외(2014).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김유경·김혜련·박중서·손창균·최영준·김연우·이가은·윤아름(2012).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 (2014a). 2014 보육예산(내부자료).
- 보건복지부. (2014b).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특수시책현황(내부자료).
- 보건복지부. (2015c). 2015년도 보육사업안내.
- 서문희·최윤경·신윤정·이세원 (2010). 영유아 양육비용에 관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신윤정·김지연(2010). 자녀 양육비용 추계와 정책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신윤정·이현주·김태완·최성은·권지은·이수형·최숙희(2009). 양육수당 도입방안 마련.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오미애(2014). 정부3.0과 빅데이터: 보건복지분야 사례를 중심으로, Issue & Focus, 230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육아정책연구소(2014). 2014 유아교육·보육 통계.
- 이영옥(2015). 보육료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KDI FOCUS. 통권 제53호. KDI.
- 이정원·이혜민(2014). 2014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최윤경·박진아·최종화(2014). KICCE 육아물가지수 연구(Ⅱ). 육아정책연구소.
- Anderson, (2003). Public Finance: Principles and Policy, Boston, MA: Houghton Milfflin Company.
- Belsky, J. (1986). Infant day care: A cause for concern?. Zero to Three, 6(5), pp.1-9.
- Belsky, J., & Rovine, M. (1988). Nonmaternal care in the first year of life and the security of infant parent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59, pp.157-176.
- Bergqvist, C. and Nyberg A. (2002). Welfare State Restructuring and Childcare in Sweden, In Michael and R. Mahon (eds) Child Care Policy at the Crossroads, New York: Routledge.
- Bettinger, Hægeland & Rege(2013). Home with Mom: The effects of stay-at-home parents on children's long-run educational outcomes. Discussion paper. No. 739. Statistics Norway Research department.

- Bettinger, E., Hægeland, T. and Rege M. (2013). Home with Mom: The effects of stay-at-home parents on children's long-run educational outcomes. Discussion Papers, No. 739. Statistics Norway Research Department.
- Brooks-Gunn, J., W. Han and J. Waldfogel (2010), First-year Maternal Employment and Child Development in the First 7 Year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Vol. 75, No. 2, pp. 144-145.
- Clarke-Stewart, K. A. (1989). Infant day care: Malignant or Maligned. *American Psychologist*, 44, 266-273.
- Dahl, G.B. and L. Lochner (2005). The Impact of Family Income on Child Achievement, NBER Working Paper, No. 11279, Cambridge.
- Department of Social Protection. (2015). 아일랜드 아동수당금액 체계. <http://www.welfare.ie/en/Pages/Child-related-payments.aspx> (최종 접속 2015.10.19.).
- Duncan, G. and J. Brooks-Gunn (1997). *The Consequences of Growing Up Poor*, Russell Sage, New York.
- Duncan, G. et al. (2010), Early Childhood Poverty and Adult Attainment, Behaviour and Health, *Child development*, Vol. 81, No. 1, pp. 306-325.
- Duvander, A.Z. and T. Ferrarini (2013). Sweden's Family Policy under Change: Past, Present, Future, Working Paper, Stockholm University Linnaeus Center on Social Policy and Family Dynamics in Europe.
- Eisenberg, N., & Fabes, R. A. (1992). *Emotion and its regulation in early development*. San Francisco: Jossey-Bass.
- Ellingsaeter, A. L. and Gulbrandsen L. (2007). Closing the Childcare Gap: The Interaction of Childcare Supply and Mothers' Agency in Norway, *Journal of Social Policy* 36(4), pp. 649-669.
- Ellingsaeter, A. L. (2003). The complexity of family policy reform, *The case of Norway*, *European Societies* 4, pp. 419-43.
- Ellingsaeter, A. L. (2007). Old and new politics of time to care: three Norwegian reform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7(1), pp. 49-60.
- Ellingsaeter, A. L. (2012). Cash for Childcare: Experiences from Finland, Norway, and Sweden, *International Policy Analysis*, Friedrich Ebert Stiftung.
- Eydal, G., and Rostgaard T. (2011). Day care schemes and cash-for-care at home,

- in I. V. Gislason and G. B. Eydal (eds.). Parental leave, childcare, and gender equality in the Nordic countries, Copenhagen, Nordic Council of Ministers
- Felfe, C. & A. Hsin(2012). Maternal Work conditions and child development.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Vol. 31. No. 6. pp.1037-1057.
- Field, T. (1994). The effects of mother's physical and emotional unavailability on emotion regulatio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 pp.208-227.
- Försäkringskassan.(2015). 스웨덴 아동수당금액 체계. [http://www.forsakringskassan.se/sprak/eng/for_families_with_children_\(barnfamiljer\)](http://www.forsakringskassan.se/sprak/eng/for_families_with_children_(barnfamiljer))(최종접속 2015.10.19.).
- GOV.UK. (2015). 영국 아동수당금액 체계. <http://www.gov.uk/child-benefit-rates>(최종접속 2015.10.19.).
- Haataja, A. and Nyberg, A. (2006). Diverging paths? The dual-earner/dual-carer model in Finland and Sweden," in A. L. Ellingsaeter and A. Leira (eds.) *Politicising parenthood in Scandinavia*, Bristol: Policy Press
- Han, W., J. Waldfogel and J. Brooks-Gunn (2001). The Effects of Early Maternal Employment on Later cognitive and Behavioural Outcom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63, pp. 336-354.
- Hardoy, I. and Schöne (2010). Incentive to work? The impact of a 'Cash-for-Care' benefit for immigrant and native mothers labour market participation, *Labour Economics* 17, pp.963-974
- Hiilamo, H. (2002). The Rise and Fall of Nordic Family Policy: Historical Development and Changes During the 1990s in Sweden and Finland, Helsinki: Stakes
- Hiilamo, H. and Kangas, O. (2009). Trap for Women or Freedom to Choose? The Struggle over Cash for Child Care Scheme in Finland and Sweden, *Journal of Social Policy* 38: 457-475
- Hill, Waldfogel, Brooks-Gunn & Hann(2005). Maternal Employment and Child Development: A Fresh Look Using Newer Methods.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41. No.6. pp.833-850.
- Jaeger, E., & Weinraub, M. (1990). Early nonmaternal care and infant attachment: In searce of process. In K. McCartney(Ed.), *Child care and maternal*

- employment: A social ecology approach. San Francisco: Jossey-Bass.
- Kela. (2015). 핀란드 아동수당금액 체계. www.kela.fi/kotihoidon-tuki_maara(최종접속 2015.9.13.).
- Lamb, M. E. & Sternberg, K. T. (1990). Do you really know how day-care affects children.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1, pp.351-379.
- LEVY, D., and G. DUNCAN (2000). Using Sibling Samples to Assess the Effect of Childhood Family Income on Completed schooling, Northwestern University, JCPR Working Paper 168.
- Macaluso, T.F.(2000). The Extent of Trafficing in the Food Stamp Program: An Update. Food and Nutrition Servic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 Mandel, H, and Seymonov, M. (2006). A Welfare State Paradox: State Intervention and Women's Employment Opportunities in 22 Countr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1, pp. 1910-49
- NAV. (2015). 노르웨이 아동수당금액 체계.
<https://www.nav.no/no/NAV+og+samfunn/Kontakt+NAV/Utbetalinger/Snarveier/Satser.380089.cms?kap=380093>(최종접속 2015. 10.19.).
- Nordic Council of Ministers (2011). Nordic countries in figures 2011, Copenhagen
- Nyberg A. (2010). Cash for childcare schemes in Sweden: history, political contradictions and recent developments, In J. Sipilä, K. Repo and T. Rissanen (eds.) *Cash-for-Childcare. The Consequences for Caring Mothers*, Cheltenham: Edward Elgar.
- OECD (2005). *Babies and bosses -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Canada, Finland, Sweden and the United Kingdom, Paris
- OECD (2011). *Doing Better for Families*.
- Rantalaiho M. (2010). Rationalities of cash-for-childcare: the Nordic case, In J. Sipilä, K. Repo and T. Rissanen (eds.) *Cash-for-Childcare. The Consequences for Caring Mothers*, Cheltenham: Edward Elgar.
- Repo, K. (2010). Finish child home care allowances - users' perspectives and perceptions, In J. Sipilä, K. Repo and T. Rissanen (eds.) *Cash-for-Childcare. The Consequences for Caring Mothers*, Cheltenham: Edward Elgar.
- Rønsen M. and Kitterød, R. H. (2010). Cash-for-care in Norway: take-up, impact and consequences, In J. Sipilä, K. Repo and T. Rissanen (eds.)

- Cash-for-Childcare. The Consequences for Caring Mothers, Cheltenham: Edward Elgar.
- Rónsen, M. (2009). Long-term effects of cash for childcare on mothers' labour supply, *Labour* 23, pp. 507-533.
- SEGURIDAD SOCIAL. (2015). 스페인 아동수당금액 체계.
http://www.seg-social.es/Internet_6/Trabajadores/PrestacionesPension10935/Prestacionesfamilia10967/Prestacioneconomica27924/Cuantias/index.htm
(최종접속 2015.10.19.).
- Sipilä, J., K. Repo and T. Rissanen (2010). Cash-for-Childcare. The Consequences for Caring Mothers, Cheltenham: Edward Elgar.
- SVB. (2015). 네덜란드 아동수당금액 체계.
https://www.svb.nl/int/en/kinderbijslag/betaling/hoeveel_kinderbijslag_krijgt_u/index.jsp(최종접속 2015.10.19.).
- Tronick, E. Z., & Cohn, J. F. (1989). Infant-mother face-to-face interaction: Age and gender differences in coordination and the occurrence of miscordination. *Child Development*, 60, pp.85-92.
- Waldfoegel, J., W. Han and J. Brooks-Gunn (2002). The Effects of Early Maternal Employment on Child cognitive Development, *Demography*, Vol. 39, No. 2, pp. 369-392.

어린이집 이용 가구 부모 설문 조사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바람직한 보육지원체계 설계를 위하여 2015년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 결과는 향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단가 조정 등 제도개편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본 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바쁘시더라도 조사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응답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그 내용은 통계자료로만 이용되오니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구 일반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1. 현재 응답하시는 분은 귀 가정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5세 아동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1. 어머니
2. 아버지
3. 기타

→ 부모가 아닐 경우 조사를 중단하고 다른 가구를 접촉

문2. 현재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은 총 몇 명입니까?

가구원 수 ()명

문3.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5세 아동은 몇 명입니까?

1. 1명
2. 2명
3. 3명 이상

문3-1.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 중 가장 나이가 어린 자녀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 ()세

문3-2. 현재 보육료로 매월 얼마를 지원받고 계십니까?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 중 가장 나이가 어린 자녀 1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녀 1인 당 ()만원

※부모님의 경제활동과 자녀양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4. 다음의 보기에 해당하는 가구 소득 유형을 선택해 주십시오.

1. 맞벌이 → 문4-1로 이동
2. 아이 아버지만 일하는 외벌이 → 문4-2, 4-3으로 이동
3. 아이 어머니만 일하는 외벌이 → 문4-1로 이동
4. 부모 모두 일을 하지 않음 → 문4-2, 4-3으로 이동
5. 무응답 → 문5로 이동

문4-1. 어머니께서는 어떤 형태로 취업하고 계십니까?

1. 상용근로자
2. 임시근로자
3. 일용근로자
4. 자영업자

→ 응답 기입 후 문5로 이동

문4-2. 어머니께서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일하고 싶지 않아서
2. 일하고 싶으나 적당한 일자리가 없어서
3. 일자리는 있으나, 자녀양육과 가사 때문에
4. 건강상 이유로

5. 기타

→ 응답 기입 후 문4-3로 이동

문4-3. 가정양육수당을 받으면서 가정에서 돌보는 대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가정양육수당 금액이 너무 적어서
2. 보육료지원 금액이 가정양육수당보다 많기 때문에
3. 육아가 힘들어서
4. 어린이집 보육프로그램이 좋아서
5. 기타

→ 응답 기입 후 문5로 이동

문5. 부모님 중 현재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거나 과거에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1. 현재 받고 있다
2. 과거에 받은 적이 있다
3. 받은 적 없음
4. 해당 없음, 무응답

문6. 귀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

1. 150만원 미만
2. 15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3.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4.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5.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6. 600만원 이상

문7. 현재 자녀양육비로 매월 얼마나 지출하십니까?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 중 가장 나이가 어린 자녀 1명을 기준으로 하며, 사교육비는 제외합니다.

1. 10만원 미만

2. 10만원 이상 ~ 20만원 미만
3. 20만원 이상 ~ 30만원 미만
4. 30만원 이상 ~ 40만원 미만
5. 4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
6. 50만원 이상 ~ 60만원 미만
7. 60만원 이상

※정부의 보육지원정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최연소 자녀를 기준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가정양육수당은 12개월 미만 월 20만원, 24개월 미만 월 15만원, 24개월 이상은 월 1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문8. 향후 6개월 이내에 어린이집 이용을 중단하고 가정양육수당을 받으면서 집에서 자녀를 돌볼 계획이 있습니까?

1. 예 → 문9로 이동
2. 아니오 → 문8-1로 이동

문8-1. 가정양육수당 금액을 어느 정도 인상했을 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대신 가정양육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래 보기 금액을 한꺼번에 알려주지 않고, 단계별 의사를 확인하여 최종 기입합니다)

1. 5만원 증액
2. 10만원 증액
3. 15만원 증액
4. 20만원 증액
5. 20만원 이상
6. 영향 없음

→ 응답 기입 후 문9로 이동

문9. 가정양육수당 금액을 어느 정도 인상했을 때 현재 하고 계신 소득활동이나 구직활동을 중단하시겠습니까? (◆아래 보기 금액을 한꺼번에 알려주지 않고, 단계별 의사를 확인하여 최종 기입합니다)

1. 5만원 증액
2. 10만원 증액
3. 20만원 증액
4. 30만원 이상 증액
5. 영향 없음

문10. 앞으로 자녀를 더 낳을 계획이 있습니까?

1. 있다 → 문11으로 이동
2. 없다 → 문10-1로 이동
3. 생각 중 → 문10-1로 이동

문10-1. 자녀를 낳을 계획이 없거나 생각 중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영유아기 양육비용 부담 때문에
2. 취학 후 교육비 부담 때문에
3. 직장생활로 바빠서
4. 건강이 안 좋아서
5. 현재 자녀로 충분해서
6. 부모 나이가 많아서
7. 기타

→ 응답 기입 후 문11로 이동

문11. 그동안 정부의 보육료지원이나 가정양육수당과 같은 보육지원 정책이 귀 가정의 자녀 출산에 대한 결정이나 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까?

1. 예 → 문11-1로 이동
2. 아니오

문11-1. 어떤 정책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습니까?

1. 보육료 지원
2. 가정양육수당
3. 산전산후휴가, 육아휴직급여 등
4. 출산장려금
5. 기타

→ 응답 기입 후 문12로 이동

문12. 가정양육수당 금액을 어느 정도 인상했을 때 현재 생각하시는 것보다 자녀를 더 낳을 의사가 생기겠습니까? (◆아래 보기 금액을 한꺼번에 알려주지 않고, 단계별 의사를 확인하여 최종 기입합니다)

1. 5만원 증액
2. 10만원 증액
3. 20만원 증액
4. 30만원 이상 증액
5. 영향 없음

문13. 적정 가정양육수당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 보기 금액을 한꺼번에 알려주지 않고, 단계별 의사를 확인하여 최종 기입합니다)

1. 현재 수준이 적정
2. 현재보다 5만원 증액
3. 현재보다 10만원 증액
4. 현재보다 15만원 증액
5. 현재보다 20만원 이상 증액
6. 현재보다 감액

● 이제 설문이 완료되었습니다.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구 부모 설문 조사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바람직한 보육지원체계 설계를 위하여 2015년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 결과는 향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단가 조정 등 제도개편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본 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바쁘시더라도 조사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응답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그 내용은 통계자료로만 이용되오니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구 일반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1. 현재 응답하시는 분은 귀 가정의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만 0~5세 아동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1. 어머니
2. 아버지
3. 기타

→ 부모가 아닐 경우 조사를 중단하고 다른 가구를 접촉

문2. 현재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은 총 몇 명입니까?

가구원 수 ()명

문3. 현재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만 0~5세 아동은 몇 명입니까?

1. 1명
2. 2명
3. 3명 이상

문3-1.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아동은 현재 몇 살입니까?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자녀 중 가장 나이가 어린 자녀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 ()세

문3-2. 가정양육수당으로 매월 얼마를 지원받고 계십니까?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자녀 중 가장 나이가 어린 자녀 1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녀 1인 당 ()만원

※부모님의 경제활동과 자녀양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4. 다음의 보기에 해당하는 가구 소득 유형을 선택해 주십시오.

1. 맞벌이 → 문4-1로 이동
2. 아이 아버지만 일하는 외벌이 → 문4-2로 이동
3. 아이 어머니만 일하는 외벌이 → 문4-1로 이동
4. 부모 모두 일을 하지 않음 → 문4-2로 이동
5. 무응답 → 문5로 이동

문4-1. 어머니께서는 어떤 형태로 취업하고 계십니까?

1. 상용근로자
2. 임시근로자
3. 일용근로자
4. 자영업자

→ 응답 기입 후 문5로 이동

문4-2. 어머니께서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일하고 싶지 않아서
2. 일하고 싶으나 적당한 일자리가 없어서
3. 일자리는 있으나, 자녀양육과 가사 때문에
4. 건강상 이유로
5. 기타

→ 응답 기입 후 문5로 이동

문4-3.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대신 가정양육수당을 받고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이 아이에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2. 주변에 자녀를 보낼만한 어린이집이 없어서
3. 주변에 어린이집은 있으나 믿을 수 없어서
4. 가정양육수당을 받으면 보육부담이 줄기 때문에

문5. 부모님 중 현재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거나 과거에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1. 현재 받고 있다
2. 과거에 받은 적이 있다
3. 받은 적 없음
4. 해당 없음, 무응답

문6. 귀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

1. 150만원 미만
2. 15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3.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4.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5.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6. 600만원 이상

문7. 현재 자녀양육비로 매월 얼마나 지출하십니까?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자녀 중 가장 나이가 어린 자녀 1명을 기준으로 하며, 사교육비는 제외합니다.

1. 10만원 미만
2. 10만원 이상 ~ 20만원 미만
3. 20만원 이상 ~ 30만원 미만
4. 30만원 이상 ~ 40만원 미만
5. 4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
6. 50만원 이상 ~ 60만원 미만

7. 60만원 이상

※ 정부의 보육지원정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최연소 자녀를 기준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가정양육수당은 12개월 미만 월 20만원, 24개월 미만 월 15만원, 24개월 이상은 월 1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문8. 현재 받고 있는 가정양육수당 금액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1. 만족 → 문9로 이동
2. 불만족 → 문8-1로 이동

문8-1. 가장 큰 불만은 무엇입니까?

1. 실제 양육에 필요한 비용에 모자라서
2. 보육료보다 지원 금액이 적어서
3. 기타

문9. 현재 받고 계신 가정양육수당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1. 아이를 위해 모두 지출
2. 저축
3. 가구 전체를 위한 생활비 등으로 지출
4. 기타

문10. 향후 6개월 이내에 가정양육수당수급을 중단하고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실 계획이 있습니까?

1. 예 → 문10-1로 이동
2. 아니오 → 문11로 이동

문10-1. 가정양육수당 금액을 어느 정도 인상했을 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대신 가정양육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래 보기 금액을 한꺼번에 알려주지 않고, 단계별 의사를 확인하여 최종 기입합니다)

1. 5만원 증액
2. 10만원 증액
3. 15만원 증액
4. 20만원 증액
5. 20만원 이상
6. 영향 없음

→ 응답 기입 후 문9로 이동

문11. 가정양육수당 금액을 어느 정도 인상했을 때 현재 하고 계신 소득활동이나 구직활동을 중단하시겠습니까? (◆아래 보기 금액을 한꺼번에 알려주지 않고, 단계별 의사를 확인하여 최종 기입합니다)

1. 5만원 증액
2. 10만원 증액
3. 15만원 증액
4. 20만원 증액
5. 30만원 이상 증액
6. 영향 없음

문12. 앞으로 자녀를 더 낳을 계획이 있습니까?

1. 있다 → 문13으로 이동
2. 없다 → 문12-1로 이동
3. 생각 중 → 문12-1로 이동

문12-1. 자녀를 낳을 계획이 없거나 생각 중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영유아기 양육비용 부담 때문에
2. 취학 후 교육비 부담 때문에
3. 직장생활로 바빠서
4. 건강이 안 좋아서
5. 현재 자녀로 충분해서
6. 부모 나이가 많아서
7. 기타

문13. 그동안 정부의 보육료지원이나 가정양육수당과 같은 보육지원 정책이 귀 가정의 자녀 출산에 대한 결정이나 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까?

1. 예 → 문13-1로 이동
2. 아니오 → 문14로 이동

문13-1. 어떤 정책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습니까?

1. 보육료 지원
2. 가정양육수당
3. 산전산후휴가, 육아휴직급여 등
4. 출산장려금
5. 기타

문14. 가정양육수당 금액을 어느 정도 인상했을 때 현재 생각하시는 것보다 자녀를 더 낳을 의사가 생기겠습니까? (◆아래 보기 금액을 한꺼번에 알려주지 않고, 단계별 의사를 확인하여 최종 기입합니다)

1. 5만원 증액
2. 10만원 증액
3. 20만원 증액
4. 30만원 이상 증액
5. 영향 없음

문15. 적정 가정양육수당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 보기 금액을 한꺼번에 알려주지 않고, 단계별 의사를 확인하여 최종 기입합니다)

1. 현재 수준이 적정
2. 현재보다 5만원 증액
3. 현재보다 10만원 증액
4. 현재보다 15만원 증액
5. 현재보다 20만원 이상 증액
6. 현재보다 감액

● 이제 설문이 완료되었습니다.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